Annual Report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Korea Immigration Service
2020 Annual Report

발간사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공동가치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성장·발전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0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한해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환경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출발 위험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현지에서 제한하기도 하고, 국내 공항에 도착한 승객의 입국심사 뿐만 아니라 행정응원 차원의 방역절차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해외입국자 및 감염병 의심자 추적, 국내 외국인의 방역 계도 활동, 통역 지원 등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방역을 위해 애쓰는 여러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하였습니다.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의 영문표기를 배타적인 이미지의 '에이리언(Alien)'에서 거주의 개념을 담은 'Residence Card'로 바꾸었는데, 세계 22개국 출신의 모범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통합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우리 본부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폐지하고 온라인 비자발급확인서로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비자를 위조해 입국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경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5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일손을 돕도록 장기체류자격을 허용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이재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회통합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통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힘썼습니다.

국제간 이동의 길이 막힌 것은 난민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해 난민신청자 수는 전년 대비 56.8%(6,684건) 감소하였으나,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46.4%(5,956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본부는 난민심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꾀하기 위해 난민업무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전담부서인 난민심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절벽 문제를 다루는 보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이 인구정책의 한 측면을 차지하고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민 사회의 여러 문제점도 살펴야겠지만, 이민정책을 외면하면 기회 자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어렵더라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감에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 각종 통계,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연감이 출입국·외국인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 속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 9.

Contents

2020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연감

3 INTRO
4 발간사

제1장 일반사항

16 제1절 **기본 방향**
16 제1항 정책 여건
18 제2항 2020년 전략목표

19 제2절 **비전과 미션**

21 제3절 **기구·인원 및 시설·예산**
21 제1항 기구·인원
30 제2항 인사
41 제3항 시설·예산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48 제1절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48 제1항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안전한 국경관리
50 제2항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준비
52 제3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공·항만 확대
54 제4항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확대 시행
56 제5항 출국금지 제도 개선
58 제6항 출입국자 현황

61 제2절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61 제1항 비자스티커 폐지 및 전자검증 시스템 도입
63 제2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가 일손 지원
65 제3항 코로나19 감염 해외유입 최소화를 위한 '재입국허가제' 시행
67 제4항 코로나19로 인한 외국국적동포 고충 해소 지원
68 제5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괄직권연장 및 비대면 민원처리 확충
70 제6항 6.25 70주년 기념, 한국전 참전용사 등에 대한 출입국·체류 지원
71 제7항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상담서비스 강화

73 제3절 이민범죄 단속 강화 및 자진출국 유도
73 제1항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지속 추진
75 제2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76 제3항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77 제4항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강화
79 제5항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80 제6항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81 제4절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수요자 중심의 국적정책 개선
81 제1항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을 위한 국적증서수여식
84 제2항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 개선
86 제3항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시행
89 제4항 국적업무 처리 현황

93 제5절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93 제1항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94 제2항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 전면실시를 통한 코로나19 탄력대응
96 제3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주말과정 신설
97 제4항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
99 제5항 한부모 결혼이민자 안정적 체류지원 방안 마련

Contents

2020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연감

100 제6절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및 정책역량 강화**
100 제1항 2020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104 제2항 2020년도 정책발표회 개최
105 제3항 2020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107 제7절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108 제1항 난민업무 전담인력 확충 및 심사 전문성 강화
110 제2항 난민 통역 제도
110 제3항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111 제4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112 제5항 재정착난민 수용
113 제6항 난민업무 처리 현황

114 제8절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115 제1항 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16 제2항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구성
117 제3항 이의신청 절차 비대면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118 제4항 국가정황정보 관리 체계화

119 제9절 **국제협력 강화**
120 제1항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 협력
120 제2항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124 제10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125 제1항 감염병 해외유입 차단 범부처 협력 체계 강화
126 제2항 감염병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업무 적극 분담
128 제3항 방역 목적 출입국·외국인 정보 제공

제3장 일자별 주요업무 처리내용(행정 연표)

132 제1절 **상반기**

141 제2절 **하반기**

제4장 법령·예규 정비

154 제1절 **법령 개정**
154 제1항 법률
157 제2항 대통령령
161 제3항 법무부령

165 제2절 **훈령·예규 정비**
165 제1항 훈령
165 제2항 예규
166 제3항 주요지시

제5장 주요 통계

172 제1절 **출입국자 현황**

177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194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195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Contents

2020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연감

제6장 보도(설명) 자료

202 2020년 보도(설명) 자료 배포 일지

부록

300 1 체류자격 일람표

310 2 사증면제협정 현황

317 3 주요 행사 연설문

330 4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331 5 역대 출입국관리국장 및 본부장 명단

332 6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336 7 주요 언론보도

452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표

23	표 1	본부 각과 업무 분장표
31	표 2	2020년 5급 이상 인사 내역
44	표 3	2020년 예산 내역
49	표 4	공항만 격리통지서 교부 현황
52	표 5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52	표 6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55	표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 활용 현황
57	표 8	기관별 출국금지 현황
57	표 9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실적(2020. 6. 1.~12. 31.)
63	표 10	계절근로 외국인 국적별·연도별 운영 현황
66	표 11	월별 재입국허가 운영 현황
76	표 12	자진출국자 현황
78	표 13	기획조사 추진 실적
80	표 14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87	표 15	우수인재 전문분야별 현황
90	표 16	유형별 귀화자 현황
90	표 17	국적별 국적회복자 현황
92	표 18	국적 신고 업무처리 현황
103	표 19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108	표 20	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대기 현황
109	표 21	2020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111	표 22	2020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112	표 23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117	표 24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122	표 25	2020년 국제회의 참여 현황
123	표 26	2020년 외국기관의 주요 인사 방문 현황
125	표 27	감염병 해외유입 방지 대응 사례
128	표 28	방역 업무 지원(행정응원) 실적
129	표 29	방역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통계

Contents

2020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연감

그림

23 그림 1 본부 조직도
24 그림 2 소속기관 조직도
27 그림 3 소속기관 현황(46개 기관)
28 그림 4 재외공관 주재관 현황(13개 국가, 19개 공관, 26명)
42 그림 5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감도
42 그림 6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조감도
43 그림 7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감도
43 그림 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감도
53 그림 9 추진경과
57 그림 10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59 그림 11 출입국자 증감 추이
60 그림 12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60 그림 13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62 그림 14 비자발급확인서 온라인 발급
64 그림 15 계절근로 5개월 허용
66 그림 16 재입국허가 시행 홍보
67 그림 17 출국기간 연장 관련 언론 기사
70 그림 18 참전국 후손에 비자혜택 언론보도
72 그림 19 법무부장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73 그림 20 총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77 그림 21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78 그림 22 알선브로커 적발 언론보도
82 그림 23 75주년 광복절 기념 국적증서 수여식
82 그림 24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85 그림 25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발간
88 그림 26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설명자료
94 그림 27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95 그림 28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95 그림 29 체류자격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현황(2020년)

98 그림 30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101 그림 31 외국인정책위원회
105 그림 32 제23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106 그림 33 2020년도 이민정책포럼
114 그림 34 난민 이의신청 현황
116 그림 35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121 그림 36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122 그림 37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124 그림 38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127 그림 39 특별입국절차 흐름도

1
CHAPTER

일반 사항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비전과 미션

제3절 기구 · 인원 및 시설 · 예산

제1절
기본 방향

제1항 정책 여건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의 국내 최초 확진사례 확인은 연중 내내 외국인 관련 정책과 출입국심사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감염병 위험국가로 여겨 탈출 행각을 벌이는 한편, 우리의 체계적인 방역대응과 전 지구적 감염병 확산에 오히려 국내로의 도피성 입국을 시도하려는 미증유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집단 보호의 위험성과 항공편 부재에 따른 본국 송환의 어려움 때문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 단속도 자유롭지 못했다. 사회통합 교육도 일시 중단에서 온라인 교육까지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었고, 체류 민원 업무도 밀집도 완화를 위한 예약제 운영이나 비대면 확대로 탈바꿈 되는 한편, 입국 심사 시 입국 목적 확인보다 주소 확인, 격리통지서 교부와 같은 방역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메르스, 사스와 같은 인체 감염 바이러스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 상황을 겪어오던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공항만 입국 과정에서 심사관이 특별입국절차라는 방역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감염병 관련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관련 정보를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가격리 적합 여부 확인 및 격리지 이탈자 추적, 방역 위반 외국인 처벌이나 출국 조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가별 비자발급 제한, 항공편 운항 조정, 현지 항공기 탑승 제한 등등의 세밀한 조치를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또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로 상대국가 국민의 입국을 차단조치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교류 가능 국가 또는 신속 입국 통로 등의 절차를 통해 필수 인력의 이동은 돕는 개방성과 더불어 위험 요인은 차단하는 방역 최전선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2020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9년 말 2,524,656명에서 약 19% 감소한 2,036,075명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 390,281명과 비슷한 392,196명을 유지하였다.

2020년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29,023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전년보다 감소했고,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10년 새 15.8%에서 24%로 증가하여 인구 문제와 노동력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인구정책으로써의 외국인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압박 상황과 여전히 이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동시에 수렴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코로나19 신속 대응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이민·통합기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출입국심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준비해야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외국인 노동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마련도 절실히 요구되었다.

제2항 2020년 전략목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다양성 존중의 사회통합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는 성과목표를 세우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제도 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주요 관리과제로 설정하여 외국인정책을 추진하였다.

제2절

비전과 미션

국가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무행정 비전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출입국 · 외국인정책 비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1. 상생	2. 통합	3. 안전	4. 인권	5. 협력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기능

- 출입국심사 및 비자 발급
- 체류허가 및 출입국사범 단속 등 체류관리
- 국적부여 및 난민인정
- 체류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및 외국인정책

2020년 전략 목표 및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성과 목표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정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제3절

기구·인원 및 시설·예산

제1항 기구·인원

1 2020. 2. 25. 직제 개정

난민인정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난민심의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였고, 기존 난민과는 난민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필요한 인력 112명(6급 34명, 7급 32명, 8급23명, 9급23명) 중,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인력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을 증원하고,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한 불법체류 단속 인력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을 증원하고, 항만·국경 관리를 위한 선박심사 인력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을 증원하였다.

2 2020. 4. 28. 직제 개정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정식 직제로 변경하였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전('20. 4. 30.)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행하던 국적 업무가 분리되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업무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재배치 하였다.

3 2020. 10. 7. 직제 개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장에게 투자이민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등록, 체류허가 권한을 분장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국을 관할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을 조정하였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장의 직급을 "출입국관리사무관"에서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조정하였다.

4 2020. 12. 29. 직제 개정

평가대상 정원인 체류외국인 관리(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하였다.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49명(7급 5명, 8급 4명, 9급 40명)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였다.

그림 1 본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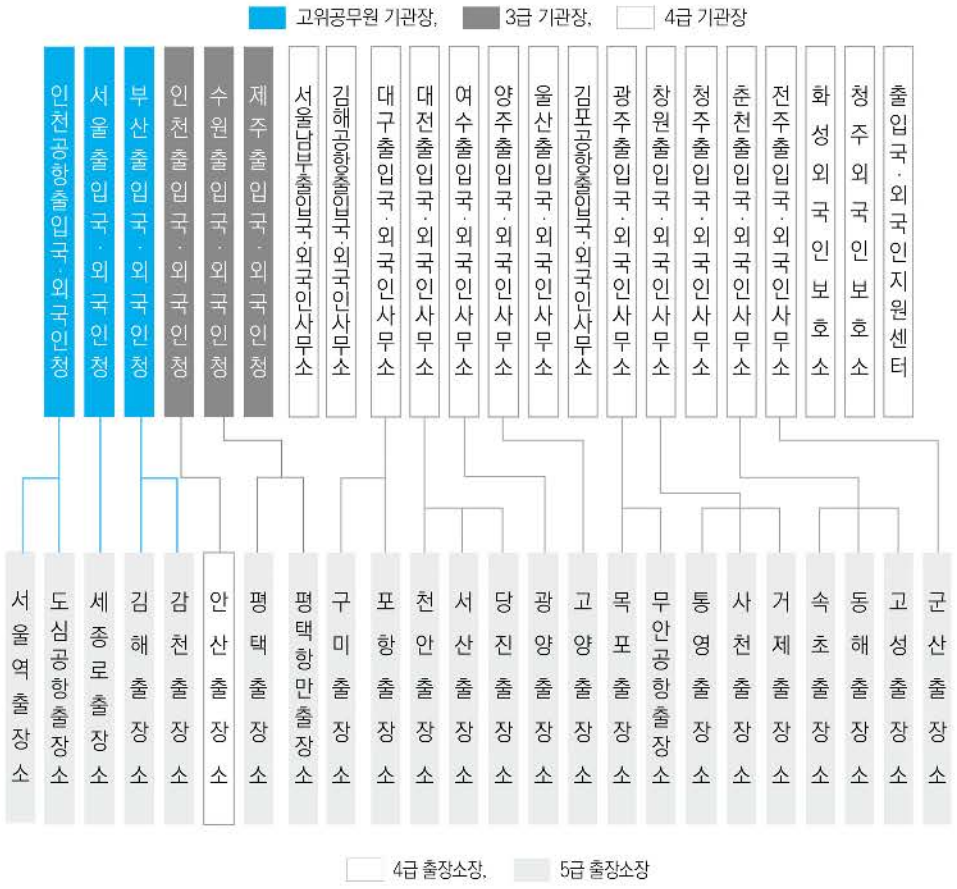
(1 본부장, 2 정책단장, 10과장)

표 1 본부 각과 업무 분장표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 출입국관리행정종합계획 수립 • 인사·조직·예산·홍보·국제협력 등	• 내·외국인출입국심사 •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등	•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사항 • 비자발급 심사에 관한 사항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 •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외국인정책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 • 소관 법령의 입안 관련 사항 등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 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등 국적관리 • 국적 관련 법령 정비 및 정책수립	•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 총괄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 난민법령 및 제도, 난민인정심사 등 총괄 • 난민인정자 등 처우 지원 및 관리
난민심의과		
•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개선 • 난민위원회운영 및 국가정황정보 등 자료 수집		

그림 2 소속기관 조직도

(6 출입국·외국인청, 13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외국인보호소, 1 센터, 24 출장소 등 총 46개 기관)



본부 및 산하기관 4급 이상 간부 현황

('20. 12. 31. 현재)

■ 본부

직위	성명	재임기간
본부장	차 규 근	'17. 9. 4.
출입국정책단장	이 인 규	'19. 10. 7.
국적·통합정책단장	유 복 근	'18. 8. 20.~'20. 3. 9.
	유 복 렬	'20. 6. 26.
출입국기획과장	배 상 업	'20. 1. 1.
출입국심사과장	구 본 준	'20. 1. 1.
체류관리과장	이 진 곤	'19. 8. 23.
이민조사과장	반 재 열	'19. 8. 22.
이민정보과장	이 상 달	'18. 1. 01.~'20. 2. 20.
	박 상 욱	'20. 2. 21.~'20. 10. 30.
	김 태 형	'20. 11. 01.~'20. 12. 13.
	이 대 우	'20. 12. 14.
외국인정책과장	차 용 호	'19. 2. 5.
국적과장	송 소 영	'19. 8. 24.
이민통합과장	김 현 채	'19. 3. 18.
난민정책과장	김 정 도	'18. 2. 28.
난민심의과장	이 정 미	'20. 4. 13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유 성 오	'20. 1. 1.~'20. 8. 24.
	최 문 정	'20. 8. 25.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김 정 복	'20. 1. 1.
국립외교원 부이사관	류 인 성	'20. 2. 17.

■ 산하기관

직위	성명	재임기간
인천공항청장	장 세 근	'18. 8. 6.
서울청장	손 홍 기	'18. 8. 6.~'20. 12. 31.
부산청장	안 규 석	'19. 10. 7.
인천청장	이 재 유	'19. 10. 10.
수원청장	육 승 훈	'20. 1. 1.
제주청장	최 영 길	'19. 10. 10.~'20. 12. 31.
서울남부사무소장	류 인 성	'20. 1. 1.~'20. 2. 16.
	이 상 달	'20. 2. 21.
김해공항사무소장	강 수 근	'19. 1. 7.
대구사무소장	이 춘 용	'20. 1. 1.
대전사무소장	황 택 환	'18. 1. 1.~'20. 7. 19.
	박 재 완	'20. 7. 20.

직위	성명	재임기간
여수사무소장	홍 혁 표	'19. 7. 8.~'20. 7. 19.
	이 호 원	'20. 7. 20.
양주사무소장	안 동 관	'20. 1. 1.~'20. 7. 19.
	황 택 환	'20. 7. 20.
울산사무소장	이 문 한	'20. 1. 1.
김포공항사무소장	이 덕 룡	'19. 7. 8.
광주사무소장	김 진 영	'19. 2. 27.
창원사무소장	김 무 진	'20. 1. 1.~'20. 7. 19.
	이 종 국	'20. 7. 20.~'20. 8. 29
	장 희 정	'20. 8. 30.
춘천사무소장	김 진 성	'19. 7. 8.~'20. 7. 19.
	정 성 경	'20. 7. 20.
청주사무소장	고 동 기	'18. 1. 1.~'20. 6. 30.
	윤 상 용	'20. 7. 20.
전주사무소장	심 준 섭	'19. 1. 7.
화성보호소장	윤 종 석	'19. 10. 10.
청주보호소장	이 종 국	'19. 7. 8.~'20. 7. 19.
	김 진 성	'20. 7. 2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이 인 숙	'19. 1. 28.~'20. 12. 31.
인천공항 지원국장	박 재 완	'19. 8. 19~'20. 7. 19.
	안 동 관	'20. 7. 20.
인천공항 심사1국장	이 기 흠	'20. 1. 1.
인천공항 심사2국장	김 기 영	'20. 1. 1.
인천공항 총무과장	이 호 원	'20. 1. 1.~'20. 7. 19.
	김 태 완	'20. 7. 20.~'20. 9. 14.
	길 강 묵	'20. 9. 15.
서울 총무과장	강 성 환	'19. 1. 7.
서울 관리과장	정 성 경	'20. 1. 1.~'20. 7. 19.
	김 용 규	'20. 7. 20.~'20. 8. 26.
	이 승 현	'20. 8. 27.
서울 이민조사대장	윤 상 용	'19. 1. 7.~'20. 7. 19.
	김 병 철	'20. 7. 20.
서울 정보화센터장	진 우 석	'20. 1. 1.
부산 관리과장	김 세 진	'20. 1. 1.~'20. 12. 20.
	공 석	'20. 12. 21.~
부산 이민조사대장	이 상 수	'19. 10. 10.~'20. 2. 16.
	김 태 완	'20. 2. 17.~'20. 7. 19.
	김 무 진	'20. 7. 20.
인천 안산소장	신 종 현	'19. 7. 8.~'20. 6. 30.
	홍 혁 표	'20. 7. 20.

그림 3 소속기관 현황(46개 기관)

그림 4 재외공관 주재관 현황(13개 국가, 19개 공관, 26명)

해외 주재관 현황

('20. 12. 31. 현재)

국가	공관명	직급	성명	부임일
일본	대사관	4급	이종국	'20.8.30.
미국	L.A.(총)	4급	이상수	'20. 2. 17.
중국	대사관	4급	공존행	'19. 1. 28.
		5급	김상희	'20. 3. 16.
	상하이(총)	4급	구병모	'19. 8. 22.
		5급	최병철	'18. 2. 12.
		5급	박상원	'20. 1. 3.
	선양(총)	5급	김종승	'19. 2. 23.
		5급	오동록	'20. 2. 24.
	칭다오(총)	4급	유성오	'20. 8. 25.
	광저우(총)	5급	이정현	'19. 2. 20.
	우한(총)	5급	주태길	'19. 8. 18.
	청뚜(총)	5급	김기성	'19. 8. 24.
러시아	대사관	4급	하용국	'18. 2. 20.
태국	대사관	4급	이재형	'18. 8. 23.
인도	대사관	4급	문수용	'19. 8. 18.
필리핀	대사관	4급	나현웅	'19. 2. 22.
		5급	김재원	'18. 2. 23.
인도네시아	대사관	4급	박제성	'19. 8. 16.
		5급	이청훈	'19. 2. 22.
몽골	대사관	4급	김태완	'20. 9. 15.
		5급	윤병승	'19. 8. 24.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5급	정길수	'18. 3. 2.
방글라데시	대사관	5급	주지정	'19. 2. 24.
베트남	호치민(총)	5급	배창준	'20. 2. 24.
캄보디아	대사관	5급	심미림	'20. 8. 30.

제2항 인사

1 2020년 상반기 인사

2020년 상반기 출입국관리직 정기인사는 2019년 하반기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파견 등에 따른 결원보충, 주재관 귀부임 및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인사 등을 위해 2020. 1. 1. 4급 4명, 5급 14명에 대한 승진인사 및 3급 2명, 4급 13명, 5급 5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0. 2. 17.에는 주재관 부임에 따른 4급 1명, 5급 1명 승진인사를 실시하였으며, 명예퇴직 및 직제개정에 따라 2020. 3. 30. 5급 3명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0. 1. 13.에는 6급 29명 승진 및 62명 전보, 7급 27명 승진 및 79명 전보, 8급 32명 승진 및 55명 전보, 9급 16명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0. 3. 30.에는 6급 38명 승진 및 13명 전보, 7급 71명 승진 및 9명 전보, 8급 90명 승진 및 11명 전보, 9급 1명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0. 1. 15. 9급 31명, 2020. 2. 24. 시간선택제 7급 1명, 9급 3명, 2020. 3. 16. 6급 1명, 2020. 4. 6. 9급 86명을 신규로 임용하였다.

2 2020년 하반기 인사

2020. 7. 20. 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결원보충, 주재관 귀·부임 전보인사 등을 위해 4급 2명, 5급 15명에 대한 승진인사 및 4급 15명, 5급 4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0. 7. 27. 에는 6급 21명 승진 및 61명 전보, 7급 8명 승진 및 102명 전보, 8급 10명 승진 및 40명 전보, 9급 21명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0. 4. 13.부 난민심의과 신설에 따른 4급 1명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2020. 7. 29. 의원면직에 따른 5급 1명 승진인사를 실시하였다.

2020. 8. 27.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운영에 대한 결원 보충으로 4급 2명, 5급 2명승진인사를 4급 1명, 5급 7명, 6급3명, 7급 1명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0. 11. 1. 국가기관 파견변경에 따른 4급 2명, 5급 2명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2020. 7. 27. 7급 8명, 2020. 7. 29. 9급 13명, 2020. 9. 28. 9급 32명, 2020. 8. 31. 5급 1명, 2020. 12. 1. 6급 1명. 2020. 12. 7. 7급 7명을 신규 임용하였다.

3 5급 이상 승진, 전보, 퇴직 현황

2020년 5급 이상 승진자와 전보자는 각각 42명과 151이며, 퇴직자는 37명으로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2020년 5급 이상 인사 내역

(단위 : 명)

구분	계	신규	승진	전보	파견	휴직	퇴직
계	241		42	151	7	4	37
고위	2						2
3급	4			2		1	1
4급	52		9	32	5	1	5
5급	183		33	117	2	2	29

2020년 5급 이상 상세 인사 현황

1 승진

■ 서기관(4급) : 9명

- '20. 1. 1.부(4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유성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정성경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호원	법무부 (국무조정실파견)	김재남

- '20. 2. 17.부(1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태완		

- '20. 7. 20.부(2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용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입국심사과 4급 유성오 주칭다오영사관 부임 시)	최문정

- '20. 8. 27.부(2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이대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승현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33명

- '20. 1. 1.부(14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배덕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백천기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일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배천기
법무부 이민통합과	정해정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조재용
법무부 이민통합과	서제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장	김순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4과장	김종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방대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최인섭	법무부 (KOTRA파견: '20.01.01~12.31.)	어원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정승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20.01.01~12.31.)	김효수

- '20. 2. 17.부(1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익산다문화플러스센터장)	최진혁		

- '20. 7. 20.부(15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체류관리과	용창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정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주재봉	화성외국인 보호소 보호과장	최민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이성용	청주외국인 보호소 보호과장	안재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구성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장	이종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고귀영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	임동영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이상배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장	전성엽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장	김용국	법무부 (보건복지부파견: '20.07.20~'21.05.31)	박성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은화		

- '20. 7. 29.부(1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장	이원호		

- '20. 8. 27.부(2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임연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익산다문화센터장)	이미라

2 전보

■ 3급 이상 : 2명

직급	신임직	성명	시행일자
부이사관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배상업	'20. 1. 1.
부이사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육승훈	'20. 1. 1.

■ 서기관(4급) : 32명

- '20. 1. 1.부(13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구본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세진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국립외교원 파견 시 까지)	류인성	주LA총영사관 ('20.2.17.부)	아상수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주재관귀임 시)	박상욱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아상달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정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춘용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이기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안동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김기영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문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9.03.02.부)	양승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무진

- '20. 4. 13.부(1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난민심의과장 ('20.4.13~'22.4.12)	이정미		

- '20. 7. 20.부(15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안동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주일본대사관 부임 시까지)	이종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주몽골대사관 부임 시까지)	김태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주재관 귀임 시)	장희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주재관 귀임 시)	길강묵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성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병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윤상용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무진	청주외국인 보호소장	김진성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	홍혁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호원	주칭다오총영사관 ('20.8.25.부)	유성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황택환		

- '20. 8. 27.부(1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국경안전 긴급대응단반장	김용규		

- '20. 11. 1.부(2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김태형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파견 '20.11.1~)	박상욱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117명

- '20. 1. 1.부(58명)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체류관리과	최문정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장	신현민
법무부 이민정보과	이우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장	임동규
법무부 국적과	정금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아상한
법무부 국적과 (주재관귀임 시)	은기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장	조기수
법무부 난민과	김민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서영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장	이승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임채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곽준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최종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감식과장	임홍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유심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장	유용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전창엽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장	김병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범과장	나모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재심2과장	박진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이명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과장	임준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조은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3과장 (주중국대사관 부임 시까지)	김상희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권종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3과장 (주재관귀임 시)	서형기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종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5과장	김호중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상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8과장	안호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보경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3과장	서윤원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익산다문화센터장)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김기락	화성외국인 보호소 사범과장	안숙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장	강대열	청주외국인 보호소 관리과장	전강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장	임선봉	청주외국인 보호소 사범과장	조승래
청주외국인 보호소 보호과장	김성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장	윤영주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주선양총영사관 부임 시까지)	오동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	이승호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주재관귀임 시)	이복행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아산다문화센터장)	최성희

신임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장	최남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송은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장	이왕훈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항만출장소장	김재석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	김진용
법무부 주호치민총영사관 ('20.2.24부.)	배창준

신임직	성명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천안다문화센터장)	이달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장	김길술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성출장소장	강영우
법무부 (대테러센터파견: '20.01.01.~12.31.)	김경수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파견: '20.01.01.~12.31.)	황민하
법무부 (주상해총영사관 부임 시까지)	박상원

- '20. 3. 30.부(3명)

신임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재심1과장	정영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형연

신임직	성명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장	곽범현

- '20. 7. 20.부(47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류재석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춰경
법무부 이민조사과	이상목
법무부 이민조사과	신한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최성은
법무부 국적과	최진혁
법무부 이민통합과 (주캄보디아 대사관 부임 시까지)	심미림
법무부 난민정책과	홍인표
법무부 난민심의과	조승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재심2과장	손흥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과장	배명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3과장	윤양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4과장	이달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6과장	나모수

신임직	성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복행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김동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소근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백천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배천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김명훈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임채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범과장	조영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임용성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입국과장	정희정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과장	권선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황선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범과장	박진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익산다문화센터)	최문정

신임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7과장 (주재관 귀임 시)	오점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8과장	김종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9과장	정병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0과장	최규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1과장	김필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2과장	빙대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5과장	유현송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통합과장	강성록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이호수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파견: '20.07.20.~'21.03.31.)	서영군

신임직	성명
청주외국인 보호소 사범과장	김성식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장	김용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안산다문화센터)	김영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천안다문화센터)	정왕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장	최종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장	김효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김일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박홍상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주재관 귀임 시)	임은진

- '20. 8. 27.부(7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고동중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용국
법무부 이민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임용성
법무부 이민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주재봉

신임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장	김홍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20. 8. 30.부)	오점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장 ('20. 9. 8.부)	김형연

- '20. 11. 1.부(2명)

신임직	성명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성규

신임직	성명
법무부 (보건복지부 파견: '20.11.1~)	김보경

3 퇴직

■ 3급 이상 : 3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 고
고위공무원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근	'20.3.10. (의원면직, 외교부복귀)
고위공무원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	손홍기	'20.12.31. (명예퇴직)
부이사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장	최영길	'20.12.31. (명예퇴직)

■ 서기관(4급) : 5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 고
서기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수남	'20.6.30. (정년퇴직)
서기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상진	'20.6.30. (정년퇴직)
서기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백석현	'20.6.30. (정년퇴직)
서기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고동기	'20.12.31. (정년퇴직)
서기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	신종현	'20.12.31. (정년퇴직)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29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 고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과장	임준식	'20.4.30. (명예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감식과장	김기철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3과장	서형기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7과장	유제경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8과장	안호근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9과장	김경희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0과장	박정호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1과장	이진수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2과장	최인식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소장	한성근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임상훈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박동철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과장	최철수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장	최희주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	주면식	'20.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장	이봉규	'20.6.30. (정년퇴직)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 고
출입국관리사무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장	이왕훈	'20.7.24. (의원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복행	'20.12.7. (당연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5과장	김일환	'20.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재심2과장	이양수	'20.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과장	윤형탁	'20.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4과장	이달세	'20.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2과장	방대완	'20.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장	최남일	'20.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	김진용	'20.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승호	'20.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장	김길술	'20.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권종현	'20.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보경	'20.12.31. (정년퇴직)

제3항 시설·예산

1 소속기관 청사 신축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만성적인 민원 적체를 해소하고 외국인보호 및 조사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사 신축공사를 '18. 1월 착공, '20. 2월 청사 준공 후 '20. 3월 청사 이전을 완료하였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청사 방문민원인의 급증에 따라 청사 민원혼잡도가 극심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청사 이전 신축공사를 '19. 10월 착공, '20. 12월 청사 준공 후 '21. 3월 청사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민원 및 사무 공간이 부족을 해소하고, 영남지역 출입국기관(부산·대구·창원·울산) 관할지역 내 외국인 전문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청사 신축공사 설계를 '20. 8월 완료, '20. 12월 착공한 후 '22. 12월 청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민원 및 사무 공간이 부족을 해소하고, 현재 관할 밖에 위치한 청사를 관내로 이전하여 체류관리의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원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사 이전 신축공사 기본설계를 '20. 12월 시작, '22. 10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 총사업비 : 608억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사업규모 : 부지 부지 11,568㎡, 건물 9,917㎡

그림 5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감도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51-1
- 총사업비 : 40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사업규모 : 부지 1,874㎡, 건물 1,496㎡

그림 6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조감도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38
- 총사업비 : 166억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규모 : 부지 11,244㎡, 건물 6,876㎡

그림 7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감도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일원(문정지구 11-2BL)
- 총사업비 : 957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사업규모 : 부지 9,035㎡, 건물 17,329㎡

그림 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감도

2 예산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예산은 총 2,73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5% 증가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제2차, 제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인건비(총액) 사업에서 117억 1,200만원,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사업에서 15억 등 총 139억 2,300만원 감액을 반영하여 최종 예산은 총 2,594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0.1% 증가하였다. 참고로,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1,386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약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20년 예산 내역

■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19년 대비	
			증감	%
세입	54,599	54,599	0	0.0
세출	259,133	259,432	299	0.1

■ 주요경비별 내역(세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19년 대비	
			증감	%
계	259,133	259,432	299	0.1
인건비	152,993	138,665	-14,328	-9.4
기본경비	14,783	14,834	51	0.3
사 업 비	91,357	105,933	14,576	16.0

■ 사업비 세부사업별 내역(세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19년 대비	
			증감	%
이민정책개발지원	411	406	-5	-1.2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1,796	2,274	478	26.6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42,061	39,754	-2,307	-5.5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4,190	4,467	277	6.6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신규	13,792	13,792	100.0
외국인보호관리	14,474	15,168	694	4.8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337	12,439	102	0.8
외국인체류질서확립	8,700	8,902	202	2.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7,388	8,731	1,343	18.2
합 계	91,357	105,933	14,576	16.0

2
CHAPTER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1절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제2절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제3절 이민범죄 단속 강화 및 자진출국 유도
제4절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수요자 중심의 국적정책 개선
제5절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제6절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및 정책역량 강화
제7절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제8절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제9절 국제협력 강화
제10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제1절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제1항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안전한 국경관리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류재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감염병의 해외 유입 억제 조치와 함께 필수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별적·선제적 국경관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0. 2. 4.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출발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탑승을 차단하고, 2020. 3. 9. 일방적인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정지, 2020. 4. 13.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90개 국가·지역의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인천공항 환승을 통해 자국으로 귀국하려는 외국인들이 자국의 입국제한 조치 또는 항공편 미비 등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국내공항 환승장에 장기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 발생함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 환승을 불허, 24시간 이내에 연결항공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환승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국내공항 환승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후, 격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한 검역소 요청 특별입국 불허 및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따라 시설/자가 격리 대상자 선별 업무를 지원하고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모든 국민 및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회수하였으며, 시설격리 외국인이 비용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자체 등 시설관리 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의 시설격리 동의서를 폐지하고 「시설격리 및 비용납부 동의서」를 활용하여, 격리비용 보유 여부 및 격리조치 및 격리비용납부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한편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 위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격리면제서 발급명단을 송부받아 격리면제서 진위 여부를 입국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표 4 공항만 격리통지서 교부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인천공항	기타 공항만
합 계 (2020. 4. 7.~12.31.)	636,255	621,548	14,707

2 평가 및 발전방향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25,364명의 탑승 시도를 해외 출발지 공항 발권단계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국내 코로나19방역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로 불요불급한 이동을 막고 사증심사 단계에서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 후 사증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선별적 제한 조치로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해외 유입 억제 조치를 시행하여 다른 국가와 달리 전면적인 국경봉쇄를 하지 않고도 효율적·선별적 국경방역을 실현하였다.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검역소의 입국불허 요청자 191명을 특별입국 불허하였고, 636,255건의 격리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검역업무 지원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기여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병력 외국인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탑승 전 사전정보 분석·심사를 통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전염병 발생 시 국내 유입 차단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제2항 전자여행허가제(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 준비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류재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그 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선린외교,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 발급을 통한 점증 장치 없이 도착함에 따라 인터뷰 등에 따른 입국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전, 최근 4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연평균 22.1%씩 증가하였고 2019년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중 무사증입국 외국인이 52.9%를 차지하는 등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급증하였다. 이에 공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태국 등 일부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입국불허가 증가하여 외교적 마찰 등 사증면제 및 무사증 제도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테러의 위협 및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유입 차단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경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를 위해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입국 적격 여부를 사전에 점증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20. 1월 조응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자여행허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법안(제7조의3 '사전여행허가' 신설)이 통과되었고, 8월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구축 예산(약 29억 3천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다. 10월에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10.16.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21. 3. 15.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 국가는 사증 면제 협정 66개국, 무사증입국 허가 46개 국가·지역 총 112개국이며, K-ETA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여행정보, 범죄 및 감염병 정보 등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불체다발 국가 등의 국민은 7개 항목 추가)하여야 한다. 신청은 K-ETA 홈페이지(웹: www.k-eta.go.kr, 모바일앱: K-ETA)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시행으로 도착 전, 신속심사 대상과 재심 인터뷰 대상을 분류하여 도착 후 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재심 인터뷰 대상에 대해 집중심사를 하는 등 승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위험도에 따른 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발국 탑승 전에 K-ETA 신청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감염병 보유, 법 위반자 등 고위험군 외국인 탑승객을 미리 차단하여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을 구축하면서도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율 상위 국가 국민의 입국을 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시행으로 기존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던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정보축적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조사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비교자료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고위험 외국인의 전자여행허가(K-ETA)를 불허함으로써 인터뷰 등 재심심사 및 강제송환 감소로 공·항만 행정력 감축도 기대된다.

제3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공·항만 확대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배덕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지문과 얼굴사진을 등록하고, 본인이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 심사대에 인식시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출입국심사 제도이다. 2008. 6월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래 국민 및 외국인의 사전등록절차 생략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양양공항, 무안공항, 평택항에 신규 설치하여 11개 공·항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공·항만을 확대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입국 자동심사 전면 제한(2020.4.11.) 및 출국 외국인 자동심사 제한(2020.6.11.)으로 전체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비율은 전년(40.3%) 대비 3.2%감소하여, 전체 출입국자의 37.1%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였다.

표 5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기준: 2020.12.31. 단위 : 대)

구분	합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설치 대수	202	148	15	6	4	4	4	3	3	7	5	3

표 6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입국자	계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1
	국민	45,313,898	53,445,030	57,859,670	57,795,389	9,171,481
	외국인	34,674,076	26,962,672	31,048,750	35,752,704	5,530,350
자동심사대 이용자	계	17,269,210	24,620,574	30,466,946	37,697,784	5,459,765
	국민	16,292,958	23,810,124	29,420,061	32,093,114	4,706,607
	외국인	976,252	810,450	1,046,885	5,604,670	753,158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대비 자동이용율(%)	21.6%	30.6%	34.3%	40.3%	37.1%
국민 자동이용율	36.0%	44.6%	50.8%	55.5%	51.3%
외국인 자동이용률	2.8%	3.0%	3.4%	15.7%	13.6%

그림 9 추진경과

- 2008. 6. ····· **자동출입국심사 개시**
  국민, 승무원
- 2010.8.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개시**
  영주 · 투자자격 등록외국인
- 2012.4.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확대**
  결혼이민자 등 11개 체류자격 소지자
- 2013.7.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14세 이상 국민, 복수상륙허가 승무원
- 2014.3.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한국방문우대카드
- 2015.11.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외국국적 동포 ·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
- 2016.7.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7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 2017.3. ····· **자동 출입국 이용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 2018.10. ····· **자동출입국 이용 등록외국인 사전등록절차 생략**
- 2019.7. ····· **관광객 등 단기방문 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국심사대이용**
- 2020.4.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동심사대 이용 제한**
  입국 자동심사 전면 제한(4.11.), 출국 외국인 자동심사 제한(6.1.)

2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간 교류가 제한됨에 따라 전년대비 자동출입국자심사대 이용자는 32,238,019명 감소하여 85.5%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이 제한되어 전체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비율은 37.1%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나, 추후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 되면 비대면 심사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보다 증가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증설,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출입국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제4항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확대 시행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배덕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 공헌자, 기업인, 참전용사 등에게 보다 나은 출입국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 12월 개정된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조건부 고액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상생협력우수기업 종사자, 국가보훈처장이 선정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직계 자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총 1,176건의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였다.

■ 우대 관련 카드 제도 현황

가)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 1996. 11월 APEC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시행을 선언 후 한국, 호주, 필리핀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해 1997. 5월 최초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 19개국의 APEC 회원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비자 대신 동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카드 소지자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회원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제공 받는다. 2021. 3월부터 호주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버전의 ABTC(모바일 ABTC)의 발급을 시행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2020. 12월 말 현재 19개국 총 카드 발급 수는 372,353개이며 이 중 한국인은 58,961개로 회원국 중 2위이다.

표 7 APEC 기업인 여행카드 활용 현황

(기준: 2020.12.31., 단위 : 개)

국가 / 카드수	중 국	호 주	한 국	싱가폴	홍 콩	베트남	타 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372,353	61,067	22,322	58,961	53,143	44,476	17,152	11,331	10,684	23,472
일 본	**대 만**	**인도네시아**	**페 루**	**칠 레**	**멕시코**	**필리핀**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35,302	19,286	4,744	1,863	3,089	1,866	1,021	169	232	2,173

나)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VIP Card) : 국가·사회발전 공헌자에게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출입국심사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카드 소지자는 출입국 시 동반 3인까지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013. 12월 시행 후 2020. 12월 말 현재 18,652명에게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되었다.

다) 한국방문우대카드(Korea Priority Card) :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증 발급 등 출입국절차를 우대하고 관광 위락시설·면세점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에게는 출입국 우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자동심사대 이용 및 의료, 통역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2020. 12월 말 현재 2,878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출입국우대카드를 지속적으로 발급하여 기업인 및 사회발전 공헌자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가 간의 교류 재개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바일 ABTC 도입 준비 등을 통하여 기업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류하며 투자,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5항 출국금지 제도 개선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윤정용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2020.6.8.) 및 국가인권위원회(2020.7.15.)의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출국금지 제도 전반에 대한 심사 절차 재점토 및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출국금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 출국금지 대상자 한정 ▲ 통지 제외 기간 축소 ▲ 통지 제외 요청서 신설 ▲ 심의위원회 상설화 및 법적근거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출국금지 제도의 사후통제를 위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4인(출입국정책단장, 장관정책보좌관,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으로 조정하였다.

표 8 기관별 출국금지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7,493	14,714	14,886	15,092	11,201	42,693
검 찰	6,591	6,919	6,137	5,569	5,539	8,400
경 찰	1,810	2,283	2,107	2,325	2,525	3,424
관세청	86	37	73	66	78	69
국세청	1,611	4,421	5,670	6,503	2,220	2,085
병무청	319	439	391	253	159	99
기 타	17,076	615	508	376	680	28,616

* 2015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16,576명은 메르스 관련자이고, 2020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22,613명은 코로나19 관련자

본인 또는 소송 수임 변호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불편이 컸던 출국금지 조회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9. 12.24. 온라인으로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2020. 6. 1.부터 정보통신망(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출국금지여부·요청기관·출국금지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제도를 시행하였다.

표 9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실적(2020. 6. 1.~12. 31.)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863건	511건	590건	503건	522건	542건	570건	625건

그림 10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2 평가 및 발전방향

출국금지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출국규제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출국금(정)지 이의신청 기간 확대, 출국금(정)지 기간 장기화 방지 등 개선안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제도 시행 이후 2020. 6. 1.~12. 31.까지 총 3,863명이 온라인을 통해 출국금지를 조회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출입국이 활발해지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국규제 제도와 관련하여 「출국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규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출국규제 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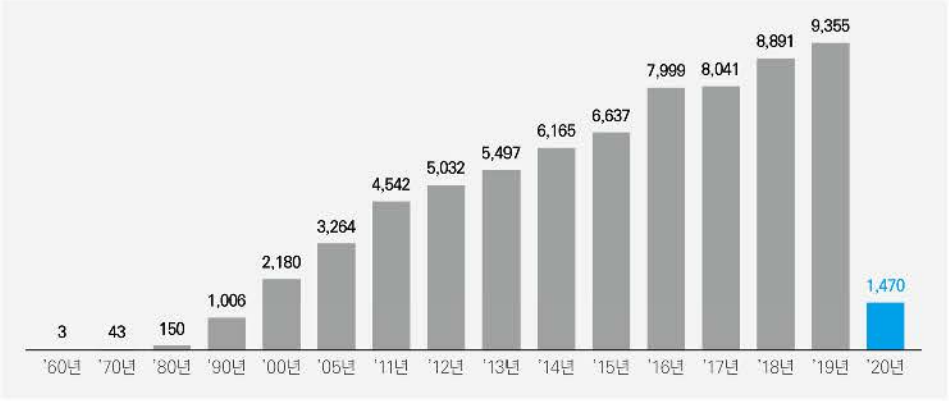
제6항 출입국자 현황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김지연

2020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93,548,093명 보다 84.3% 감소한 14,701,831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9,171,481명으로 전년도 57,795,389명에 비해 84.1% 감소하였고 외국인은 5,530,350명으로 전년도 35,752,704명에 비해 84.5% 감소하였다.

그림 11 출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만 명)



1 외국인 입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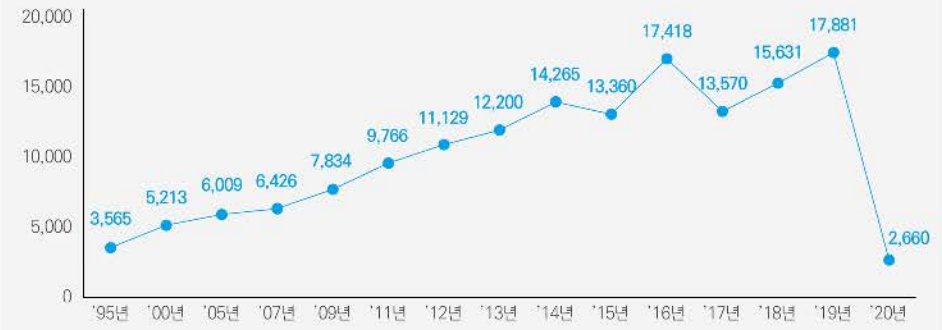
2020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2,659,845명으로 전년도 17,880,503명에 비해 85.1% 감소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74만 명(27.8%), 일본 43만 명(16.5%), 미국 26만명(10%), 대만 17만 명(6.5%), 필리핀 12만 명(4.5%) 순이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167만 명(63%)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11만 명 (4.2%), 유학 8만 명(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4,301,903명으로 전년도 28,905,763명 대비 대폭(85.1%) 감소하였다. 2007년 이후 감소하던 국민 출국자가 2010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대폭 증가세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던 국민의 출국자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1994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13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제2절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제1항 비자스티커 폐지 및 전자검증 시스템 도입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대한민국을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평균 260여만 장의 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외국인의 여권에 비자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발급하는 비자스티커 인쇄에 소요되는 예산만 연간 22억 원에 달하며, 비자 발급량이 많은 공관에서는 공관별로 평균 2명 이상의 행정원이 비자스티커 관리 및 부착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비자발급 방식의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7. 4월부터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 전면시행 등 정보인프라 개선으로 비자스티커 부착 필요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인이 손쉽게 '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동시에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비자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개선된 비자발급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0. 2월부터 우선 비자 발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럽지역(총 24개국*), 미국,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시범운영 하였다.

*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헝가리,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불가리아, 프랑스, 그리스, 루마니아, 세르비아, 스위스, 독일, 스웨덴

2020. 7월부터는 전 세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발급을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4 비자발급확인서 온라인 발급

〈기존 : 여권부착〉

〈개선 : 온라인 발급〉

■ 평가 및 발전방향

비자스티커 부착 폐지로 인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연간 약 2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행안부 주관, '2020년 혁신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특히,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위·변조 비자를 통해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 등 국익위해사범의 입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항공사·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제2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가 일손 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종철

법무부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 9월부터 충북 괴산군·보은군, 강원도 양구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어촌지역까지 확대하여 현재 농·어번기 계절성이 있는 농작물과 수산물 분야에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2015. 10월~2016. 12월) 7개 지자체에 219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21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1,085명(농업 831명, 어업 254명), 2018년에는 42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2,824명(농업 2,249명, 어업 575명), 2019년에는 50개 지자체에 3,497명(농업 2,948명, 어업 549명)을 활용하는 등 그 사업 규모 및 근로자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해외 신규입력 도입이 불가능하여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자격 외국인 및 취업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활동을 허용하여 25개 지자체에 223명(농업 142명, 어업 81명)을 계절근로자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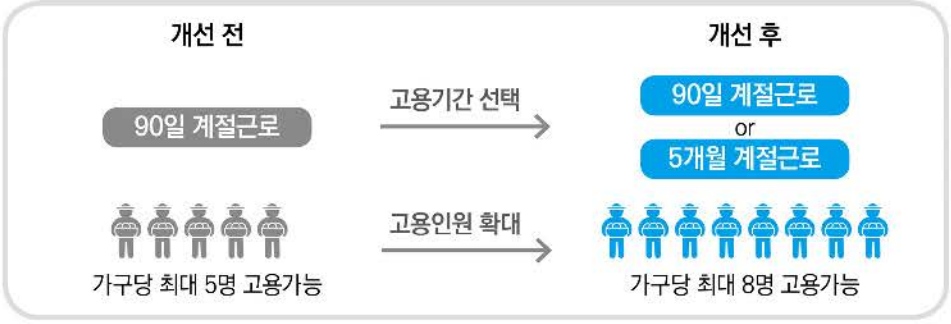
표 10 계절근로 외국인 국적별·연도별 운영 현황

연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	네 팔	9	33	45	82	45	214
2	라오스	·	·	31			31
3	러시아	·	·	8	7		15
4	몽 골	20	61	152	95		328
5	베트남	29	375	1,039	1,535	112	3,090
6	우즈베키스탄	·	1	8	11	4	24
7	인도네시아	·	2	2	2	1	7
8	중 국	73	163	128	233	11	627
9	캄보디아	·	37	158	251	10	456
10	키르키즈스탄	11	·	·	139		150
11	필리핀	58	413	1,253	1,142	4	2,870
12	기타					36	36
합 계		200	1,085	2,824	3,497	223	7,848

특히, 2020년에도 계절근로 허용인원 상향(현행 5명→8명),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농가당 1명씩 추가고용), 계절근로 5개월 장기체류자격(E-8) 허용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대폭 개선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공로로 담당 김택균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정책명장'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림 15 계절근로 5개월 허용



■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공급자(농어민)·소비자(일반 국민)·근로자(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어가의 인력수급을 위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을 못하고 있는 동포(H-2)를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3항 코로나19 감염 해외유입 최소화를 위한 '재입국허가제' 시행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장기체류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등록외국인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됐지만 2020. 6. 1.부터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했고, 또 재입국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병원진단서 또는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체류자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기존과 같이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였다.

재입국허가를 전격 시행하게 되면서, 기존에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었던 등록외국인이 혼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홍보가 필요했고, 이에 법무부는 외신기자 간담회(2020. 6. 16.), 주한 EU회원국 대사 간담회(2020. 6. 17.) 등을 열어 제도취지 등을 적극 대외에 알렸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방문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 신청제를 시행하였다.(2020. 10. 12.)

그림 16 재입국허가 시행 홍보

〈외신기자간담회(6.16. 프레스센터)〉

〈주한 EU 회원국 대사 회의〉

2020. 12월까지 39,442명이 재입국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36,671명(93%)이 출국, 7,719명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월별 재입국허가 운영 현황

구분	총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입국허가	39,442	3,804	3,435	3,057	3,838	5,612	7,498	12,198
- 출국자	36,671	2,016	3,567	3,005	3,841	5,102	6,028	13,112
- 입국자	7,719	48	565	1,567	1,193	1,333	1,357	1,656

■ 평가 및 발전방향

재입국허가제 시행 이후 국내 체류외국인의 해외 이동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재입국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진단서 소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코로나19 해외유입 감소에 기여하였다.

제4항 코로나19로 인한 외국국적동포 고충 해소 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정욱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 특히,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시행(2020. 2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강화대상 국가 출신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 시행(2020. 10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2020. 11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2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는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출국 항공편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을 유예하였다.

그림 17 출국기간 연장 관련 언론 기사

법무부 '신종 코로나'로 중국 못간 中동포 체류 연장

신종코로나 사태 속 중국 동포들이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하는 까닭

2020. 7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일부 국가를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하면서 방역강화대상 국가 국민은 사증발급이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족이 있는 방역강화대상 국가 동포가 우리나라에 입국이 어려워져 가족 간 이별이 장기화 되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초중고에 다니다

출국하였다가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되어 사증발급이 제한된 동포의 자녀와 동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발급 제한 대상에서 해제하였다.

2020. 11. 16.부터는 방문취업(H-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하던 동포가 체류기간이 끝나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한 경우(동포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그의 가족도 함께 출국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 가족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해당 동포가 입국 후 함께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포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면서도 국가 간 이동으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계속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제5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괄직권연장 및 비대면 민원처리 확충

체류관리과 사무관 용창식

코로나19의 확산 및 재확산으로 인한 자국행 비행편 등의 부재로 출국을 못하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하였고, 이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출입국외국인관서 주변의 주민은 물론 각종 체류허가를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 체류외국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재한외국인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민원처리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우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실시했다.

직권 연장은 2월 24일, 4월 9일, 12월 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총 21만여 명의 외국인이 직권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직권연장은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었으며, 연장된 체류기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등록외국인 뿐 아니라 출국을 못하는 단기체류 외국인들의 이동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시급하게 이들에 대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4월에는 단기체류외국인 출국기간 연장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6월에는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뒤이어 구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7월에는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출입국·체류·국적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 온라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9월에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온라인 신청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10월에는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제를 전면 시행하여 비대면 민원처리를 확충하였다.

제도 시행이후 2020. 12월말까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는 39,442건이고, 단기체류외국인 출국기간연장은 342,114건 허가하였다.

■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의 직권연장 조치와 비대면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은 민원인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온라인을 통하여 손쉽게 체류기간 연장 및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익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직권연장의 경우, 직권연장 조치 후 관련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문자전송, 홈페이지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정책도 실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표적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6항 6.25 70주년 기념, 한국전 참전용사 등에 대한 출입국·체류 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법무부는 한국전 UN군 참전용사와 그 후손, 참전국 우수인재를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을 시행했다.

유해 봉안식, 재방한 행사 등 정부초청 방한사업(외교부·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입국하는 참전용사와 그 후손·가족에 대해서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무료로 발급하였으며, 참전용사 및 그 직계가족에게는 우리나라 각 공항에 설치된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하여 '전용통로(fast-track)'로 쉽고 편리하게 입출국 할 수 있도록 출입국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하였다.

또한, 국가보훈처 주관 '6.25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우수인재 68명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업과 체류가 자유로운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

*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6.25 UN참전국(22개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협업하여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 10명 내외를 선발·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

** (정부초청장학생)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22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00여명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등록금·생활비·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림 18 참전국 후손에 비자혜택 언론보도

■ 추진성과

이번 참전국 국민에 대한 거주(F-2) 비자 발급 정책은 우리정부가 한국전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민으로 하여금 6.25.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숭고한 뜻을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7항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상담서비스 강화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이 취약한 재한외국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방역당국과의 3자 외국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의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1월 2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이하 '1345')를 24시간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재한외국인에게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전국보건소 등의 의료진과 외국인간의 통역지원도 강화하였다.

■ 추진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하여 온 운영체제를 24시간(토·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였다.

- 평일 09:00~18:00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 등 20개국 언어로 운영)
  18:00~09:00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 운영)
- 토·공휴일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 운영)

특히, 상담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2,197건의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상담은 182,826건에 이르고 있다.

* (18개 기관) 질병관리청,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금융감독원,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헌충원, 의료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대전시청

한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기존 목동센터에서 염창센터를 추가하여 2원화 운영함으로써 상담사 근무 밀집도를 낮추는 등 상담사의 개인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림 19 법무부장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 향후계획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200만 명이 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24시간 출입국 및 각종 체류 관련 상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는 한편, 국내 체류외국인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체류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기능을 확충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재한외국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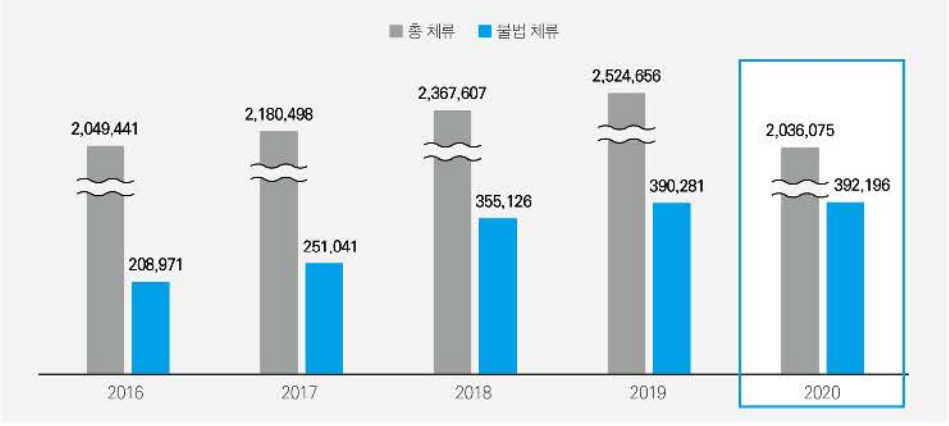
이민범죄 단속 강화 및 자진출국 유도

제1항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지속 추진

이민조사과 주무관 정성식

2019. 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른 2020년 상반기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7월 이후 자진출국 외국인 범칙금 부과 등 다양한 감축 정책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선 항공편 중단·축소 영향으로 외국인의 출국이 제한되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6년 이후 급증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19년도와 비슷한 39만명 선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20 총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 36개 특별단속지역과 74개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정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산하 이민특수조사대 및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등 주요 출입국사범, 국민안전 및 서민일자리 분야에 대한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새로운 감염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진을 위한 단속유예 및 관계기관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점검·계도, 추석 전후나 연말연시 국가별 행사·모임 자제 홍보 및 방역 점검 강화 등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으로 5월 등 집중방역기간에는 전국단위 단속을 유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진료소 등 운영지역과 진료를 위한 이동 과정에 대하여는 단속 유예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단속활동이 제한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법유흥·마사지업소 집중단속(1월, 12월), 대포차 운행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2월),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4월~6월), 국민안전 및 서민일자리 침해 출입국사범 단속(8월~9월)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2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이민조사과 주무관 정성식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2013년부터 단속과 함께 자진출국 및 불법고용 방지 사전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2020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었다.

2019. 12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으로 '20. 6. 30.까지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20. 7. 1. 이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과거와 달리 불법체류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진출국 신고자의 코로나 감염전파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및 대면신고를 지양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1차 : 3. 11.~6. 30., 2차 : 12. 16.~)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각 국의 항공편 중단 축소로 항공편 예약이 곤란해짐에 따라 '20년 4월부터는 예약항공권 제출없이도 자진출국신고가 가능토록 하였다.

2020. 7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지자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방역 실태 점검 및 점진 독려를 위한 계도, 자진출국 유도 홍보 활동을 병행하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추석 전후 방역 점검 및 이동 자제 홍보활동, 핼러윈데이 대비 특별 방역계도 순찰활동 등 연말까지 방역 점검 및 자진출국 유도 계도활동을 지속하였다.

※ 벌집촌·밀집시설 등 2,539개소, 인력사무소 738개소 점검, 마스크 6만여 개, 손소독제 1.6만여 개 배부 (7. 1.~12. 31.)

표 12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9 대비 2020 실적
자진출국자	52,431	39,513	64,814	71,663	55,260	16,403↓ (22.9%↓)

이와 같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방역 및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계도활동 등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속활동 위축 및 강제퇴거 곤란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세 차단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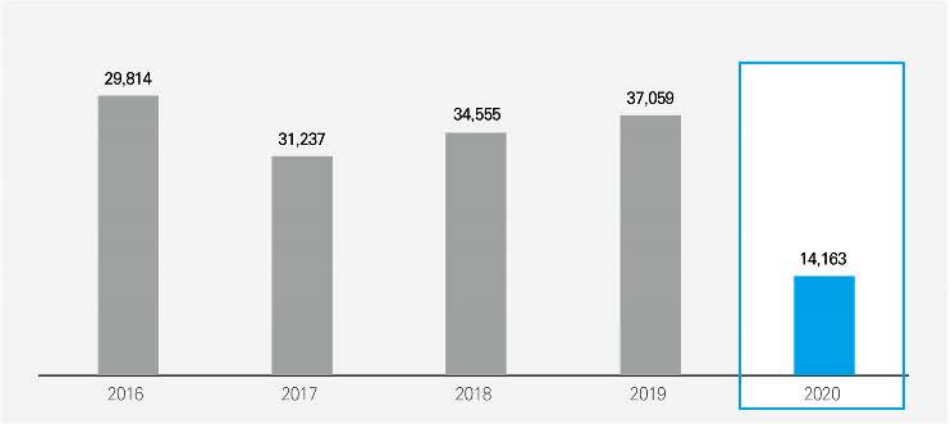
제3항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이민조사과 주무관 정성식

연중 코로나19 검진 독려를 위한 계도 및 자진출국유도 등 홍보활동에 집중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의 진정추세와 보호시설 과밀화 여부를 고려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020년 한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14,163명을 적발하여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단속활동 위축 및 '방역우선'의 정부시책에 따라 단속실적은 전년대비 38.2%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그림 21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제4항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강화

이민조사과 주무관 황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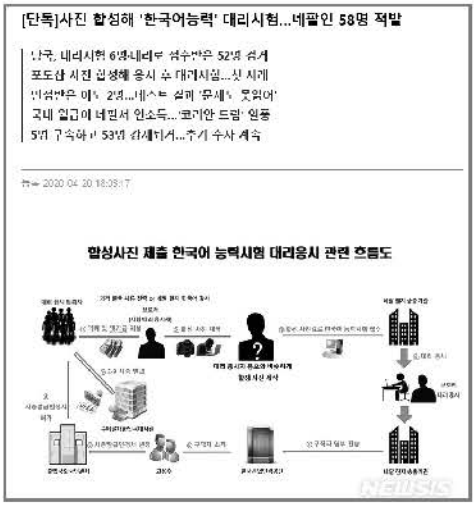
2020년도에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불법취업 알선자 등 2,338명(595건)을 적발하여 그 중 44명을 구속, 21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418명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클럽·마사지업소 등 유흥업소의 방역지침 저해 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682명, 불법고용주 205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발생 주요 요인인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알선브로커 41명, 불법고용주 및 불법취업 외국인 등 252명을 적발하여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제한으로 인해 국내 불법입국·취업 환경을 조장하는 알선자 및 대포차, 배달업 등 국민안전과 서민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하여 알선브로커 22명, 불법고용주 85명, 불법취업 외국인 509명 등 총 616명을 적발하였다

그림 22 알선브로커 적발 언론보도

미등록 체류외국인 66명에 불법취업 알선한 中브로커 구속


[단독]사진 합성해 '한국어능력' 대리시험...네팔인 58명 적발

합성사진 제출 한국어 능력시험 대리응시 관련 흐름도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2회(영상회의) 개최하고,

동향조사·사범·보호 기법연구 발표회, 유관기관·단체 초청 간담회, 권역별 동향조사요원 정례회합을 통한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 공유에도 힘썼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계도 활동으로 국민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등 안전한 사회 구현에도 노력하였다.

표 13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위변조 여권		허위초청		불법취업		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19년	882	7,569	92	121	84	151	220	2,791	486	4,506
2020년	595	2,338	44	118	44	98	146	755	361	1,367
전년대비(%)	67.5	30.9	47.8	97.5	52.4	64.9	66.4	27.1	74.3	30.3

※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단속 제한 및 방역점검·계도 활동으로 기획조사 실적 감소

제5항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이민조사과 주무관 정성식, 남명우

2019년 9월 1일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개정 시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단속과정에서의 사고 예방 노력 추가,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강화 등을 반영하여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였다.

단속·보호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5명의 직원을 국군의무사령부에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을 위탁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2020년 5월과 11월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법무부 인권국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기관별 실정에 따라 소방·전기시설 및 장비를 자체 또는 위탁 점검하였다.

2020년 2월, 6월, 10월, 12월 4차례에 걸쳐 외국인 보호시설 기관장 등과 영상회의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보호시설 및 보호외국인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강제퇴거를 앞둔 보호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체불임금 1,198건, 의료구호 2,276건 등의 고충을 적극 처리하였다.

제6항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이민조사과 주무관 장기연

2020년에 처리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18,829명으로, 이 중 강제퇴거 5,867명(4.9%), 출국명령 2,062명(1.7%), 출국권고 2,097명(1.8%)이었고, 고발된 사람은 2,605명(2.2%)이며, 그 외에 통고처분 17,863명(15%), 과태료 21,358명(18%), 처분면제 등 기타 66,977명(56.4%) 이었다.

표 14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건	금액		건	금액	
2018	176,849	31,811	4,770	3,273	30,395	49,452,520	3,482	15,595	2,086,170	87,523
2019	175,609	34,557	5,852	2,687	26,106	49,564,840	4,552	14,330	1,960,670	87,525
2020	118,829	5,867	2,062	2,097	17,863	25,114,680	2,605	21,358	3,033,820	66,977

※ 기타 : 처분면제 등

제4절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수요자 중심의 국적정책 개선

제1항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을 위한 국적증서수여식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 배경 및 경과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되고 「국적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2019. 1. 21. 제1회 국적증서수여식(국립한글박물관)의 개최된 이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제도를 통해 새로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약 3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전국 2020년 전국 18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공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방식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연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총 15,641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다.

그림 23 75주년 광복절 기념 국적증서 수여식

〈75주년 광복절기념 국적증서수여식(8. 12.)-포토뉴스 제공〉

특히 법무부장관은 제75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에게 직접 국적증서를 수여하여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동포들에 대한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0. 9월 추석을 맞아 1966년 원주교구 주임신부로 임명된 이래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보호 등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평생을 노력해 온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로버트 존(안광훈)신부를 위한 특별공로자 국적수여식도 개최하여 귀화자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민의 귀화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4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특별공로자 브레넌 로버트 존(안광훈)신부의 국적증서수여식(9.24.)-포토뉴스 제공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시행 후 2년을 맞이하였으며 올해 기획한 75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과 '안광훈' 신부의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따라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국적취득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정체성을 함양하는 행사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집합형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국적법에 따른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개별국적수여 방식으로 국적수여 방식을 다각화하는 '비대면 방식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연중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27%이상 증가한 인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여 감염병 확산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적취득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는 일률적인 식순에서 벗어나 귀화자 및 국민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기념일·지역 특성화 축제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연계 행사 참여형 수여식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2항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 개선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 배경 및 경과

국적법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기존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반드시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이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포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12273호, 2020. 12. 22. 일부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서도 재외공관을 통하여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대통령령 제312273호, 2020. 12. 22. 일부개정)하여 귀화허가 신청서 서식에 종합평가·면접심사 면제 여부, 건강정보 및 참고사항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귀화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귀화 신청자에게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였다.

한편,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귀화 면접심사의 시의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적 면접심사의 질문지 내용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질문 문항을 추가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면접 응시자의 학습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던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내용을 수정 및 보강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발간·배포하는 등 국적 신청자의 면접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국적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25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발간

〈2019년 발간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2020년 발간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밖에, 국적을 신청하는 민원인의 사무소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적 업무 방문예약제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해외 각국의 이동 제한조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라인 선 접수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국적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先온라인신고 後방문접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적 행정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국적 행정 개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국적 수요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우편 접수 및 대행제도 등 국적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적업무처리절차를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국적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예외 없는 국적이탈 시기 제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0. 9. 24.)을 함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적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3항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시행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 배경 및 경과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5. 4. 국적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학술·체육 등 분야로 한정적이고 경력이나 소득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당초 도입취지에 비해 유치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민자 및 귀화자 증가에 따른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적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 6. 26.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대상을 확대(4개→10개 분야)하고, 경력 및 소득요건을 현실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포섭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가점제도를 신설하여 국민고용 창출, 납세실적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사회봉사 및 기부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및 신산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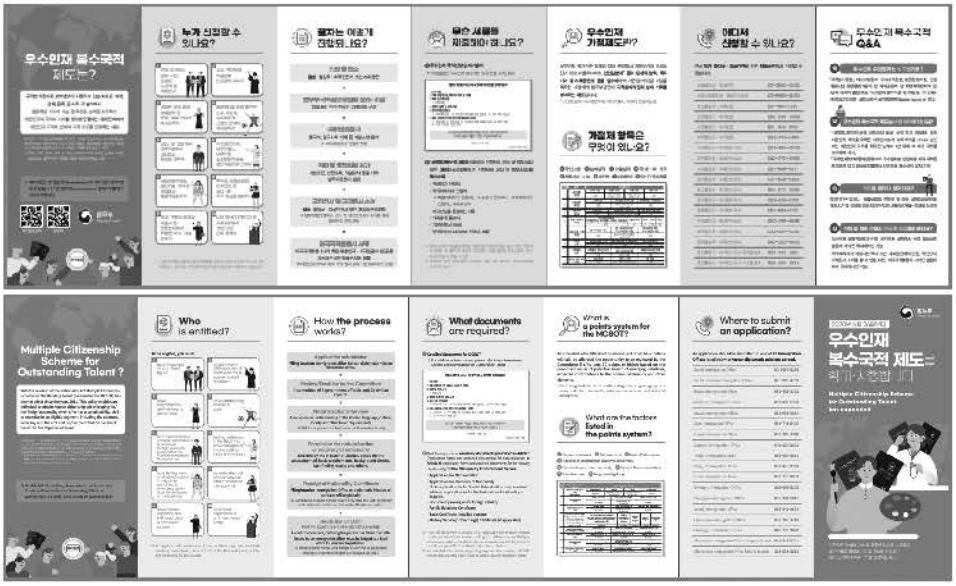
표 15 우수인재 전문분야별 현황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야
학술분야 (127)	과학(56)	의학(20), 약학(3), 보건학(2), 물리학(5), 화학(3), 미생물학(2), 생명과학(6), 지질학(1), 해양과학(3), 환경과학(2), 나노과학(5), 신소재(3)
	공학(42)	건축공학(1), 교통공학(1), 기계공학(3), 반도체(1), 바이오센서(1), 식품공학(2), 인공위성(1), 재료공학(4), 전기·전자공학(4), 정보전자융합(1), 정보통신(2), 조선해양(1), 컴퓨터공학(5), 토목공학(3), 항공우주(2), 핵공학(1), 화학공학(5), 환경공학(2), 인공지능(2)
	인문학(11)	인문학(1), 신학(2), 역사학(1), 기타어학(2), 영문학(4), 음악학(2), 경제학(4)
	사회학 등(18)	법학(2), 경제학(1), 경영학(2), 문헌정보학(1), 교육심리학(1), 국제학(1), 무역학(1),마케팅(1), 언론홍보(1), 건축학(1)
문화·예술, 체육분야 (42)	체육(29)	농구(4), 태권도(2), 럭비(1), 마라톤(1), 배구(1), 유도(1), 아이스하키(11), 바이애슬론(4), 쇼트트랙(1), 루지(1), 아이스댄스(1), 장애인노르딕스키(1)
	문화·예술(13)	바이올린(2), 피아노(1), 음악(2), 문학(4), 영화(1), 조각(1), 큐레이터(1), 기타(1)
첨단기술 (12)	나노(2)	생명과학(1), 나노과학(1)
	생물(1)	바이오나노(1)
	융복합(1)	융복합산업(1)
	전자(4)	반도체(2), 디스플레이(1), 전자제어·계측(1)
	정보기술(1)	이동통신(1)
	제약(4)	신약개발(3), 나노과학(1)
경영분야 (9)	경영·무역(9)	경영(4), 무역(5)
신산업분야 (2)	신산업(2)	바이오헬스(1), 반도체(1)
전문분야 (1)	전문분야(1)	변호사(1)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상회의와 서면회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대상자가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와 리플릿을 한글·영문으로 제작하여 우수인재들이 근무하는 대학교·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및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온·오프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제도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림 26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설명자료



2 평가 및 발전방향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도입 이래 우수인재 선정을 위한 국적심의위원회를 2020년 말까지 총 36회 개최(2020년 4회) 하여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 127명, 문화·예술 13명, 체육분야 29명, 첨단기술분야 12명, 경영·무역분야 9명, 신산업분야 2명 등 총 192명을 우수인재로 인정하여 우리 국적을 부여하였다.

특히, 2020년도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총 4회의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산업·첨단기술, 의사 등 전문분야의 다양한 우수인재를 38명 선정하였으며 이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유치한 우수인재의 연평균 수(15.6명) 대비 143%가 증가한 획기적인 실적 달성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과 소통을 통한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 등 내·외부 정책환경을 개선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4항 국적업무 처리 현황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귀화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법상 법률행위를 말한다. 귀화자는 2016년 10,108명, 2017년 10,086명, 2018년 11,556명이며 2019년에는 9,914명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13,885명으로 증가하면서 꾸준히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귀화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연간 귀화심사 TF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 국적취득자가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다.

일반귀화는 성년자로서 영주권을 갖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서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연고가 없이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도 귀화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로서 전체 귀화자 중 48.4%(6,717명)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일반귀화자로서 24.3%(3,380명)이다. 전년도 일반귀화자는 1,172명이었으나 연간 귀화심사 TF를 운영을 통하여 특히, 일반귀화자 수가 3,38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밖에,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로서 부 또는 모의 귀화 시에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인 귀화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표 16 유형별 귀화자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합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혼인귀화	기타		
2016	10,108	566	6,375	413	2,382	372
2017	10,086	715	6,438	304	2,238	391
2018	11,556	1,037	7,689	264	2,064	502
2019	9,914	1,172	6,027	339	1,763	613
2020	13,885	3,380	6,717	432	1,925	1,43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회복제도는 국적법 제정 시부터 있었으나,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1년 이내에 포기해야 했었다. 그러나 2011. 1. 1. 제10차 개정 「국적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65세 이상 고령동포가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국적회복 시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국적회복자가 「국적법」개정 전인 2010년까지 연평균 491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310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복수국적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국적회복자 추이가 2016년 2,303명, 2017년 2,775명, 2018년 2,698명, 2019년 2,443명으로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우리 동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에서 신청자들이 입국하지 못하여 국적회복자가 1,76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17 국적별 국적회복자 현황

(단위 : 명)

국적별 / 연도별	합계	미국	캐나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기타
2016	2,303	1,486	286	113	102	316
2017	2,775	1,655	356	245	112	407
2018	2,698	1,681	334	144	116	423
2019	2,443	1,476	277	182	121	388
2020	1,764	1,057	221	120	63	303

국적선택제도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적법령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제10차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 5월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1998. 6월 제4차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적선택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2009년까지 연평균 5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513명, 2017년 1,329명, 2018년 1,714명, 2019년 1,829명, 2020년 2,1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효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우수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적상실은 2016년 35,257명, 2017년 19,364명, 2018년 26,608명, 2019년 22,078명, 2020년 25,034명이며 국적이탈은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2018년 6,986명, 2019년 2,461명, 2020년 3,651명이었다.

기타 항목에는 미성년자로서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신고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그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국적재취득 등이 포함된다.

표 18 국적 신고 업무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 유형별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이탈	기타
2016	1,513	35,257	1,147	629
2017	1,329	19,364	1,905	519
2018	1,714	26,608	6,986	538
2019	1,829	22,078	2,461	679
2020	2,106	25,034	3,651	626

※ 2016년, 2018년, 2020년 국적상실 현황은 각각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이며, 2018년과 2020년 국적이탈 현황은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2018. 5. 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하여 증가한 것임

■ 향후 추진계획

2021년에는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예외없는 국적이탈 시기 제한에 대하여 법정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적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 지속 실시 및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특별공로자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꾸준히 발굴, 격려하는 행사를 매년 추진하여 귀화자 등에 대한 국민정체성을 함양하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국적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제5절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제1항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이민통합과 사무관 황선주

지난 2019년 선·후배 이민자 간 소통과 선순환적 사회통합 유도를 위한 이민자 멘토교육의 성공적 시범실시와 더불어 선배 이민자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져감에 따라, 2020. 5월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 35명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구성하여 이민자 멘토교육은 물론, 내국인 대상 상호문화 이해 강의,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출입국·외국인정책 분야 정책자문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민자 멘토단은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칭 변경 관련 정책 제안을 하여 해당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멘토교육을 121회 실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자 2,25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멘토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위기극복 릴레이 캠페인'과 '덕분에 챌린지' 등 공익캠페인과 내·외국인 상호소통 강화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법무연수원 '재한외국인이 들려주는 상호문화의 이해'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림 27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출범 1년 간 멘토교육, 상호문화 이해 제고, 정책자문, 공익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법무부는 이민자 멘토단이 참여한 '재한외국인이 들려주는 상호문화의 이해' 강의를 2021년부터 법무연수원과 인사혁신처 나라배움터 등에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2항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 전면실시를 통한 코로나19 탄력대응

이민통합과 사무관 황선주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등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기존 집합교육으로 운영하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4월, 기존 집합교육 방식에서 전면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교육 참여자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운영 정상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외국인들이 영주자격 취득 및 귀화에 필수적인 한국사회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8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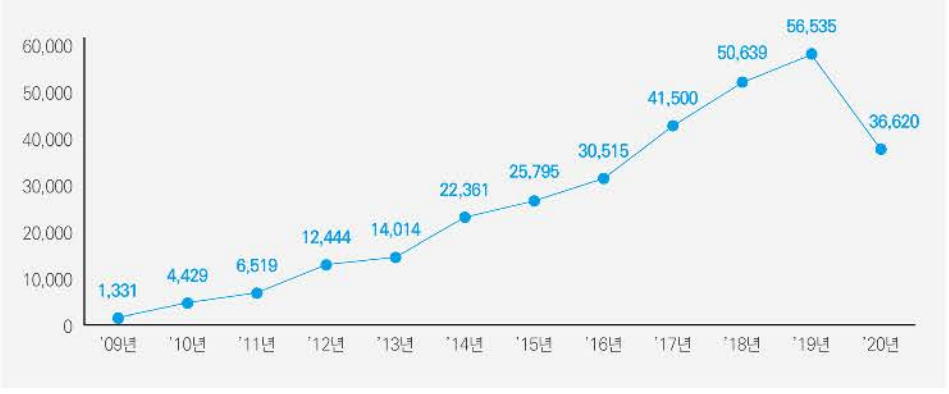


그림 29 체류자격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현황(2020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체류유형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가 커져감에 따라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국적동포 및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2021년 특수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제3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주말과정 신설

이민통합과 사무관 서제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정보,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월 2회씩 실시하고 있다.

모든 교육이 주중 일과시간에 진행되다 보니 그동안 직장인들은 연차를 활용해야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0. 7월부터 수도·중부·전라·경상·제주 등 5개 권역에서 월1회 이상 주말과정을 개설하여, 직장인들이 주말을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생업 등을 이유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웠던 한국인 배우자들은 주말교육 과정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교육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제4항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은숙

2020. 5. 2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는 제13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은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이루었고,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통을 나누고 희망의 힘으로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었다며, 그 위기 극복과정에서 재한외국인이 함께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천주교 대구 대교구 영거 수산나 메리가 대통령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하였다. 수산나 여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평생 소외된 여성과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항상 낮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양성하며 지역사회 복지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사)충남다문화가정협회 박인규 회장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단체)가 대통령표창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은자 대표, 서울시립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꿈나무학교 이성균 교장, 유니버설문화원 바수무쿨 대표,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과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 단체가 국무총리 표창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 네트워크 한드랙쟁채벨마 회장 등 5명과 (사)글로벌국제비전센터 등 2개 단체는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림 30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제5항 한부모 결혼이민자 안정적 체류지원 방안 마련

이민통합과 사무관 서제선

국민과 혼인관계가 단절된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F-5) 자격 및 국적 취득 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영주·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녀양육자의 안정적 국내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0. 12월,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의 국내 생활기반 및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다.

혼인단절 후 자녀(국민)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요건,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등의 체류지위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체류환경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이민배경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제6절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및 정책역량 강화

제1항 2020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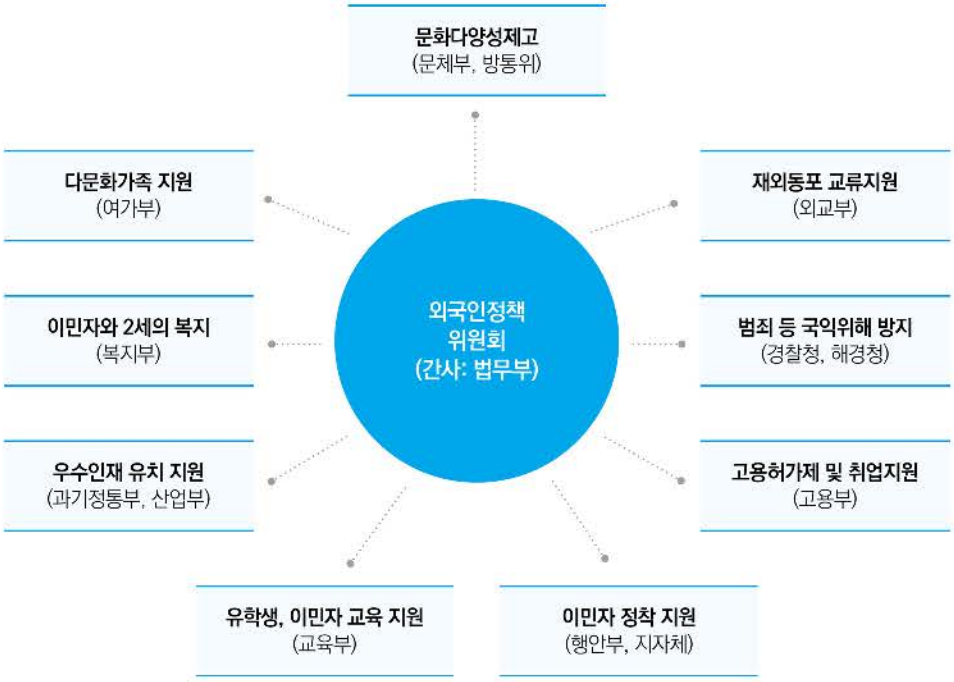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노종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1]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의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0. 7. 23.부터 2020. 7. 29.까지 '제2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1)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를 의미하며,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

그림 31 외국인정책위원회



2 주요 내용

'20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21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5,281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재외공관 비자신청센터 및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우수인재 발굴 및 입국·체류·적응 상담서비스를 다국어로 제공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한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 및 유학생 지원체제 등 교육의 질 관리 강화

- 5개월까지 계절근로 가능한 체류자격 신설,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예방 강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중장기 검토
- 환승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강화, 관광코스 다양화, 목표그룹 선정 및 홍보 확대, 인천공항 환승관광 신규코스 개발 등 환승관광 활성화

②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전자민원 확대,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 사회통합 관련 강사,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고품질 교육 인프라 구축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 보장과 내국인 권익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결혼제도 개선안 후속 조치 지속 추진
- 지방자치단체 이민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성공사례 발굴 및 표준 모델 개발 추진

③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바이오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오 정보 활용 체계 강화,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및 이용 대상 확대
- 불법체류자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적발할 수 있는 '신속 출동팀' 운영, 불법 입국·취업 브로커 집중단속을 위한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권역별 광역단속팀 확대 운영
-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 외국인 주민단체 등과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④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이민자 차별 유형 및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조사 및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시설 제공, 전문 상담·법률·의료지원 등 종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확대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을 위한 이주민 자조 모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역 내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중국 및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F-4) 부여 요건 완화 및 자격 부여 확대를 통한 동포 왕래 및 경제 활동 확대

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체류만기 도래자 등 자진귀국 의사가 있는 자 등 인도적 사유를 가진 사람에게 출국 비용 지원 등 귀국 지원, 자발적 귀환자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추진
- 법무부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재한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민자 위원의 비율 확대
-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 과정 교육 기회 확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등 공무원 교육 강화
- 국제 인구이동 통계·전국 및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및 결과 공표 등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표 19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2020년 /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221	528,101	176	286,548	1,045	241,553
1. 개방	120	218,104	43	165,491	77	52,613
2. 통합	701	164,588	39	24,814	662	139,774
3. 안전	42	18,918	25	18,344	17	574
4. 인권	287	50,224	44	17,179	243	33,045
5. 협력	71	76,267	25	60,720	46	15,547

제2항 2020년도 정책발표회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박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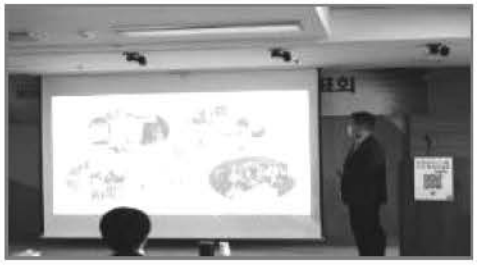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0. 11. 6. 외국인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출입국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로 매년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출입국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0년 정책발표회에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53개 과제를 제출할 정도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20. 11. 6. 개최된 정책발표회에서 '모바일 여권, C.I.Q 통합신고, 비접촉 심사도입'이 최우수상을, '보건의료 투자이민제 도입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환승구역 관리방안'이 우수상을, '빅데이터센터 신설을 통한 혁신 출입국·외국인행정 구현방안'과 '수사업무 전자화 방안', '동일외국인 정보결합'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2 제23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제3항 2020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박래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 8. 29.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 3. 24.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이민정책포럼 개최를 잠시 중단하다가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운영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평가

2020년 이민정책포럼을 통해 학자, 연구원, 정책담당자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였고,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통합', '물류산업의 인력수급 실태와 외국인력 도입 효과 연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민정책 방향', '독일의 이민법개정 배경과 실리적 선택', '이슬람과학문명', '인구학 이론' 등을 주제로

초청 강사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듣고 토론을 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33 2020년도 이민정책포럼

제7절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가. 추진배경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사증면제 협정 등 잠정정지 조치 등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어 난민신청 건수도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은 증가 추세였으나 2020년 급감함에 따라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적체 현상은 지속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난민 심사 운영과 난민통역의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심사제도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난민업무 전담인력을 확대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전담부서인 난민심의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난민심사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난민심사관과 통역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아가 난민심사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난민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12월에 입법예고하였다.

표 20 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대기 현황

(매년 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난민신청		7,541	9,942	16,173	15,452	6,684
대기	1차	3,791	7,317	16,887	22,321	14,976
	이의신청	3,066	2,325	2,747	3,253	5,118

나. 추진내용

제1항 난민업무 전담인력 확충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난민정책과 사무관 홍인표

2013년 「난민법」 시행 당시 전국 18명에 불과했던 난민업무 전담인력은 이후 5년간 21명이 증원되어 2018년 말 기준 전국 난민업무 전담인력은 39명으로 늘어났지만,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난민 신청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업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9년에는 52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난민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위원회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난민심의과')를 신설(2명 인력 증원)하였다.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진술내용과 출신국의 정황정보, 기타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매년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강의 외에도 관련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전문교육을 총 5회 실시하는 등 국내외 난민심사이론과 실무 심사기법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표 21 2020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회차	교육과정	주요 내용	주최
1차 (5. 28.~5. 29.)	초·중급 (49명)	• 난민이론 개관(박해 등 기초이론) • 난민면접 및 심사기법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아동 면접의 특수성 - 유의미한 진술 도출법과 진술의 신빙성 분석 - 러시아 및 CIS 국가정황의 이해 - 중동 국가정황의 이해(여성 인권 및 개종)	법무부/UNHCR
2차 (8. 13.)	초급 (22명)	• 난민이론 개관 • 난민면접 및 심사기법, 국가정황정보 수집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협약상의 박해사유 분석 및 난민인정기준 - 난민통역의 이해	법무부/UNHCR
3차 (9. 1.~9. 4.)	초급 (26명)	• 난민이론 개관(난민법 및 난민협약) • 난민면접 및 심사기법 • 최신 소송 동향 및 판례 분석 • 전문가 초청 강연 - 라포형성 훈련 - 트라우마 및 치유상담의 이해 -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가정황의 이해	법무부
4차 (11. 6.)	중·고급 (38명)	• 난민이론 및 면접기법(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 전문가 초청 강연 - 성소수자 난민의 이해 - 성소수자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 사례 분석, 역할극 및 소그룹 토론 • 해외판례 분석	법무부/UNHCR
5차 (11. 20.)	중·고급 (20명)	• 중동권 국가 심사 시 유의사항, 최근 쟁점사항 공유 • 전문가 초청 강연 - 이집트 국가정황의 이해 • 사례 분석 및 소그룹 토론	법무부

제2항 난민 통역 제도

난민정책과 사무관 구성림

2020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자의 국적이 85개, 난민통역 언어가 36개에 달하는 등 난민신청자의 국적과 구사언어가 다양해지며 소수·특수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통역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였고, 2020. 12월 현재 29개 언어 205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하고 있다.

한편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품질을 검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0년에는 4차에 걸쳐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난민전문통역인 154명에 대한 통역능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난민전문 통역인에게 난민제도와 통역윤리, 난민통역실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의 역량강화 및 통역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제3항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난민정책과 사무관 임연주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는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를 6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금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신국의 박해로부터 긴급히 피난해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중 별도로 지원신청을 한 사람들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소득·자산, 주거현황, 자녀동반 또는 임신여부, 중대한 질병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로 지급된 비용은 총 5억4천만 원이며,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2 2020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센터 비(非) 입주자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센터 입주자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2020년 한 해 전체 난민신청자 6,684명 중 460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이 중 262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제4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난민정책과 사무관 임연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로 2020년 신규 입소자는 총 19명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어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은 화상 교육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와 상생·소통하기 위해 체육 시설 개방, 관내 외국인 대상 이동 출입국사무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선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5항 재정착난민 수용

난민정책과 사무관 임연주

재정착난민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재정착난민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42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여 지역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 중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현지에서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후 입국하여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초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된 '재정착 난민 수용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태국 내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총 86명(16가족)을 수용하며 1차 시범사업을 종료하였다. 이어 2018. 6월 사업국을 말레이시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재정착난민 수용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26명, 2019년 37명, 2020년 17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다. 현재까지 재정착난민 제도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난민은 총 166명이다.

표 23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17(5)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제6항 난민업무 처리 현황

난민정책과 사무관 구성림

1994년 난민업무를 시행한 이후 2020년 말까지 총 71,042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자진 철회된 16,970건을 제외한 총 34,836건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결과 총 1,091명에게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2,370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여, 결과적으로 총 3,461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2020년에는 난민신청 수가 총 6,684건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폭 감소(2019년 총 15,452건)하였고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총 20,094건으로 전년대비 5,480건 감소하였다. 2020년 난민심사결정 건수(1차 심사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건수)는 총 6,766건으로 전년도 5,073건 대비 33% 증가하였으나, 난민인정은 69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15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 33% 감소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21년에는 2019년에 실시한 난민통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의 내용을 기반으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해 통역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역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통역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난민전문통역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진행된 「난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처우를 지원하는 한편,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효과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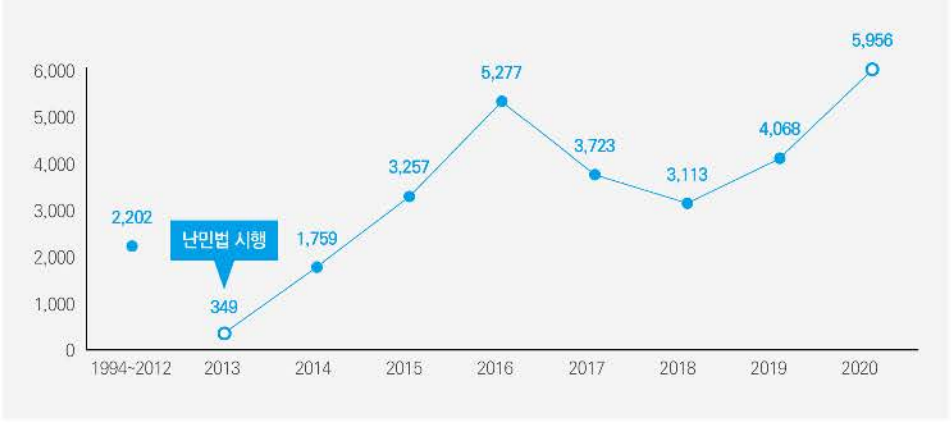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가. 추진 배경

중동지역의 종교 분쟁 및 아프리카에서 계속되는 종족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전세계 난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문제는 계속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0년 이의신청 건수는 5,956건으로 2019년 이의신청 4,068건 대비 46%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2020. 12월말 기준 이의신청 심의 대기 건수는 5,118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하는 등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그림 34 난민 이의신청 현황



또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이의신청 절차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준사법절차보장이 필요하나, (특별)행정심판에서 보장하고 있는 구두 의견 진술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0. 2. 25. 법무부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하여, 난민위원회 운영 등 사무처리 및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 〈난민심의과〉가 신설되었다.

〈난민심의과〉가 신설되면서 이의신청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의신청 심의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제도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나. 추진 내용

제1항 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난민심의과 사무관 조승래

2014. 6월 3개의 난민 분과위원회 체제를 구축한 이후 난민신청자 약 5.3배(2014년 2,896명 → 2019년 15,452명), 이의신청인 약 2.3배(2014년 1,759명 → 2019년 4,062명) 증가하였고, 난민신청자 출신 국가(2014년 60개국→2019년 96개국) 및 난민신청 사유도 복잡화·다양화되었다.

특히 중앙아시아권 및 러시아 국적 난민신청자가 약 284배(2014년 19명 →2019년 5,396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의 난민신청이 급증하는 추세(2014년 8명 →2019년 5,065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난민신청 추이 및 지리적 여건, 사회·문화적 환경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1, 2분과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아시아권 국가 및 러시아를 하나의 분과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존 3개(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분과위원회의 심의 대상 국가를 조정하고, 1개(중앙아시아권, 러시아) 분과위원회를 증설하여 총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2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신설분과(4분과) 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위촉위원(지역·법률 전문가)으로 지정하여 분과위원장 전원을 위촉위원으로 배치함으로써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35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제2항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구성

난민심의과 사무관 전동균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 출신 국가 및 난민신청 사유는 복잡·다양해진 반면, 난민 이의신청 심의위원은 15명으로 제한되어 전문적인 심의에 한계가 있고, 종교·여성·성소수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관련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외부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학교수, 연구원 등 난민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관계부처 및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20. 7월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구축하였다.

표 24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총계	국가정황 전문가				종교 전문가	특정집단 전문가 (성소수자 등)
	소계	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35명	30명	8명	8명	9명	4명	6명

이를 통해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대면 개최 시 심의 안건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자문을 청취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자문을 받음으로써 난민위원 수 부족에 따른 전문성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3항 이의신청 절차 비대면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난민심의과 사무관 조승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이의신청 절차의 비대면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 훈령)」을 개정하여 영상회의 방식의 난민위원회 개최 근거와 영상회의로 참석한 난민위원의 출석 인정 및 의결서 개별 제출 근거를 마련하였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4항 국가정황정보 관리 체계화

난민심의과 사무관 전동균

출신국의 박해를 피해 급박하게 탈출하는 난민의 열악한 지위 및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난민은 자신이 난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진술로 대신하고 있다.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과 박해 가능성의 판단 근거로서 신청자의 국적국 국가정황정보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여 난민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나, 다양한 박해사유에 대한 국가정황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의신청 심의 대기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및 각 국에서 발간한 최신 국가정황 자료* 및 그 외 언론 보도 자료, 학술 논문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전문적으로 수집하여 번역 및 분석할 수 없는 상태였다.

*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호주 외교통상부(DFAT), 캐나다 이민난민심판원(IRB), 영국 내무부(UK Home Office) 등에서 등재되는 국가정황정보

이에 난민 업무 담당자가 국가정황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국가정황정보센터 및 국제기구, 인권단체,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등재된 국가정황정보를 키워드로 일괄 검색 및 수집할 수 있는 국가정황정보 검색 시스템을 개발 및 시범 운영함으로써 국가정황 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급증하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신속·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국가정황정보 조사팀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이의심사 기회 보장으로 난민 불복절차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난민 이의신청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9절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주무관 송지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혼란 속에서도 다양한 이민동향을 파악하여 국제 환경 변화 흐름에 부응 하고자 하였고, 각국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는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GM 회의, OECD 이주정책 전문가회의 등에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이민 흐름을 파악하고 인권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제 3차 유엔난민기구(UNHCR)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의 난민 동향 등을 파악하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였다.

출입국 관련 주요 협력국인 일본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세계의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한-중 코로나19대응 방역협력 대화와 한-콜롬비아 코로나19 대응회의에 참여하였고, K-방역 웹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출입국관련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였다.

제1항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 협력

급변하는 세계이민동향에 발맞춰 국제기구에서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 파악 및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0. 1월부터 12월까지 ① 제12차 GFMD 정상회의, ② OECD 고위급 포럼 및 이주 장관회의, ③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GM 회의, ④ IGC 워크샵, ⑤ 한-메르코수르 TA 제5차 협상, ⑥ 한-UNHCR 정책협의회, ⑦ IGC 고위급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제2항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등 우리나라와 이주 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만드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주요 협력 국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과 고위급회담을 실시하였고, 출입국 관리 분야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36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 분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공동 대응에 동참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0. 3. 18.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에 참여하여 분야별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0. 4. 29. 한-콜롬비아 당국 간 코로나19대응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해외 입국자 관리 경험 공유를 하여 양국 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20. 6. 3. 출입국·검역 분야의 정책 및 경험을 주제로 K-방역 웹세미나(4Tth Special Webinar on Covid-19 for Policy and Technology Sharing-Policies & Practices of ROK's Immigration Sector and Quarantine Measures)를 개최하여 한국의 출입국 및 검역 분야에 대한 우수한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총 18개국 853명이 웹세미나에 참여하였으며 위 세미나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의 입국 정책과 외국인 체류관리제도, 검역·방역 지원 입국심사 등을 소개하여 K-방역 출입국관리 분야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림 37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표 25 2020년 국제회의 참여 현황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1	1.15.~1.19.	프랑스	• OECD 고위급 포럼 참석	유복근 국적통합단장 김현채 서기관 최문정 출입국관리사무관 염기동 출입국관리주사
2	1.19.~1.26.	에콰도르	• GFMD 회의	김민경 출입국관리사무관 신동철 출입국관리서기
3	2.2.~2.6.	말레이시아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 회의(1차)	손가희 출입국관리주사보 김현실 출입국관리서기
4	2.9.~2.14.	미국	• IGC 워크샵 참석	김기현 출입국관리주사 최장호 출입국관리주사보
5	2.9.~2.16.	우루과이	• 한-메르코수르 5차 협상	김명훈 출입국관리사무관
6	3.18.	화상회의	•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구본준 서기관
7	4.29.	화상회의	• 한-콜롬비아 코로나19 대응 회의	박재완 서기관 김동완 출입국관리주사
8	6.3.	화상회의	•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및 기술 공유를 위한 특별 웹세미나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본준 서기관 이기흠 서기관 김명훈 출입국관리사무관
9	8.26.	화상회의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 회의(2차)	손가희 출입국관리주사보
10	10.29.	화상회의	• IGC 고위급회의 참석	강성환 서기관
11	12.4.	화상회의	• 한-UNHCR 정책협의회	김민경 출입국관리사무관

표 26 2020년 외국기관의 주요 인사 방문 현황

연번	기간	국가	방문목적	예방자
1	1.21.	일본	• 한-일본 출입국관리 고위급회담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 사사키 쇼코 청장 등 5명
2	2. 5.	카자흐스탄	• 출입국분야 협력을 위한 MOU 초안 전달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아스카 아슬란 참사관 등 4명
3	2.12.	중국	• 신임 대사 부임에 따른 장관님 예방 및 코로나19 관련 협조 요청	주한 중국대사관 싱 하오밍 대사 등 6명
4	2.25.	몽골	• 코로나19 확산 자국민 체류연장 관련 협조 요청	주한 몽골대사관 롬보 하쉬에르덴 참사관 등 2명
5	3. 6.	태국	• 코로나 19 확산관련 자국민 귀국시 협조 요청	주한 태국대사관 롬마니 카누락 대사 등 5명
6	3.10.	일본	• 한-일본 고위급회담 이후 본청의 감사장 전달 및 출입국관련 협력 논의	주한 일본대사관 시라토리 토루 1등서기관 등 2명
7	3.11.	태국	• 태국 정부의 자국민 입국거부 사태에 대한 논의	주한 태국대사관 롬마니 카누락 대사 등 5명
8	3.31.	일본	• 영사 귀임에 따른 외국인본부장 면담	주한 일본대사관 시라토리 토루 1등서기관 등 2명
9	3.31.	몽골	• 몽골 정부의 자국민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논의 및 보호외국인 지원 방안 협의	주한 몽골대사관 대리대사 남스라이 에르덴투야 등 2명
10	4.14.	중국	• 공사참사관 전근에 따른 예방. 보호 중인 중국인 관련 협조 요청	주한 중국대사관 왕루신 공사참사관 등 3명
11	5. 7.	일본	• 신임영사 부임에 따른 부임인사 및 협력관계 구축	주한 일본대사관 와타나베 켄타로 1등서기관 등 3명
12	5.20.	중국	• 보호 중인 중국인 송환위한 업무 협의	주한 중국대사관 덩 총 총영사 등 5명
13	6.11.	EU 대표부	• 등록외국인 대상 재입국허가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및 협력관계 구축	EU 대표부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 등 5명
14	7.28.	미국	•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관련 면담	주한 미국대사관 넬슨 우 영사 등 3명
15	11. 3.	프랑스	• 한국의 이민정책관련 및 사회통합정책 등 정보 교환	주한 프랑스대사관 필립 르포르 대사 등 4명
16	11.10.	러시아	• 러시아 국적법관련 질의 및 협력 관계 구축	주한 러시아대사관 데니스 압드라시코브 총영사 등 3명
17	11.18.	베트남	• 보호 중인 베트남인 송환위한 업무 협의	주한 베트남대사관 뜨란 뚜엉 뚜이 공사참사관 등 2명

제10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주무관 서인수

2020. 1. 20. 최초의 확진자 발생으로 시작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감염병 해외유입 방지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2020. 8. 27.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긴급대응단'을 신설하였다.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은 업무 조율을 위하여 출입국정책단장이 단장을 겸임하되, 보좌기관인 이민국경안전대응반을 두어 반장(4급) 이하 총 7명을 배치, 주말·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운영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등 범정부 회의 관리, 대외 협의, 감염병 대응 출입국절차 마련·관리, 방역목적 출입국·외국인 정보 대외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림 38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제1항 감염병 해외유입 차단 범부처 협력 체계 강화

해외 감염병 확진자의 국내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구성(6. 28.~), 주기적으로 국가별·체류자격별 발생현황·환자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응 조치를 마련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초기부터 방역업무를 적극적으로 분담하였으나, 긴급대응단의 설치에 따라 출입국·외국인본부의 대외 창구를 일원화하여 더욱 긴밀한 협업이 가능해졌으며, 출입국정책부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감염병 해외유입 위험도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27 감염병 해외유입 방지 대응 사례

연번	기간	상황	대응방안
1	9~10월	• A국 發 해외유입확진자 증가	• 현지 PCR 검사서 신뢰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대사관과 협력, 검사기관 교체 및 결과지에 영사 확인인 날인 등 신뢰성 담보 조치 시행
2	10월	• B국 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안건으로 상정, 중수본·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추이감시국가로 지정
3	10~11월	• C국發 국내 입항 선원 확진자 증가	• 확진자 발생 선사에 대한 입항 금지 등 패널티 부여 등 조치 마련
4	12월	• D국 변이바이러스 발생	• 긴급관계기관 회의 개최, 정기항공편 취소,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 격리면제제도 중단 등 강도 높은 차단 조치 시행

제2항 감염병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업무 적극 분담

정부는 유래없는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개방성을 유지하되, 감염병 유입 우려가 높은 해외입국자를 선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출입국자 수는 급감한 반면, 통상의 검역 절차만으로는 전체 입국 승객에 대한 확대된 방역 조치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기존의 검역절차에 추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신설(3.19.)하고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격리의무를 부과하는 등 방역절차를 마련하였다.(4.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증상 심사대를 마련하여 감염병의심자(유증상자)를 일반 승객의 동선과 분리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한편, 4. 13. 90개국과의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잠정 중지하여, 관광목적 등 불요불급한 입국을 억제하되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격리면제제도 운영을 적극 분담하였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본연의 출입국업무뿐만 아니라 해외입국자 검역 및 방역관리를 적극 지원하였다. 탑승객 사전정보시스템 등의 전산 인프라 및 숙련된 심사 인력을 적극 활용, 특별입국절차 신설 시부터 공항만 검역소의 업무를 적극 분담하였다 입국심사관이 승객이 작성한 특별검역신고서를 회수하고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내외국민 여부,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여 격리 유형(자가·시설)을 분류하여 표찰(목걸이) 교부하고, 격리 주소지·격리자 연락처를 전산 입력하여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을 통해 지자체 등 격리시설 관리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해외입국자 격리자 관리를 지원하였다.

그림 39 특별입국절차 흐름도

무증상자

구분	도착	입국장 검역	특별검역	입국심사
담당	항공사	질병관리청 검역소	국방부	법무부 출입국
장소	기내, 도착 게이트 앞	검역소 발열검사대	입국장	입국심사대
임무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발열검사 실시 • 증상 여부 확인 • PCR 음성확인서 제출 • 격리면제서 제출	• 자가격리앱, 등 설치 • 국내 주소 및 연락처 수신 확인	• 특별검역신고서 회수 • 국내 주소 입력 및 지자체 전송 • 각종 서류 교부 및 안내 • 격리유형별 표찰 교부
사진				

이동	사후 모니터링
국방부, 지자체, 경찰	지자체
1층 입국장	격리 장소
• 격리대상자 분류·인솔 • 격리구분에 따라 격리장소로 이동	• 앱을 통해 증상 확인 후 3일 내 진단검사 • 분류 대상에 따라 격리

유증상자

구분	도착	입국장 검역	입국심사	이동
담당	항공사	질병관리청 검역소	출입국	국방부, 지자체, 경찰
장소	기내, 도착 게이트 앞	검역소 발열검사대	유증상 전용심사대	임시시설
임무	•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발열검사 실시 • 증상 여부 확인 • 역학조사 실시	• 각종 서류 교부 및 안내 • 국내 주소 입력 및 입국심사 • 중증-대리심사	• 국민, 장기체류외국인-지자체 보건소에서 검사 • 단기체류외국인-시설검사 및 시설격리
사진				

또한 해외입국자 격리 관리 지원을 위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해외입국자 입국정보확인 콜센터를 설치, 24시간 운영하며 해외입국자의 출입국정보·입국 외국인의 체류지·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 등의 격리자 관리를 신속 지원하였으며, 격리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등에 대하여 검역소의 요청에 따라 입국불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표 28 방역 업무 지원(행정응원) 실적

연번	내용	실적(기간)
1	격리통지서 교부 - 행정응원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입국심사관이 교부	635,456건 ('20.4.7.~12.31.)
2	감염병 의심자(유증상자) 전용심사 - 감염병 의심자(유증상자)의 진단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유증상 전용 심사대를 마련, 분리 심사	26,518건 ('20.3.19.~12.31.)
3	해외입국자 입국정보확인 콜센터(24시간 운영) 통계 - 지자체 등의 내·외국인 연락처 확인 요청 응답 등	19,644건 ('20.4.6.~12.31.)
4	검역소 요청 대상 입국불허 - 시설격리 거부, PCR 음성확인서 소지의무자 미소지 등	188건 ('20.2.4.~12.31.)

제3항 방역 목적 출입국·외국인 정보 제공

해외유입 확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간 감염병 확산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외국인의 방역 사각지대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역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부처는 물론 교육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방역관리를 위한 출입국·외국인정보 활용이 필요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범정부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확진자 및 감염병 의심자의 출입국·체류 정보 등을 질병관리청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육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에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선원 등 소관 외국인의 방역관리를 위한 출입국 정보 등을 작성, 제공하여 외국인의 방역사각지대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표 29 방역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통계

연번	내용(소관 부처)	실적(2020년)
1	• 외국인 출입국기록(질병관리청)	2,390,917건
2	• 자가격리·능동감시 등 무응답 외국인 정보(질병관리청)	28,752건
3	• 유학생 입국 기록(보건복지부)	7,311건
4	• 유학생 입국·체류정보(교육부)	595,877건
5	• 외국인 선원 입국기록(해양수산부)	25,533건
6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입국자 사업장 주소 정보(고용노동부)	112,512건

3
CHAPTER

일자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1절 상반기

제2절 하반기

제1절
상반기

1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1.	▪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개정** • 배경 : 타 부처와 협의된 출입국 우대카드 대상 추가 및 제도개선 등 반영 • 내용 : 상생협력우수기업 종사자, 한국전 참전용사 및 직계자녀 등 발급 확대, 별도 카드* 소지자는 동 카드만으로 우대 제공 등 * 독립유공자, D-8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소지자	출입국 심사과
1. 3	▪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 마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참석 : 기재부·문체부·국토부·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 ※ 우리 부 : 출입국심사과 담당 사무관, 주무관 • 내용 : 외래관광객 확대를 위한 무사증 입국허가* 관련 관계기관 의견 청취 및 협조사항 등 논의 * 제주 환승 동남아 3국 단체관광객, 지방공항 환승 관광객 72시간 무사증	출입국 심사과
1. 8.	▪ **유흥·마사지업소 불법취업 외국인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 '20년 1월 불법 유흥·마사지업소 집중단속 실시	이민 조사과
1. 8.	▪ **제205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다문화는 어떻게 낙인이 되는가'	외국인 정책과
1.10.	▪ **외국인본부장, 주한태국대사관 대사와 오찬 간담회** • 내용 - 태국 관련 국내 현안 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등 정책 설명 및 협조 당부	출입국 기획과
1.13.~ 1.15.	▪ **제25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 안건 : '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안) • 참석자 : 법무부차관(위원장)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8명	외국인 정책과
1.15.	▪ **제206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통합	외국인 정책과
1.21.	▪ **'20년 대포차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 합동단속 지시** • '20년 2월중 대포차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대포차 운행 외국인 등) 합동단속 실시	이민 조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2.	■ **'20년도 범죄예방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관리방안 시달** • 외국인밀집지역 재지정(74개소), 외국인 밀집지역 담당관제 지정·운영 등	이민조사과
1.21.	■ **한-일본 출입국관리 고위급회담 개최** • 내용 - 건전한 국제결혼을 위한 관리 방안관련 정보 공유,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관한 협의 등	출입국기획과
1.22.	■ **제207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물류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택배산업을 중심으로 〉	외국인정책과
1.23.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공모** • 내용 :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를 멘토단으로 구성하기 위해 체류유형 별 멘토 등 공모	이민통합과
1.28.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체류지원 등 대응 방안' 시행** • 내용 : ①감염병 예방조치 및 안내 강화, ②감염병 확진자 발견 시 처리절차, ③확진자 등 체류관리 지원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관심'→'주의')에 따른 대응조치	체류관리과
1.30.	■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내용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민간위원 8인(위원장 : 김태환 한국이민행정학회) 위촉 ※ 임기 : '20. 1. 30.~'22. 1. 29.까지(2년)	외국인정책과
1.31.	■ **귀화 민간면접관 신규 위촉** • 내용 : 신규 선발된 귀화 민간면접관 15명에 대한 위촉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위촉식은 생략	국적과
1.31.	■ **2020년 제1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 31.(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과

2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 4.	■ **중국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및 제주 무사증 일시정지** • 내용 : ①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 ②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③ 후베이성 관할공관 발급 기존사증 효력 잠정정지, ④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 무사증 일시정지, ⑤ 제주 무사증 입국제한 조치에 준한 국내 환승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	출입국 심사과
2. 5.	■ **국제협력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참사관 면담** • 내용 - 이민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 검토 논의	출입국 기획과
2. 5.	■ **'20년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안) 마련** • 내용 : 외국인정책 수립·추진·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활용 ※ 12개 연구과제(예산액 : 527백만 원)	외국인 정책과
2.10.	■ **「'20년 전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발표** • 내용 : '20년도 전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및 운영 관련 주의사항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통보	체류 관리과
2.12.	■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 특례대상 확대조치** • 내용 :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후베이성 거주자 외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 신청 당시 이동제한 조치로 사실상 국내로 입국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증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서류 간소화 등 조치 확대	이민 통합과
2.13.	■ **2020년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방안 시달** • 전국 36개 권역별 특별단속지역 지정, 각 관서별 특별단속지역 단속·순찰 자체 시행계획 수립 등	이민 조사과
2.17.	■ **'20년 국외 단기연수 추진** • 배경 : 외국인본부 이민정책 수립 참고를 위해 국외연수 추진	출입국 기획과
2.17.	■ **신임 주한 중국 대사 장관님 예방** • 참석 : 장관님, 외국인본부장, 정책보좌관 등	출입국 기획과
2.17.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 내용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권한 지원센터장에게 위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난민 정책과
2.18.	■ **'19년 하반기 우수 국외연수보고서 채택 및 동영상 제작 및 공유** • 배경 : 국외 출장 결과의 공유를 통한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해출장 결과를 요약한 동영상 제작 및 공유 • 선발과정 : 말레이시아 육로 국경관리체계 연구 등 3개 과정	출입국 기획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24.	▪ **감염병 위기 '심각' 경보 관련 출입국심사 강화** • 배경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최고수준) 상향(2.23.) ※ 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 • 내용 : (출입국심사) 코로나19 대응 입국제한 대상자 및 규제자 입국 차단, 입국신고서 기재 확인, 감염 예방수칙 철저 준수 등 (상황관리) 비상연락망 정비 및 즉시 작동여부 확인, 상황 발생 시 신속 전파, 상황근무 철저 등	출입국심사과
2.24.	▪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시행** • 내용 : 체류만료일이 4.30. 이전에 도래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에 대하여 '20.4.30.까지 직권 연장	체류관리과
2.24.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국적업무 조치 사항 시달 • 내용 - 귀화 면접심사 잠정중단(2. 24.~3. 31.)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행사 잠정중단(2. 24.~3. 31.), 수여방식 다양화(선서문 온라인 송부 또는 유선으로 국민선서문 낭독) - 귀화신청자('19. 2. 14.~'19. 7. 23. 신청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결과 제출기한 연장(~7. 24.) - 국적관련신고 등 신고기한 연장(국내거주자 ~4. 29., 해외거주자 ~6. 30.)	국적과
2.25.	▪ **국제협력팀, 주한 몽골 대사관 참사관 면담** • 내용 - 보호 중인 몽골인 송환 협조 요청 및 재한 몽골인에 대한 체류편의 제공 논의	출입국기획과

3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3.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시 심사 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 • 내용 : 기존 내부지침으로 규정한 심사기준 예외 대상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시 형식으로 제정	이민통합과
3. 6.	▪ **외국인본부장, 주한 태국 대사 면담** •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체류 태국인 자진출국신고 관련 논의	출입국기획과
3. 9.	▪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무사증) 정지 등 조치** • 내용 :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과 취약한 대응 등을 감안,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 국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①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외교·관용여권 포함) ② 일본 주재 공관에서 발급한, 일본인에 대한 기존 사증 효력 잠정정지 ③ 일본 주재 공관의 신규 비자발급 심사 강화(모든 외국인) ④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적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	출입국심사과
3.10.	▪ **국제협력팀, 주한 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 면담** • 내용 - 양국의 코로나19 관련 양국의 정책 공유 및 협력사항 논의	출입국기획과
3.10.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처리방안 시달** • 코로나19 확산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출국신고를 사무소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	이민조사과
3.11.	▪ **외국인본부장, 주한 태국 대사 면담** • 내용 - 코로나19 관련, 태국 정부의 한국발 승객에 대한 무리한 서류 제출 요구 관련 유감 표명 및 시장 요구	출입국기획과
3.19.	▪ **코로나19 특별입국절차 모든 입국자 대상 전면 확대** • 내용 : 국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시행함을 소속기관 등에 알림 (중앙사고수습본부 시행 결정) - (시행사항) 경증 유증상자 전용심사 구역 마련, 심사대 전면 차단막 설치 등 - (심사관 유의사항) 모든 입국자 검역확인증 소지 여부 확인, 예방수칙 준수 등 ※ 유증상 외국인 입국심사 시 얼굴정보만 취득하고 지문정보는 취득 생략	출입국심사과
3.21.	▪ **제5기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 내용 :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 14인(위원장 : 김동욱 서울대 교수) 위촉 ※ 임기 : '20. 3. 21.~'22. 3. 20.까지(2년)	외국인정책과
3.25.	▪ **'20년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안) 시달** • '20. 4~5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	이민조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26.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 취업활동 한시적 허용 방안 시행**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부터 계절근로자 도입이 어려운 농어가를 위하여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취업활동 허용	체류 관리과
3.31.	■ **출입국정책단장, 주한 몽골 대리대사 면담** • 내용 - 임시항공편 입항 후 출항 시 보호외국인 탑승 우선 고려, 대사관 홈페이지 및 민간단체를 통한 자진출국제도 홍보	출입국 기획과

4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2.~ 4. 9.	■ **'19년도 연구용역에 대한 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개최** • 내용 : '19년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상황 등 심의 ※ (안건) 인도적 국경관리에 관한 연구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 / 이민정보원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외국인 정책과
4. 9.	■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연장' 시행** • 내용 : 5. 31. 이전에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등록외국인(약 6만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일괄 직권* 연장 * 시행 시급성을 고려, 일괄 전산 연장 조치	체류 관리과
4.13.	■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정지 조치 시행** • 내용 : 4.5. 이전 발급 단기사증(C-4 제외) 효력 잠정정지, 우리 국민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협정·무사증 입국 잠정정지(90개국), 모든 재외공관 사증심사 강화 등	출입국 심사과
4.13.	■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정지 조치 시행** • 내용 : 4. 6.(월) 사증심사 강화조치 시행 전 발급된 단기사증(C-4 제외) 효력 잠정정지, 우리 국민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협정·무사증 입국 잠정정지(90개국), 모든 재외공관 사증심사 강화 등	체류 관리과
4.16.	■ **코로나19 위기극복 릴레이 캠페인** • 내용 :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 멘토단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지침 및 응원메시지 등 전달	이민 통합과
4.14.	■ **외국인본부장,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면담** • 내용 - 보호중인 중국인 송환시 자가진단앱 설치 요건 면제 등 협조 요청	출입국 기획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17.	▪ **국제선 일부 운항 중단 등에 따른 「자진출국 업무처리 기준」 개선 시달** • 코로로19로 인한 각 국의 항공편 중단 축소로 항공편 예약이 곤란해져 예약항공편 없이도 자진출국신고 허용 시행	이민조사과
4.17.	▪ **2020년 제2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4. 17.(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심의과
4.22.	▪ **보호 중인 태국인 강제퇴거 집행(주한태국대사관과 업무 협조)** • 내용 - 4. 14.(화) 전세기를 이용하여 태국인 135명을 강제퇴거한 이후 주한태국대사관과 관련 협의 지속, 화성보호소 등 보호중인 태국인 45명 강제퇴거 집행	출입국기획과
4.22.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시달** • 코로나19 확산 초래 외국인 전용 클럽, 마사지 등 유흥업소 불법취업·고용행위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입국·취업알선 행위 등 관련 브로커 집중 단속 실시	이민조사과
4.24.	▪ **'20년 제1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개요 - 일시, 장소 : 2020. 4. 24.(금) 14:00~16:00, 5동 대회의실(109호) - 참석자 : 위원장(본부장님), 정부위원(6명), 민간위원(21명) • 주요 내용 - 위촉식(신규 위촉 12명 및 재위촉 11명) - 안건 심의: 우수인재 특별귀화(8건), 우수인재 평가기준 개선(1건) 사실상 국민 국적판정(3건)	국적과

5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6.	■ **귀화 면접심사 재개** • 내용 -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귀화 면접심사를 5.6.(수)부터 재개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실 소독, 칸막이 설치 등 철저한 방역 실시 - 면접 대상자 수를 1일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하여 면접자 간 접촉 최소화	국적과
5. 7.	■ **국제협력팀, 주한 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 면담** • 내용: 신임 영사와의 첫 교류, 코로나19관련 양국의 정책 공유 및 협력 사항 논의	출입국 기획과
5.10.	■ **이민정책연구원 이전** • 내용 : 경기도 고양시 소재 연구원을 서울시 양천구로 이전	외국인 정책과
5.13.	■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개최** • 일자, 장소 : 5. 13.(수), 법무부 대회의실 등 • 참석 :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민자 멘토 등 • 내용 : 이민자 멘토단 위촉장 수여식, 멘토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이민 통합과
5.20.	■ **출입국정책단장,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 면담** • 내용: 보호 중인 중국인 신속한 송환위한 논의	출입국 기획과
5.20.	■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 • 일자, 장소 : 5. 20.(수),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법무부차관, 정부포상 수상자 등 • 내용 :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이민 통합과
5.26.	■ **'보호중인 태국인 송환' 관련 태국대사관과 업무 협조** • 내용 : 주한태국대사관으로부터 '태국행 출항편에 공석 발생' 사실을 통보받아 보호외국인에게 좌석 긴급 배정 요청 ※ 해당 사무소에 송환을 위한 절차 및 대사관 협조요청사항 전달	출입국 기획과
5.28.	■ **출입국심사 시 승객 간 거리 유지 지시** •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대한 방역 대응을 위해 입·출국 시 승객 간 최대한 거리유지 지시 - (시행사항)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사 대기 승객 간 2m 이상(최소 1m) 거리 두기 방안 마련 ※ 배너, 디스플레이 등을 활용한 2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시설관리자 협조 등을 통한 승객 대기선에 2m 간격 선 표시 등	출입국 심사과
5.28.~ 5.29.	■ **제1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기간, 장소 : 5. 28.~5. 2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참석 : 거점기관 난민전담공무원 등 49명 • 내용 : 미성년자·아동 면접 기법,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유의미한 진술 도출 기법 등	난민 정책과

6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1.	▪ **출국금지 온라인 조회 제도 시행** • 내용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출국금지 여부, 요청기관, 출국금지 기간 등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 ※ 출국금지 온라인 조회 근거 시행('20.6.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 심사과
6. 1.	▪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 내용 :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 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국허가제' 시행	체류 관리과
6. 9.	▪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자 미담사례집 배포** • 내용 : 제13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그동안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통합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해 온 자들을 소개	이민 통합과
6.11.	▪ **외국인본부장,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등 면담** • 내용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허가 요건, 기업인들의 교류 촉진 방안 등	출입국 기획과
6.12.	▪ **2020년 제3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6. 12.(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 심의과
6.26.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개정·시행** • 내용 : 4차 산업혁명 대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위한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의 개정 및 시행 • 개정 주요내용 : △우수인재 복수국적 대상 확대, △경력 및 소득요건 현실화, △가점제도 신설, △추천권자 확대	국적과

제2절
하반기

7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1.	■ **'재외공관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및 사증발급 확인서 발급' 시행** • 내용 : 여권에 사증스티커를 부착하는 기존 사증발급 방식이 7. 1.부터 전면 중단되고, 사증발급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전 재외공관에서 시행 ※ 2. 24.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 26개국에서 시범 운영	체류관리과
7. 1.	■ **외국인 밀집지역(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합동점검·계도활동 실시** • '20. 7월부터 외국인 밀집지역(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합동점검·계도활동 실시	이민조사과
7. 2.	■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 안건 :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등* * (우리부 관련) 외국인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7. 3.	■ **'3분기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시행** *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숙련기능 외국인 중 고득점순으로 쿼터별 선발된 사람 • 신청기간 : 7. 1.(수)~3.(금), 3일간 • 선발인원 : 125명(연간 총 쿼터 5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	체류관리과
7. 3.~ 7. 8.	■ **「2020년 제2회 국적심의위원회」개최** • 심의방식 및 일정 : 서면회의, 7. 3.(금)~7. 8.(수) • 위원회 구성 : 총 20명(본부장님,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3명) • 심의안건 : 우수인재 인정여부 심의(7명)	국적과
7. 7.	■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배경 : 금융사기 관련자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입국규제 기준 정비 • 내용 : 영구입국금지 대상자 추가 등 규제대상자 개정 및 입국금지 기간 세분화	출입국심사과
7. 7.	■ **격리기간 중 무단 출국 시도자 조치 방안 마련** • 배경 : 출국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시설·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하여 탑승권 발권을 시도하는 경우 대비 * 격리면제자, 중도출국 허용자 • 내용 : (조치) 해당자가 발권을 시도하는 경우, 대상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① 공항경찰대 통보 ② 중대본에 이탈 사실 통보 ③ 출입국심사과 통보 • 시스템개선 : 출국심사 화면에 격리기간 위반 여부 표출 되도록 개선	출입국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10.	▪ **'2020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개최** • 안건 : '20년도 하반기 계절근로자 운영 지자체 선정 및 인원수 확정, 제도 개선안 등 협의 ※ 21개 지자체, 991명 배정	체류관리과
7.11.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주말 교육 시범 실시** • 내용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모든 과정이 주중 일과시간에 진행됨에 따라 참여자 편의 제고를 위해 권역별 월 1회 이상 주말교육 실시	이민통합과
7.15.	▪ **국적 업무 방문예약제 하이코리아 예약 실시** • 개요 - 시행일 : '20. 7. 15.~'20. 12. 31.(시범운영) - 대상 업무 : 각종 허가 및 신고, 확인서 발급 및 국적판정 업무 - 대상사무소 : 전국 18개 국적 업무 지방 관서 • 향후 계획 : '20년 말까지 시범 운영 후 '21년부터 전면 예약제 도입	국적과
7.23.~ 7.29.	▪ **제24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 안건 : '20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결과 : 심의안건 2건에 대한 원안 의결	외국인정책과
7.28.	▪ **국제협력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비자과장 면담** • 내용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대상, 미 국토안보부가 진행 중인 약속이행캠페인에 대한 요구사항* 전달	출입국기획과
7.30.	▪ **국민안전 및 서민일자리 침해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 시달** • 국민안전 위협 사범과 서민일자 분야 불법취업·고용행위, 불법입국 및 알선 행위,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선별적 단속 실시	이민조사과
7.31.	▪ **제1차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실시** • 일시, 방식 : 7. 31.(금) 10:00~16:30,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참석 : 신규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후보자 등 33명 • 내용 : 난민 기초 이론, 난민면접 실무, 난민통역의 특수성 및 통역 윤리 등	난민정책과

8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 5.	■ **전자여행허가제(K-ETA) 세부사항 규정** • 내용 :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절차·방법, 권한위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출입국 심사과
8. 7.	■ **2020년 제4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8. 7.(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 심의과
8.12.	■ **제209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독일의 이민법개정 배경과 실리적 선택	외국인 정책과
8.12.	■ **75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 일시, 장소 : 8. 12.(수) 10:30~11:40, 1동 지하 대강당 • 참석자 - (내빈) 장관님, 외국인본부장, 정책보좌관, 국적·통합정책단장 등 - (외빈) 광복회 회장, 국가보훈처 관계자 • 대상자 : 독립유공자 후손(21명) 및 동반가족(16명)	국적과
8.13.	■ **법조기자 대상 외국인정책 업무소개** • 주제 : 출입국·외국인정책 개관	외국인 정책과
8.13.	■ **제2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장소 : 8. 13.(목) 9:00~17: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참석 : 거점기관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 등 22명 • 내용 : 난민협약상의 박해사유 분석 및 난민인정기준, 난민통역의 이해, 난민면접 및 심사기법 등	난민 정책과
8.18.	■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지 확인 강화** • 배경 : 장기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시 자가격리에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소지 확인 강화 • 내용 : 입국심사 단계에서 재입국 외국인의 주소지 확인을 강화하고 거주 예정지가 자가격리자로 부적합한 경우 시설격리 조치	출입국 심사과
8.18.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방사무소 방역 철저 지시** • 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방사무소 귀화 면접 업무 수행 시 감염예방 활동 지시 필요 • 내용 - 면접 시간 탄력 운영으로 피면접자 간 접촉 억제 및 간격 띄워 앉기 - 면접실 환기 및 소독,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철저 - 일정 통보 시 '안내 문자' 발송 의심자 사전 방문 차단 및 일정 변경 -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 보고 철저	국적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22.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및 면제 고시 통합** • 내용 : 심사면제 기준,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 요건 등 기존 고시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로 통합	이민통합과
8.24.	▪ **「체류기간만료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시행** • 내용 : 코로나19로 자국 귀국이 어려워 출국기한 유예 등을 받은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에게 자격변경(G-1-19)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허용 ※ 신청기간 : 8. 24.~9. 7.	체류관리과
8.26.	▪ **제210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이슬람 과학 문명	외국인정책과
8.27.	▪ **제2기 인구정책 TF 외국인정책반(우리부 소관) 과제 발표** • 내용 : 고급인재·필요인력 유입·정착 및 활용 /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는 사회통합과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	외국인정책과
8.27.	▪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신설**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의 전문성·통일성·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을 신설, 본부 각 과의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감염병 해외유입차단 업무 수행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응단
8.31.	▪ **중국 출발 무사증 외국인 국내 환승 허용** • 주요내용 - 2. 4. 중국인 및 중국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관련, 중국 출발 무사증 외국인 국내 환승 제한 조치 해제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응단

9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1.~ 9. 4.	▪ **제3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기간, 방식 : 9. 1.~9. 4.,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참석 : 전국 난민전담공무원 등 26명 • 내용 : 라포형성 훈련, 트라우마 및 치유상담의 이해, 국가정황의 이해, 최신 소송 동향 및 판례 분석 등	난민정책과
9. 2.	▪ **2020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 발표회** • 내용 : 출입국 및 선박 심사 업무 개선방안 등을 토론하고 심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기법 발표회 개최 ※ 코로나19 상황으로 발표회는 생략하고, 23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관련 27개 연구과제 제출 후 서면 심사로 대체	출입국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2.	▪ 「'20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신청·접수 • 내용 : '18. 11. 5. 지정된 20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지정기간(2년) 종료에 따른 신규지정 • 기간 : 9. 14.(월)~25.(금), 2주간 ※ 지정 우수기관은 온라인사증 신청 권한 부여 등 혜택 제공	체류관리과
9. 4.	▪ 2020년 제5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9. 4.(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심의과
9.14.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개정 • 내용 : 일반 운영기관의 화상교육 운영 근거 마련, 평가 참여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성적증명서 서식 신설 등	이민통합과
9.15.	▪ 출입국 관서 출입자 명부 작성 시행 • 주요내용 - 확진자 방문 시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기 위하여 (1차) 모든 청사 출입자 전화번호 기재 쪽지를 수집함에 제출, 관서는 수집함 밀봉 보관 후 4주후 정보 파기(2차)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자 관리' 시행 시 관서별 관리전용 번호 부여로 발신번호 서버 저장(9.28.)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응단
9.16.	▪ 제211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법제의 현황과 과제	외국인정책과
9.18.~ 9.23.	▪ 「'20년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방식, 일정 : 서면회의, 9.18.(금)~23.(수) • 위원회 구성 : 총 20명(외국인본부장,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3명) ※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의 2(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2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금번에는 2개 팀 중 제2팀이 심의 진행 • 심의안건 : 우수인재 인정여부 심의(11명) ※ 특별귀화 2명, 국적회복 9명	국적과
9.22.	▪ 제5기 이민정책자문위원회 1차 서면회의 개최 • 안건 :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구제대책(안), 외국인등록증상 영문명(Alien) 변경(안) • 참석자 : 위원장(김동욱 서울대 교수), 자문위원 등	외국인정책과
9.24.	▪ 제3회「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협의회」개최 • 내용 : 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과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대상 교육·상담 등 지원 활성화, 외국인 이민행정 서비스 품질의 개선을 위한 정책 협의	체류관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24.	▪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 배경 :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국적법 제7조1항2호)을 선정하여 우리 국적을 부여하고 그 공적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 대상자 : 안광훈(BRENNAN ROBERT JOHN)* 신부 • 일시 및 장소 : 9. 24.(목) 11: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자 : (내빈) 장관님, 외국인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등 (외빈) 추천자 및 지인 등 10명 이내	국적과
9.29.	▪ **2020년 9월 국가별 모임·이동자제 권고 및 방역점검** • 추석 연휴기간 외국인들의 모임 및 이동자제 홍보활동과 벌집촌, 외국인 전용클럽, 이슬림사원 등 외국인 밀집지역 자체 방역 점검·계도 활동 실시	이민 조사과

10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 1.	▪ **보호근무상황 일일점검 시행**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출국항공편 감소로 보호외국인 및 장기보호 증가에 따라 보호시설 일일보호현황 작성·보고(새벽 2시 기준) 및 취약시간대(새벽 1시~4시) 불시 유선 점검 • (본부 직접 점검기관) 화성/청보/여수 (권역별 거점 점검기관)서울·인천·부산·제주·대전 → 전국 관서(출장소 포함) 점검 후 본부 보고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응단
10. 5.~ 10. 7.	▪ **제26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 안건 :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분과 개편, 외국인등록증 영문명 변경(안) • 참석자 : 법무부차관(위원장) 등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8명	외국인 정책과
10. 6.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개선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내용 : 점수제 쿼터 확대로 인한 업종별 임금 변화 등 시장영향 분석, 점수제 도입이 숙련기능인력 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	체류 관리과
10. 7.	▪ **우즈베키스탄발 외국인 입국자 검역 강화** • 주요내용 - 현지 공관에서 음성확인서 진위 여부 검증 및 관련정보 공유(입국심사 시 공유정보 활용) • 기타 조치 사항 - 발열기준 강화(37.5℃→37.3℃), 외국인 입국자 전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지 항공사 발권 단계에서 'PCR음성확인서' 적격여부 확인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응단
10. 8.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 10.15.부터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자 또는 외교(A-1), 공무(A-2)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일본 출발 외국인 입국심사 시 출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징구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응단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12.~ 10.19.	■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강의 동영상 공모전** • 공모명 : 「슬기로운 온라인 화상강의」동영상 공모전 • 일정 : 10. 12.(월)~10. 19.(월) 접수, 10. 28.(수) 결과 발표 • 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단계별 화상강의 노하우 및 사례 관련 동영상(10~15분 분량)	이민통합과
10.14.	■ **제212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코로나19시대 국제이주	외국인정책과
10.16.	■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구축사업 개시** • 내용 :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은 사전 차단하고, 일반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심사를 지원하는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 구축 사업 개시 ※ 전자여행허가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	출입국심사과
10.16.	■ **2020년 제6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0. 16.(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심의과
10.21.	■ **'20년 4분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결과 발표** • 신청기간 : 10. 5.(월)~8.(목), 4일간 • 선발인원 : 125명(연간 총 일반쿼터 500명 중 분기별 균분 배정) + 국민 고용창출 우수기업 · 관계부처 추천 별도쿼터 • 선정기준 : 총점 180점(기본점수 80, 각종 가점 100점)에 52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체류관리과
10.26.	■ **「'20년도 하반기 귀화 민간면접관 역량강화교육」 실시** • 개요 : - 일시, 장소 : 10. 26.(월) 10:00~17:00, 대전역 회의실 - 대상 : 중부이남권 민간면접관 21명 • 교육 내용 :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 귀화 면접실무 등	국적과
10.28.	■ **「핼러윈데이」대비 특별 방역계도·순찰 활동 지시** • 10. 29.~10. 31.까지 핼러윈데이에 외국인의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계도·순찰 활동 실시	이민조사과
10.30.	■ **'20년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 내용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 * 지정혜택 : 전자비자 신청권한 부여, 비자신청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초청대상 간병인 범위 확대 등	체류관리과
10.31.	■ **항만 입항선원 검역강화 조치 시행(러시아, 필리핀 발)** • 주요내용 - 러시아, 필리핀 기항(출항 포함) 선원교대 등 승하선 이력(14일 이내)이 있는 선박은 국내 선원 교대 금지, 러시아 출발 선원은 10.23. 발급 PCR 음성확인서부터 현지 공관 영사 확인(현지 공관없는 지역은 공관 메일 접수), 우리부는 러시아, 필리핀 승하선 이력 해당 여부를 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하여 선원교대 목적 입국을 제한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응단

11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3.	▪ **외국인본부장,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 • 내용 - 한국의 이민정책 관련 법률과 이주민 지원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정보 교환	출입국 기획과
11. 4.	▪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홍보 및 국적제도 바로 알기 Q&A」 온·오프 열린 소통포럼 참석** • 개요 - 일시, 장소 : 11. 4.(수) 14:00~17:00, 서울열린소통포럼(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참석자 : 본부 국적과 담당자, 지방사무소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등 • 내용 :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홍보 및 국적이탈제도 등 국적제도에 대한 설명 및 논의, 1:1 상담을 통한 국민 소통·공감의 자리 마련	국적과
11. 5.	▪ **제2차 난민(전문)통역인 교육 실시** • 일시, 방식 : 11. 5.(목) 9:30~17:20,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참석 : 신규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후보자 등 21명 • 내용 : 난민제도 및 난민법, 난민인정 절차, 난민통역의 특수성, 통역 윤리 등	난민 정책과
11. 6.	▪ **2020년도 정책발표회 개최** • 기간, 장소 : 11. 6(금), 서울지방교정청 회의실 • 참석 : 국적·통합정책단장, 심사위원, 발표자 등 • 내용 : 본선 과제(10개) 발표, 우수과제 선정('보건의료' 투자이민 등)	외국인 정책과
11. 6.	▪ **제4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장소 : 11. 6.(금) 9:00~17:00,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 주관 : 법무부-UNHCR 공동 주관 • 참석 : 전국 난민전담공무원 등 38명 • 내용 : 성소수자 난민의 이해, 성소수자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사례 분석 등	난민 정책과
11. 6.	▪ **경기도청 공무원 대상 난민정책 설명회 개최** • 일시, 장소 : 11. 6.(금) 14:00~16:00, 경기도청 북부청사 • 대상 :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및 시·군·구 외국인복지센터 담당자 총 35명 • 내용 : 난민·난민협약 등 기초이론, 국내외 난민동향, 난민 처우 등 난민제도 전반 설명 및 질의응답	난민 정책과
11. 6.	▪ **2020년 제7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1. 6.(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 심의과
11.10.	▪ **국제협력팀, 주한 러시아 대사관 면담** • 내용 - 러시아 국적법 관련 질의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 관련 양국의 정책 공유	출입국 기획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16.	■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운영 방안 검토** • 배경 : 국내 여행수요 충족 및 항공·면세업체 등 여행업계 지원을 위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시행 관련, 세부 업무처리 방안 검토 * 국내공항을 출발하여 타국 영공 선회비행 후 출발공항으로 복귀하는 비행 • 주요내용 - (출입국심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 (특별검역)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절차 적용 면제 및 관광비행 후 15일 경과 여부 관계없이 출국 가능	출입국심사과
11.16.	■ **'독일(베를린) 비자신청센터' 개소** • 내용 : 외국인의 비자발급 편의 증진, 공관 비자업무 능률성 향상 등을 위해 비자신청 접수, 교부 등 단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비자신청센터를 베를린지역에 개소	체류관리과
11.16.	■ **'20년 12월 불법 유흥 마사지 업소 단속 계획 시달** • '20년 12월(1개월) 불법 유흥·마사지업소 집중단속 실시(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불법행위, 마사지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미풍양속 저해행위 등)	이민조사과
11.17.	■ **국제협력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면담** • 내용 - 신임영사와의 천 교류, 이스라엘의 동포업무 및 외국인 업무 관련 담당 부처 등에 관한 질의	출입국기획과
11.20.	■ **중동권 심사담당자 워크숍 개최** • 일시, 장소 : 11. 20.(금) 9:00~17:0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대상 : 전국 중동권 난민심사 담당자 20명 • 내용 : 중동권 국가 심사 시 유의사항, 관련 국가정황의 이해, 사례 분석 및 소그룹 토론 등	난민정책과
11.25.	■ **「'20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참석** • 안건 : '20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1차 심사결과 공유 및 대학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등 논의	체류관리과

12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1.	▪ **등록(거소)외국인 직권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행** • 배경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 방지 및 이동최소화 유도 • 내용 : 시행일인 12.1.부터 3개월 이내('21. 2. 28.) 체류만료일이 도래하는 합법 등록(거소)외국인을 대상*으로 3개월 직권 연장조치 * 출국기간연장·출국유예 허가자 등 일부 제외	체류관리과
12. 3.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지 발간 용역 입찰 공고 의뢰** • 배경 - 출입국 정책 및 소식, 국민과 이민자의 공존 및 이민자의 사회 공헌 사례를 소개하는 소식지를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 강화 및 이민자에 대한 인식 제고	출입국기획과
12. 4.	▪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단속 및 방역계도 활동 지시** • 12. 5.~12. 6.까지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긴급 단속 및 방역계도·순찰 활동 실시	이민조사과
12. 8.	▪ **항만 입항선박 하역작업 방역관리 지침 시행** • 주요내용 - 러시아, 방역강화국가에서 부산으로 입항한 선박 중 항만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선박(원양, 냉동냉장선) 대상 - 필수선원(5명 내외)에 한해 PCR 검사 실시, 하역작업 시 비필수 선원과 동선 구분 등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응단
12.11.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교재 출간** • 내용 : 교육현장의 요구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이민자 수요에 따라 교재 다양화 등을 위해 신교재 출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는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사회이해(5단계)는 법무부에서 각각 개발	이민통합과
12.16.	▪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운영 관련 온라인간담회' 개최** • 내용 : 개정 출입국관리법령(12. 10. 시행)에서 정한 대행기관 등록, 교육, 행정제재 등에 대한 안내 및 제도개선 논의	체류관리과
12.16.	▪ **「'20년 제4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개요 - 일자, 방식 : 12. 16.(수)~12. 21.(월), 서면 회의 - 구성 : 총 21명(외국인 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3명) • 심의안건 : 우수인재 인정여부 심의(12명)	국적과
12.16.	▪ **2020년 제8회 난민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12. 16.(수) 15:00, 법무부 대회의실 •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 •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난민심의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18.	■ **'20년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온라인 워크숍 개최** •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총 70여 명 참석) 및 이민정책연구원, 줄리안 퀸타르트(방송인) 등 • 내용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관련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 중앙·지자체 협업 증진 방안 등 논의	외국인정책과
12.22.	■ **국적법 시행령 등 개정(안)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 개선 - 귀화(국적회복) 신청서, 복수국적자 발견통보서 등 국적관련 서식 개선 -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근거마련	국적과
12.23.	■ **제213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인구학 이론	외국인정책과
12.23.	■ **영국 코로나19 변이 발생에 따른 입국자 방역 강화** • 주요내용 - 영국발 입국자 집중검역 : 37.3도로 발열기준 강화, 유증상자 및 동행자 진단검사, 영국발 항공승무원 전수 진단검사, 영국발 입국자 격리 해제 전 추가검사 실시 - 영국발 확진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영국발 확진자 전수 유전자 진단검사, 승무원 자가 및 숙소 대기 중 확진된 경우 관할 지자체 철저 관리 • 우리부 주요조치 사항 - 입국심사 강화, 영국발 우회 입국자 apis 선별로 심사창 표출, 영국행 재입국허가 원칙적 불허 등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응단
12.28.	■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설치 완료** • 배경 : 내·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공을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내용 - 무안공항 3대, 양양공항 3대 신규 설치 및 인천항 2대 교체 설치 완료	출입국심사과
12.28.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 : '20. 12. 28.~'21. 2. 6. • 내용 : 난민위원회 위원 증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제한,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 난민인정자 등 사회적응지원 강화 등	난민정책과

4
CHAPTER

법령·예규 정비

제1절 법령 개정

제2절 훈령·예규 정비

제1절
법령 개정

제1항 법률

1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증이 면제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2019. 7. 19. (조응천 국회의원), 8. 13.(송기헌 국회의원) 제안
- 2020. 1. 9. 국회의결
- 2020. 2. 4. 법률 제16921호로 공포
- 2020. 8. 5. 시행(일부 5. 5. 시행)

다. 주요내용

-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등이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한

사전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지”를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로 한다.

2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출입국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단기체류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2019. 10. 25. (조응천 국회의원), 2020. 2. 24(정성호 국회의원) 제안
- 2020. 5. 20. 국회의결
-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공포
- 2020. 12. 10. 시행

다. 주요내용

-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 업소의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단기체류자격 숙박외국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기한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반납사유에 따라 반납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19. 3. 29. 정부 제안
- 2020. 1. 9. 국회의결
- 2020. 2. 4. 법률 제16917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2항 대통령령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사증을 발급받는 외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일시, 신청 업무 등을 방문하는 전날까지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함
-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지정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사증을 발급받는 외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사증발급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 방문 전날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함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등을 추가함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6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단기체류자격 숙박외국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여권 등의 자료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국적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효율적인 귀화 심사를 위한 심사 절차 마련
- 국적 취득 후 해외에 주소를 둔 사람의 편의 제고

나. 추진경과

- 2020. 7. 21.~8. 31. 입법예고
- 2020. 12. 15. 국무회의 통과
- 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73호로 공포
- 2020. 12. 22.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의 신청자에 대한 의견진술·자료제출 및 거주지 현지조사 절차 규정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또는 국적회복허가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함

4 난민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난민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있으나, 난민위원회 회의는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심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에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난민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나. 추진경과

- 2020. 9. 17.~9. 24. 입법예고
- 2020. 12. 8. 국무회의 통과

- 2020. 12. 15. 대통령령 제31263호로 공포
- 2020. 12. 15. 시행

다. 주요내용

- 원격영상회의 방식 난민위원회 개최 근거 마련
  - 난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출석 및 이의신청인 등의 회의 출석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온라인을 통한 국내거소이전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기한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기간을 확대하는 등 국내거소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온라인을 통한 국내거소이전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외국국적동포에게 귀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로 반납기간을 확대
- 「출입국관리법」등을 위반했더라도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과태료 처분 1회에

한정하여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허가

제3항 법무부령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2020. 2. 21. 법무부령 제96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초청인인 내국인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심사·확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산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유예 선고 유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대상 외국인의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2020. 5. 29. 법무부령 제97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던 것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하여 범칙금 상향 조정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사전여행허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921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2020. 8. 5. 법무부령 제97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증이 면제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의 세부사항을 마련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추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거부통지서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한 법령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 2020. 12. 10. 법무부령 제98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단기 체류자격으로 숙박하는 외국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여권 등의 자료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중보건상 위해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등의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하여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 등을 출국정지 대상자에 추가

6 국적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귀화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나. 추진경과

- 2020. 12. 22. 법무부령 제98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귀화허가 신청서 서식에 종합평가·면접심사 면제 여부, 건강정보 및 참고사항 항목 등을 추가하고, 「국적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각종 서식을 정비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서식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 2020. 9. 29. 법무부령 제98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개정

제2절

훈령·예규 정비

제1항 훈령

번호	일자	제목	주요골자	비 고
1282	2.13.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 위임 •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의 지원센터 이용 규정 신설	난민 정책과
1287	4. 1.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난민위원회 간사 변경 • 분과위원회 확대(3개 → 4개)	난민 심의과
1293	5.18.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지침	• 정보시스템(ICRM2019)의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라 출입국자기록의 수정·보완 업무가 민원처리 청장·사무소장 결재 시 처리될 수 있도록 변경	이민 정보과
1303	8.17.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 보호일시해제 심사기준 추가 • 일반해제 대상의 범위 조정 • 보증금 양정의 세부기준 마련 • 보증금 국고귀속절차 보완	이민 조사과
1327	12.15.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분과위원회 개최 근거 마련 •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난민위원회 출석한 위원의 의결서 제출 근거 마련	난민 심의과

제2항 예규

번호	일자	제목	주요골자	비 고
1250	4.14.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외부위원을 4명이상으로 조정	이민 조사과
1259	6.18.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코로나 대비 비대면 제도 운영 활성화 정책에 따라 대면회의와 병행한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도입 근거 마련 • 민간 전문위원을 2개 팀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국적법 시행령에 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지침에 반영하여 우수인재 심의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국적과

제3항 주요지시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1. 6.	결혼이민(F-6) 사증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 결혼이민 사증 재신청 제한기간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	외교부 (재외공관)	이민 통합과
1.22.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지시	• ICRM2019 전환 이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지시	기	이민 정보과
1.22.	사회통합교육 참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 수업참여 외국인에 대한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교육,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타 수강생과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등	기	이민 통합과
1.3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 지시'에 따른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방식 변경 지시	•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라 단계별로 행사 진행	기	국적과
2.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입국제한 조치 지시	• 중국 감염병 위험지역 출발·방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2.21.	스티커사증 미부착 관련 사증발급확인서 미소지자의 출입국심사 처리절차 지시	• 사증발급확인서 미소지 외국인에 대한 현지 공항 탑승단계 항공사 직원의 사증 관련 발권 기준 및 입국심사 방법 지시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2.24.	감염병 위기단계 · '심각' 격상에 따른 출입국심사 강화 등 조치사항 지시	• 중수본 주관 범정부대책회의에서 2. 23.부로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심사 강화 등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2.24.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심각)에 따른 체류기간 직권연장 지시(1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체류외국인 이동최소화를 위해 체류기간 만료 등록외국인의 직권 체류연장 실시(1차)	본부 각 과, 기	체류 관리과
2.27.	참전국 우수인재 거주(F-2) 자격 부여 및 우대조치 지시	•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수료 참전국 국민에 대해 거주(F-2) 비자 부여	본부 각 과, 기	체류 관리과
3. 8.	코로나19 대응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정지 등 조치 지시	• 일본정부의 우리 국민 입국제한 조치 발표에 따라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3.1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관리 철저 지시	• 코로나19 방역취약 시설로 분류되는 콜센터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관리 등 방역점검 철저 지시	기	체류 관리과
3.16.	재택근무 중 개인정보 관리 철저 지시	•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재택근무 실시 확대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 철저 등 지시	기	이민 정보과
4. 1.	시설격리 불응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 지시	• 시설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검역법 위반에 따른 검역소의 입국불허 요청 시 입국불허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4. 3.	전자사증 발급 잠정 중단 지시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면밀한 건강상태 확인 등이 어려운 전자사증을 중단하도록 지시	본부 각 과, 기	체류관리과
4. 6.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교부 협조 지시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교부 및 수령증 관리에 관한 행정응원 요청으로, 해외입국자 격리통지서 교부 및 회수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심사과
4. 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입국제한 조치 지시	• 효력 잠정 정지 대상인 4.5.까지 발급된 모든 단기사증 소지자 및 입국 제한 90개 국가(지역) 국민에 대한 무사증 탑승 차단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심사과
4. 9.	코로나19 관련 체류기간 직권연장 지시(2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체류외국인 이동최소화를 위해 체류기간 만료등록외국인의 직권 체류연장 실시(2차)	본부 각 과, 기	체류관리과
4. 9.	단기사증 잠정 무효화 지시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4.5.까지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 중단	기	체류관리과
4.14.	재외공관장 발급 격리면제서 확인 지시	• 시설격리 대상 외국인의 위조 격리면제서 사용 방지 보완책 마련 후 철저한 이행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심사과
4.24.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난민면접절차 개선 및 면접재개 지시	• 비말방지판 설치, 방역물품 비치 등 난민면접실 감염예방 조치, 면접일정 예약 및 면접 당일 주의사항 등 지시	기	난민정책과
4.29.	체류외국인 대상 주요 의무사항 안내문 교부 지시	•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령 상의 각종 의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신청 시 '주요 의무사항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지시	기	체류관리과
5.28.	출입국 심사 시 승객 간 거리 유지 지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출입국 심사 시 거리두기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 지시	출입국기획과, 공항만 관서	출입국심사과
6. 9.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등 지시	• 7. 1.부터 기존 사증발급 방식인 사증스티커 부착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하는 개선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 점검 및 대외 홍보 등 지시	본부 각 과, 기, 외교부(재외공관)	체류관리과
6.24.	코로나19 상황 관련, 항만 승무원(선원) 상륙허가 심사 철저 지시	• 외국인 선원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로 강화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상륙허가 업무 처리기준 시달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심사과
7. 7.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출국심사 강화 지시	•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후 출입국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국내 입국 14일 도과 여부 확인 및 전산시스템 개발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심사과
8.13.	우리 기업인 단기체류 귀국시 격리면제 관련 협조 지시	• 중수본은 우리 기업인 단기체류 귀국 시 격리면제 대상국을 정하여 알려온 바 격리면제서 확인 관련 협조사항 철저 이행 지시	본부 각 과, 각 소속기관	출입국심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8.19.	서울·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예방을 위한 일선기관, 교육 운영기관 등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사항 등	기	이민통합과
8.2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체류민원실' 방역점검 철저 지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출입국기관 체류민원실 밀집도 완화, 위생철저 및 주기적 환기 등 방역점검 철저 지시	본부 각 과, 기	체류관리과
8.27.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외국인 정보 연계 지시	• 휴대전화 부정사용 및 외국인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외국인출국기록 연계 등 지시	서울청 출입국정보화센터, 인천공항청 정보관리과	이민정보과
8.31.	취업기간 만료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한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지시	• 농어촌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취업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지시(통보)	기,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체류관리과
9. 7.	사회통합교육 시 마약 관련 예방교육 강화 지시	• 국내 체류외국인의 마약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대상 관련 교육 철저	기	이민통합과
9.14.	2020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일부 개정	• 감염병 등 상황 하에서 일반 운영기관의 화상교육 운영 근거 마련,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서식 신설 등	기	이민통합과
10.28.	호텔·유흥(E-6-2) 체류기간 상한 일시 해제 지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규인력 도입 및 관련 업계의 경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상한(2년)이 도래했거나 출국기간연장을 받은 호텔·유흥(E-6-2)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3개월씩) 지시	기	체류관리과
11. 2.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심사 관련 업무지시	• 코로나19 인해 입출국이 제한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가 급감하는 등 경제분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심사기준 한시적 완화 지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심사과
11.23.	난민면접 시 방역수칙 등 준수 철저 이행 지시	•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난민업무 처리 시 방역수칙 및 감염예방 조치 철저 준수 지시	기	난민정책과
12. 1.	코로나19 관련 체류기간 직권연장 지시(3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체류외국인 이동최소화를 위해 체류기간 만료등록외국인의 직권 체류연장 실시(3차)	본부 각 과, 기	체류관리과
12.10.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관련 업무지시	•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시행과 관련하여 출입국심사 방법 및 검역 관련 사항 등 관련 업무 알림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심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12.11.	사회통합프로그램 증정용 교재 배포 알림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규 교재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등에 배포하여 민원 안내 및 차년도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기,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등	이민 통합과
12.14.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지시	• 시설격리를 동의한 입국심사 단계에서 비용 납부 의사 확인 등 입국심사 강화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 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12.23.	영국출발 승객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지시	• 중수본 주재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 대응 방안 회의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유리 부에 입국심사 강화를 요청한 바, 영국출발 승객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 외국인기관	출입국 심사과
12.29.	결혼이민사증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통한 초청인 추정소득 산정기준 변경 알림	•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혼이민 사증 초청인 추정소득 산정기준 변경	외교부 (재외공관)	이민 통합과

5
CHAPTER

주요 통계

제1절 출입국자 현황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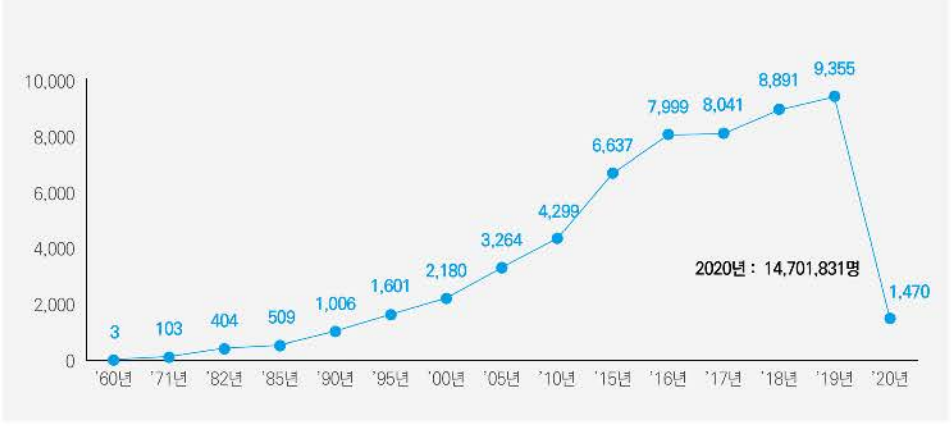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제1절

출입국자 현황

1 출입국자 증가 추이

(단위 : 만 명)



■ 1960년 출입국자 현황

(단위 : 명)

총계	입국			출국		
	소계	국민	외국인	소계	국민	외국인
33,984	18,402	9,727	8,675	15,582	7,856	7,726

■ 2020년 출입국자 총괄

(단위 : 명)

구분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총계		**14,701,831**	**7,529,423**	**7,172,408**
국민	소 계	**9,171,481**	**4,869,578**	**4,301,903**
	승 객	7,957,472	4,242,969	3,714,503
	승무원	1,214,009	626,609	587,400

구분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외국인	소 계	**5,530,350**	**2,659,845**	**2,870,505**
	승 객	4,820,106	2,275,220	2,544,886
	승무원	710,244	384,625	325,619

■ 최근 10년간 출입국자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국	국민	13,019,134	14,065,176	15,155,660	16,372,830	19,580,398	22,659,640	26,765,503	28,945,447	28,905,763	4,301,903
	외국인	9,592,545	11,056,169	12,413,453	14,665,282	13,901,391	17,255,769	13,393,163	15,418,228	17,872,201	2,870,505
	소계	22,611,679	25,121,345	27,569,113	31,038,112	33,481,789	39,915,409	40,158,666	44,363,675	46,777,964	7,172,408
입국	국민	13,045,329	14,071,452	15,196,643	16,349,538	19,531,418	22,654,258	26,679,527	28,914,223	28,889,626	4,869,578
	외국인	9,765,902	11,129,305	12,200,473	14,264,508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소계	22,811,231	25,200,757	27,397,116	30,614,046	32,891,119	40,072,565	40,249,036	44,544,745	46,770,129	7,529,423
출입국자총계		45,422,910	50,322,102	54,966,229	61,652,158	66,372,908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1

2 외국인 입국 현황

■ 외국인 입국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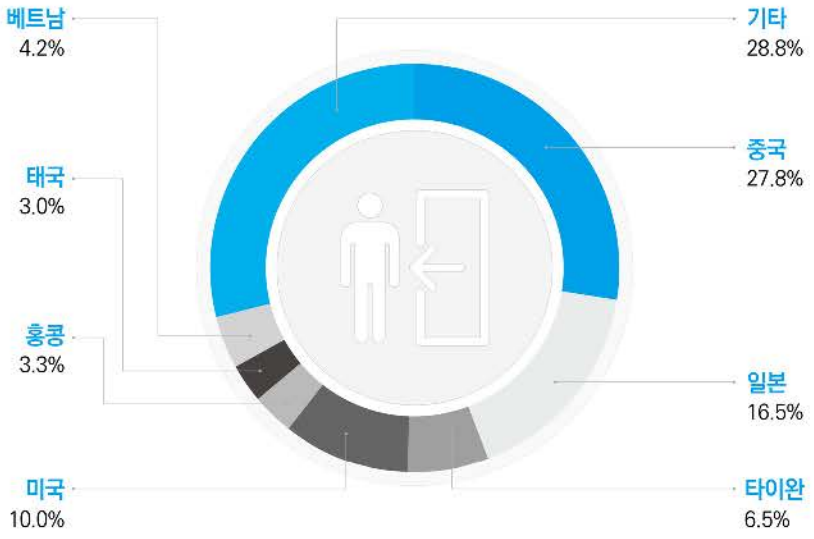
■ 외국인 입국자

(단위 :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	9,765,902	11,129,305	12,200,473	14,264,508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 주요 국가 국민 입국 현황

(2020.12.31. 현재)



※ 전년대비 입국자 : 중국 88% 감소, 일본 87% 감소, 타이완 87% 감소, 미국 77% 감소,

■ 외국인입국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중 국[2]	8,268,262	4,393,936	5,032,905	6,284,486	740,039
한 국 계	267,130	649,225	1,046,060	1,004,319	132,191
일 본	2,321,842	2,337,588	2,976,445	3,303,088	438,708
(타 이 완)	865,948	957,836	1,146,215	1,290,683	171,943
미 국	960,683	969,277	1,068,173	1,139,150	265,134
(홍 콩)	651,639	659,182	679,942	685,569	87,118
태 국	474,262	503,777	565,784	580,191	78,878
베 트 남	299,084	380,929	519,448	624,640	112,938
필 리 핀	566,693	459,588	471,532	516,503	120,171
러 시 아(연방)	238,171	275,779	308,665	350,093	75,117
말 레 이 시 아	311,686	308,152	383,467	409,254	48,741
인 도 네 시 아	296,377	231,908	250,249	280,146	67,301

2) 한국계 포함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오스트레일리아	153,125	151,583	154,390	174,681	23,559
캐 나 다	178,023	178,761	196,859	208,280	35,437
몽 골	82,780	108,139	118,783	118,977	22,535
싱 가 포 르	221,844	216,574	232,359	246,736	18,136
영 국	136,900	128,046	133,149	146,132	21,124
인 도	196,773	124,458	120,975	144,758	34,299
독 일	111,413	111,077	117,173	121,989	24,543
우즈베키스탄	71,299	81,711	89,391	95,634	17,570
프 랑 스	93,039	94,013	101,854	112,588	19,891
미 얀 마	68,822	70,288	71,517	74,243	43,637
(마 카 오)	51,020	51,849	52,877	52,517	5,919
캄 보 디 아	33,278	34,276	36,780	45,713	12,447
카자흐스탄	35,080	46,185	55,104	56,011	11,100
기 타	730,264	694,597	746,486	818,441	163,560

■ 외국인입국자 체류목적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총계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85.1%**
사증면제(B-1)	1,556,536	1,634,095	1,908,616	2,053,173	222,306	-89.2%
관광통과(B-2)	5,833,225	5,269,825	6,378,362	7,158,538	939,748	-86.9%
단기방문(C-3)	5,026,435	3,319,579	4,127,283	5,184,417	503,028	-90.3%
단기취업(C-4)	12,920	20,617	22,618	24,507	12,750	-48.0%
유 학(D-2)	169,715	212,295	248,472	291,007	89,414	-69.3%
일반연수(D-4)	81,033	90,357	83,538	84,653	29,048	-65.7%
상사주재(D-7)	9,160	8,548	8,460	9,072	2,045	-77.5%
기업투자(D-8)	42,007	41,984	41,886	42,442	9,252	-78.2%
무역경영(D-9)	26,302	18,288	9,705	8,669	3,169	-63.4%
교 수(E-1)	7,550	7,491	7,160	6,904	2,061	-70.1%
회화지도(E-2)	32,158	30,922	27,291	29,115	11,326	-61.1%
연 구(E-3)	9,494	9,618	9,508	9,212	2,569	-72.1%
기술지도(E-4)	1,336	1,345	1,339	1,577	444	-71.8%
전문직업(E-5)	2,285	2,206	2,404	2,526	578	-77.1%
예술흥행(E-6)	3,996	3,765	4,570	5,436	1,790	-67.1%
특정활동(E-7)	46,324	47,528	46,661	46,475	12,398	-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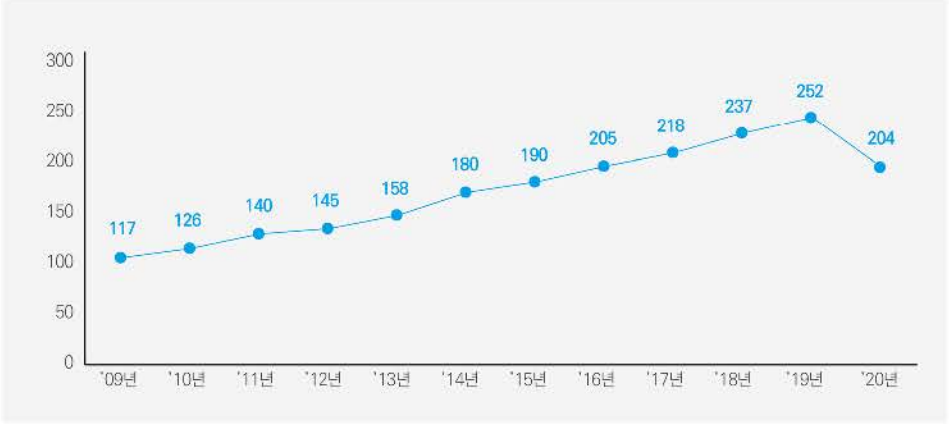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비전문취업(E-9)	134,764	140,072	145,174	151,116	41,992	-72.2%
선원취업(E-10)	9,877	10,720	11,737	11,634	6,325	-45.6%
방문동거(F-1)	69,742	82,857	88,747	97,159	32,329	-66.7%
거주(F-2)	43,041	48,924	53,672	58,425	13,330	-77.2%
동반(F-3)	43,684	40,048	38,402	40,284	13,651	-66.1%
재외동포(F-4)	468,337	515,587	565,636	579,522	112,752	-80.5%
영주(F-5)	134,138	151,115	162,760	177,531	34,140	-80.8%
결혼이민(F-6)	118,883	130,834	143,092	159,499	46,119	-71.1%
방문취업(H-2)	229,300	251,674	258,067	250,655	58,992	-76.5%
기타	3,306,065	1,479,215	1,235,362	1,396,955	458,289	-67.2%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1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매년 12.31. 기준, 단위 : 만 명)



■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총계	등록	거소신고	단기체류
2019년	2,524,656	1,271,807	459,996	792,853
2020년	**2,036,075**	**1,145,540**	**464,783**	**425,752**
전년대비 증감률	-19.4%	-9.9%	1.0%	-46.3%
구성비	100%	56.3%	22.8%	20.9%

■ 불법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9년	전체	390,281	95,815	293,150	1,316
	15~59세	377,304	93,708	283,040	556
2020년	전체	**392,196**	**108,665**	**281,857**	**1,674**
	15~59세	376,822	105,965	270,041	816
전년대비 증감률(전체)		0.5%	13.4%	-3.9%	27.2%

※ 거소신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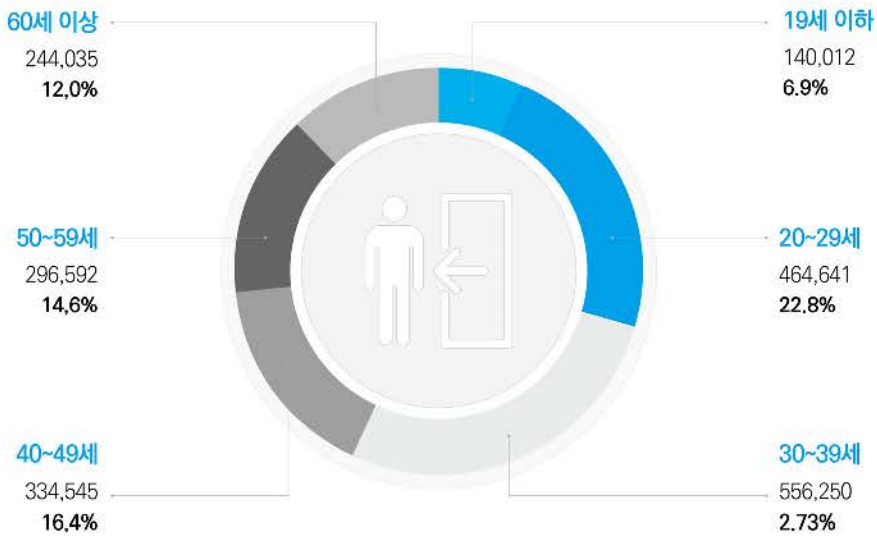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등록 외국인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단기체류 외국인	277,596	324,504	356,842	419,673	431,646	518,902	597,399	679,874	792,853	425,752
거소신고	135,020	187,616	233,269	286,414	324,786	368,862	411,337	441,107	459,996	464,783
총계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2020.12.31. 현재, 단위 : 명)



■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총계	**2,036,075**
중국[3]	894,906
한국계	647,576
베트남	211,243
태국	181,386
미국	145,580
우즈베키스탄	65,205
러시아(연방)	50,410
필리핀	49,800
몽골	42,511
캄보디아	41,405
네팔	39,743
인도네시아	36,858
카자흐스탄	29,278
일본	26,515
미얀마	26,412
스리랑카	22,466
캐나다	21,794
(타이완)	19,444
방글라데시	16,823
파키스탄	12,842
인도	10,892
오스트레일리아	7,913
영국	5,871
키르기즈	5,710
기타	71,068

3) 한국계 포함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총계	**2,036,075**	**1,643,879**	**392,196**
사증면제(B-1)	179,332	7,527	171,805
관광통과(B-2)	51,977	25,866	26,111
단기방문(C-3)	114,261	35,327	78,934
단기취업(C-4)	2,356	1,991	365
유학(D-2)	101,810	97,118	4,692
기술연수(D-3)	1,634	392	1,242
일반연수(D-4)	52,952	29,279	23,673
종교(D-6)	1,254	1,209	45
상사주재(D-7)	1,057	1,039	18
기업투자(D-8)	5,587	5,440	147
무역경영(D-9)	2,136	2,098	38
교수(E-1)	2,053	2,050	3
회화지도(E-2)	12,621	12,574	47
연구(E-3)	3,110	3,104	6
기술지도(E-4)	199	198	1
전문직업(E-5)	374	367	7
예술흥행(E-6)	3,011	1,600	1,411
특정활동(E-7)	19,534	17,229	2,305
비전문취업(E-9)	236,950	189,828	47,122
선원취업(E-10)	17,552	11,153	6,399
방문동거(F-1)	105,382	101,610	3,772
거주(F-2)	43,666	41,533	2,133
동반(F-3)	20,050	19,488	562
재외동포(F-4)	466,682	464,885	1,797
영주(F-5)	160,947	160,947	0
결혼이민(F-6)	133,987	130,256	3,731
방문취업(H-2)	154,537	151,641	2,896
기타	141,064	128,130	12,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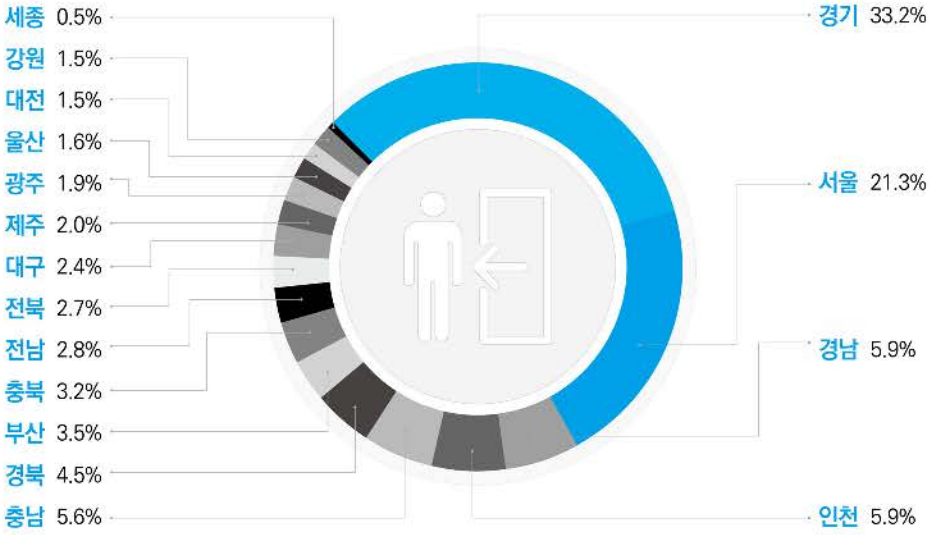
2 등록외국인 현황

■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법체류	899,613	840,421	890,286	997,607	1,058,118	1,086,436	1,088,925	1,156,559	1,175,992	1,036,875
불법체류	82,848	92,562	95,637	93,924	84,969	75,241	82,837	90,067	95,815	108,665
총계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인천	충남[4]	경남	경북	부산	충북
	380,144	242,623	67,648	69,622	67,239	52,469	40,366	37,060
1,145,540	전남	전북	대구	제주	광주	울산	강원	대전
	32,906	31,288	27,798	22,943	21,323	17,884	17,332	16,895

4) 세종특별자치시 5,076명 포함

■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등록외국인
총계	**1,145,540**
중국[5]	465,843
한국계	286,933
베트남	181,415
우즈베키스탄	48,370
필리핀	40,686
캄보디아	40,222
네팔	38,527
인도네시아	33,239
태국	30,801
미국	25,910
미얀마	24,985
몽골	24,515
일본	22,798
스리랑카	21,231
(타이완)	18,357
카자흐스탄	14,377
방글라데시	13,813
러시아(연방)	13,613
파키스탄	10,644
인도	9,386
키르기즈	4,240
영국	4,170
캐나다	4,089
말레이시아	3,532
기타	50,777

5) 한국계 포함

■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등록외국인	합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총계	**1,145,540**	**1,036,875**	**108,665**
문화예술(D-1)	33	31	2
유학(D-2)	101,200	96,660	4,540
일반연수(D-4)	49,171	26,415	22,756
취재(D-5)	105	105	0
종교(D-6)	1,222	1,189	33
상사주재(D-7)	1,016	1,002	14
기업투자(D-8)	5,499	5,359	140
무역경영(D-9)	2,027	1,990	37
교수(E-1)	2,045	2,042	3
회화지도(E-2)	12,468	12,428	40
연구(E-3)	3,060	3,055	5
기술지도(E-4)	192	191	1
전문직업(E-5)	371	365	6
예술흥행(E-6)	2,753	1,473	1,280
특정활동(E-7)	19,258	17,067	2,191
비전문취업(E-9)	234,287	188,530	45,757
선원취업(E-10)	16,980	10,918	6,062
방문동거(F-1)	103,621	99,964	3,657
거주(F-2)	43,366	41,233	2,133
동반(F-3)	19,672	19,156	516
영주(F-5)	160,733	160,733	0
결혼이민(F-6)	132,124	128,856	3,268
관광취업(H-1)	842	829	13
방문취업(H-2)	152,565	149,862	2,703
기타	80,930	67,422	13,508

3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 단기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법체류	193,242	240,791	270,906	306,885	303,561	386,113	430,259	415,830	499,703	143,895
불법체류	84,354	83,713	85,936	112,788	128,085	132,789	167,140	264,044	293,150	281,857
총계	**277,596**	**324,504**	**356,842**	**419,673**	**431,646**	**518,902**	**597,399**	**679,874**	**792,853**	**425,752**

■ 단기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전체
총계	**425,752**
태국	150,578
중국[6]	78,602
한국계	10,182
미국	76,532
베트남	29,828
몽골	17,996
러시아(연방)	11,690
카자흐스탄	9,370

6) 한국계 포함

구분	전체
필 리 핀	9,101
우 즈 베 키 스 탄	4,192
인 도 네 시 아	3,422
방 글 라 데 시	3,010
일 본	2,991
파 키 스 탄	2,198
캐 나 다	2,195
오 스 트 레 일 리 아	1,968
말 레 이 시 아	1,935
인 도	1,504
미 얀 마	1,427
스 리 랑 카	1,235
네 팔	1,216
캄 보 디 아	1,178
(타 이 완)	1,014
영 국	903
기 타	11,667

4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 불법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율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등록 외국인	82,848	92,562	95,637	93,924	84,969	75,241	82,837	90,067	95,815	108,665
단기체류 외국인	84,354	83,713	85,936	112,788	128,085	132,789	167,140	264,044	293,150	281,857
거소신고	578	1,579	1,533	2,066	1,114	941	1,064	1,015	1,316	1,674
총계	**167,780**	**177,854**	**183,106**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390,281**	**392,196**
불법체류율 (%)	12.0	12.3	11.6	11.6	11.3	10.2	11.5	15.0	15.5	19.3

※ 불법체류율 : 총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외국인 비율

■ 불법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비교

5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체류자	**452,297**	**43,258**	**409,039**
합법체류	391,735	39,113	352,622
불법체류	60,562	4,145	56,417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총계		**452,297**	**391,735**	**60,562**
전문인력	**소계**	**43,258**	**39,113**	**4,145**
	단기취업(C-4)	2,356	1,991	365
	교수(E-1)	2,053	2,050	3
	회화지도(E-2)	12,621	12,574	47
	연구(E-3)	3,110	3,104	6
	기술지도(E-4)	199	198	1
	전문직업(E-5)	374	367	7
	예술흥행(E-6)	3,011	1,600	1,411
	특정활동(E-7)	19,534	17,229	2,305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순기능인력	**소계**	**409,039**	**352,622**	**56,417**
	비전문취업(E-9)	236,950	189,828	47,122
	선원취업(E-10)	17,552	11,153	6,399
	방문취업(H-2)	154,537	151,641	2,896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총계	**452,297**
중국[7]	145,136
한국계	131,315
베트남	42,759
캄보디아	33,338
네팔	32,309
인도네시아	30,544
우즈베키스탄	26,452
필리핀	23,746
미얀마	23,060
태국	22,683
스리랑카	18,731
미국	9,119
방글라데시	8,740
카자흐스탄	5,889
몽골	5,430
파키스탄	3,065
인도	2,342
영국	2,124
동티모르	2,063
키르기즈	2,023
남아프리카공화국	1,861
캐나다	1,772
우크라이나	1,607
기타	7,504

7) 한국계 포함

■ 비전문취업(E-9) 업종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236,950**	**189,828**	**47,122**
소계	231,314	189,668	41,646
제 조 업(E-9-1)	177,940	152,707	25,233
건 설 업(E-9-2)	9,803	6,737	3,066
농 업(E-9-3)	29,381	21,795	7,586
어 업(E-9-4)	13,927	8,279	5,648
서 비 스 업(E-9-5)	263	150	113
기 타[8]	5,636	160	5,476

■ 비전문취업(E-9) 국적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국적	총체류자
총계	**236,950**
캄 보 디 아	33,219
베 트 남	31,406
네 팔	31,431
인 도 네 시 아	24,184
필 리 핀	21,420
타 이	22,176
미 얀 마	22,149
스 리 랑 카	18,439
우 즈 베 키 스 탄	10,786
방 글 라 데 시	8,225
몽 골	5,058
파 키 스 탄	2,623
중 국[9]	2,450
한 국 계	588
기 타	3,384

8) 기타 : 과거추천연수(E-9-95)~과거합법조치(E-9-98)
9) 한국계 포함

■ 방문취업자(H-2)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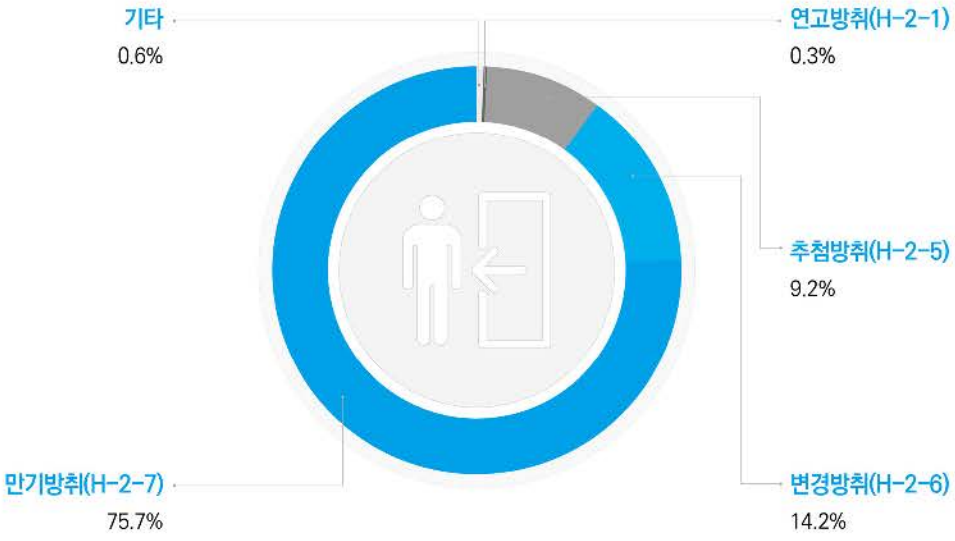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연고방취 (H-2-1)	유학방취 (H-2-2)	자진방취 (H-2-3)	연수방취 (H-2-4)	추첨방취 (H-2-5)	변경방취 (H-2-6)	만기방취 (H-2-7)	기타방취 (H-2-9)
총계	**154,537**	**448**	**0**	**228**	**12**	**14,163**	**22,003**	**117,044**	**639**
중국	130,708	437	0	228	10	1,098	21,994	106,461	480
우즈베키스탄	15,338	7	0	0	1	7,005	4	8,216	105
카자흐스탄	5,789	0	0	0	1	4,404	4	1,340	40
키르기즈	1,113	0	0	0	0	778	0	330	5
기타	1,589	4	0	0	0	878	1	697	9

* 약호 설명

약호	분류 기준	약호	분류 기준
H-2-1	연고자	H-2-5	무연고자 등 전산추첨자
H-2-2	유학자격소지자의 부 또는 모 및 배우자	H-2-6	무연고동포 연수 후 자격변경자
H-2-3	자진귀국자	H-2-7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
H-2-4	연수취업 후 자진귀국자	H-2-9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 방문취업자(H-2)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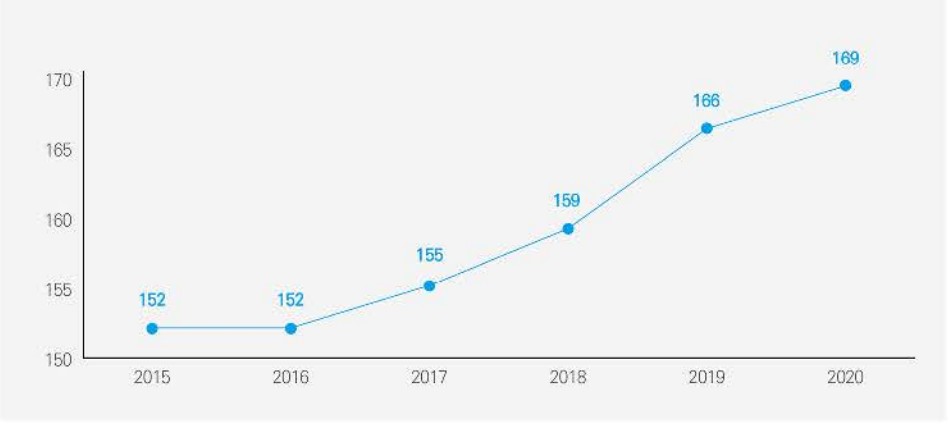
6 결혼이민자[10] 체류 현황

■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	151,608	152,374	155,457	159,206	166,025	**168,594**
전년대비 증감률	0.4%	0.5%	2.0%	2.4%	4.3%	**1.5%**

(단위 : 천 명)



〈참고〉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혼인귀화자 (전체누계)	108,526	114,901	121,339	129,028	135,056	**141,773**

■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등록외국인)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인천	경남	충남[11]	경북	부산	전남
	50,182	27,883	11,286	10,865	9,683	8,057	7,409	6,774
166,612	전북	대구	충북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제주
	6,085	5,546	5,543	3,863	3,732	3,459	3,431	2,814

10)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2011년 12월 이후(F-2-1, F-5-2, F-6)
11) 세종특별자치시 829명 포함

■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 국적	계	중국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국	기타
전체	**168,594**	**60,072**	**22,580**	**44,058**	**14,595**	**12,002**	**5,929**	**4,638**	**4,312**	**22,988**
남자	30,716	13,823	8,312	3,195	1,244	503	111	466	3,083	8,291
여자	137,878	46,249	14,268	40,863	13,351	11,499	5,818	4,172	1,229	14,697

※ 여성 81.8%, 남성 18.2%
※ 중국 35.6%, 베트남 26.1%, 일본 8.7%, 필리핀 7.1% 순임

7 외국인 유학생[12] 체류 현황

■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88,468**	**84,711**	**81,847**	**86,410**	**96,357**	**115,927**	**135,087**	**160,671**	**180,131**	**153,361**
유학(D-2)	68,039	64,030	60,466	61,257	66,334	76,040	86,875	102,690	118,254	101,810
한국어연수(D-4-1)	20,429	20,681	21,381	25,138	30,017	39,873	48,208	57,971	61,867	51,545
외국어연수(D-4-7)	-	-	-	15	6	14	4	10	10	6
전년대비증감률	1.1%	-4.2%	-3.4%	5.6%	11.5%	20.3%	16.5%	18.9%	12.1%	-14.9%

12) 외국인 유학생 (D-2, D-4-1, D-4-7)

■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유학 (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총계	**153,361**	**101,810**	**51,545**	**6**
베 트 남	57,945	23,767	34,175	3
중 국[13]	52,102	45,362	6,740	0
한국계	982	931	51	0
우즈베키스탄	9,077	6,733	2,344	0
몽 골	8,240	6,008	2,232	0
네 팔	2,796	2,473	323	0
일 본	2,193	1,294	899	0
파 키 스 탄	1,531	1,502	29	0
인도네시아	1,342	1,114	228	0
인 도	1,289	1,160	129	0
방글라데시	1,160	1,124	36	0
미 얀 마	1,043	680	363	0
러 시 아(연방)	918	460	457	1
미 국	861	518	343	0
(타 이 완)	859	525	334	0
프 랑 스	794	528	266	0
말레이시아	724	596	128	0
(홍 콩)	626	365	261	0
카자흐스탄	579	515	64	0
기 타	9,282	7,086	2,194	2

13) 한국계 포함

8 체류허가업무 연도별 처리현황

(2020.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1,739,766**	**1,748,121**	**1,944,880**	**1,885,856**	**2,004,345**
기간연장	490,416	534,630	578,912	584,889	1,052,327
자격부여	7,850	6,477	7,155	7,587	10,755
자격변경	140,698	132,516	134,413	123,522	119,463
재입국	2,946	1,961	1,542	1,380	41,374
체류지변경	661,663	612,597	677,179	657,882	456,788
자격외활동	8,915	10,815	14,762	19,743	15,109
근무처(장소)변경·추가	55,833	55,501	57,437	52,434	49,853
외국인등록	292,187	298,148	337,109	294,319	119,085
거소신고	71,238	68,284	58,722	49,003	37,557
등록사항변경	7,954	27,143	77,588	95,042	102,034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연도별 처리

(단위 : 명, 천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강제퇴거		21,919	28,784	26,694	31,811	34,557	5,867
출국명령		5,564	6,183	6,282	46,504	5,852	2,062
출국권고		3,192	3,345	3,366	3,273	2,687	2,097
통고처분	건	29,272	29,380	29,838	30,397	26,106	17,863
	금액/천	35,037,850	38,592,080	40,094,280	49,461,520	49,564,840	25,114,680
고 발		1,850	2,553	2,851	3,482	4,552	2,605
과태료	건	8,558	7,271	15,205	15,546	14,330	21,358
	금액/천	1,312,070	988,440	2,165,600	2,079,740	1,960,670	3,033,820
기 타		54,160	74,970	62,688	45,824	87,520	66,977
총 계		**124,515**	**152,486**	**146,924**	**176,837**	**175,604**	**118,829**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1 국적업무 처리 현황

■ 연도별 및 국가별 국적취득 현황

(단위 : 명)

종류 / 연도	총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5년	19,351	13,534	16,721	10,924	2,630	2,610
2016년	19,700	12,411	17,045	10,108	2,655	2,303
2017년	20,244	12,861	17,765	10,086	2,479	2,775
2018년	25,014	14,254	22,153	11,556	2,861	2,698
2019년	19,952	12,358	16,852	9,914	3,100	2,444
2020년	18,899	15,649	16,529	13,885	2,370	1,764

국가 / 연도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귀화	**10,924**	**10,108**	**10,086**	**11,556**	**9,914**	**13,885**
	회복	**2,610**	**2,303**	**2,775**	**2,698**	**2,444**	**1,764**
중국	귀화	6,477	5,126	4,781	4,838	4,371	7,932
	회복	193	113	245	144	182	120
베트남	귀화	2,722	3,289	3,743	4,849	3,867	4,076
	회복	47	56	57	45	39	29
필리핀	귀화	280	337	359	597	423	375
	회복	6	3	7	7	11	7
몽골	귀화	101	107	93	99	102	145
	회복	10	7	17	14	6	10
우즈베키스탄	귀화	81	62	48	72	78	138
	회복	28	19	27	12	6	8

국가 \ 연도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본	귀화	44	35	29	17	14	15
	회복	49	31	38	53	41	54
태국	귀화	45	41	52	58	52	68
	회복	5	5	4	5	3	7
파키스탄	귀화	24	33	51	42	48	26
	회복	0	0	0	2	0	0
기타	귀화	1,150	1,078	930	984	959	1,110
	회복	2,272	2,069	2,380	2,416	2,156	1,529

■ 연도별 및 국가별 국적이탈·상실 현황

(단위 : 명)

연도 \ 종류	총계	상실	이탈
2015년	17,529	16,595	934
2016년	36,404	35,257[14]	1,147
2017년	21,269	19,364	1,905
2018년	33,594	26,608[15]	6,986[16]
2019년	24,541	22,080	2,461
2020년	28,686	25,035	3,651

국가 \ 연도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상실	**16,595**	**35,257**	**19,364**	**26,608**	**22,080**	**25,035**
	이탈	**934**	**1,147**	**1,905**	**6,986**	**2,461**	**3,651**
미국	상실	9,798	12,075	11,647	13,754	14,110	10,238
	이탈	717	827	1,514	5,128	1,933	2,961
캐나다	상실	3,482	4,336	3,041	3,342	2,807	2,948
	이탈	68	80	89	749	133	144
오스트레일리아	상실	1,205	1,553	1,556	1,911	1,804	1,396
	이탈	16	17	17	219	39	26
일본	상실	499	15,216	962	4,998	841	8,832
	이탈	88	102	193	609	256	374

14) ('16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임
15) ('18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임
16) ('18년 국적이탈처리 증가 이유)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임

국가 \ 연도	유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뉴 질 랜 드	상실	564	657	655	686	807	355
	이탈	11	9	17	60	14	36
영 국	상실	200	293	336	366	372	210
	이탈	0	6	9	21	16	14
독 일	상실	162	197	192	289	297	239
	이탈	4	3	16	36	16	17
기 타	상실	685	930	975	1,262	1,042	817
	이탈	30	103	50	164	54	79

2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구분 \ 연도		총계	'94~'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청	1차	**71,042**	5,069	1,574	2,896	5,711	7,541	9,942	16,173	15,452	6,684
	이의신청	**29,704**	2,202	349	1,759	3,258	5,277	3,722	3,113	4,068	5,956
심사결정	소계	**63,682**	4856	914	3,349	6,238	10,602	9,634	6,881	9,311	11,897
	1차	**39,954**	2,901	598	2,388	4,244	6,326	5,219	4,297	5,877	8,104
	이의신청	**23,728**	1,955	316	961	1,994	4,276	4,415	2,584	3,434	3,793
철회*	소계	**16,970**	895	350	408	351	815	1,245	2,412	4,264	6,230
	1차	**16,112**	840	327	362	278	735	1,197	2,305	4,138	5,930
	이의신청	**858**	55	23	46	73	80	48	107	126	300

* 1차 심사의 경우 직권종료 처리 건 포함

3 난민신청 심사결과

구분 \ 연도		총계	'94~'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완료		**34,836**	2,646	523	1,574	2,755	5,665	5,874	3,960	5,073	6,766
난민 인정 (보호)	소계	**3,461**	495	63	627	303	350	437	652	310	224
	(보호율, %)	**(9.9)**	(18.7)	(12)	(39.8)	(11)	(6.2)	(7.4)	(16.5)	(6.1)	(3.3)
	인정	**1,091**	324	57	94	105	98	121	144	79	69
	(인정률, %)	**(3.1)**	(12.2)	(10.9)	(6)	(3.8)	(1.7)	(2.1)	(3.6)	(1.6)	(1)
	인도적 체류	**2,370**	171	6	533	198	252	316	508	231	155
불인정		**31,375**	2,151	460	947	2,452	5,315	5,437	3,308	4,763	6,542

※ 2020. 12. 31. 기준 시점에서 작성된 최종 심사결과에 대한 통계임
※ 인정취소 7건 및 철회 1건 포함(2009년 4건,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4년 1건)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6
CHAPTER

보도(설명) 자료

2020년 보도(설명) 자료 배포 일지

월일	주요내용
1. 8.	(설명자료)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이 달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1. 10.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
1. 21.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설날이에요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1. 22.	추미애 법무부장관, 설 연휴 대비 인천공항 현장 점검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및 감염병 차단 검역 협력 당부
1. 29.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1. 31.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1. 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2.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
2. 5.	법무부, 민원인 방문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에 총력
2. 6.	법무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지원 대책 마련
2.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중국 동포 밀집지역 안내·계도 활동 실시
2. 9.	(설명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로 5백 명 가까이 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하였습니다. - 2.8.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 수도 1월 중 가장 많았던 날(1.10.) 대비 81% 감소
2. 11.	(설명자료) 외국인 근로자 운영중단 관련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2.10.(월) 아시아경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손 급한데…」보도 관련
2.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한-중 출입국자 대폭 감소 - 중국인 입국, 사드 때 보다 적어

월일	주요내용
2. 14.	「코로나19」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10일간의 결과 -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분석
2. 21.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소속대학 관계자의 체류허가 단체접수 확대 및 온라인 접수 추진
2. 21.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 21.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 적극 해소
2 .21.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예산 절감 및 비자 위·변조 방지 효과 기대
2. 24.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 - 체류기간 일괄 연장을 통해 민원인 이동 최소화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적극 차단
2. 24.	(설명자료) 법무부는 미성년 이주아동의 보호 조치 및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20.(목) 경향신문 「난민단체, 외국 국적의 아동 구금은 위헌」, 노컷뉴스 「이주아동 구금하는 외국인 보호제도는 위헌」보도 관련
2. 27.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1,000명 대로 감소 - '20. 2. 26.(수) 중국인 입국자 1,404명, 1월 대비 92.6% 감소
3. 5.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hikorea.go.kr)으로 하세요. - 3. 11.부터 미리 온라인 신고를 하면, 3. 14.부터 공항으로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3. 6.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 시 부당한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 이민특수조사대 · 전국 광역단속팀 투입, 실태점검에 나서
3. 6.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 ▲미국행 출국검역, ▲인천공항 방역망 가동, ▲14일내 위험지역 방문자 관리강화
3. 8.	코로나19 관련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정지 등 법무부 조치
3. 9.	(설명자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정책은 필요합니다.
3. 10.	일본국민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첫날 일본발 일본국민 입국자 5명
3. 11.	(설명자료)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13.	불법체류 외국인 2일만에 416명 온라인 자진 신고 - 3. 11.부터 온라인만으로 자진출국 신고 가능, 3. 1.부터는 단속된 외국인에게 범칙금 부과 시작
3. 16.	(설명자료) 코로나19 관련, 법무부 대응책은 선제적 맞춤형 대책입니다. - 3.13.(금), 뉴데일리, -우한폐렴에 한국 떠나려는데..."체류기간 연장해주겠다"는 범부부- 보도 관련
3. 19.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취소 ·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월일	주요내용
3. 31.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19개국→ 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4. 1.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
4. 2.	법무부, 4.1.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4. 3.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 '20. 4. 1.부터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 시행
4. 3.	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 구축
4. 6.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 - 1명 추방, 11명 입국 거부, 3명 소환 조사 -
4. 8.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 자가격리 명령 위반 인도네시아인 추방 및 베트남 부부 강제추방 절차 개시 -
4. 9.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역유입·확산 방지 도모
4. 9.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
4. 19.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조치 - 4. 1. 이후 누적 추방 조치는 12명 (자가격리 위반 8명, 격리시설 입소 거부 4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29명
4. 19.	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올해 2. 1.부터 범칙금 부과 시작, 4. 15. 현재 1억원 넘어
4. 20.	4월 13일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5. 1.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18명 (자가격리 위반 12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6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35명
5. 1.	법무부, 중단되었던 귀화 면접심사를 5. 6.부터 재개
5. 3.	법무부, 귀화 면접심사 5. 6.(수)부터 재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도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5. 23.(토) 특별 실시 예정
5. 4.	법무부,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력 -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
5. 13.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 방송인 크리스티안, 줄리안, 수잔 샤키야 등 35명 선정
5. 20.	6.25 전쟁 상처, 봉사로 어루만진 60년.... 영국인 수산나 여사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 -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

월일	주요내용
5. 22.	자가격리 위반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24명 (자가격리 위반 17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7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36명
5. 23.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6. 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5. 2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행정'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적극 대응에 기여
5. 28.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6월 1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확인 가능
5. 29.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5. 29.	(설명자료)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 관련 설명자료
6. 1.	「외국인등록증」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 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6. 2.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경험, 해외에 나눈다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전담팀(T/F) 제4차 웹세미나 개최 - 한국의 출입국 및 검역 경험 공유 기회 마련
6. 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 법무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
6. 19.	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 시행
6. 19.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으로 간편하게 집에서도 신청 가능
6. 23.	(설명자료) 법무부는 편법 관광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6. 25.	법무부,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영주 비자 최초 발급 -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발급을 통해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
6. 26.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28명 (자가격리 위반 19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9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40명
7. 7.	(설명자료)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 20.	(설명자료) 계절근로 송출국 정부의 귀국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귀국을 위한 것입니다. - 7.20.(월), 매일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엇박자, 농식품부 확대시행, 법무부 지침 강화" 보도 관련

월일	주요내용
7. 21.	「국적법령」개정안 입법예고 - 비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방식 도입
7. 2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 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실증랩 개소
8. 4.	(설명자료)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체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8.3.(월), CNN "South Korea authorities encourage men to marry foreign women But their brides often become victims of abuse" 보도 및 이를 인용한 연합뉴스 「CNN, 한국 결혼이주여성 조명 "폭력문제 심각…차별로 신음"」보도 등 관련
8. 12.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명 구속 및 시설격리(6명)·자가격리(9명) 위반 외국인 15명 추가 출국조치
8. 12.	제75주년 광복절 맞아 중국동포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9. 4.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 8월 27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운영
9. 7.	(설명자료)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보호외국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 「철창 너머 사람이 가득 찼다」보도 관련
9. 8.	(설명자료) 해외체류 중 코로나19로 국내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지난 영주권자에게만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보도 관련
9. 18.	(설명자료) 최근 3년간 1만1352명이 "국적포기했다" 언론보도 관련
9. 24.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합니다.
9. 24.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추석 "나는 자랑스런 한국인 안광훈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 신부에게 국적증서 수여
9. 29.	법무부, 추석기간 외국인 모임·여행자제 요청 및 방역 취약시설 점검·순찰 활동 강화
11. 3.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가 바뀝니다. - 배타적 어감이 강한 'Alien' 삭제
11. 4.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 11.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2명)·자가격리위반(39명) 총 61명 출국조치
11. 17.	(설명자료)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입장은 법원의 판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 11.15. 세계일보 「법무부 '인권 침해' 번번이 도마 위에」보도 관련
11. 30.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월일	주요내용
12. 11.	국내 210만여 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출판 -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법무부 협력의 결과물, 사회통합프그램 기본 교재
12. 16.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 12. 16.부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 외에 hikorea.go.kr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
12. 21.	법무부,'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키로
12. 28.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이 달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20.1.8.)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설 명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2쪽(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1. 8.(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담당과장	김정도 과장 02)2110-4155	담당자	김민경 사무관 02)2110-4176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이 달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 1. 6.(월) 인사이트 「난민이 지원받는 한 달 생활비가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보다 많다」 보도 관련 -

'20. 1. 6.(월) "난민이 지원받는 한 달 생활비가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보다 많다." 제하 인사이트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 지난해 6·25 참전용사에게 지급된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2020년 최저생계비 527,000원에 미치지 못하며, 국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인 432,900원보다도 적은 금액임

○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87세 이상의 고령으로 약제비 지출이 많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거나 고독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등 난민신청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

《 설명 내용 》

□ 난민신청자 생계비와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제도의 배경과 내용이 다릅니다.

○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의 취약성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 없이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수당이나,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 중 취약한

■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20.1.10.)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3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1. 10.(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담당과장	구본준 02) 2110-4035	담 당 자	사무관 손홍기 02) 2110-4045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이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ETA(전자여행허가제)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은 ①사증면제협정, ②우리정부의 특별조치, ③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며,

▸ **세부적인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 **'18년 전체 입국외국인 대비 무사증 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설날이에요(20.1.21.)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7쪽 (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 21.(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담당과장	송소영 02) 2110-4120	담 당 자	정금심 사무관 02) 2110-4131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설날이에요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안동관)는 **2020. 1. 21.(화) 14:00**부터 양주출입국 대강당에서 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귀화허가자 **34**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첫 번째 맞이하는 민속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 사회에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하하는 뜻깊은 장이 되었습니다.

※ 2018.12.20. 국적법 개정에 따라 국적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민 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업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재외공관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귀화자 거주지역별 출입국에서 자체적으로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고 있음

○ 이 날 행사에는 국적 취득과 동시에 지방자치 주민이 되는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양주부시장, 양주경찰서장, 양주사무소 사회통합위원, 한국이민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 대통령 축하 영상 시청, △ 귀화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 귀화자 소감 발표, △ 축사 및 축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한 달 자진출국 외국인 2배 증가(20.1.21.)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1. 21.(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사무관 김영오 02) 2110-4082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한 달, 자진출국 외국인 2배 증가

- 국내 불법체류 및 알선 태국인 명단, 태국 정부에 제공 -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한 달 동안 **총 8,093명(일평균 385명)이 자진출국**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 ~ 11월 일평균 자진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 법무부는 지난 해 12. 11.부터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 동 대책에 따라 2020. 6. 30.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기간 준수 출국 시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 1년 복수 비자 발급)

- '20. 3. 31. 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 후에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에,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에, 마지막으로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진출국 시점에 따라 비자 신청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빨리 나가면 그만큼 빨리 들어 올 수 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설 연휴 대비 인천공항 현장 점검(20.1.22.)

법무부 |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0. 1. 22.(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담당과장	구본준 02) 2110-4035	담 당 자	사무관 손흥기 02) 2110-4045

추미애 법무부장관, 설 연휴 대비 인천공항 현장 점검

-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및 감염병 차단 검역 협력 당부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2020. 1. 22.(수) 11시,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출입국 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추미애 장관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장, 보안상황실, 인터뷰실(재심실)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설 연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입국자에 대비한 철저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설 연휴를 전후(1.22.~1.28.)하여 인천공항 기준 약 133만 명이 출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국은 연휴 시작일인 24일, 입국은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이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설 연휴 혼잡한 상황을 틈타 국익 위해자 등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인물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위변조 여권 심사, 정밀 인터뷰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주요 간부를 포함한 직원 비상근무 체계를 편성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함은 물론 공항 상주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

■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20.1.29.)

법무부 |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만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1. 29.(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담당과장	김현체 02) 2110-4140	담 당 자	사무관 이효수 02) 2110-4141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20. 1. 28.(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임

**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임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31.)

법무부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 31.(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연 02) 2110-4075	담 당 자	강성욱 사무관 02) 2110-4076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병 여부를 검진받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 28.(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보호소 입소 전 단계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체온 측정, 문진 등 감염병 의심증상 유무를 점검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 감염병 의심증상 외국인 발견 시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통보의무 면제 제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20.1.31.)

법무부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7쪽 (붙임 5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1. 31.(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신곤 체류관리과장 02) 2110-4061	담 당 자	김병훈 사무관 02) 2110-406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하여 왔으나,

○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체류 외국인의 감염증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토·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평일 09:00~18:00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 등 20개국 언어로 운영)
18:00~09:00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 운영)
토·공휴일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 운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20.2.3.)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3.(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상황실
출입국장	구본준 02) 2110-4035	담 당 자	사무관 손승기 02) 2110-40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이제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습니다.

1.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겠습니다.

○ 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湖北/HUBEI)인 모든 중국 여권이 대상이며, 국내 입항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은 모두 해당됩니다.

○ 차단 방법은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의 여권 인적사항면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차단하지 못한 경우 2차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해 최종 차단하겠습니다.

2. 중국 후베이성 관할공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겠습니다.

○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이 대상이며, 사증을 발급받은 여권의 발급지가

■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발급 사증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은 사증발급 시점에 관계없이 제한됩니다 (20.2.4.)

법무부

설 명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6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4.(화)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담당과장	체류관리과장 이진곤 출입국심사과장 구본순	담 당 자	체류관리과 김명훈 사무관 02)2110-4062 출입국심사과 손흥기 사무관 02)2110-4045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발급 사증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은 사증발급 시점에 관계없이 제한됩니다

- 2. 4.(화) 서울경제, 「"후베이성 안 갔어요" 한마디면 통과」 보도 관련 -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정부는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비자발급을 2. 9.까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의 권고 이전에 비자를 받은 중국인들은 얼마든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

□ 설명 내용

1.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은 제한됩니다.

○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은 효력 정지 대상이며, 사증을 발급받은 이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효력이 정지된 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로 항공권 등의 발권 자체가 불가능하며, 항공사 등의 실수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입국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 다만, 특별 검역을 거쳐 증상이 없음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제3지역 체류 등 후베이성 체류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허가 가능

■ 법무부, 민원인 방문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20.2.5.)

법무부 | 나라를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5.(수)		
담당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이형섭 02) 2110-3311	담 당 자	범죄예방기획과 석철우 사무관 02) 2110-3574
	교정기획과장 유대오 02) 2110-3366		교정기획과 이도곤 사무관 02) 2110-3458
	출입국기획과장 배상업 02) 2110-4024		출입국기획과 이은경 사무관 02) 2110-4017

법무부, 민원인 방문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에 총력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열화상 카메라 : 체온을 추적, 탐지하여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 외국인 체류관리기관 중에는 서울·인천·수원·부산·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총 19곳에 열화상 카메라 21대를 배정하여, 수도권 지역은 2. 4.(화)에 설치 완료하였고, 그 외 지방은 이번주(2. 7.)까지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 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사무소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

○ 보호기관은 소년원 7곳, 치료감호소 1곳, 부산솔로몬로파크 1곳 등 총 9개 기관에 다음주(2. 14.)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 서울·부산·대구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대전솔로몬로파크에 열화상 카메라 운영 중

■ 법무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지원 대책 마련 (20.2.6.)

법무부 |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붙임 4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6.(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총괄팀장	이신곤 02) 2110-4055	담 당 자	사무관 최문성 02) 2110-4067

법무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지원 대책 마련

◇ **미입국 유학생**은 향후 **비자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비자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

◇ **국내체류 유학생**의 경우 **개강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체류기간연장을 탄력적으로 허용**

◇ **어학연수과정 유학생(D-4)**의 경우 **한시적으로 한국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 허용**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원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학사 일정에 맞추어 입국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먼저 해당 유학생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 향후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재발급 받도록 지원하고 수수료를 면제하여 비자 재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중국 동포밀집지역 안내,계도 활동 실시 (20.2.6.)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1쪽 포함) /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0. 2. 6.(목)	담당부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과장	박동철 02) 2650-4602	담 당 자	박종길 팀장 02) 2650-467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중국 동포밀집지역 안내·계도 활동 실시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류인성)는 '20. 2. 6. 중국 동포밀집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방지 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해당지역 동포 체류인원 : 영등포구 4만 5천여 명, 구로구 4만 2천여 명

○ 이날 행사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대림 2동 치안대책 민관협의체,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3곳(한중사랑교회, 중국동포지원센터, 한민족연합회) 소속 직원 30명이 참석하였으며

○ 인근 주민과 동포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문, 마스크를 나눠주며 **마스크 착용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 이번 홍보활동은 **정보취득에 취약**한 동포 및 단기체류 중국인 등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포사회가 **능동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로 5백 명 가까이 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하였습니다(20.2.9.)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설 명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1쪽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9.(일)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상황실
담당과장	구본순 과장(02-2110-4035)	담 당 자	손흥기 사무관(02-2110-40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로 5백 명 가까이 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하였습니다.

- 2.8.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 수도 1월 중 가장 많았던 날(1.10.) 대비 81% 감소 -

○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발열체크, 후베이성 방문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아직까지 국내 공항과 항만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습니다.

○ 이는 현지 발권단계에서부터 탑승자 사전확인, 항공사 발권 시 확인 등으로 이미 철저한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고(499명 차단),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가 널리 알려짐과 동시에 중국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 억제조치가 더해져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인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 수 추이 비교
- 1월 중 가장 많은 날 대비 : (1. 10.) 18,856명 → (2.8.) 3,572명 (81.1% 감소)
- 입국제한 조치 공표일 대비 : (2. 2.) 8,543명 → (2.8.) 3,572명 (58.2% 감소)
- 입국제한 조치 시행일 대비 : (2.4.) 5,350명 → (2.8.) 3,572명 (33.3% 감소)

○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지 발권단계에서부터 입국제한 대상자를 철저히 차단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외국인 근로자 운영중단 관련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20.2.11.)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설 명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즉시 사용가능	총 10쪽(붙임 7쪽)	
배포일시	2020. 2. 11.(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진곤 02) 2110-4055	담 당 자	이종철 사무관 02) 2110-4059

외국인 근로자 운영중단 관련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2. 10.(월) 아시아경제「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손 급한데…」보도 관련 -

'20. 2. 10.(월)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손 급한데…." 제하 아시아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계절근로(E-8), 단기취업(C-4) 등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농촌현장에 비상

○ 법무부는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여 기존 단기취업(C-4) 비자 이외에 기간을 5개월로 확대한 계절근로(E-8) 제도를 신설했으나, 시행 첫 해부터 운영 좌초

○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E-9) 비자와 외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H-2) 비자 신규 발급도 잠정 중단된 상태

《 설명 내용 》

□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의 운영 중단이나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한-중 출입국자 대폭 감소(20.2.12.)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12.(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송골팀장	이상담 02) 2110-4090	담 당 자	사무관 문질민 02) 2110-409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한-중 출입국자 대폭 감소
- 중국인 입국, 사드 때 보다 적어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중국인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 2. 11.(화) 중국인 전체 입국자는 3,313명으로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된 이후 가장 적은 입국자 수를 기록했던 '17. 4. 3. 5,354명 보다 약 39%나 더 적은 수치입니다.

* 2017. 3. 15.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

○ 2020. 2. 1. ~ 2. 11. 까지 전체 중국인 입국자는 65,328명으로 전년 동기 170,363명보다 62%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2월 일별 중국인 입국자]

(단위: 명)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입국자	9,985	9,638	8,891	5,977	5,538	4,831	3,969	3,973	4,884	4,201	3,313

☐ 한편 '20. 2. 11. 중국행 국민 출국자는 1천명 미만(911명)으로 이는 2006년 7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 2. 1. ~ 2. 11. 기간 동안 중국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의 수는 27,050명으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 「코로나19」 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10일간의 결과(20.2.14.)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6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14.(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상황실
출입국장	구본준 02) 2110-4035	담 당 자	사무관 손승기 02) 2110-4045

「코로나 19」 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10일간의 결과

-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분석 -

☐ 코로나 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법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0시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1,589건을 효력 정지하여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77,080건) 입니다.

2.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하였습니다.

3.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신규 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치로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감염증상 여부는 물론 후베이성 방문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발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소속대학 관계자의 체류허가 단체접수 확대 및 온라인 접수 추진(20.2.21.)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6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21.(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총괄팀장	이진곤 02) 2110-4055	담 당 자	사무관 최문정 02) 2110-406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소속대학 관계자의 체류허가 단체접수 확대 및 온라인 접수 추진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학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먼저, 기존에는 일부 대학에만 단체접수가 허용되었으나 전체 대학으로 **단체 접수를 한시적 확대**하여 개별 유학생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하여 대학 관계자가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단체접수를 하되,** 이 경우 대학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향후에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20.2.21.)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민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2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21.(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담당과장	김현체 02) 2110-4140	담 당 자	권택성 사무관 02) 2110-4144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2. 21.(금)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이유)**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이들로부터 결혼이민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20.2.21.)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모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6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21.(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체류관리과장	이신곤 02) 2110-4055	담 당 자	사무관 김상욱 02) 2110-4065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 적극 해소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신규 인력 도입지연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분야 등 일부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소지자가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체류기간연장 대상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선원)로서 '성실근로자'*로 제입국이 예정되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선원입니다.

■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20.2.21.)

법무부 |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2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21.(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총괄팀장	이신곤 02) 2110-4055	담 당 자	사무관 김명훈 02) 2110-4062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예산 절감 및 비자 위·변조 방지 효과 기대 -

□ 법무부(장관 : 추미애)는 비자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2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하며, **7월 1일부터 전(全)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 유럽(24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횟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PC·모바일 접속·조회 가능).

□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통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간 비자스티커 구입 소요 예산 : 약 22억 원 (2019년)

○ 특히,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20.2.24.)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6쪽)
배포일시	2020. 2. 24.(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진곤 02) 2110-4055	담 당 자	김명호 사무관 02) 2110-4062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

- 체류기간 일괄 연장을 통해 민원인 이동 최소화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적극 차단 -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 2. 23.부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 '심각'으로 격상

○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번 일괄 연장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미성년 이주아동의 보호 조치 및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0.2.24.)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설 명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3 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24.(월)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세열 과장	담 당 자	박수원 사무관 02)2110-4079

법무부는 미성년 이주아동의 보호 조치 및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20(목) 경향신문 「난민단체, 외국 국적의 아동 구금은 위헌」, 노컷뉴스 「이주아동 구금하는 외국인 보호제도는 위헌」 보도 관련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시민단체들이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주아동 등에 대해 정부가 운영 중인 외국인 보호제도를 비판하고." 관련,**

○ 해당 아동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후 보호조치 된 것이 아니라,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 단속되었기 때문에 보호조치 된 것입니다.

○ 미성년 이주아동의 상당수는 보이스피싱이나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 형사범이거나 마사지업소 불법취업 등으로 신병이 인계되고 있으며, '19년의 경우 미성년 이주아동의 83%가 불법취업과 형사범이었습니다.

※ 2019년 미성년 보호 : 총 69명(형사범 19명, 불법취업 38명, 불법체류 12명)

- 본인이 희망하고 여권 등이 구비된 경우에는 보호된 그 다음날도 본국으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1,000명 대로 감소(20.2.27.)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9쪽(붙임 7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2. 27.(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담당과장	박상욱 02) 2110-4090	담 당 자	사무관 윤질민 02) 2110-4091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1,000명 대로 감소

- '20. 2. 26.(수) 중국인 입국자 1,404명, 1월 대비 92.6% 감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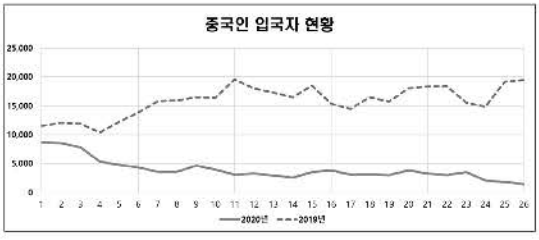
□ '20. 2. 26.(수)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입국자는 1,404명으로 이는 금년에 가장 많은 입국자를 보인 '20. 1. 13.(월) 18,743명 대비 92.6% 감소하였습니다.

○ '20. 1. 31.(금) 중국인 입국자가 1만 명 이하인 9,506명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 2. 중국인 입국자 현황]

(단위: 명)

	2월1일	2월2일	2월3일	2월4일	2월5일	2월6일	2월7일	2월8일	2월9일	2월10일
입국자	8,701	8,543	7,803	5,350	4,765	4,356	3,566	3,572	4,633	3,945
	2월11일	2월12일	2월13일	2월14일	2월15일	2월16일	2월17일	2월18일	2월19일	2월20일
입국자	3,089	3,259	2,944	2,569	3,521	3,842	3,099	3,164	3,005	3,803
	2월21일	2월22일	2월23일	2월24일	2월25일	2월26일				
입국자	3,247	3,022	3,528	2,070	1,824	1,404				



■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hikorea.go.kr)으로 하세요(20.3.5.)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붙임 1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3. 5.(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빈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사무관 김영오 02) 2110-4082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hikorea.go.kr)으로 하세요.

- 3. 11.부터 미리 온라인 신고를 하면, 3. 14.부터 공항으로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해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0. 21.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습니다.

*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 시 부당한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20.3.6.)

법무부 |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붙임 1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3. 6.(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사무관 김영오 02) 2110-4082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 시 부당한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

- 이민특수조사대·전국 광역단속팀 투입, 실태점검에 나서 -

□ 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 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하여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9. 12. 11. ~ 2020. 6. 30. 동안 자진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6개월 경과 후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금번 대책은 자진출국 신고 시 본인이 여권과 항공권, 자진출국 신고서를 가지고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3. 11.(수) 부터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또한, 자진출국 시 발급하는 「자진출국확인서」를 가지고 본국의 대한민국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문제를 삼지 않고 심사를 할 예정이며, 범죄경력과 결핵 등 감염병 확인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입국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20.3.6.)

관계부처 공동	보 도 자 료	(배포) 2020.3.6.(금)
2020년 3월 6일 16:30 배포		
담 당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과장 김금찬, 연구관 손태종 (043-719-9200, 9210)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과장 신윤근, 사무관 황성필 (044-201-4207, 4215)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 구본준, 사무관 손홍기 (02-2110-4035, 4045)
	외교부 북미 1과	과장 박은경, 서기관 공수연 (02-2100-7388, 7396)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 ▲미국행 출국검역, ▲인천공항 방역망 가동, ▲14일내 위험지역 방문자 관리강화 -

□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3.11일(수) 0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과 미국(본토) 간은 '20.2월 기준,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여 양국 간 인적('19년 477만명)·물적 교류를 촉진해 왔으며,

* (운항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노선) 애틀랜타, 보스턴, 댈러스, 디트로이트, 워싱턴, 뉴욕, 라스베가스, LA,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 특히, 미국노선은 동북아 대표허브인 인천공항의 간선노선으로, 제3국↔미국 간 대규모 환승수요('19년 170만명)를 유치하며, 우리나라의 촘촘한 네트워크(60여국 180여 도시)를 지탱하는 중심노선이다.

■ 코로나19 관련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정지 등 법무부 조치(20.3.8.)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3. 8.(일)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총괄팀장	구본준 02) 2110-4035	담 당 자	사무관 손홍기 02) 2110-4045

코로나 19 관련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정지 등 법무부 조치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잠정 정지합니다.

○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합니다.

-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이 조치 시행 이후(3.9. 0시)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 확인을 통해 제한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입국 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2.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겠습니다.

○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일본 국민에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정책은 필요합니다(20.3.9.)

법무부 | 보다 나은 정부 | **설 명 자 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사용가능	총 13쪽 (붙임 10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3. 9.(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김영우 사무관 02) 2110-408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정책은 필요합니다.

'20.3.8.(일) "어서와 한국은 두 번째지?…코로나 탈출 불법체류자 '재입국 허용'? 머니투데이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 자진출국제도가 '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한국 탈출에 쓰이고,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재입국도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

○ '선순환' 인적교류라는 명목인데 불법체류 외국인이 과연 줄어들 것인지는 의문, 불법체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양산하고 보장하는 제도란 지적

《 설명 내용 》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19. 12. 11)」에는 범칙금 부과 등 많은 불이익도 포함되어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 '19. 11월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이 38만 여명으로 급증하고 있던 상황에서 단속 또는 기존의 자진출국 제도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19. 12. 11.부터 동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첨부 : '19. 12. 10. 법무부·고용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보도자료)

■ 일본국민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첫날 일본발 일본국민 입국자 5명(20.3.10.)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3. 10.(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담당과장	박상욱 02) 2110-4090	담 당 자	사무관 윤실민 02) 2110-4091

일본국민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첫날 일본발 일본국민 입국자 5명

☐ '20. 3. 9.(월) 00:00부터 시행된 일본국민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단조치가 시행된 첫날 일본에서 출발하여 입국한 일본국민은 5명입니다.

○ 입국한 일본국민은 기존에 국내에서 기업투자(D-8)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던 사람들로서, 금번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대상은 아닙니다.

* 기업의 전문인력 등으로 취업하는 자격임

○ 한편, 한국비자 없이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현지에서 탑승차단된 일본국민은 4명입니다.

☐ '20. 3. 9.(월)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에 입국한 우리 국민은 5명이며, 일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총 464명입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0.3.11.)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설 명 자 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사용가능	총 5쪽 (붙임 1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3. 11.(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김영우 사무관 02) 2110-4082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 3. 11.(화) "감염 취약한데 정보는 부족…코로나19 사각지대 동인 불법체류자"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법체류자 6천 700명이 자진출국했고 1천 19명이 강제퇴거됐다. 1월 기준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의 1.9%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불법체류자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라는 걱정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 언어 등 문제로 인한 정보 부족과 심사받으러 갔다가 당국에 적발돼 추방되는 것은 아닌지 등 관련 정보에 어둡다.

《 설명 내용 》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 '19. 12. 11.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이후 '20. 3 8.까지 자진출국 신고자는 27,405명이고, 자진출국자는 21,054명입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 20.부터 3. 8.까지 17,803명이 자진출국 신고하였고, 12,091명*이 출국하였습니다.

* 지난 해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도입, 출국 3일 ~ 15일전 사전신고를 하므로 자진출국 신고자와 실제 출국자 수는 시차가 있음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20.3.12.)

<동정 알림>

법무부 장관 동정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 3. 12.(목) 서울 목동 소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방문,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감염신고 통역 지원에 힘쓰고 있는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하였음

☐ 추미애 장관은 최근 구로구에서 발생한 콜센터 상담원 집단 감염 사건을 언급하면서, 콜센터 내 감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상담사 분산근무 · 재택근무를 통한 밀집도 완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 29명(전체 상담사의 약 30%)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KTcs 본사(염창동)에서 분산 근무 예정

☐ 추미애 장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 사진

2020. 3. 12.

법무부 대변인

■ 불법체류 외국인 2일만에 416명 온라인 자진 신고(20.3.13.)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3. 13. (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2110-4075	담 당 자	사무관 김영오 02)2110-4082

불법체류 외국인 2일만에 416명 온라인 자진 신고

- 3. 11.부터 온라인만으로 자진출국 신고 가능, 3. 1.부터는 단속된 외국인에게 범칙금 부과 시작 -

□ 법무부는 3. 11.부터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사진자진출국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시행 이틀간(3. 11. ~ 12.) 416명의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자진신고제도」는 사전 신고를 쉽게 하여 자진출국을 촉진하고,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범 심사를 받고 범죄 수배여부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넷에서 '하이코리아'를 검색하면 바로 신고창이 뜨고,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로 제공되며,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항공편명, 체류지 주소 등 기본사항만 입력하면 사전신고가 완료됩니다.

□ 올해 6. 30. 까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등 더욱 강화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법무부 대응책은 선제적 맞춤형 대책입니다.(20.3.16.)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설 명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가능	총 3쪽(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3. 16.(월)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진곤(02-2110-4058)	담 당 자	사무관 김정욱(02-2110-4065) 사무관 최문정(02-2110-4067)

코로나19 관련, 법무부 대응책은 선제적 맞춤형 대책입니다.

- 3. 13.(금), 뉴데일리, -우한폐렴에 한국 떠나려는데... "체류기간 연장해주겠다"는 법무부- 보도 관련 -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법무부의 코로나19 대책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연장' 및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체류기간연장'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취지의 보도

□ 설명 내용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연장 관련>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20. 2. 13.부터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50일간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취소·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20.3.19.)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3. 19. (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진곤 02) 2110-4055	담당자	사무관 김명훈 02) 2110-4062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취소 ·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감염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즉시 귀가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점·음식점 등에 방문한 외국인 적발(3.18. 다수 언론 보도)

○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방역 조치 불응 외국인 처분 절차 >

방역당국(지자체) 조치불응 확인	⇨ 방역당국(지자체)→법무부 인적사항 통보	⇨ 비자·체류허가 취소 강제퇴거·입국금지

○ 특히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 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20.3.31.)

법무부 | 보내온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0. 3. 31.(화)	총 7쪽(붙임 5쪽 포함) / 사진 없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담당과장	이 진 곤(02-2110-4057)	담당과장	박 영 준(043-719-7280)	
담당자	김 성 욱(02-2110-4065)	담당자	이 주 선(043-719-7325)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19개국 → 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

◇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결핵고위험국가)'에 16개국 추가

◇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시 다제내성 결핵으로 확인된 경우에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

□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한다고 밝혔음

* 결핵고위험국가 지정기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 결핵 고위험국가

** 추가 16개 국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또한 **국내 체류 중**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외국인의 체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20.4.1.)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4. 1. (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담당과장	박상욱 02) 2110-4090	담당자	사무관 윤철민 02) 2110-4091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

○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있으나,

-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하여,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하여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하여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하여 1일 1회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는데,

-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0. 4. 1.**부터는**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다운로드 받아 지자체 담당직원 메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제공이 가능해 집니다.

○ 한편, 법무부는 지자체에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가로 진행 중이며,

- 2020. 4. 7.부터는 출입국심사관이 심사시스템에 입력한 주소 및 연락처가 자동 분류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법무부, 4.1.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20.4.2.)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4. 2. (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상황실
담당과장	구본준 02) 2110-4035	담당자	사무관 손홍기 02) 2110-4045

법무부, 4.1.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함

-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하고 소요비용은 자부담

○ 법무부는 시행 첫날인 이제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함

-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임

○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20.4.3.)

법무부 국민과 존중하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안전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 쪽 (붙임 1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4. 3.(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세열 과장	담 당 자	박수원 사무관 02)2110-4079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 '20. 4. 1.부터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 시행 -

○ 법무부는 '20. 4. 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 4. 1.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별첨)」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으로써,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의

■ 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 구축(20.4.3.)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2쪽 포함)/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4. 3. (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담당과장	배상업 02) 2110-4010	담당자	사무관 이한태 02) 2110-4021

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 구축

○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20.04.06(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영어 : 24시간 통역 지원(83명)

○ 또한, 법무부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1매칭하여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 '20.04.0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20.4.6.)

법무부

국민의 존엄을 존중하는 인간한 나라
안전과 번영 품성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2쪽 포함)/ 사진, 동영상 있음
배포일시	2020. 4. 6.(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당자	사무관 박수완 02) 2110-4079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응

-1명 추방, 11명 입국 거부, 3명 소환 조사-

□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 동인은 '20. 4. 2.(목)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여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 3. 도착하였으나

-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4. 5.(일) 00:3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되었는데,

-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 5.(일) 19:45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 조치 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4. 4.(토)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4. 5.(일) 15:00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하였습니다.

■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20.4.8.)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환경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없음)/ 동영상 있음
배포일시	2020. 4. 8.(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연 02) 2110-4075	담 당 자	강성록 사무관 02) 2110-4076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 자가격리 명령 위반 인도네시아인 추방 및 베트남 부부 강제추방 절차 개시 -

□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세, 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4. 8.(수) 15:20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최초 사례이자, 지난 4. 1.(수)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입니다.

○ A씨는 4. 4.(토)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4.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20.4.9.)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10쪽(붙임7쪽 포함)/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0. 4. 9.(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진곤 02) 2110-4055	담 당 자	최문정 사무관 02) 2110-4067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 **2.24.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30까지 일괄 연장(제1차 조치)**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19.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4.9.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20.4.9.)

법무부 **공동보도자료** 외교부

보도일시	2020. 4. 9.(목) 15:00부터 보도		
배포일시	2020. 4. 9.(목)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담당자	법무부 이민규 출입국정책단장 (02-2110-4045, 4062) 외교부 변철환 재외동포영사기획관 (02-2100-7562)		

단기사증 효력정지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역유입 · 확산 방지 도모 -

□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 **총 66명**(누계, 4.8. 기준)

○ 뿐만 아니라,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 **총 880명**(4. 7. 기준)

**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 **총 16명**('20.4. 1.~4. 7.)

□ 이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조치(20.4.19.)

법무부 국민을 존중하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환경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0. 4. 19.(일)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연 02) 2110-4075	담 당 자	강성록 사무관 02) 2110-4076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조치

- 4. 1. 이후 누적 추방 조치는 12명 (자가격리 위반 8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4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29명 -

□ 법무부는 입국 후 서울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2명)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4. 14. 강제추방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베트남인 선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벌칙금을 부과하였고, 베트남인 부부의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 소재 모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 소재 모대학교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 4. 17.(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마치고 추방(출국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벌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폰을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등 장시간(5시간) 이탈하였고,

■ 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20.4.19.)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나라
인권과 평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4. 19.(일)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당자	김영오 사무관 02) 2110-4082

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올해 2. 1.부터 범칙금 부과 시작, 4. 15. 현재 1억원 넘어 -

□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한데,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 4월 13일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20.4.20.)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4. 20. (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담당과장	박상욱 02) 2110-4090	담당자	사무관 윤철민 02) 2110-4091

4월 13일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제한 조치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감소를 위해 지난 4.13일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하여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정지 대상 : **90개** 국가 (협정 56개국, 무사증 입국허용 34개국)

○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 (사증면제협정 + 무사증허용 + 단기방문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이 입국(일평균 : 87명)하여, 제한조치 이전인 4.1. ~ 4.12.간 일평균 단기체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53% 감소하였습니다. <참고, 표1>

※ 이번 조치가 현지 출발 시각으로 적용됨에 따라, 4.13. 도착한 항공기중 **7편**이, 4.14. 도착한 항공기 중 **2편**이 **적용대상이 아니**었음

- 이는, 1년전 '19.4.15. ~ '19.4.19. 단기체류 입국자 일일 평균 45,699명 (총 228,496명)과 비교하면 99.8% 감소한 것입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현황을 자격별로 분석해보면

- 4.1.~ 4.12.간 일평균 사증면제협정(B-1) 입국자는 48명이었으나, 입국제한 조치가 완전하게 적용된 **15일에는 0명, 16일 4명** (영국인 3명 + 아일랜드인 1명으로 제한조치 대상 아님), **17일 11명**(11명 중 10명은 입항 선박의 선원으로 제한조치 대상 아님), **18일 3명**(영국 3명), **19일 9명**(영국 8, 선원 1)**이 입국**하였습니다. <참고, 표2>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조치(20.5.1.)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환경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1쪽)
배포일시	2020. 5. 1.(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연 02) 2110-4075	담 당 자	강성록 사무관 02) 2110-4076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18명 (자가격리 위반 12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6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35명 -

□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 1.(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3명)하였습니다.

○ 금번 강제퇴거 조치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하여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더구나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 위반과 불법취업 혐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강제퇴거) 결정 하였습니다.

○ 중국인 X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K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 캄보디아인 T씨는 인근 편의점 이용 등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출국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5. 1.(금)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부 귀화 면접심사 5. 6.(수)부터 재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도(20.5.3.)

법무부 국민의 존엄받는 든든한 나라 인권과 면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5. 3.(일)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이민통합과
담당과장	송소영 02) 2110-4120 김현새 02) 2110-4140	담 당 자	은기범 사무관 02) 2110-4127 서세신 사무관 02) 2110-4146

법무부, 귀화 면접심사 5. 6.(수)부터 재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도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5. 23.(토) 특별 실시 예정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귀화 면접심사를 5. 6.(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한 후 5. 6.(수)부터 귀화 면접심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귀화 면접심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2개월이 넘게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신청자 약 6,200여 명이 장기간 면접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간 귀화 면접심사 대상은 약 1.5만 명 수준임

○ 법무부는 면접심사 재개에 앞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면접실 소독 및 칸막이 설치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였으며, 관서별 면접 인원을 1일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별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한편, 그 간 중단되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도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5.23.(토) 특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KINAT :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는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

■ 법무부,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력(20.5.4.)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평화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5. 4.(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영 02) 2110-4075	담 당 자	김영오사무관 02) 2110-4082

법무부,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력

–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

□ 법무부(장관 : 추미애)는 그 간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19.12.11)을 통해 3만 5천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유도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고,

○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통보의무면제 제도 시행(1.31.),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연장(2.24., 4.9.)으로 이동 동선 최소화 및 단기 체류외국인의 출국기한 유예를 통한 불법체류 전락 방지, 자가격리 이탈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추방조치, 활동범위 제한 명령제도 시행(4.1.) 및 범칙금 부과 조치로 자가격리 이탈자 발생을 억제하였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 자국 입항 항공편 자체를 차단하는 일이 계속되어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이 어렵게 되자, 법무부는 이들 국가와의 협상으로 특별 전세기 운항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 송환*(4개국, 5회에 걸쳐 331명)도 성사시켰으며, 그 외에도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하는 등 각종 적극 행정을 통해 합법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 몽골 55명(4. 8.), 태국 135명(4. 14.), 베트남 79명(4. 14.), 러시아 35명(4. 25.), 몽골 27명(5. 1.)

※ 5. 1.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없음

■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20.5.13.)

법무부

국민과 존중받는 든든한 나라
인권과 면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3쪽 포함)/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0. 5. 13.(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담당과장	김현채 02) 2110-4140	담 당 자	서재선 사무관 02) 2110-4146

법무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 방송인 크리스티안, 줄리안, 수잔 샤키야 등 35명 선정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 이민자 35명에 대하여 5. 13(수)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2개국 출신 이민자로 구성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등 내외국인간 상호 소통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IIP)*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기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2019년 누적 참여자 27만명임

□ 지난 해 이렇게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내외국인 대상 멘토 강의를 시범운영하였으며, 올해는 멘토단을 공개모집하여 110여명의 응모자 중 최종 35명을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선정하였습니다.

■ 6.25 전쟁 상처, 봉사로 어루만진 60년… 영국인 수산나 여사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20.5.20.)

법무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5. 20.(수) 14시 30분부터 보도		총 8쪽(붙임5쪽 포함)/ 사진 추후 배포
배포일시	2020. 5. 20.(수)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과장	과장 김 헌 채 02) 2110-4140	담 당 자	싱 해 싱 사무관 02) 2110-4149

6.25 전쟁 상처, 봉사로 어루만진 60년… 영국인 수산나 여사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

-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 -

벌써 60년도 더 된 일이다. 그 배가 부산항에 도착했던 날이..... 외삼촌과 사촌오빠 2명이 6.25 전쟁에 참전해 이미 한국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으나 직접 두 눈으로 전쟁의 잔해로 남은 가난한 땅을 보며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일았다. 수산나 여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일평생 소외된 여성과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항상 낮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이제는 83세의 고령으로 건강은 좋지 않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양성하며 지역사회복지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로 **제13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되었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5. 20.**(수) 14: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로 제13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올해는 6. 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전쟁의 폐허속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와 나눔의 손길을 보내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재한외국인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하나됨을 염원하고자 열렸습니다.

■ 자가격리 위반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20.5.22.)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평화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1쪽 포함)/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5. 22.(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연 02) 2110-4075	담 당 자	강성록 사무관 02) 2110-4076

자가격리 위반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5명 추가 출국 조치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24명 (자가격리 위반 17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7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36명 -

□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5. 22.(금)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3명)하였습니다.

○ 이번에 강제퇴거 조치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한 다음날인 4. 27. 격리지를 이탈하여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에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고, **중국인 L씨**는 4. 14. 입국 후 4. 14. ~ 4. 28.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를 하였습니다.

○ 또한, **중국인 C씨**는 4. 12. 입국하여 자가격리 중 4. 23. 흡연을 위해 일시적(11분)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하여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한 바 있어 출국 조치(출국명령)를 하였습니다.

○ **폴란드인 B씨**는 3. 10. 관광목적으로 입국 후 친구인 폴란드인 G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G씨가 코로나19 확진(병원격리)이 됨에 따라 본인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3. 13. ~ 3. 25. 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거의 매일 10 ~ 15분씩 공원 산책 등을 하여 출국 조치(출국명령)를 하였습니다.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20.5.23.)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2쪽 포함)/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5. 23.(토)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신곤 02) 2110-4061	담당자	사무관 김명훈 02) 2110-4062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6. 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

□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으나,

- 코로나19의 신규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0. 6. 1.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중단**합니다.

■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20.5.28.)

법무부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나라
인권과 평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5. 28.(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담당과장	구본준 02) 2110-4052	담 당 자	유상오 서기관 02) 2110-4036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6월 1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확인 가능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9. 12.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금지 여부 확인 가능함

- 출국금지가 된 경우 ▲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 이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인데,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코로나19 시대 상황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 관련 설명자료(20.5.29.)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설 명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0 (붙임 2쪽 포함)/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5. 29.(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진곤 02) 2110-4061	담당자	사무관 김명훈 02) 2110-4062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 관련 설명자료

○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관계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외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붙임: 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끝.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20.5.29.)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합동	법 무 부	이 민 정 보 과	과 장 박상욱(02-2110-409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 장 신종철(02-2110-1520)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 장 남 식(044-202-6650)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확대' 제도는 2019년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경진대회에서 동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20.6.1.)

법무부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이 안생 중심이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6. 1.(월)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이민정보과
담당과장	김현채 02) 2110-4140 박상욱 02) 2110-4090	담 당 자	정해정 사무관 02) 2110-4149 윤천민 사무관 02) 2110-4091

「외국인등록증」 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 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 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5.13.(수)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 소통의 사례**입니다.

-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

※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의 외국인을 '에일리언(ALIEN)'으로 표기해 옴

※ 향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용어로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을 검토할 예정임

○ 한편, 정책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추진 소식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며 환영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경험, 해외에 나눈다(20.6.2.)

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배 포 일 / 보도일	2020. 6. 2. (총 4매) / 배포 즉시 보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 담당자	구본준 손승기	02-2110-4073 02-2110-4045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과장	이선규	043-719-7550
외교부 개발협력과	과장	강용구	02-2100-8137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전략기획실	팀장	김현원	031-740-0371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경험, 해외에 나눈다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전담팀(T/F) 제4차 웹세미나 개최 -
- 한국의 출입국 및 검역 경험 공유 기회 마련 -

□ 정부는 **6월 3일(수) 오후 4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케이(K)-방역」에 관한 **제4차 웹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주소 : **www.medicalkoreawebinar.or.kr**

○ 「케이(K)-방역」 웹세미나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주제별로 진행 중으로, 이번 4차 웹세미나는 **출입국관리 및 검역 분야의 대응경험**을 주제로 **법무부** 총괄 하에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 우리나라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달리 **국경봉쇄나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 없이도** 효과적으로 감염병 유입과 확산에 대처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20.6.3.)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6. 3.(배포 즉시 보도)		총 5쪽 / 사진 없음
담당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법무심의관 전대석, 서기관 임성택, 사무관 고민지 (02-2110-3164, 3503, 3507)
		상사법무과	과장 명한석, 사무관 김효선 (02-2110-3167, 363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과장 이진곤, 사무관 최문정, 김명훈 (02-2110-4055, 4067, 4062)
		국적과	과장 송소영, 사무관 정금심 (02-2110-4120, 4131)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법무정책 추진

- 법무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 지원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법무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경기 침체로 우리 서민과 중소기업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 영업소득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비자 혜택을 다양화하여 해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비자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20.6.19.)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6. 19.(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담당과장	송소영 02) 2110-4120	담 당 자	은기범 사무관 02) 2110-4127

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 시행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및 국적판정 등입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20.6.19.)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9쪽(붙임 7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6. 19.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신곤 체류관리과장	담 당 자	김명훈 사무관(02-2110-4062)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으로 간편하게 집에서도 신청 가능 -

○ 법무부는 '20. 6. 1.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20. 6. 22.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한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붙임)**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법무부는 편법 관광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20.6.23.)

법무부 | 보다 나은 정부 | **설 명 자 료** |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가능	총 2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6. 23.(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담당과장	박 상 욱 02) 2110-4090	담 당 자	윤철민사무관 02) 2110-4091

법무부는 편법 관광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0. 6. 22.(화) "편법 관광비자 안막고 취업 입국은 막나" 제하 매일경제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 관광비자(B-2)를 이용한 외국인 노동자 편법 입국은 막지 못하면서 3~4년 동안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E-9비자로 입국해야 할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막고 있음

○ 급여기가 끝난 어촌이나 농번기에 돌입하는 농촌에서는 당장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주 격리기간 동안 인건비를 주더라도 외국인 인력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때 들어오는 인력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고 있음

《 설명 내용 》

□ **'관광비자(B-2)'를 이용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편법 입국은 없습니다.**

○ 먼저 B-2는 무사증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입국할 경우에 부여되는 부호이지, 관광목적으로 발급되는 관광비자가 아닙니다.

○ 또한, '20. 4. 13. 시행된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이후 동남아 국가는 **무사증(B-2)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가 무사증(B-2)으로 편법입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국, 아일랜드, 미국

■ 법무부,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영주 비자 최초 발급 (20.6.25.)

법무부 | 보다나은 정부 | **보 도 자 료** |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1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6. 25.(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진곤 체류관리과장	담 당 자	김명호 사무관(02-2110-4062)

법무부,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영주 비자 최초 발급

-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발급을 통해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초청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하여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 및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8명에 대하여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최초로 부여하였습니다.

*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6.25 국제연합(UN) 참전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 대상 장학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협업하여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 10명 내외 선발

** (정부초청장학생: GKS-Global Korea Scholarship)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22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00여명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등록금·생활비·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조치(20.6.26.)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 (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6. 26. (금)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강성록 사무관 02) 2110-4076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28명 (자가격리 위반 19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9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40명 -

□ 법무부는 지난 6.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6. 23.(화) 출국 조치(강제퇴거)하였고,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 25.(목)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 하였습니다.

○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씨**는 6.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써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 위 미국인(한국계)의 격리시설 이탈 위반에 대해 '20. 6. 21. 다수 언론에 보도됨

○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5. 8.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5. 15. 자가격리 조치되었으며,

■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20.7.7.)

법무부 | 보다 나은 정부 | **설 명 자 료** |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가능	총 3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7. 7.(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 진 곤 02) 2110-4058	담 당 자	최문정사무관 02) 2110-4067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7.7.(화) "외자 유치 효과는 온데간데... 먹튀·범죄도피 악용되는 투자이민제" 제하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 부동산 투자이민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적지 않음

- 2017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영주권을 받은 중국인 A씨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바 있음

-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유치하기만 해도 거주권이 부여되고 5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경우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 속 사실상 투자 유치 효과가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분석임

■ 계절근로 송출국 정부의 귀국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귀국을 위한 것입니다 (20.7.20.)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도설명자료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가능	총 3쪽/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7.20.(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진곤(02-2110-4055)	담 당 자	사무관 이종철(02-2110-4059)

계절근로 송출국 정부의 귀국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귀국을 위한 것입니다.

- 7. 20.(월), 매일신문,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엇박자, 농식품부 확대시행, 법무부 지침 강화" 보도 관련 -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둘러 싼 정부 부처간 엇박자에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음

- **농식품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체류기간 5개월의 계절근로(E-8) 비자 신설 등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 반면,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계절근로자 종료 후 신속귀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 보증 추가

○ 송출국 정부 보증 요구는 격리기간 임금(96만원)을 받지 못하고 격리비용(140만원) 부담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전년대비 평균 236만원을 덜 받게 되어 이탈 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임

■「국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7.21.)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18쪽(붙임15쪽 포함)/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7. 21.(회)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담당과장	국적과장 송소영	담 당 자	사무관 최진혁(02-2110-4122)

「국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비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방식 도입 -

□ 법무부는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대면→비대면)을 국적업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 7. 21.(화) 입법예고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외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던 중 그 외국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고, **보유신고 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거주국에서 출생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국적을 자동 취득하거나 등록 절차를 거쳐 국적 취득

*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외국인에 입양·인지, 부모와 동반취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국적법 제15조 제2항)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20.7.23.)

보다나은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의 큰 길로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2020. 7. 24.(금) 조간(온라인 7. 23. 14: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7. 23.(목) 09:00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인재양성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담당과장	공진호(044-202-6370) 차용호(02-2110-4105)	담 당 자	조수연 주무관(044-202-6372) 고동중 사무관(02-2110-4109)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 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실증랩 개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목)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하였다.

○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4층에 위치한 실증랩은 **총 면적 2,022㎡**의 규모로, 다수의 AI 기업*이 **데이터 가공, 학습 및 실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 '20년 AI 개발·검증 등을 위한 총 11개 컨소시엄 선정

○ 특히, 법무부가 보유한 출입국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권한 설정·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설계·구현**하였다.

□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은 AI가 학습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출입국자를 식별하고 **범죄·위험행동 등도 사전에 감지·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AI 개발 및 실증랩 운영 등에 '19~'22년까지 총 450억원 지원

■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체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8.4.)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도설명자료**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가능	총 3쪽/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8.4.(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담당과장	김현채(02-2110-4140)	담 당 자	사무관 서제선(02-2110-4144)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체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8. 3.(월), CNN "South korea authorities encourage men to marry foreign women. But their brides often become victims of abuse" 보도 및 이를 인용한 연합뉴스 「CNN, 한국 결혼이주여성 조명 "폭력문제 심각…차별로 신음"」 보도 등 관련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미국 CNN은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가정폭력과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함

-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되고 있으나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체류를 위해 5년 마다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하며, 혼인단절 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함
-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결혼이민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20.8.12.)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 (붙임 6쪽 포함)	
배포일시	2020. 8. 12. (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신한진 사무관 02) 2110-4076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1명 구속 및
시설격리(6명)·자가격리(9명) 위반 외국인 15명 추가 출국조치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 7.30.(목)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 8.11.(화)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기 12명, 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 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음 (붙임 1)

  * '20. 4. 1. 이전 입국한 외국인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범칙금부과 대상이 아님

□ 또한 8.11.(화)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하여는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제75주년 광복절 맞아 중국동포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20.8.12.)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2020. 8. 12.(수) 배포 즉시 보도	총11쪽(본인/쪽 포함)/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8. 12.(수)	담당부서	국적과
담당과장	송소영 02) 2110-4120	담 당 자	정금심 사무관 02) 2110-4131

제75주년 광복절 맞아 중국동포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8. 12.(수)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붙임3)**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중국 14, 러시아 2, 카자흐스탄 4, 쿠바 1

○ 이번 수여식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출발을 기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김원웅 광복회 회장, 보훈처 공훈관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 축사 및 축하 영상 시청(축하연주 포함)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소감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20.9.4.)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0. 9. 4.(금)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담당과장	긴급대응단 반장 김용규	담당자	사무관 주제봉(02-2110-4088)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 8월 27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운영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 4.(금)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 '20. 8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단(반)은 행안부, 고용부 등 다수 부처에서 운영 중

○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교도소·소년원 등 수용·보호시설 확산 방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10여개 관계기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소관 업무와 겸임해 왔습니다.

○ 그런데,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담당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분산 대응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 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외국인보호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0.9.7.)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도설명자료**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가능	총 3쪽/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0.9.7.(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제열(02-2110-4078)	담 당 자	사무관 박수완(02-2110-4079)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보호외국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철창 너머 사람이 가득 찼다」 보도 관련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보호소는 포화상태,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

- TV 및 공중전화가 유일한 외부 소통수단, 항공편 예약을 위해 문자나 메신저, e-메일 사용이 필요한데 접근조차 불가능
- 모든 시설이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보호시설 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 발생 우려
- 외국인 중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신원보증, 보증금 예치 등 일정한 조건 하에 보호일시해제하고,
- 자가격리자 관리 앱이나 입국자 시설격리센터 등 인신구속성이 낮은 자발적 출국유도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체류 중 코로나19로 국내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지난 영주권자에게만 과태료가 면제됩니다(20.9.8.)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도설명자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가능	총 2쪽/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0.9.8.(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담당과장	박상욱(02-2110-4090)	담 당 자	사무관 윤철민(02-2110-4091)

해외체류 중 코로나19로 국내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지난 영주권자에게만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연합뉴스,「코로나 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보도 관련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를 접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 (기사제목) 코로나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

○ (주요내용)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만료됐으나 신청을 못한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면제됨.

- 대상은 2008년 9월 20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임. 다만, 재입국허가 기간인 2년을 넘겨 영주자격을 상실한 이는 제외됨.

□ 설명 내용

금번 조치는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주증 재발급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한 영주권자들만을 위한 조치이며, 국내 체류하며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제외됨

■ 최근 3년간 1만1352명이 "국적포기했다" 언론보도 관련(20.9.18.)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설 명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2쪽	
배포일시	2020. 9. 18.(금)	담당부서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담당과장	송소영 02)2110-4120	담 당 자	사무관 최신혁 02)2110-4122

최근 3년간 1만1352명이 "국적포기했다" 언론보도 관련

☐ '20. 9. 17.(목) 모일간지에서 보도한 「최근 3년간 1만1352명이 "국적포기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적이탈자 증가 통계 관련

○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한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 5. 1.)을 앞두고 국적이탈신고가 증가하였습니다.

* 개정 「재외동포법」 공포('17. 10. 31.) 이후 '18. 3. 31. 까지(5개월간) 국적이탈 신고 접수 건수는 총 3,551건으로 전년동기 1,424건 대비 2,127건(149%) 증가

○ 또한 '18년도에 국적이탈처리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과거 접수하였지만 담당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미루어졌던 2,163건을 민원발생 방지 및 적체 해소를 위하여 집중처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 과거 신청 건에 대해 '18. 4월 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결국 행정처리 지연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집중처리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합니다(20.9.24.)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9. 24.(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담당과장	차용호 02) 2110-4105	담 당 자	서석주 사무관 02) 2110-4115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으로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방지합니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비자신청센터 업무 위탁」,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5일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20. 9. 25. ~ 11. 4.(40일간)

□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 마련

○ (시행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거나, 대테러센터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테러경보'를 발령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 신부에게 국적증서 수여(20.9.24.)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8쪽(붙임4쪽 포함) /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0. 9. 24.(목)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담당과장	송소영 02) 2110-4120	담 당 자	정금심 사무관 02) 2110-4131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추석 "나는 자랑스런 한국인 안광훈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브레넌 로버트 존(뉴질랜드) 신부에게 국적증서 수여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9. 24.(목)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한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로버트 존 '안광훈(光薰) 신부'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추석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 안광훈'으로 새 출발하는 뜻깊은 자리를 기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행사는 △ 장관 및 외빈 축사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소감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안광훈' 신부님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교구장 대리 주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다영 서울시 여성정책실장을 비롯한 신부님 지인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20.9.25.)

법무부 | 보다 나은 정부 | **보 도 자 료** |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 사진 있음	
배포일시	2020. 9. 25.(금)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과장	김상권 02) 2110-3111	담 당 자	사무관 이준석 02) 2110-3110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강조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9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 (79건 접수)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주요 선정사례로는 △ 출·입국 관련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기여한 사례와 △ 지자체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1,636명)을 통해 법률소외지역 거주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참석한 우수공무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혁신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며 적극행정을 강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무부, 추석기간 외국인 모임·여행자제 요청 및 방역 취약시설 점검·순찰 활동 강화(20.9.29.)

법무부 | 보다 나은 정부 | **보 도 자 료** | 함께하는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9. 29.(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신한진 사무관 02) 2110-4076

법무부, 추석기간 외국인 모임 · 여행자제 요청 및 방역 취약시설 점검 · 순찰 활동 강화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0. 9.21.(월)부터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기간 중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추석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소모임 활동과 여행, 외국인 전용클럽, 종교시설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석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방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 이에따라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는 21일부터 관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석연휴기간 중 불필요한 모임이나 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해당국 언어로 작성하여 배부하는 한편,

○ 밀집촌 등 방역취약 지역과 연휴기간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기차역 주변, 외국인 전용클럽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도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이번 캠페인은 10. 4.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 계도 · 순찰활동 사진 및 안내문(별첨1,2)

■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가 바뀝니다.(20.11.3.)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1. 03.(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담당과장	김대형 02) 2110-4090	담 당 자	윤철민 사무관 02) 2110-4091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가 바뀝니다.

- 배타적 어감이 강한 'Alien' 삭제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11. 05.(목)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입니다.

※ (사회통합이민자멘토단) 한국사회 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위해 아시아·미주·유럽 등 22개국 출신 모범 이민자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 5. 13.(수) 위촉된 제1기 멘토단이 법무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에 사용된 **'Alien'**에는 **외계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 제기

○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변경을 위해 그간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35명),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15명),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29명),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다양한

■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20.11.4.)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활기차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11. 4.(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빈제열 02) 2110-4075	담 당 자	이상복 사무관 02) 2110-4079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 '20. 9. 24. 국회에서 통과('20. 10. 20. 공포, '21. 1. 21. 시행)된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시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번에 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도」 세부사항 마련

○ **(납부 방법)**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20.11.11.)

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1. 11.(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엽 02) 2110-4075	담 당 자	신한진 사무관 02) 2110-4076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20. 4. 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2명) · 자가격리위반(39명) 총 61명 출국조치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 지난 8.12.(수) 이후 11.10.(화)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사항 조사 및 심사결정*을 마치고 출국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하였고,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습니다.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16명) : 8월(5명), 9월(6명), 10월(3명), 11. 10.(2명)

- 미국인 B씨는 8. 20.(목) 입국하여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착지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시설을 훼손하고 무단이탈 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입장은 법원의 판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20.11.17.)

법무부 | 보다 나은 정부 | **설 명 자 료**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6쪽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11. 17.(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담당과장	구본순 과장 02)2110-4035	담당자	직문성 서기관 02)2110-4036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입장은 법원의 판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 11. 16. 세계일보 「법무부 '인권 침해' 번번이 도마 위에」 보도 관련 -

위 보도와 관련,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방침의 배경 및 내용

○ 법무부는 '19. 6. 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액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출국금지 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공항만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일 뿐, 고액 조세체납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 황제노역 허○○ 슬며시 출국… (한겨레, '15. 8 22.)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시행(20.11.30.)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11. 30.(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진곤 02) 2110-4055	담 당 자	용정식 사무관 02) 2110-4062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약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20.12.1.(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고, 겨울철 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하여 지역내 이동이 예상**되므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내 210만여 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출판(20.12.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법무부

보 도 자 료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2. 11.(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문체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과장	문체부 김지희(044-203-2531) 국립국어원 김진엽(02-2669-9741) 법무부 김현채(02-2110-4140)	담 당 자	사무관 최혜연(044-203-2532) 연구관 박정아(02-2669-9742) 사무관 권택성(02-2110-4146)

국내 210만여 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출판

-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법무부 협력의 결과물,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 교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함께 국내 210만여 명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출판했다.

이 교재는 한국어 확산 정책 주관부처 문체부와 국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간 실질적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한국어 과정의 교재를 전담하는 국어원이 개발한 이 교재는 12월 11일부터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2021년 1월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의 기본 교재로 사용된다.

교육 현장의 요구와 여건 반영, 전문적인 내용을 체계적이고 친근하게 구성

교재는 기초편 교재 1권, 초급 교재 2권, 중급 교재 2권 등 총 5권으로 구성되며, 이 구성에 따라 학습자용 익힘책과 교사용 지도서를 함께 출간했다. 이와 함께 학습자용 유형별 보조 자료와 수업용 보조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국어원의 '한국어교수학습센터(kcenter.korean.go.kr)'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20.12.16.)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새로운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4쪽 (붙임 1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12. 16.(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사무관 박수완 02) 2110-4082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 12. 16.부터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 외에 hikorea.go.kr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려면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고 지문채취 등 사범 심사를 받은 다음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자진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의 감염 개연성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에 법무부는 '20. 12. 16.부터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위한 이동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사전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 '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키로(20.12.21.)

법무부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안생 중심의 공정사회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12. 21.(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담당과장	김현새 과장(02-2110-4140)	담 당 자	서제선 사무관(02-2110-4144)

법무부, '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키로

□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이 도래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합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미성년자 양육시 부여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동 자격이 아닌 방문동거(F-1)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국내기주요건(2년), 생계유지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 시 면접심사 면제 등 다 체류자격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거쳐 영주 및 국적취득 가능

- 다만,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은 취업에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그렇지 않아 자녀를 직접 양육하여 부모의

■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2.28.)

법무부 | 보다나은 정부 | **보 도 자 료** |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25쪽 (본문 18쪽 포함)	
배포일시	2020.12.28.(월)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
담당과장	김정도 02)2110-4155	담 당 자	홍인표 사무관 02)2110-4161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28.(월)에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2.28.~'21.2.6.)

□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고,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5,452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 난민신청자 수 : 1,574명('13) → 5,711명('15) → 9,942명('17) → 15,452명('19)

□ 다만, 난민법 시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기 어렵고 △'명백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자유롭게 본국을 방문하는 등 오로지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또한, 심사인력 등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이의신청·행정소송 등 절차가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가 오히려 제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APPENDEIX

부 록

1. 체류자격 일람표
2. 사증면제협정 현황
3. 주요 행사 연설문
4.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5. 역대 출입국관리국장 및 본부장 명단
6.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7. 주요 언론보도

부록1

체류자격 일람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19. 6. 1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1. 6. 2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D-6)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1. 기업투자(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12.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구직(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교수(E-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연구(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7.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18.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9.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의2. 계절근로(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선원취업(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23. 방문동거(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4.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25.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6.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9.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금속 광업(06) 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아)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거)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너) 과실류 도매업(46311).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더) 채소류, 서류(薯類)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 생활용품 도매업(464) 머)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버)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서)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어)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저) 무점포 소매업(479) 처) 육상 여객 운송업(492) 커)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터)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퍼)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성급·2성급 및 3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고) 여관업(55102) 노) 한식 음식점업(5611) 도) 외국인 음식점업(5612) 로)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보)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오)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조)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초)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87) 토)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포)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호)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구) 욕탕업(96121) 누) 산업용 세탁업(96911) 두)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루) 가구 내 고용활동(97)
30. 기타(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8. 5.>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체류자격(기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같은 법 제5조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체류자격(기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록2

사증면제협정 현황

('20. 12. 31. 현재)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시아주	라 오 스	외교, 관용	90일	'09.06.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말레이시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3.09.09.	
	몽 골	외교, 관용	90일	'12.12.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단기사증 발급수수료 면제
	미 얀 마	외교·관용	90일	'11.04.0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방글라데시	외교, 관용	90일	'83.03.17.	○ 2008.7.15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선원수첩	15일		
	베 트 남	외교, 관용	90일	'99.01.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싱 가 포 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11.01.	
	아르메니아	외교, 관용	90일	'12.05.22.	
	아랍에미리트	외교, 관용, 특별, 일반	90일	'16.09.2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오 만	외교, 관용, 특별 및 공무	90일	'15.04.11.	
	우즈베키스탄	외교	60일	'09.06.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란	외교, 관용	3개월	'76.12.2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스 라 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5.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인 도	외교, 관용	90일	'05.10.03.	
	인도네시아	외교, 관용, 공무	30일	'20.02.1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부임 전 사증 취득 ※ '20.3.20. 외교·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일시 정지
	일 본	외교, 관용	90일	'98.12.0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20.3.9. 외교·관용여권 사증면제 잠정 정지
	조 지 아	외교, 관용	90일	'13.04.01.	
	중 국	외교	30일	'13.08.18.	
		관용	30일	'14.12.25.	
	카자흐스탄	외교, 관용	90일	'07.12.05.	
		일반	30일	'14.11.29.	○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180일 내 최장 60일 체류)
	키 르 키 즈	외교, 관용	30일	'11.05.19.	
	캄 보 디 아	외교, 관용	60일	'06.12.2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쿠 웨 이 트	외교, 관용, 특별	90일	'15.06.24.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타지크스탄	외교, 관용	90일	'13.01.08.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시아주	태 국	외교, 관용	제한없음	'67.10.10.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일반	90일	'81.12.09.	
		선원수첩	15일		
	터 키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5.03.	◦1987. 3. 1. 양해각서 개정
	투 르 크 메 니 스 탄	외교, 관용	30일 30일	'08.12.06. '19.05.17.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파 키 스 탄	외교, 관용	3개월	'85.06.08.	※ 2001.10.1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필 리 핀	외교, 관용	제한없음	'70.09.01.	◦체류기간 59일이하의 일반상용(C-3-4), 단기방문(C-3)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 '20.3.22. 외교·관용여권 사증면제 일시 정지
	요 르 단	외교	90일	'17.5.22.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미주	과 테 말 라	외교, 관용, 일반	90일	'07.10.04.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그 레 나 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1.27.	
		선원수첩			
	니 카 라 과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4.08.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도 미 니 카 공 화 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3.04.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도미니카연방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멕 시 코	일반	3개월	'79.04.06.	
		외교, 관용	90일	'97.08.01.	◦사증수수료, 연장허가수수료 면제
	바베이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84.03.11.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바 하 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88.09.04.	
		선원수첩	15일	'94.11.03.	
	베 네 수 엘 라	외교, 관용	30일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07.12.22.	
	벨 리 즈	외교, 관용	90일	'07.02.08.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주	볼리비아	외교, 관용	90일	'11.04.18.	
	브라질	외교, 관용	90일	'92.02.10.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세인트루시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7.06.	
		선원수첩	15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수리남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6.08.03.	◦재입국허가 면제
	아이티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21.	
		선원수첩	15일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04.07.31.	
	앤티가바부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2.29.	
		선원수첩	15일		
	에콰도르	외교	제한없음	'86.05.29.	
		관용	3개월		
	엘살바도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7.02.14.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우루과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1.19. '13.01.10.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자메이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1.27.	
		선원수첩	15일		
	칠레	외교, 관용	90일	'00.07.18.	◦재입국허가 면제 (단, C-2, D-7, D-8, D-9에 한함)
		일반	90일	'04.10.20.	
	코스타리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0.22.	
		선원수첩	15일		
	콜롬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2.25.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외교, 관용, 일반 선원수첩	90일 15일	'94.10.15.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주	파 나 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09.	
	파 라 과 이	외교, 관용	90일	'83.01.0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페 루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6.12.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유럽주	그 리 스	외교, 관용	제한없음	'74.05.15.	
		일반	3개월	'79.02.25.	
	네 덜 란 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노 르 웨 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덴 마 크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독 일	외교, 관용	제한없음	'62.01.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재입국허가 면제 : '97. 4. 14
		일반	90일	'74.01.24.	
	라 트 비 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3.06.2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러 시 아	외교, 관용	90일	'04.11.20.	※ 2006.12.31 관용 추가 협정
		일반	60일	'14.01.01.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루 마 니 아	외교, 관용	90일	'96.06.0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16.03.13.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룩셈부르크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리투아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2.05.09.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리히텐슈타인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몰 도 바	외교, 관용	90일	'12.07.03.	
	몰 타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0.23.	
	벨 기 에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벨 라 루 스	외교, 관용	90일	'08.07.24.	※ 조약 제1902호
	불 가 리 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8.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00.12.16.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스 웨 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스 위 스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스 페 인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4.08.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75.04.18.	
	슬로바키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7.1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아이슬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4.01.	
	아 일 랜 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9.07.12.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유럽주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08.11.21.	
	에스토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18.	
	영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2.19.	
	오스트리아	외교, 관용	180일	'79.06.2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우크라이나	외교, 공무	90일	'14.09.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탈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75.05.0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체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1.0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01.06.16.	
	포르투갈	외교, 관용, 일반	60일	'79.09.19.	○ 마카오 제외
		선원수첩	15일		
	폴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2.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프랑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67.04.12. ('8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핀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4.03.01.	○ 재입국허가 면제
	헝가리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4.25.	
아프리카주	가봉	외교, 관용	90일	'13.08.14.	
	라이베리아	외교, 관용	90일	'82.09.23.	○ '19.7.18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레소토	외교, 관용, 일반	60일	'71.09.05.	
	모로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09.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2000. 8. 3 추가 협정)
		선원수첩	15일		
	베냉	외교, 관용	90일	'92.07.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06.08.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앙골라	외교, 관용	30일	'12.05.25.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98.06.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프리카주	튀 니 지	외교, 관용, 일반	30일	'69.08.17.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 ◦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 (단, 6개월 초과 불가)
	카보베르데	외교, 관용	90일	'15.10.14.	
	모 잠 비 크	외교, 관용	90일	'17.02.16.	
	탄 자 니 아	외교, 관용	90일	'18.10.05.	
대양주	뉴 질 랜 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94.09.30.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뉴질랜드의 ISLANDS, NIUE, TOKELAU 제외
	바 누 아 트	외교, 관용	90일	'18.02.21.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국가/지역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조치, 시행 : '20. 4. 13.)

('20. 12. 31. 현재)

사증면제협정 국가				56개
아·태(4)	▵ 뉴질랜드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태국
미주(18)	▵ 바하마 ▵ 우루과이 ▵ 페루 ▵ 브라질 ▵ 트리니다드토바고	▵ 앤티가바부다 ▵ 자메이카 ▵ 과테말라 ▵ 세인트루시아 ▵ 파나마	▵ 아이티 ▵ 칠레 ▵ 그레나다 ▵ 수리남	▵ 엘살바도르 ▵ 코스타리카 ▵ 도미니카공화국 ▵ 콜롬비아
유럽(29)	▵ 불가리아 ▵ 노르웨이 ▵ 러시아 ▵ 벨기에 ▵ 스페인 ▵ 오스트리아 ▵ 포르투갈 ▵ 헝가리	▵ 이탈리아 ▵ 덴마크 ▵ 루마니아 ▵ 스웨덴 ▵ 슬로바키아 ▵ 체코 ▵ 폴란드	▵ 그리스 ▵ 독일 ▵ 룩셈부르크 ▵ 스위스 ▵ 아이슬란드 ▵ 카자흐스탄 ▵ 프랑스	▵ 네덜란드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에스토니아 ▵ 터키 ▵ 핀란드
중동(4)	▵ 모로코	▵ 아랍에미리트	▵ 이스라엘	▵ 튀니지
아프리카(1)	▵ 레소토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35개
아·태(15)	▵ 나우루 ▵ 호주 ▵ 홍콩 ▵ 사모아	▵ 마셜제도 ▵ 솔로몬제도 ▵ 대만 ▵ 통가	▵ 마이크로네시아 ▵ 투발루 ▵ 마카오 ▵ 일본(3. 9)	▵ 키리바시 ▵ 피지 ▵ 브루나이
미주(5)	▵ 아르헨티나 ▵ 파라과이	▵ 에콰도르	▵ 온두라스	▵ 캐나다
유럽(5)	▵ 몬테네그로 ▵ 세르비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크로아티아		▵ 사이프러스
중동(5)	▵ 바레인 ▵ 쿠웨이트	▵ 오만	▵ 사우디	▵ 카타르
아프리카(5)	▵ 모리셔스 ▵ 에스와티니	▵ 남아프리카공화국	▵ 보츠와나	▵ 세이셸

부록3

주요 행사 연설문

“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

Ⅰ

이민자 멘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촉식이 연기되어 많이 아쉬웠는데 드디어 오늘 멘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남인 만큼 매우 뜻깊고 반가운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과,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한마음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Ⅱ

법무부는 이민정책 총괄 부처로서 외국인의 입국부터 체류허가, 국적취득까지 외국인의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정책을 설계하는 부처입니다.

특히 이민통합은 재한외국인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체류외국인 증가와 함께 그 함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Ⅲ

성공적인 이민자 통합은 국민과 이민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려는 진지한 노력과 상호 소통 없이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민통합 정책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멘토 여러분들이 선배 이민자로서 다른 이민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아직은 낯선 여러분들의 삶과 문화를 알려주는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Ⅳ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국민과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이러한 작은 시작이 앞으로 우리사회의 이민통합이라는 큰 나무를 키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제1기 이민자 멘토단이 활동하게 될 앞으로의 1년은 성공적인 이민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다시 한 번 멘토단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13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정한 「세계인의 날」입니다.

제13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해외 원조와 차관으로 가난을 이겨냈던 우리는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국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25 참상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이루었으며, 지난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에도 우리 국민은 고통을 나누고 희망의 힘으로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은 우리 국민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국인에게 경제적 자립과 교육사업의 후원자였으며, 이제는 든든한 우리 경제의 동반자로서 수 많은 재한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Ⅲ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한외국인이 위기 극복의 동반자라는 사실 역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하나됨이 우리사회에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모여 한국사회의 그늘진 곳이 더욱 밝아지고 내·외국인 간의 벽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제4차 코로나19에 대한 정책과 기술 공유를 위한 특별 웹세미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이렇게 웹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의 이민과 검역 분야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웹세미나에 참석하신 이민과 검역 분야 관계자 여러분들이 감염병 예방의 가장 선두에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고 계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입국 금지, 항공편 중단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특히 국경 이동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입국자 통제, 입국자 동선 파악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침착하고 단계적인 대처는 세계 여러 나라에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업무 외에도 '국경 이동'이라는, 매우 기본적이고도 일상적인 분야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도 함께 이동하여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에 법무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웹세미나는 특히 출입국 관리와 검역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시행해 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한 우리의 정책과 경험이,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나라들의 기술과 경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웹세미나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전 세계의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면, 그 어떤 나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노력으로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75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축사”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원웅 광복회 회장님, 국가보훈처 관계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에 침탈당한 조국을 되찾기 위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기를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오늘 그 후손인 여러분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먼저, 여러분들의 선조들께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조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진정 독립을 되찾겠다는 위대한 용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험난한 노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 오셨을 후손 여러분들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후손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적증서수여식을 통해 여러분 선조들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나라와 이웃을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여러분들은 오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선조이신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 땅에서 각자가 꿈꾸어왔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많은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으로 우리 국민들의 선진 시민의식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국격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교와도 같습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겨,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며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그 후손들이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직은 저 나무들의 잎사귀가 노랗게 물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가을을 맞이할 채비를 하듯 푸른 잎사귀 색들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추(秋)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풍성하고 결실을 맺는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약 1년여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과천청사의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그 중에 가을에 만나는 청사는 가장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멋진 가을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봉사와 헌신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신부님께 대한민국 국적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특히, 이 가을 신부님 인생에 가장 큰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적 순간에 함께 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님,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님, 박용진 국회의원님,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오정삼 삼양주민연대 사무국장님, 그리고 신부님의 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훈 신부님이 처음 선교사로 오셨던 1960년대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는 무척 어렵고 힘든 시절었습니다.

안광훈 신부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평생을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탄광촌에서도, 추운 겨울 삼양동 무허가 판자촌에서도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함께' 하셨습니다.

50여년간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랑과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어 주셨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주신 신부님의 삶은, 신부님의 이름 '광훈(光薰)'처럼 빛과 향기가 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한없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평생을 살아오신 신부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법무부에서 뜻깊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겨울에 염수정 추기경님, 박용진 국회의원님,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특별공로자로 신부님을 법무부에 추천해주셨고,

이에,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신부님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게 되어 오늘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분들을 발굴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분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여 한국 사회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안광훈 신부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님은 오늘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뉴질랜드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사람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신부님은 뉴질랜드와 한국을 잇는 가교이자 훌륭한 민간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공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양 국가간 우호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앞으로도 소통과 이해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는 민속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을 방문하거나 부모님을 찾아 뵙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하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마도 이번 한가위는 신부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로 그 의미와 기분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이 기쁨을 누리시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안광훈 신부님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부록4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가. 일반 책자 목록

발간 시기	책자 명
2020. 6.	서로 다른 눈빛, 모두 같은 손길 - 세계인의 날 기념 미담사례집

나. 전문가 연구 보고서 목록 (www.prism.go.kr 참조)

발간 시기	연구 보고서 명	연구자(단체)
2020. 7.	한국사회에 적합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적용 모델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2020. 7.	귀화제도 개편을 통한 국적정책 추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7.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제도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2020. 9.	출입국외국인청의 새로운 역할모델 개발	이민정책연구원
2020. 9.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선별적 가족초청 제도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2020. 10.	주변국가의 이민행정 조직기능 사례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2020. 10.	체류질서유지 부담금 도입방안 연구	사단법인 고용이민연구원
2020. 12.	사회통합프로그램 특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록5

역대 출입국관리국장 및 본부장 명단

('20. 12. 31. 현재)

• 출입국관리국장

대순	성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신설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鉾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熹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曺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郎)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晙)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炅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검사장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일반직

부록6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20. 12. 31. 현재)

가. 본 부

직 위	성 명	발령일
본 부 장	차규근	'17. 9. 4.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	'19. 10. 7.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근	'18. 8. 20.
출입국기획과장	배상업	'20. 1. 1.
출입국심사과장	구본준	'20. 1. 1.
체류관리과장	이진곤	'19. 8. 23.
이민조사과장	반재열	'19. 8. 22.
이민정보과장	이대우	'20. 12. 14.
외국인정책과장	차용호	'19. 1. 28.
국적과장	송소영	'19. 8. 24.
이민통합과장	김현채	'19. 3. 18.
난민정책과장	김정도	'18. 2. 28.
난민심의과장	이정미	'20. 4. 13.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최문정	'20. 8. 25.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김정복	'20. 1. 1.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강영우	'20. 2. 25.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박주현	'18. 7. 23.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한태	'19. 1. 7.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고동중	'20. 8. 27.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은경	'19. 7. 8.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류재석	'20. 7. 20.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배덕환	'20. 1. 1.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취경	'20. 7. 20.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종철	'16. 2. 22.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정욱	'19. 7. 8.
체류관리과 사무관	용창식	'20. 7. 20.
이민조사과 사무관	이상목	'20. 7. 20.
이민조사과 사무관	박수완	'19. 1. 7.

직 위	성 명	발령일
이민조사과 사무관	홍동우	'19. 1. 7.
이민조사과 사무관	신한진	'20. 7. 20.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철민	'19. 1. 7.
이민정보과 사무관	이우진	'20. 1. 1.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서석주	'18. 7. 23.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최성은	'20. 7. 20.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김용국	'20. 8. 27.
국적과 사무관	은기범	'20. 2. 28.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20. 1. 1.
국적과 사무관	최진혁	'20. 7. 20.
이민통합과 사무관	정해정	'20. 1. 1.
이민통합과 사무관	권택성	'16. 2. 22.
이민통합과 사무관	서제선	'20. 1. 1.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주호	'20. 8. 31.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민경	'20. 2. 25.
난민정책과 사무관	홍인표	'20. 7. 20.
난민심의과 사무관	조승래	'20. 7. 20.
난민심의과 사무관	전동균	'20. 2. 25.
법무부 부이사관	이규홍	'20. 7. 1.
법무비서관실 서기관	박상욱	'20. 11. 1.
국무조정실(일반행정) 서기관	김재남	'20. 1. 1.
법무연수원 사무관	임은진	'20. 9. 4.
국가인권위 사무관	황민하	'20. 1. 1.
KOTRA 사무관	어원희	'20. 1. 1.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사무관	김경수	'20. 1. 1.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서영군	'20. 7. 20.
보건복지부 사무관	구성림	'20. 11. 1.

나.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청장	장세근	'18. 8. 6.
인천공항 지원국장	안동관	'20. 7. 20.
인천공항 심사1국장	이기흠	'20. 1. 1.
인천공항 심사2국장	김기영	'20. 1. 1.
인천공항 총무과장	김강묵	'20. 9. 15.
인천공항 심사지원과장	김홍규	'20. 8. 27.
인천공항 입국재심1과장	정영부	'20. 3. 30.
인천공항 입국재심2과장	손흥기	'20. 7. 20.
인천공항 심사 1과장	배명한	'20. 7. 20.
인천공항 심사 2과장	공 석	
인천공항 심사 3과장	윤양선	'20. 7. 20.
인천공항 심사 4과장	공 석	
인천공항 심사 5과장	김호중	'20. 1. 1.
인천공항 심사 6과장	나모수	'20. 7. 20.
인천공항 심사 7과장	공 석	
인천공항 심사 8과장	김종오	'20. 7. 20.
인천공항 심사 9과장	정병모	'20. 7. 20.
인천공항 심사10과장	최규주	'20. 7. 20.
인천공항 심사11과장	김필호	'20. 7. 20.
인천공항 심사12과장	공 석	
인천공항 심사13과장	서윤원	'20. 1. 1.
인천공항 심사14과장	오승석	'20. 2. 25.
인천공항 심사15과장	유현송	'20. 7. 20.
인천공항 정보분석과장	유용재	'20. 1. 1.
인천공항 조사과장	곽준태	'20. 1. 1.
인천공항 감식과장	임홍헌	'20. 1. 1.
인천공항 보안관리과장	김병희	'20. 1. 1.
인천공항 정보관리과장	신병묵	'18. 1. 15.
인천공항 서울역소장	공 석	
인천공항 도심공항소장	신안선	'19. 7. 8.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청장	공 석	
서울 총무과장	강성환	'19. 1. 7.
서울 관리과장	이승현	'20. 8. 27.
서울 이민특수조사대장	김병철	'20. 7. 20.
서울 정보화센터장	진우석	'20. 1. 1.
서울 국적·통합과장	강성록	'20. 7. 20.
서울 난민과장	임선봉	'20. 1. 1.
서울 사범과장	강대열	'20. 1. 1.
서울 조사과장	김기락	'20. 1. 1.
서울 사무관	김용님	'19. 1. 7.
서울 사무관	공 석	
서울 전자비자센터장	신현민	'20. 1. 1.
서울 정보화센터사무관	유재두	'20. 9. 14.
서울 정보화센터사무관	이수천	'18. 8. 1.
서울 세종로소장	송은옥	'20. 1.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청장	안규석	'19. 10. 7.
부산 관리과장	공 석	
부산 심사과장	최인섭	'20. 1. 1.
부산 조사과장	이호수	'20. 7. 20.
부산 이민특수조사대장	김무진	'20. 7. 20.
부산 사무관	김민기	'19. 1. 7.
부산 사무관	정승화	'20. 1. 1.
부산 이민특수조사대 사무관	이성용	'20. 7. 20.
부산 김해소장	김용진	'20. 7. 20.
부산 감천소장	이원호	'20. 7. 29.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청장	이재유	'19. 10. 10.
인천 관리과장	박찬순	'18. 7. 23.
인천 심사과장	김동근	'20. 7. 20.
인천 조사과장	구창모	'19. 7. 8.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 사범과장	임동규	'20. 1. 1.
인천 사무관	소근희	'20. 7. 20.
인천 사무관	오금택	'19. 3. 18.
인천 안산소장	홍혁표	'20. 7. 20.
인천 안산 사무관	김영오	'20. 7. 20.
인천 안산 사무관	권옥례	'19. 8. 24.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수원청장	육승훈	'20. 1. 1.
수원 관리과장	이상한	'20. 1. 1.
수원 사범과장	조기수	'20. 1. 1.
수원 조사과장	오점근	'20. 8. 30.
수원 평택항만소장	김재석	'20. 1. 1.
수원 평택소장	공 석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청장	공 석	
제주 관리과장	백천기	'20. 7. 20.
제주 심사과장	배천기	'20. 7. 20.
제주 조사과장	박성규	'20. 11. 1.
제주 사무관	임연주	'20. 8. 27.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남부사무소장	이상달	'20. 2. 21.
서울남부 관리과장	임채임	'20. 7. 20.
서울남부 사범과장	조영주	'20. 7. 20.
서울남부 조사과장	공 석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사무소장	강수근	'19. 1. 7.
김해공항 입국과장	정희정	'20. 7. 20.
김해공항 출국과장	권선희	'20. 7. 20.
김해공항 정보관리과장	문상봉	'17. 7. 2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사무소장	이춘용	'20. 1. 1.
대구 관리과장	이성문	'19. 7. 8.
대구 심사과장	고귀영	'20. 7. 20.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구 조사과장	이상배	'20. 7. 20.
대구 구미소장	김성헌	'19. 1. 7.
대구 포항소장	윤영주	'20. 1. 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사무소장	박재완	'20. 7. 20.
대전 관리과장	최종원	'20. 1. 1.
대전 조사과장	황선주	'20. 7. 20.
대전 천안소장	김홍수	'20. 12 . 7.
대전 천안사무관	정왕교	'20. 7. 20.
대전 천안사무관	최성희	'20. 1. 1.
대전 서산소장	최종문	'20. 7. 20.
대전 당진소장	김호진	'19. 1. 7.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사무소장	이호원	'20. 7. 20.
여수 관리과장	유심희	'20. 1. 1.
여수 사범과장	공 석	
여수 보호과장	김형연	'20. 9 .8.
여수 의무과장	이어진	'16. 4. 18.
여수 광양소장	이종수	'20. 7. 2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양주사무소장	황택환	'20. 7. 20.
양주 관리과장	전창엽	'20. 1. 1.
양주 사범과장	박진수	'20. 7. 20.
양주 조사과장	이명표	'20. 1. 1.
양주 고양소장	공 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사무소장	이문한	'20. 1. 1.
울산 관리과장	조은주	'20. 1. 1.
울산 심사과장	조재용	'20. 1. 1.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사무소장	이덕룡	'19. 7. 8.
김포공항 심사과장	공 석	
김포공항 사무관	김종무	'20.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사무소장	김진영	'19. 2. 27.
광주 사무관	신상원	'20. 1. 1.
광주 사무관	박광균	'20. 2. 25.
광주 목포소장	임동영	'20. 7. 20.
광주 무안공항소장	김순옥	'20. 1. 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창원사무소장	장희정	'20. 8. 30.
창원 사무관	최해원	'19. 10. 10.
창원 사무관	공 석	
창원 거제소장	전성엽	'20. 7. 20.
창원 통영소장	김효수	'20. 7. 20.
창원 사천소장	윤양원	'19. 7. 8.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사무소장	정성경	'20. 7. 20.
춘천 사무관	정은화	'20. 1. 13.
춘천 동해소장	김일곤	'20. 7. 20.
춘천 속초소장	박홍상	'20. 7. 20.
춘천 고성소장	김종석	'20. 2. 25.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주사무소장	윤상용	'20. 7. 20.
청주 심사과장	배용호	'19. 7. 15.
청주 사무관	주정희	'20. 7. 20.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사무소장	심준섭	'19. 1. 7.
전주 사무관	이미라	'20. 8. 27.
전주 사무관	공 석	
전주 군산소장	곽범현	'20. 3. 30
〈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보호소장	윤종석	'19. 10. 10.
화성보호소 관리과장	김종복	'19. 1. 7.
화성보호소 사범과장	안숙열	'20. 1. 1.
화성보호소 보호과장	최민수	'20. 7. 20.
화성보호소 의무과장	이도형	'17. 10. 20.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보호소장	김진성	'20. 7. 20.
청주보호소 관리과장	전강섭	'20. 1. 1.
청주보호소 사범과장	김성식	'20. 7. 20.
청주보호소 보호과장	안재필	'20. 7. 20.
청주보호소 의무과장	박은실	'17. 4. 2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입국지원센터장	이인숙	'19. 1. 28.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김준철	'19. 7. 8.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박병현	'20. 2. 25.

07 주요 언론보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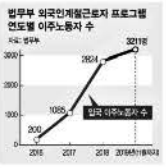
한겨레

2020년 01월 06일 월요일 006면 사회

법무부 비웃듯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뜯는 중개업자들

3개월 단기 취업비자 받아
농번기 농어촌서 일하다 돌아가는
법무부 공식 프로그램

규정상 중개업자 개입 금지
현장선 "까지 않는 곳 없을 것"
임금 일부가 중개업자 계좌로



몽골인 A씨와 L씨는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 이 프로그램은 농번기 농어촌에서 일할 이주노동자들에게 3개월 단기 취업비자를 주는 제도다. 두 사람은 전남 해남군에서 쌀과 배추 수확 일을 하면 받은 월급 175만원 가운데 숙박비 25만원을 고용주에게 냈다. 그런데 통장에는 남은 금액 150만원이 절반인 75만원도 아닌 훨씬 더 적게 나가고 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75만원은 한국인 중개업자 계좌로 이체되었다. 해남군청에 문의했더니, 출국 전 산하로시사와 봉합계약을 맺기 위해 제약사에서 합의한 사항이고 귀국 뒤에 정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씨와 L씨가 필리핀 중개업자와 서명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결국 그씨는 석달 임금의 절반인 225만원, L씨는 두달 임금의 절반인 150만원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법무부가 2015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국내의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들이 개입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본격 확대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3211명의 이주노동자가 이 제도를 통해 입국했다. 국내와 국외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어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법무부의 '2019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보면, 지자체의 신청 요건에는 △업무협약 때 국내외 중개업자의 개입이나 중개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 △중개업자들이 받은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의 개입은 여전하다. 경기 포천시에선 지난해 6~7월에 네팔 등은 부라이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 중 1명꼴이 귀국하지 않고 이탈했다. 포천시와 면초부락시가 업무협약을 맺을 때 이주노동자들이 민간 중개업자에게 비용기성과 중개료를 냈으나 3개월밖에 일하지 못한 것이 이탈의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해경 배재대 교수(공공인재학부)가 2018년 12월 발표한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 심층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 지자체 20곳 가운데 5곳이 중개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소개받고 있었다. 한 한국인 중개업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맺을 때 중개업자가 끼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산하로시시 사례에서도 필리핀과 한국인 중개업자가 지자체 협약 체결부터 개입했다. 하지만 해남군청은 "산하로시시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선 몇 수소 심수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 다음 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외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재구 기자 jk@hani.co.kr

서울경제

2020년 01월 06일 월요일 A29면 사회

外人5%에도… '다문화 범죄수사' 걸음마

강도·마약 강력범죄 늘어나는데
검거율은 4년 연속 하락해 1.2%
소통문제 겹쳐 수사 까다는 분위기
형사절차 어려·문화집짐 높여야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외국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며 조만간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 범죄가 치안 당국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일선 경찰들은 외국인 피의자와 경찰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수사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의자 신분인 외국인도 자기 권리에 위축된 나머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혼란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수사 환경기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외국인 범죄 검거인원은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지만 올해(9월 기준) 검거인원은 2만8,6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줄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범죄검거인원은 증가 추세인 반면 검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2.1% 였던 검거율은 3년 연속 하락해 올해 9월 기준 1.2%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강력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류·강도 범죄가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80%, 40% 늘어났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검거는 일선 현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언어 문제다. 경찰을 하락 등 외국인 범죄 관련 지표가 악화하는 것은 물론 등 언어 분지도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통상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만큼 노련적이지 않아 수사관들은 통역사가 필요할 때마다 개별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목록을 찾고해

열사적으로 그들을 고용한다. 구두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와 달리 수사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높고 검거율도 낮다"며 "거기에 언어적 어려움까지 겹치니 노력해도 실적이 나오지 않아 수사관들이 업무 기피하는 세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행정 복소기를 반영해 경찰청은 지난 수년간 통역 기반을 확충해왔다. 지난 2016년 2,648명이었던 민간 통역사를 올해 기준 3,401명으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397명이었던 외국어 구사 경찰관도 441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낮은 민간 통역사를 활용하는 탓에 수사관의 미세한 뉘앙스를 전달하고, 피의인 외국인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역의 질적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피의자와 경찰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은 기본이고 수사 절차, 형법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경찰청 통역 풀에 등록된 통역사의 경우 '경찰관 통역'과 '민간 통역'으로 나뉜다. 경찰관 통역의 경우 언어와 형사 절차 양쪽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대부분 경찰들은 민간 통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정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깊은 경험이 많고 3자의 통역을 통해 작성한 조서가 높은 신뢰도를 갖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역 기관은 물론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언어·문화에 이해가 확장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순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문화 사회인 미국의 경우처럼 이송단어를 하는 경찰관 비중도 더 확충하는 등 수사는 물론 재판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수사관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기자 hjin@sodaily.com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경향신문 2020년 01월 18일 토요일 001면 종합

커 버 스 토 리 제주청, 예멘 난민 백서 첫 공개

그들과의 낯선 '동거' 결국 우리의 삶이었다

외국인의 출입국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청)은 '악재공군이 모두 있는 곳'으로 통한다. 이들이 상대하는 외국인들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제주도를 오가고, 뭍에서 건게 된 곳곳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제주는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테스트베드'(시험무대)로 여겨진다. 이런 제주에서도 예멘인들은 낯선 존재였다. 2000년대 초반 한해 2~3명 정도의 예멘인이 제주를 찾았지만 연간 방문객은 수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예멘인 26명이 제주를 찾았다. 2017년 52명을 더해도 5년간 제주를 방문한 예멘인은 78명뿐이었다. 2018년, 그러니까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발생한 그해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발어난 것이었다. | 관련기사 2·3면

출입국 정책 사진 최초의 기록물
예멘인들과 만나 겪은 경험 생생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질문 던져

인은 보다는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수식으로 기록했고, 제주는 물론 곳곳에서 난민 신청 찬반 집회가 있었다. 2018년 6월 시작된 난민심사는 12월이 되서야 마무리됐다. 총 561명의 예멘인이 입국했고, 그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 중 제주에서 난민심사를 받은 인원은 484명, 난민으로인정된 건 2명이었고, 인도적 지위 허가자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이었다.

"어떤 경험을 통해 제주청이 새롭게 바뀐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018년 7월 제주청을 찾은 한국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제주청은 예멘 난민들에 대규모로 익숙하고 있다. 사실을 과학의 뒤부터 이 일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지난해 9월 만들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련 부처에 난민 공개한 것이 '2018 제주이전 난민 백서'다. 내부용으로 제작됐으나 백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하기 전까지 존재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김두군 전 제주청장(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그들은 지옥 같은 전쟁으로 (지구에서) 살 수 없으니 평화의 섬 제주에 머물게 해달라고 난민신청을 한 것이었다"며 "제주 예멘 난민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백서를 남겼다"고 했다. 백서 작성을 팀장 한 최순수 난민팀장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한다. 그의 고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섞여 오기에"라고 했다. 평소 책임기를 좋아하고 감명 깊은 글귀를 수첩에 메모하는 편이라는 그는 백서 또 쓰면서 농네 도서관을 찾으며 제주로 찾아온 예멘 '사람'들에 대해 고민했다. 백서 속에는 권조한 사실관계의 곁에 '출입국 담당자'나 '난민 심사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이 직접 대 사람으로 예멘인들과 만나 겪은 경험과 후기도 담겨 있다.

제주 | 전형진 기자 jin38@kyunghyang.com

세계일보 2020년 01월 18일 토요일 008면 종합

교육·봉사 통해 교류… '고립된 섬' 벗어나

한국정착 성공 사례 보니

"다문화 엄마 학교" 통해 초등 첫발
"복지사" 일등 사회 관계망 넓혀
이산 "제괌봉사단" 수석 주낸 1, 9
"점곡점 많으면 인식 개선 등 효과"

정형진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경향신문

2022년 01월 18일 토요일 10면 종합

'2018 제주 예멘 난민 백서' 나오기까지

전담팀 꾸리고 아랍어 통역관 부르고… 다시 없을 특별한 난리 겪고 깨달은 '운명'

제주도정이 최근 다시 속세한 탓에이시아 직항, 그 비행기 타고 온 예멘인들… 당시 지휘한 김도균 정장 "예멘인들이 제주로 찾은 건 운명"

여름휴가 제주행, 난민신청사들 등에게 전주가 가장 바쁜 송일국 도청으로… 송일국의 국민청장·심사 자문관·정책자문 위장·통역 반장·검수 반장 동동

심사 발표까지 6개월 걸리는데 돈 없어 노숙하는 난민들과 그것으로 안한 도민들 불안 듣고 문의 해결 동분서주… 공무원 내 난민 아닌 사람 내 사람으로 이어져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경향신문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00면 종합

"언제든 찾아올 난민 문제, 예멘 난민 백서를 '기출문제' 삼길"

2018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의 갓난아기에게 상장 수여식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난민신청자 484명 심사 결과
인정된 난민은 단 2명에 불과
대부분 인도적 체류허가 받아
"명백한 내전 상황에 처한 이들
가짜 난민으로 몰아선 안돼"
제주청 직원이 의견 내기도

예멘인들을 지키온 지원금
"난민에 대한 생각 바뀔 계기"
취업관리 체계화·심사 다양화 등
백서에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김도균 전 청장 "한국에 이미 난민 지내는 분 있다 보니 힘들다"

취업설명회 이후 예멘인 분포도

2018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의 갓난아기에게 상장 수여식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조 교장은 종족 탄압 이슬람 반정부 군벌 내분이 주된 원인 누설.

"처음에는 조금 신중들이 났습니다. 자금이 '그런가 가입 해인가' 싶었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인종에게는 입국부터 오랜 준비 시간이 고 강사가 계획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난민'이라는 게 일종의, 조심해야 봤습니다." (강원우 사진)

동예멘는 이 종족도 예멘인과 다니며 탈출 지원 받아보기 힘다고 본다. 예멘인 여성과 대화할 때는 더욱 조심했다. "여성인들이 코에서 먼저 대화하면" "반에 교에 이야기를 한다" "소속을 묻다" 등 주변에서 지켜볼 때 "인종에게 직접적으로 물 때도 노출주는 것을을 쓰지않으려 주의했다. 외국에서 온 난민인 관심 이슈만이 주제받고 다는 기교이 필요 없도도 예멘부터였다.

"신청자에는 외이에이거부터 대사대사 대한으로 나오는 예멘인도이 '갑오년이어로 보증을 보고 '여학생들이 학에 참여나니다' '여성계 학업을 주니다'도 무서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행에서도 '오전 외국인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서다보게나 느려서 하기도 하는 곳에선, 경사 사진들도 고사에이 다도에게 자원을 보고는도 도서에 할 수 있도고 그런데 예멘 이름이요, 고정관념을 고고도도 어려웠습니다." (이상준 과장)

■ 취업반대에 반발 오보 때문 컷

2018년 7월 제주에 세 차례에 걸친 난민 심사 관계자 브리핑에서 수십명 유입한 국 사람들 때문에서 불린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바무워졌다. 500여명이 몰은 사건 인 예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첫 사례였다. 난민 신청자 중심명을 대상으로 주었는 난민 심사 예시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고민 노력 제주도가 난민을 받았다. 난민으로 이정이 큰 고민이었다.

난민수용 시기 이지원 최장비근 대한법무지 내부분 난민법이 정하고 있는 5년 때에 시

당이 제주에 살기 때문이다. 나무법은 인종, 종교, 국적, 신분, 정치 등에 이유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난민으로 보기 때문에, 전쟁·내란 등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 그래서 예멘 등을 대상으로는 보고가 없지만, 국내가 제도상 할 수 있는 절차이 제약이 크기 때문에 수용도 못 보호하다. 난 시기 시설이 다도의 지원 도움이 모두 부족/부는 곳 느꼈다"고 했다.

제주청이서는 "예멘난민지원업무에 대한 내

지이어는 제주 예멘 난민 등에 드러난 난민과 제도로 도지했다. 난민 신청자들 보면 취업은 제 제도. 예멘 기 근대의 생소 관광, 난민 신청자에 대한 복잡한 마녀, 심사 방법의 다양을 등이다. 수개월은 취업 난민을 거절 기준이나 지속분 제주를 이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난민들이 제주를 다시방을 하는 것이다.

"지금이는 예멘에 디제서도 올 모르고 의 전시업무인지도 올 원입습니다. 그러나 안 리오이비드는 난민에다 점 이후가나 유용은 당일 등을 받은의 이슬람 논점들을 설명해자 주는 식으로 답하면 내 상을 다음이이요. 서양 예산신청분분 반, 예멘들을 주식 반 1:1 이어기대부서 이들도 수년을 똑같은 사람의 이는 것 아지 않습니다."(강원우 기자)

김도균 전 청장은 제주에서 이주 난민 지내

서 더욱이나 '제기(예멘)'이어는 한국 이름을 지어한다. 더이상 제주을 평생 구입하고, 구직분류 사업으로서 남들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자리로는 이미의 답했다. 그는 그래 난민 심사 대기로 모두 예외없이 이 생활하기 힘든 측면이고 함께 노력해고 했다고 본다. "한번도 난민고, 상존의 가능도 없지 않으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두 번 있을 수 사건이었죠. 예멘 난민 사태을 통해 동안 오라이 생으로 이 조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스심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제주를 찾았던 예멘인도 종종 방송 사고로 상황을 찾아 옵지로 바보고, 일부는 자주에 머물고 있다. 김진 심장은 "자주로 남은 예멘 난민들을 조용히 살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들을 낯이했던 제주청 사업들도 "한 번 지지고 그래서 생활과 더 상 등이 예멘 난민 백서이고소한다"고 했다.

백서의 끝이 점 김장은 "출입국·외국사회 공익관계자의 당장시간, 한으도 난민 기록을 주 상세하기 위해도 백서는 달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제주 예멘 난민 백서는 출입국 외 또 관련 다양 시간에 대한 정보의 기록입니다. 그는 "제주에이 경제 지원 난민 사람 분석가 있다. 이 자료 기록으로 쉽이 이 바로 지금 출기 대한다"고 말을 남겼다. 이러 우리 같이 왔고 있도도 우리을 찾아올 수 있는 난민. 기술과 이들의 공존할 조건가, 제주 이번 나타난 오리에게 조심 바라 더에서 공부하지 도 보았다.

제주 | 전성원 기자 jun96@kyunghyang.com

07 주요 언론보도

경향신문 2020년 01월 20일 월요일 030면 오피니언

시선

사할린 한인의 간절함

조영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사할린. 인천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러시아 영토의 섬. 태평양을 바라보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이 섬은 남쪽으로 일본 홋카이도, 북쪽으로 러시아 본토와 마주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의 슬픈 역사가 새겨진 섬이다.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가니, 당시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은 일본의 영토였다. 전쟁시기 일본은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수만명의 식민지 조선인을 남사할린 탄광으로 강제 징용 보냈다. 비윤리적 방법으로 징용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만형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신 징용살이에 응했고, 이제 막 갓 혼인한 새댁은 남편 혼자 보낼 수 없어 보따리 싸 뒤를 따랐다.

사할린에 보낸 패는 일본 식민지 백성이었지만, 현장에서 매매한 임본의 선을 수인에 넘겨주면서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겨졌다. 귀향선에 조선인은 탈 수 없었다. 남겨진 조선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 믿으며 사할린 섬의 남쪽 끝 홋카이도와 코르사코프로 모이는 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일본의 약속은 없었고 배만 몇 번 가로막았고 해방 후 속았다. 고국은 이들을 외면했다.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韓人)들은 수십년 동안 망향의 그리움을 달고 동토의 땅에서 살아남았다.

1990년이 이르러 한국과 소련이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비로소 고향방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사할린 한인의 귀국을 위한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오랜 시간 동안 버림받았던 이들의 복잡한 삶을 단기엔 지금의 법과 제도는 너무 엉성하거나 무책임하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이 살아온 삶과 온전을 조국인 대한민국의 공문서에 사실대로 기록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법은 2014년 무국적자로 살아온 사할린 한인2세에게 지금부터 국적을 이탈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결했지만, 사고두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공백으로 인해 한국인으로 기록되지 못한 동포와 그들의 자녀들이 많다. 사할린 한인의 삶과 이는의 기록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제대가 최근에 고국으로 영주 귀국한 어르신이 사랑하였는데 자녀들이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해 친족관계를 입증하지 못해서 사망신고를 비롯한 고인의 정리절차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뉴지도 있었다. 남겨진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고려할 때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행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 요건을 북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완화하거나, 법무부 시책적으로 사할린 한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처리를 위한 별도 행정지침을 마련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른 욕심 없다. 죽기 전에 내가 한국사람이고, 죽은 남편과 낳은 자식이 내 가족이라고 적힌 호적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올해 아흔셋 어르신의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0년 01월 30일 월요일 B07면 기획

한국이 세계 3위…'여권 파워' 이 정도인줄 몰랐네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여권지수 1위는 일본
미국 8위·아프간 꼴찌

◆한국, 독일과 공동 8위

헨리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수에 따라 세계 여권 순위를 매긴 독점적인 지수로 세계항공운송협회(IATA)의 독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분석한 전 세계 199개 여권 중 1위는 일본이다. '그레이존(회색지대)' 지수 1위를 기록하면서 한 번 입국 허가를 받으면 비자 없이 최장 기간 체류할 수 있는 국가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일본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190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와 독일이 189개국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88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 3위에 랭크됐다.

뒤를 이어 룩셈부르크, 스웨덴이 187개국으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최고 막강국'은 UAE

이번 여권지수 1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0년 사이 순위가 무려 47단계나 상승하며 이번 조사에서 '무비자 여행 지수' 점수 171점을 획득하여 18위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이러한 UAE의 급부상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정책 덕분이다. 아프가니스탄은 현 시점에서 단 26개 국에만 갈 수 있어, 압도적 꼴찌 순위를 차지했다.

헨리앤파트너스 창립 겸 관리 담당자는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어디로 갈지 결정할 때는 비용과 편리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며 "특히 여권은 여행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 산하 연구기관인 외교관계협회(CFR)는 "여권 파워 지수는 여행의 편의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지만 국가 안보나 외교 관계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아수 여행·레저전문기자

東亞日報

2020년 01월 31일 금요일 A01면 종합

국내서 中신종폐렴 첫 확진… 확산 비상

우한서 온 중국인 여성 격리치료

中 확진 사흘새 62명→218명 급증
당국자 "사람간 전염현상 존재"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중국 외 국가에서 폐렴 환자가 발생한 건 태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 정부는 사흘 새 136명이 추가로 감염 판정을 받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사람 간 전염'으로 여한 환사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초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는 맞아 15일 동안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돼 국내에도 비상이 걸렸다.

30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시에서 중국남방항공 (CZ-6079)편을 타고 19일 낮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 A 씨(3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은 기침 등 증세로 '환자' 단계에서 '주의'로 높였다.

A 씨는 생활에서 일부러 비행기로 환승하다 고열 증상을 보여 적발됐다. 우한 거주자인 A 씨는 신종 폐렴 발생지로 알려진 화난(華南) 수산물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질본은 사흘간 추적에 따른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A 씨가 확진 환자 수는 우한 198명, 네이징(寧波) 3명, 선전(深圳)에서 등 광둥(廣東)성 14명, 상하이(上海) 1명으로 집계됐다. 우한이 아닌 중국 다른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19일이는 환자 한 명이 숨져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이날 중난산(鍾南山)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선문가팀 팀장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에 사람 간 전염 현상이 존재한다"며 "숨겨 존재지의 특성을 막는 게 반지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시 기자 ongsk@donga.com / 베이징=홍은호 특파원
▶A5면에 관련기사

07 주요 언론보도

내일신문 2020년 01월 21일 화요일 004면 정치

"이주민, 정치의사표시 어려워"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전국 순회, 커뮤니티 연결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21일 "이주민에게는 정치적 의사 표현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주민이 우리당 시민 선거인단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이름이 3자 이상 넘어가는 이주민들은 가입하기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주민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예전의 자신 이름을 사용하는데, 대개 이름이 3글자 이상 넘어간다. 이들이 선거인단에 가입하려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하면 불일치한다고 뜨거나 본인 인증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고 멈추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적 획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처음 개통할 때 가족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변경하지 않고 놔뒀기에 이주민의 정치 참여의 벽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인단 가입이 안 된 이주민들은 '아직도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라고 자조하며 실망하는데, 이는 다른 정당의 경우도 고쳐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에 입당한 후 당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역의 정의당 협력에 처음으로 이주민의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장에서 이주민 여성의 자녀들이 이미 정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다는 점이 좋다고 했다.

18세 이상 이주민 청년들이 늘고 있어 '투표 자어로 남북이 결정되는 지방 선거에서는 이주민들의 표심이 중요해졌다는 시대 변화도 감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5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그는 19대(2012~2016년) 때 지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에 입당해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입당 당시 "다문화,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면위로 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지난 4월 '이민사회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현재 이민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가칭) 이민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구 수는 30만이 넘었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 수는 100만 명이 넘었지만 아직 이주민의 정책적·법적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만 해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난민법 등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합으로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주민 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외국인과 외국인' 간 다시 꾸린 '제2의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얼굴만 외국인이지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

그는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자신과 소통하기 쉬운 자국인과 결혼하고, 이런 형태의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 가정에서 태어나 자녀도 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윤설환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서울신문

2020년 01월 22일 수요일 025면 종합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에 열린 마음 가졌다면 지원하세요"

SDS 조시생

〈2〉 출입국관리 직무

국내외 문화에는 외국인이 기술 위주의 높은 한국인이 비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다. 사증 발급부터 공사, 외국인에 대한 연장, 체류자격 변경, 출입국 위한 사증 검토 업무까지 출입국관리 직무 분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방대하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업무인 만큼 외국어 능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만큼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하다고 한다. 서울신문은 출입국관리 직무 분야를 집중 취재하는 '조시생'을 통해 출입국관리 직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어본다. 첫 번째 순서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시생 3명을 만나 출입국관리 직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태형 기자 kimth@seoul.co.kr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시생 이승연(왼쪽), 김정은 씨가 조시생 3명을 대표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출입국 노하우를 전했다. 두 사람은 "결혁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출입국관리직에 어울린다"고 조언했다. 김태형 기자

-해외출입국관리 직무를 준비했나.

정지원 "대학 때 주로 외국 여행을 다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천을 하면 좋겠다 싶어 출입국관리직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다 우연히 출입국관리직 조시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그때 공부하면 되겠다 싶어 지원하게 됐다."

이승연 "고등학생 때 막연하게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한국 체류 외국인이 많아질 때라 이 직업이 괜찮겠다 싶었다. 지금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대학 때 배운 중국어도 업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학 때 중국 유학을 다녀온 것이 지금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조시생이 되었나.

정지원 "인터넷을 통해 조시생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다. 조시생 교육은 약 4개월 정도 받았다."

이승연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 한국사, 상식이었다. 면접 전형에서 인성을 많이 봤다. 면접 전형 때 조시생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출입국관리 직무의 장단점이 궁금하다면.

이승연 "출입국에서 외국인 체류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점은 주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지원 "이런 두 가지 업무가 있다. 첫 업무는 사증 발급과 같은 업무이다. 출입국관리직 특성 상 면접 심사관을 배출하기 어렵다. 대부분이 한국에 유학오기 전 사증을 받고 온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활, 대학 생활, 출입국 유형 사전 업무, 나만 알고 있는 꿀팁 등을 주로 안내한다."

● 외국인에게 좋은 인상과 첫 말을 건네주는 업무로 보고 이렇다.

정지원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항에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출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항에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입국할 때 궁금해 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안내하려고 노력한다."

이승연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항에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입국할 때 궁금해 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안내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이 조시생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이승연 "외국인을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출입국관리직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또 업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조시생 3명 중 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직 조시생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출입국관리직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또 업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시생 업무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이승연 "외국인을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출입국관리직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또 업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조시생 3명 중 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직 조시생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출입국관리직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또 업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시생 업무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정지원 "대학 때 중국 유학을 다녀왔다. 그래서 중국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출입국관리직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다 우연히 출입국관리직 조시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그때 공부하면 되겠다 싶어 지원하게 됐다."

이승연 "고등학생 때 막연하게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한국 체류 외국인이 많아질 때라 이 직업이 괜찮겠다 싶었다. 지금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대학 때 배운 중국어도 업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학 때 중국 유학을 다녀온 것이 지금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정지원 "이런 두 가지 업무가 있다. 첫 업무는 사증 발급과 같은 업무이다. 출입국관리직 특성 상 면접 심사관을 배출하기 어렵다. 대부분이 한국에 유학오기 전 사증을 받고 온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활, 대학 생활, 출입국 유형 사전 업무, 나만 알고 있는 꿀팁 등을 주로 안내한다."

● 외국인에게 좋은 인상과 첫 말을 건네주는 업무로 보고 이렇다.

정지원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항에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입국할 때 궁금해 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안내하려고 노력한다."

이승연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항에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입국할 때 궁금해 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안내하려고 노력한다."

-조시생 업무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정지원 "대학 때 중국 유학을 다녀왔다. 그래서 중국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출입국관리직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다 우연히 출입국관리직 조시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그때 공부하면 되겠다 싶어 지원하게 됐다."

이승연 "고등학생 때 막연하게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한국 체류 외국인이 많아질 때라 이 직업이 괜찮겠다 싶었다. 지금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대학 때 배운 중국어도 업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학 때 중국 유학을 다녀온 것이 지금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정지원 "이런 두 가지 업무가 있다. 첫 업무는 사증 발급과 같은 업무이다. 출입국관리직 특성 상 면접 심사관을 배출하기 어렵다. 대부분이 한국에 유학오기 전 사증을 받고 온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활, 대학 생활, 출입국 유형 사전 업무, 나만 알고 있는 꿀팁 등을 주로 안내한다."

● 외국인에게 좋은 인상과 첫 말을 건네주는 업무로 보고 이렇다.

정지원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항에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입국할 때 궁금해 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안내하려고 노력한다."

이승연 "입국 심사관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항에서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입국할 때 궁금해 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안내하려고 노력한다."

-조시생 업무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정지원 "대학 때 중국 유학을 다녀왔다. 그래서 중국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출입국관리직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다 우연히 출입국관리직 조시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그때 공부하면 되겠다 싶어 지원하게 됐다."

이승연 "고등학생 때 막연하게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우연히 한국 체류 외국인이 많아질 때라 이 직업이 괜찮겠다 싶었다. 지금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대학 때 배운 중국어도 업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학 때 중국 유학을 다녀온 것이 지금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정지원 "이런 두 가지 업무가 있다. 첫 업무는 사증 발급과 같은 업무이다. 출입국관리직 특성 상 면접 심사관을 배출하기 어렵다. 대부분이 한국에 유학오기 전 사증을 받고 온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활, 대학 생활, 출입국 유형 사전 업무, 나만 알고 있는 꿀팁 등을 주로 안내한다."

중앙일보

2020년 01월 28일 화요일 008면 종합

중국인 입국 금지? 사스·메르스 때도 안 했고 WHO도 신중

〈세부전기기〉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확진자 4명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아예 중국인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7일 오후 기준으로 47만 명 넘게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26일 대국의 남화문을 찾은 중국인 입국 금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시한 전염이 대책 마련이 크다. 질병관리본부 여러모로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 청와대도 이날 국민청원과 관련해 "그런 조치의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라고 그러나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는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년 전에에서 WHO와 같은 것이다"라고 "입국 금지 조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규약상으로는 한국이 질병에기 청와대 국민청원 47만 명 넘게 참여

의협도 "입국 금지 고려를" 했지만

청와대 "그런 조치 가능성 낮다"

입국 제한한편 중국 보복 등 우려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24일 이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센터로 의심 검체를 채취하러 온 보건소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원지 않다. WTO의 국제보건규약(IHR 2005)은 "질병 확산을 통제하려는 국가가 각 나라 이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해선 안 된다"(22조)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해당 유입경로를 완전히 막아내긴 현실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중국이 그나마 국가 간 이동을 봉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데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차단하지 않았다. 국경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해당 유입경로를 완전히 막아내긴 현실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중국이 그나마 국가 간 이동을 봉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데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차단하지 않았다. 국경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고려할 부분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시진핑 주석이 "외교는 체제 대립에 반발하면서 '외교단'을 내세운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면 보복 차원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WHO에서 아직 국제적인 비상상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WHO에선 권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 leeyoojung@joongang.co.kr

07 주요 언론보도

朝鮮日報

2020년 03월 26일 AC5면 종합

홍콩, 후베이성 체류자 입국 차단 몽골은 中과 접경지대 모두 폐쇄

한국일보

2020년 03월 26일 목요일 AC5면 정치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입국 금지 국민청원 50만명 돌파
한선당 "中 눈치 보며" 금지 촉구
김부겸 "검역 부족기에 말이"
정부 강력제재 선례도 없고 감염 악화 우려
TF 구성 등 더 지켜봐야
WHO는 여행 제한 권고 안 해

중앙일보

2020년 01월 28일 화요일 00면 종합

우한 한국인 700명 전세기 귀국 뒤 천안 격리

(우종균·우원재·국종국기획팀 스운운운)

정부 30-31일 이격기 4번 투입
주민 "왜 도심에 격리하나" 반발
네 번째 환자 접촉 172명으로 늘어
문 대통령 "과할 정도 선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깜짝 방문했다. 확진 우려가 커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날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면서 우한 폐렴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두 손을 세게 저로 소독하는 마스크를 쓴 의료진을 격려하면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처음부터 선별진료소, 격리병실, 또 국가 지정 격리병상 등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다른 환자나 내원객에는 일절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다. 그렇게 해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하고, 세 번째는 이런 조치들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는 서대문구를 찾아와 고충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303명(내국인 196명, 외국인 957명에 대한 우한 폐렴 감염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증상이 아니라 지난 13~27일 입국자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네 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172명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6시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총 106명으로 이 중 49명이 확진됐고, 1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97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된 상태다.

정부 차원에선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을 위해 30~31일 전세기 4편을 투입해 귀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700여 명이다. 귀국 후엔 전세기 기내 격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충청권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민안전수련원으로 알려졌다. 충청 지역 주민들은 "코ронь의 중심지이자 서울과 수도권에서 좀 먼곳에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바람을 맞으며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 정기명 기자

문준영 기자
joon@joongang.co.kr

한국일보

2020년 01월 30일 목요일 A12면 사회

법원 "35억원 체납자 출국금지는 부당"

"재산 해외 도피 정황 없어"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 수시로 해외를 오고 간 체납자가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의 항소심 에서 승소했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정황이 없는 한 출국금지는 과도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기실업체를 운영해 온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외 재산 은닉의 의심되기 때문에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체납해 2017년 11월 기준 총 30억 여원의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던서 A씨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17회에 걸쳐 해외를 드나들었다. A씨 가족의 기록까지 더하면 2019년까지 출국기록은 40회에 달했다. 세무 당국의 요청으로 법무부는 2016년 1월부터 A씨에게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처분은 6개월 마다로 연장돼 왔다.

그러자 A씨는 세무 당국이 이미 자신의 자산을 상당 처분해 체납세금에 충당했기 때문에 더는 재산도 없다며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로 이 자산을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에게 패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13~2015년에 발생한 배당·인정상여 소득을 은닉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해당 소득은 종합이 두절한 회사 지분 등을 회계 처리한 결과라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주목할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3년7개월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은닉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거듭히며 "A씨가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 등을 방지하는 데 수단 목적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잦은 출국에 대해서도 "행선지가 일본·마카오 등 주로 가까운 곳이고 방문 기간도 2~4일에 그친다"며 출국 기록만으로는 재산을 해외에 도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주명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0년 01월 30일 목요일
A04면 종합

정부 "중국인 입국 금지는 없을 것"

감염증 환자 등 위생상 염려 땐
법무부 '입국 금지' 가능하지만
특정 국가 전체 제한 전례 없어

복지부 "더 큰 문제 야기할 수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 국민 입국 금지 조치는 국제관계와 효율적인 질병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등 정부도 입국 금지 조치 발령에는 부정적이다.

지난 23일 처음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9일 오후 9시 기준 약 58만명이 동의했다. 이런 여론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동조하고 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우한 등 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이곳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 입국 제한 결정은 법무부 소관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감염병 환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역법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감염병 환자의 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국가의 국민 전체 입국을 금지한 전례는 없었다.

국제보건규범이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인 입국 금지 실현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규모 질병 발생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할 때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고 국경 폐쇄 또는 여행·무역 제한 등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5차례의 PHEIC 선언에서 이러한 권고가 뒤따른 적은 없었다. '국제보건규칙(IHR)'도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예방, 보호, 통제하더라도 국제 교통 및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방지'하라고 강조한다. 더구나 WHO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비상사태도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일괄적으로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입국 금지시킨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어렵다"며 "검역을 더 강화해 국적에 관계 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27일 "현재 WHO 역시 이동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도 WHO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몽골 등 일부 국가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긴 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 현실이나 의료 환경 차이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양진하·신은별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매일경제

2020년 01월 30일 목요일 A01면 속보

17만 中동포·유학생 돌아온다…두려운 2월

"코로나 오지 마" 꼼꼼 무장…중국서 온 입국자 부산 북구 검역 물품관리센터 중국서 입국하는 가족에 건강 진단 관련 안내문과 마스크 등이 담긴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춘제·방학 맞아 중국갔다 속속 입국…우한폐렴 최대 고비
중국내 확진 6000명 넘어…한국 유증상자 183명으로 늘어

29일 중국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감염자 수(8422명)를 넘어섰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9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5974명, 사망자는 1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실시간 정보 협산 터미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에서 확진자는 6086명이 넘었다. 사망자 수는 사스 당시 (8개월) 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연세 넘 이 심지 의 수 많는 기타 한 상황이다.

중동에서도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보건부는 "우한에서 온 중국인 2명 4명의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A3·4·5면

국내에서는 중국 등부(푸순쥐) 멈칫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이 폐렴 다학가 등을 중심으로 공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동포 상권은 이미 얼어 붙었다. 법무부 출입국 등에에 따르면 약 70만명의 중국 동포 중 올해 춘제 기간(1월 25일~2월 7일)에 약 17만명이 중국을 방문한 뒤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관리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은 7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춘제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중앙시장 골목은 우한 폐렴 이후로 가장 한산한 모습이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찾는 식당과 마트 등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대림동 주민 A씨(40대·여)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한산한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중앙시장 골목은 우한 폐렴 이후로 가장 한산한 모습이었다. 곳곳 입구에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었다. 김재훈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02

朝鮮日報

2020년 02월 03일 월요일 A04면 종합

우한서 입국한 내국인 1085명 중 50여명이 연락두절 외국인 398명중 서울체류 205명인데, 65명 오리무중

정부, 1483명 전수조사 난관 봉착

정부가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1483명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전수(全數)조사 중이지만 내국인 50여명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서울로 들어온 외국인 20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 "조사 대상 내국인 1085명 중 현재까지 한 번도 통화가 안 된 내국인이 50여명"이라며 "분석로 주의사항 등을 계속 안내하고, 지자체에도 변사를 통보해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질본은 지난달 말 문제인 대통령이 "우한 입국자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해 명단을 추렸다. 지난달 13~28일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2361명 중 국내에 머물고 있는 내국인 1085명, 외국인 398명이 대상이 됐다. 질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자체 보건소 인력을 동원해 매일 전화를 걸어 이들이 의심 증상을 보이는지 살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안 되는 내국인이 5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일 "(전수조사 결과) 심사가 신청된 것은 40건 정도 되지만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외국인 398명을 찾는 일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질본에서 전수조사를 의뢰한 우한에서 입국해 서울에 머무르는 외국인 205명 중 이제 20명까지 접촉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질본은 우한 입국자 중 서울 체류 중이나 연락처가 없는 외국인 205명 명단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 중 120명은 다시 확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85명은 각 자치구 보건소가 1일부터 직원들을 주소지로 보내 접촉을 시도했다. 이 중 20명을 only 결과 우한 폐렴 증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65명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질본에서 연락처는 없고 주소만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확인을 요구해왔다"며 "외국인이 기재한 주소이다 보니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소재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허상우·구본우 기자

중앙일보

2020년 02월 03일 월요일 A04면 종합

"중국 다 번졌는데…" 후베이만 입국 막는다

(4일 0시부터)

정세균, 신종코로나 대책 발표
"후베이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내국인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
자진신고 안하면 알 길 없어 한계
주한 중국대사는 입국금지 반대

오늘의 신종코로나 입국 후 14일 이내 확진

후베이성	중국 후베이 외	중국 외
15명	1만4489명	304명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신종 코로나 대응 범정부 회의 전후다. 함께 배포됐던 보도참고자료 수정도 두 차례 됐다.

1차 발표는 신종 코로나가 최초 발생한 후베이(湖北)성을 14일 이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4일 0시부터 한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을 방문한 한국 국민은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는 일시 중단되며 사업상이나 여행객은 중단할 것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또 입국자들에 ▶중국인 대상 기존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며 ▶한국민 대상 중국 지역의 여행 경보를 현지 여행 제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심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막히고, 중국인 역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지난 며칠 두 시간여 변에 중국인 대상의 단기비자에 대한 '발급 중단 계획이 '발급을 중단하는 방향도 검토로 수정됐다. 강호 이에스더 위원의 기자 gnomor@joongang.co.kr

>> 3면 '신종코로나'로 계속

관계기사 2, 3, 4, 5, 6, 8, B1, B2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이름)'과 관련, 본사 기사의 드기를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정하고, 일부 등을 '신종 코로나로 바꿔도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이 이들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朝鮮日報

2020년 02월 03일 월요일 A05면 종합

제주도 다녀간 중국인 확진… 정부, 원희룡 요청대로 무비자 입국 일시중단

4박5일 체류, 해열제 복용도 확인

제주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부터 해열제를 구입하며 관련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나섰고,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수용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관광객 A(52)씨는 지난달 21일 딸과 함께 중국 춘추항공 직항 노선으로 중국 양저우에서 제주를 방문했다. 관광 목적의 외국인은 무비자로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A씨는 4박 5일간 머문 뒤 지난달 25일 양저우로 돌아갔다가 이튿날인 26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30일 '우한 폐렴'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딸은 증상이 없는 상태다.

A씨의 확진 사실은 지난 1일 중국 춘추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리면서 확인됐다. 소식을 접한 제주도는 즉각 질병관리본부(질본)에 통보했지만 "(발열 이후 한식의 동선만 파악하기 바란에) 관리 및 발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 소식이 언론 등을 통해 퍼지면서 관광객의 동선을 는는 주민 진화가 행정기관으로 폭주하는 등 제주 지역에 불안감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복용한 요텔 직원 5명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가 취해졌고, A씨가 출국한 후 발열 증세를 보인 제주공항 검역 직원 1명에 대해선 정밀 조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오세웅 기자, 허상우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경향신문

2020년 03월 07일 토요일 04면 종합

중국 전용 입국장 설치… 거주지·연락처 확인 후 입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책

1. 국내 입국 제한
- 중국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 중국인 입국 목적 査증 발급 중지 검토
- 후베이성 제외 중국 査증 발급 중단
- 사증(VISA) 무효화
2. 중국 관광 여행경보 '철수 권고' 상향, 관광목적 중국 방문 금지
3. 중국 입국자, 국내 검역 제한
-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시 발급 제한
- 내국인 경우 격리조치 강화
4. 마스크 제조공장 24시간 가동,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
5. 확진자 접촉자는 14일간 무조건 자가격리
6. 감염 우려 지역은 계속 업기 또는 백서말형 조정

정부 '신종 코로나' 대응 종합 대책 발표

후베이성 방문한 한국인도 '14일간 격리'
입국 외국인 규정하자 대중관계 영향 등 고심 끝 '검수'
정 총리, 최근까지 입국금지 반대…경제계 "중국 소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19)으로 인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 대상을 후베이성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중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월 말 우한 등 후베이성 주요 도시를 봉쇄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중국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 및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중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방문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 주요 도시를 봉쇄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중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고, 후베이성 방문 내국인은 입국 시 14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또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중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후베이성 이외 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와 형평성을 고려해 후베이성 이외 지역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0년 02월 03일 월요일 A03면 종합

"中서 오는 외국인은 안 받아" 빗장 거는 지구촌

美, 2주새 中 방문한 外人 입국 불가
日, 후베이성 방문자만 제한적 거부
中 경제의존도 높은 동남아는 난감
캄보디아는 "경제 망쳐" 조치 안해

"중국과 전 세계 사이에 '새로운 벽'이 솟고 있다." 1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 노력을 전한 뉴욕타임스(NYT) 기사의 한 대목이다. 신종 코로나가 온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각국의 내(對)중국 봉쇄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벽'에 비유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다음 여행·교역 제한 반대 입장은 이미 무색해졌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립을 갈수록 심화하는 분위기다.

가장 날카로운 제재 조치인 건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일 오후 5시(미 동부시간 기준)를 기해 최근 2주 사이 중국에 다녀온 모든 국적자의 입국을 사흘 금지했다. 이와 관련, 우선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온 자국민을 최대 잔복기인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기로 했다. 국방장관은 외부 격리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군 시설을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또 2일부터 중국발(發) 항공편을 주요 7개 공항으로 집중시켜 탑승객들의 감염 여부 확인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이날 0시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는 중국에서 출발했거나 경유한 모든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고, 싱가포르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내놓았다. 그 외 파키스탄의 엘살바도르 등 이날까지는 신종 코로나 '청정지역'인 중남미 국가들도 잇따라 입국 금지 조치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중국발 오가는 하늘길도 계속 좁아드는 추세다. 터키나 타지키스탄국은 한한령 또는 노선의 운항을 5월 1일까지 전면 중단했고, 이탈리아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다. 북한 동포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 데 이어 러시아도 모스크바를 제외한 지역에서 입국편 운항과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바뀐 중국 외교도가 눈을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부로 대응으로 중국의 반감을 살 경우 관광산업과 '차이나머니'가 투입된 내수의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대표적 친중(親中) 국가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중국행 비행편을 폐쇄"고 중국 내 우리 국민을 대피시키는 서방보다야의 강제를 칭찬하고 중국의 입장을 이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빈 기자·하노이=정재호 특파원

중앙일보

2020년 02월 04일 화요일 00면 종합

출입국 관리 전문가 "입국차단 조치 열흘 전에 했어야… 너무 늦었다"

"중국 1월 24일 자국민 출국 제재령 한국도 이때부터 입국 막았어야"

전직 출입국 관리 전문가가 정부의 중국 후베이해제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춘운 후베이성을 지난달 21일 이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4일 0시부터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발표했다. 세주 무사증 입국 제도도 잠시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김두곤(58·사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4일 중국 정부가 중국인 해외 단체관광 출국 자제 권고를 했을 때 우리 정부도 입국자 차단 또는 세주 무사증 입국 정지 등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사실상으로 자국민 출국을 막았던 조치였기 때문에 (당시 우리 정부가) 입국 정지 주치를 했다 해도 외교적 마찰이 적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1988년 출입국관리국으로 법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주중 대사관(현재) 총영사관 영사와 법무부 이민정책과장, 법무부 재외출입국외국인

정준을 역임한 뒤 서산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여권에는 출입국한 국가만 명시되고, 해당 국가 내부에서 이동한 경로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여름 들어 중국 내부에서 국내선을 이용해 베이징과 후베이성을 오갔다 하더라도 한국에 출입국 관리 조치는 이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중국 출입국·검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국은 너무나 빈틈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어 만일 중국발 항공기를 갑자기 모두 막는다면 상당수의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요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삼 기자
kim.minseong3@joongang.co.kr

한겨레
2020년 02월 04일 화요일 003면 종합

'발권-입국-입국 뒤' 3단계 걸쳐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걸러낸다

입국금지 조처 어떻게

문 대통령 "국민 안전 위한 조치"
중국여행 전역 '철수권고'는 유보
발표 4시간 만에 정정…혼선 사과

정부는 4일부터 외국인이 출발지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부터 입국 단계, 입국 이후까지 3단계에 걸쳐 중국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총리 주재 회의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머무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울러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묻고, 입국 단계에선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입국 이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확인되면 강제로 퇴거조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후베이성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하는 것과 중국인의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의 대책은 중국 내 질병 확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 여행경보를 지난달 25일부터 '철수 권고'로 상향한 상태인데, 이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여행경보 3단계인 '철수 권고'가 결정되면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해당 국가에서 철수하고 기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주재원, 출장자, 엔지오(NGO), 선교사, 이형자 등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출국과 체류에 큰 영향을 주는 조처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 효과 등을 보고 있다"며 "질병의 전파 양상이나 중국 내 확대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해 전문가 의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인이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비자를 신청하면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주중공관의 비자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고작 2~4시간 만에 이를 "검토한다"며 수위를 낮춰 혼선을 빚은 데 대해 3일 사과했다. 김강립 차관은 "시간적 여유 없이 회의를 한 뒤 발표를 하면서 수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싱하이밍 신임 주한중국대사는 4일 오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황과 한·중 양국 정부의 공조 등을 설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경을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한국에서 중국에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박다해 성연철 기자 dandy@hani.co.kr

07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0년 02월 05일 수요일 A06면 종합

중국發 승객 도착하자 긴장 팽팽 일일이 연락처 확인해 입국 허용

'후베이성' 입국제한 첫날 인천공항 가보니

후베이성 경유 여부 확인 강화
30명 중국인 심사에 45분 걸려
발열등 유증상 입국 거부 없어

"입국하는 데 조금 불편했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협조해야죠."

4일 오전 중국 선전에서 에어부산을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A씨는 한국 정부의 강화된 검역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곳(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입국 게이트에서 내린 승객들은 게이트 인근 검역 장소로 인솔돼 검역당국이 요구한 기본적인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빠짐없이 제출하며 협조했다. 다만 특별검역신고서 작성이 서투르거나 신고서에 작성된 연락처로 바로 연락이 되지 않아 신사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당국이 요구한 특별검역신고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국내 주소, 휴대전화, 14일 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또는 경유 여부, 국내 학교·직장명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검역당국은 외국인 여객이 제출한 서류에 적힌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국내 소재 파악 가능성을 확인한 뒤 '검역확인증'을 발급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바로 받지 않아 이후 절차인 입국심사가 차례로 늦어진 것이다. 이날 오전에 도착한 에어부산 승객 30명은 심사하는 데 45분가량이 소요됐다. 일부 항공기편에서 이같은 불편이 발생했지만 이날 검역확인증을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한 중국인 승객은 없었다.

검이 강화에 따른 승객 불편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러시아 남성 1명이 제1여객터미널 2층 특별검역대에서 연락처 문제로 20분간 실랑이를 벌였지만 중국 전용 입국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환승객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는 "이미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 검역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입국해서인지 검역 강화를 문제 삼은 중국인은 없었고, 발열 등 유증상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도 입국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계자는 "중국 여권에는 출신 지역이 표기되지 않아 입국 금지 대상이란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입국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홍구 기자

東亞日報

2020년 02월 06일 목요일 A12면 사회

"개강 늦춰도 中학생 동선 통제 못해" 대학들 불안

교육부,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
中거쳐 입국 모든 유학생-교직원
14일간 등교 중지-임무 배제
일반대학 온라인 수업 확대 적극
신입생 첫 학기 휴학도 인정 추진

교육부가 개학일이 개강 시기를 4주 이내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는데서 확산을 우려한 것이다.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 동선을 통제할 수 없다"며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중국인 유학생 수 1위였던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은 3일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3단계(불필요한 여행 자제)에서 2단계(여행 중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단계 조치는 일본 정부가 중국 우한 지역에 대해 내린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3단계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2018년 일본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9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유학생(18만 2000여 명)의 54%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달리 한국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 동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 수가 워낙 많아 이들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서울 A대학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가 한국에 가족이 없어 방학 때 중국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중국에 돌아가 있는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B대학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가 한국에 가족이 없어 방학 때 중국에 돌아가 있는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중앙일보

2020년 3월 19일 오전 9:00

중국 못 간 크루즈선 몰리는 부산…'혹시 퍼질라' 전전긍긍

부산=이은지 기자 eseoul@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출발과 기항이 권고된 크루즈선들이 부산항에 몰려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월부터 6척에 이어 총 3척의 크루즈가 무호에 걸쳐 부산항에 기항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 크루즈의 입항은 지난 1·2월 전부터 모두 짜여진 다"며 "최근 부산항에 기항한 3척의 크루즈는 중국 입항이 금지되자 여정 중에 부산항에 기항했다"고 말했다.

세 척 모두 크루즈 승객은 하선하지 않았다. 하수석 해운물류과장은 "지난 6일 부산항에 기항한 크루즈는 승무원이 하선을 원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하선을 막았다"며 "절차를 거쳐 출국한 뒤 부산항을 떠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역 기준을 강화해 머고 있는 크루즈 기항에 나서고 있다. 크루즈가 입항하기 전 승객들의 건강 상태 등명서, 크루즈 역사 스캔서, 중국 경유 여부, 여지 기항지 감염 정보를 확인하고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있는지 파악한다. 중국이나 신종 코로나 발병 지역에서 14일 이내에 출항 또는 경유한 승객이나 승무원 중 한 명이라도 발열에나 인후통 증세가 있으면 검역관은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검역 거부는 최후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 선박은 모두 14척이다.

지난 2일부터 이틀 간격 3척 기항
코로나 확산 우려, 승객 하선 막아
검역 강화하자 한 척은 입항 포기

다음 주 이후 좀 줄어 들어올 예정
방역망 강화해 감염 차단하기로

지난 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부두에 외국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7일 보호 장비를 착용한 관계자들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승선하고 있다. 지난 3일 항구에 들어온 이 배에는 탑승객 3700여 명의 절반 이상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일 승객과 승무원 2천67명을 태우고 홍콩에서 출발했다는 캄보 정부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했다. 다시 홍콩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을 도와달라 없는 유코하마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13일, 17일에도 예정에 없던 크루즈가 한 척씩 부산항을 찾는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에 이어 대만 역시 입국이 금지되면서 부산으로 베트남을 출항한 크루즈"라며 "3척 모두 크루즈 승객이 하선하지는 않을 이점"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7월 중순부터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이다. 2월에 4척, 3월에 8척, 4월 22척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 크루즈 1척마다 평균 1000여명, 많게는 4000여명까지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다. 기항한 항구에 들어가 열 시간 내외 하루 정도 있다 떠나지만, 입항한 승객이 대에서 내리고 대형이 제 부하는 범석이다. 제공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공제는 메회, 공기는 수십 원을 통해 실통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검역사가 승선해 검역 시간에 대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이 감염된 승객이 하선해 부산 시내 전철역과 쇼핑센터 등을 돌아다닐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해수부 해양경제관광과 관계자는 "검역 기준과 방역이 강화되서 입부 선사는 자체적으로 입항을 후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세 크루즈의 입항을 허용해준다 방역을 완벽히 해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0년 02월 10일 월요일
010년 사회

후베이성 14일 이내 방문 외국인 현지서 국내 입국 499명 막았다

발권 단계서 '1단계 차단' 효과적
국내 입국심사 때 거부 인원 없어
중국인 입국 한 달 새 80%나 급감

이도윤 기자 scope@segye.com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기 위해 시행한 '현지 발권 차단' 정책으로 약 500명이 국내 입국이 현지 발권 단계에서 차단됐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 절차'를 거쳐 발열 체크와 후베이성 방문 여부 등을 조사받고 있으나 아직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다"며 "이는 현지 발권 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차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발권 단계에서 차단이 이뤄진 인원은 현재까지 총 499명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자정부터 14일 이내 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도 금지했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도 중단했다.

국내 입국 과정에서 차단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먼저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가 반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심사실에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한다.

법무부는 국내 심사 단계에서 입국 거부된 사람이 없는 것은 '차단 1단계'에 해당하는 현지 발권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중국의 자국민 해외여행 억제조치가 더해지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 수는 5350명에서 8일 3572명으로 33.3% 줄어들었다. 8일 입국자 수는 1월 중에 가장 많은 중국인 입국자가 들어온 지난달 10일(1만8856명)에 비해서는 80% 넘게 줄어들었다.

한국경제

2020년 02월 10일 월요일 A03면 종합

외국인 근로자 '3D분야 산업인력' 줄고, 농·어업은 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제조업에서 등은 분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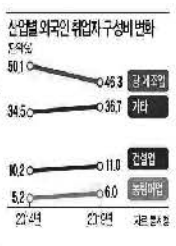
법무부 등계청의 이민자 취업통계 결과 용주사에 내국인 근로자로 종사하는 외국인은 총 39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4.4% 감소했다.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래 제조업 종사 외국인이 줄어든 것은 2017년(8만2000명) 이후 두 번째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자리 업 제조업 등 다른 3D 업종 취업자 감소분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메우고 있다. 제조업 종사 외국인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단순노무만 하는 'E-9' 비자 대신 취업 자유로운 'F-4'로 전환 늘어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 4.2% 감소 농림어업 2.2%·음식숙박 1.3%↑

H2 체류자격은 중국 및 러시아인을 농가에 배치하는 취업비자다. 제조업, 건설업 등 3D 업종 구분하지 않고 종에서 일할 수 있다. 이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E-9 취업자는 전년보다 11.2% 감소했다.

H2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농촌 노동력 구조 변화 때문이다. 농림어업 취업자격 취득 요건이 완화됐지만 H2 비자 자체는 점차 줄고 있다. 지난 H의 해당하는 단순노무업종 취업은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신규 F-4 보유자 중 65.3%가 조직 주는 직업 H2 사유로 국내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제4차 동계획을 거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내 동포를 대상으로 이 자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 및 H-2 비자)는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전년보다 1.3% 늘어나 3만800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 H-2 비자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증가하면서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도 증가했다"며 "농림어업의 경우 '5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사업소득 종사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과 달리 건설업(-15.7%), 제조업 운수·통신·금융업(-0.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5%) 등에서 외국인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규 기자 [illegible]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경제
2020/02/10 월 요일
A03면 종합

와국인 근로자 관련법은

고용허가제 2004년 도입
뿌리산업 일손 뒷받침

한때 실업난 해소한다며
쿼터 줄인 탓에 인력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용자가 선정해온 정부가 외국인을 수입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1993년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 파견허리 등이 사회 문제도 대두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 인력은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다. 원칙적으로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재고용 시 1년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요건법 사회지 임금제도를 적용받는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2002년 79.8%에 이르던 외국인 불법체류율은 고용허가제 도입 후 20% 이하로 떨어졌다. 외국 인력 점유 도입대입(한국산업인력공단도 2002년 3509달러에서 2005년 941달러까지 올랐다.

제도 도입 첫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6개국 출신 외국 인력 4만 1000명이 국내에 배정됐다. 이후 피견국을 15개국으로 확대해 2006~2007년에는 매년 10만여 명을 배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2008년 13만2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 외국 인력 쿼터는 전년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가 내국인 실업난 해소를 목표로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한 것이다. 방문취업(H-2)에 대한 규제와 취업등록제도를 시행해 건설현장의 외국 인력 배정을 일부 제한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후속 조치였지만 정작 외국인이 있는 자리에 취업하려는 내국인은 거의 없어 중소기업 인력난만 심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2012년에는 신규 인력 배정 방식을 기존 선착순 배정에서 점수제로 전환했다. 성실근로자 체류국 취업 특례제도도 시행했다.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숙련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는 취지에서다. 2014년부터는 매년 5만여 명의 외국인이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 배정되며 중기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피오스기 첫 번째 근로자를 보내면서 파견국은 총 16개국으로 늘었다.

민경진 기자 mk@hankyung.com

한국일보
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A15면 사회

중국인 뱃길 입국 '올스톱'

카페리 업체 14곳 운송 중단에
한달새 3088명서 3명으로 '뚝'
전체 입국 중국인, 3분의 1로 줄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최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때도 여객 운송이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최용석 한중카페리협회 사무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전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특히 뱃길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수도 급감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수(인별 집계)는 지난달 1일 1만4,987명에서 이달 9일 4,884명으로 크게 줄었다. 공항은 같은 기간 1만 1,899명에서 4,581명으로 감소했다. 항만은 3,088명에서 3명으로 급감했다. 항만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은 이달 들어 4일(4명), 5일(3명), 7일(3명) 달 비롯해 나흘이나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중카페리협회와 인천, 평택, 군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16개 노선을 운영 중인 14개 선사는 설서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여객 운송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다만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정부도 지난달 22일을 전후해 단체 여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국 옌윈강(連雲港) 항로 카페리 선사인 연유환훼리 관계자는 "중국 지방정부가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여객 운송 자제를 각 선사에 권고하거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호전되면 운송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입항을 금한 중국인 입국도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중국의 설) 기간(지난달 24~30일) 이전 하루 14건~17건씩을 유지하다가 점점 줄어 이달 8일에는 3,950명까지 줄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과 외국인 수도 국내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25살 중국인 여성)가 입국한 지난달 19일 각각 1만3,548명과 1만6,239명에서 이달 9일 1,504명과 4,873명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부터 주요 공항과 항만이 중국 전용 입국장을 설치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의 체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날 홍콩, 일본 등을 오가는 크루즈선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최 차무국장은 "신종 코로나는 사스, 메르스에 비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서 자국적으로 여객운송 중단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현지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소수의 중국인은 러시아, 일본에서 체류하다 부산항으로 들어온 경우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00면 사회

대학가 무대책 개강 연기… 수업 결손 우려 학생만 '발동동'

신종 코로나 비상- 학사일정 차질 불가피

외대부산 수업기간 2주 줄어
학생들 무의미도 '미정' 답변만
세종시 개학식 일주일 연기
지방정부 학생 배려 부족
'개강 대학 개강 연기' 더 늘 듯
교육부, 대응방안 마련조치 지원

한국경제

2020년 02월 11일 화요일 A3면 종합

통신사는 알고 있다… 우한 폐렴 확진자 어디 갔는지

뉴스카페

환자 기억 의존하면 정보 왜곡
통신사, 위치정보 정부에 제공
해외 폰 쓰는 외국인 파악 안돼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경제

2020년 02월 12일 수요일 A04면 종합

"중국인 고용 꺼리니…" 건설현장·간병·돌봄시장 '구인난' 쇼크

신종 코로나 '가장 열악한' 인력시장부터 덮쳤다

건설업용지 80% 중국동포·중국인 - 인력 메지자 현장 스톱
"하루새 공사현장 3곳서 중국인 인력사올 중단 돌보해와"
고향 다니왔다 여긴 확인하며 시름 말아…대체인력 못 구해
환자·노인·어린이 돌봄 '아우성'…인력 중개업부 60% 급감

"우자오지직 기자드옥여요?"

1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직업소개소. 위기리가 있느냐는 한 중국 동포의 공대에 직원들이 깜짝 놀라곤 우물쭈물 대답했다. 봉산별 중국 이주동 내가주자 직업은 시간을 한정시 넘지기다 출입국 업무를 주관했다. 직원은 "지난해 중이주 중국을 다녀왔느냐를 물어봤다"며 "정확히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이라 중국을 다녀온 사람은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감염 우려에 중국인과 중국 동포들을 쓰지 않으려는 업종 및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국내에체하는 중국인및 중국 동포들이 10개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빠질 경우 건설, 간병, 식당 등 5개 업종에서 인력난이 심화될 전망이다.

◆건설 공사 속도에 직격탄

중국 출신 근로자들의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건설 현장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청도 '생산가능인구'의 약 절반 정도인 건설업종 종사자 수 38만 명에 비해서 중국 출신 종사자만 놓고 보면 건설업종 종사자 수 19만 명에 달한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집계에는 6만5천 명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일하고 있다"며 "실제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건설현장이 중국 출신 근로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피 업종의 인력 중개업체 관계자는 "일당 최저 8만 원의 공사현장 세 곳에서 기존에 있던 중국인력을 자를 때 한국인들을 보내줄 수는 없다"며 "한국인들은 일을 덜 하고 요구 조건이 많아 관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봉천동의 A건설업체 현장 인력 중개업체 관계자는 "일이야 중국 출신은 더 이상 소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주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으면 모를까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설 연휴 이후 중국 동포 사회에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출신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동북3동도 비상

중국 출신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간병과 노인서비스 등의 분야도 비상이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요양원은 중국인 종사자 비중이 30~40% 정도로 높은데 중국인 또는 중국 동포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이 요양원 관계자는 "중국인 간병인 공급으로 소개하는 업체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로 중국인이 아닌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을 대체 인력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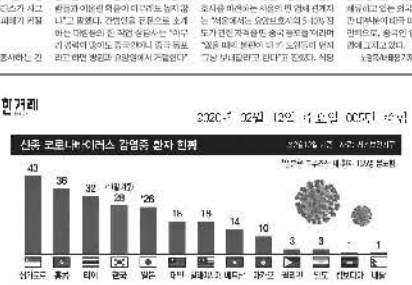
서울 동북3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중국 동포 아주머니 대상 아이돌보미 교육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올해 교육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출신 간병 수요가 크게 줄어서 공공 부문 위탁기관에서 업무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한국인들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어린 자녀가 있는 한 중국인 주부는 "영유동포아주머니 대상 아이돌보미 등 한국인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크게 늘었다. 도움이 절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줄었다는 얘기다.

다만 제주인은 중국 출신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적어 상대적 타격이 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반 이상인 서울 명동 등과 비교하면 타격이 덜하다는 얘기다.

노경목 기자 kmr@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동포 노동자의 구직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 구로동 직업소개소 주변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구인 광고가 붙어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한경제

2020.2 02월 12일 수요일 00면 1단 제목

정부, 홍콩·마카오 입국자 검역 강화

'지역사회 감염' 6개국 여행자제 권고

정세균 총리 "필요 때까지" 대응 나서 (부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본토 외에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입국자 검역 단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싱가포르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등 6개국에 대해 여행과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홍콩 본부 외 홍콩과 마카오의 대해서는 12일 0시를 기해 오염사이으로 지정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콩은 현재 감염자가 1명 추가돼 10일 밤부터 총 26명이 됐다. 이 중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은 8명이다. 마카오(10명)는 중국 광둥성 인접 지역으로 이 지역도 상주한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검역 강화 지역에 포함됐다. 정다운 상황 추이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서 중국 본토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들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정지서 차관은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지정시설 격리와 개별적으로 체온 감시를 하고 기침 상태 등을 점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출신 여성 수요가 많은 돌봄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에서 입국 거부 등 한국인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 차관은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고 대칭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인은 중국 출신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적어 상대적 타격이 덜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반 이상인 서울 명동 등과 비교하면 타격이 덜하다는 얘기다.

노경목 기자 kmr@hankyung.com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0년 02월 13일 목요일 001면 종합

"유커 급감 땐 韓관광수입 20억弗 감소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중국인 입국자, '사드'때보다 줄어
"사태장기화 땐 성장률 둔화 우려"

이도영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을 찾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급감한 경우 한국의 관광 수입이 20억달러(2조4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광산업 일자리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국인 입국자는 지속해서 감소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당시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 내 주요 업무 단축과 수출 및 내수 둔화, 관광 위축 등의 경로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해외관광 위축에 따른 효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KIEP에 따르면 한국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유커가 차지하는 비중은 39%(2019년 11월 기준)에 달한다. 1인당 지출 경비 역시 평균 1887달러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인 1342달러의 1.4배 수준이다.

KIEP는 한국을 방문하는 유커가 한 해 100만명 감소할 경우 한국의 관광 수입은 약 2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한국을 방문한 유커 약 351만4000명을 기준으로 관광객의 약 28%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

'유커 급감'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하루 중국인 전체 입국자가 331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로 중국인 입국자가 가장 적었던 2017년 4월3일의 535명보다 약 36% 적은 수치다. 지난 1~11일 전체 중국인 입국자는 6만53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3643명보다 62%나 급감했다.

朝鮮日報

2020년 02월 13일 목요일 A02면 종합

중국산 필터 동났다, 국내 마스크 공장 멈추기 시작

생산업체 70%가 중국산 의존하는데 필터 재고량은 지난 1주일 새 절반 줄어
**업계 "물량 위기"… 정부가 장담한 하루 1000만개 온데간데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약국 앞에 "마스크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중국산 부품 수입이 막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다빈 기자

마스크 대란 수급 점검해보니

서울 종로구에 사는 주부 A(32)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마스크 5장을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섰다. 하지만 A씨는 "마스크 재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는 "아이가 감기에 걸려 마스크가 필요한데 구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통해 "하루 1000만개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중국산 필터 수입이 막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필터 재고가 1주일 새 절반 이하로 줄어 물량 위기가 닥쳤다"는 말이 나온다.

◇MB(Melt Blown) 필터

물티슈 등 일반 부직포와 달리 마스크는 극세사 수준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공기는 통과하되 바이러스는 걸러내야 한다. 이 때문에 MB 필터는 마스크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MB 필터는 '마스크의 심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춘절(중국 설) 휴무로 인해 지난달 말부터 MB 필터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말했다.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는 130여 개. 정부가 공급 확대 대책으로 내놓은 하루 1000만개 이상 생산 업체 대부분은 MB 필터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필터 재고가 1주일 새 절반 이하로 줄어 물량 위기가 닥쳤다"는 말이 나온다.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130여 개 가운데 70%가 중국산 필터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필터 재고가 1주일 새 절반 이하로 줄어 물량 위기가 닥쳤다"는 말이 나온다.

나 그나마 공급되던 나머지 30%도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중국 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필터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한 'TF'를 통해 "하루 1000만개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중국산 필터 수입이 막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필터 재고가 1주일 새 절반 이하로 줄어 물량 위기가 닥쳤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출범한 'TF'를 통해 "하루 1000만개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중국산 필터 수입이 막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필터 재고가 1주일 새 절반 이하로 줄어 물량 위기가 닥쳤다"는 말이 나온다.

朝鮮日報

2020년 02월 13일 목요일 A10면 종합

퇴원한 3번 확진자 "사흘 정도 앓아… 센 독감 느낌"

"일반 폐렴 앓았을 때, 10번 너 고등 확진자 6·10·11·25번에 옮기자 수퍼 전과자란 비난에 마음고생 병속까지 최종하게 생각해요"

2명도 어제 퇴원… 모두 7명 남해

"(우한 쿠르니 감염증은) '나냐 '센 독감'이에요. 무서운 병 아닙니다."

우한 코로나 집중중 국내 첫번째 확진자(24·한국인 남성)가 격리 지로 17일 만인 12일 퇴원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이번 우한 코로나를 "엄한 독감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음압병실에서 본 원이면서 "안녕히 사요. 3번 확진자입니다. 제가 같습씨가 너무 많이서 최송스럽지만 감사의 마음을 로 남겨둡니다"로 시작하는 A4 용지 두 장 분량의 편지를 이료진에게 남겼다. 이날 3번과 17번 확진자도 퇴원했다. 국내 28번은 확진자 가운데 처음 온자는 이날까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2년 전 같은 폐렴이 10배 힘들었다"

그는 "처음은 그저 피곤해서 그 목이 사흘 정도 열이 37도가 넘었다"며 "2018년 10월 중국에서 폐렴에 걸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침, 가래가 심해 삼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다. "이번엔 그때에 비해면 기침이 1/10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 한듯없던 건 몸로다 두통이었다"고도 했다. 이번 우한 코로나 전파지인 중국 우한에서 체류했을 하는 그는 지난달 입국 이후 서울 중남구와 고양시 일대를 돌아다니는 동선에서 모두 4명의 2·3차 감염자가 나와 '수퍼 감염자'라는 달이 나왔다.

◇"진짜 힘들었던 건 몸보다 마음"

그가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 '한은관'에서 같이밥을 먹은 두 명중 한 명이 두 내 첫 3차 감염자이 4번 확진자였다. 6번 확진자는 아내(10번 확진자)와 아들(11번 확진자)에게 옮겨 첫 3차 감염도 나왔다. 우한 국제페렌센터 스상 중의 중국인 여성(30)은 검진 확진자가 됐다. "나는 지난달 22일쯤 허도 몸이 약간 으슬으슬해 감기약을 사 먹은 3일 째쯤 부터 열한 증상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방문 증가도 몸에다는 사람으로 오해받아 미울하다"고 했다. 간호사 앨에서 점점 은 적도 있다고 한다. "하입과에서 바나 친구와 그의 부인, 아들도 장차분은 걱정"이라고도 했다.

◇선문가들 "바이러스의 시해지심문"

전세기를 타고 충남 아산 등 임시생활시설에 있는 우한 교민들이 "생님이 잘 두통 제 아니에요" "덕급 낫지 가서요"라고 크윈해주는 지 마음이 어와이라고 했다. 방역본부 의료전은 정신과으로 뭡 들려라는 3년 확진자를 치료 적된 생원 에 화상으로 원격 음악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본지기입수한 그의 편지에 "(격료 진계) 끼부 배속까지 노쓰던 최송스러움과 감사의 마음은 끝다 줌이 한 당의 글또는 부족하다"며 "출직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까기까…"고 했다. 김부주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퇴 해서 걱정 것도 아니고 어도로으로 폐로 인코비19자가아닌 바이러스의 피해다운"이라고 했다.

시난달 신기보드를 나너본 1년 확산 자(3) 한국인 남성(도 에상 오류 명시를 일게서 목원했다. "는 지난 5일 화공 다 후일주일 만에 보일에 경미으 보일 환자 가운데 가장 입원 기간이 짧았다. 그도 이날 퇴원하면서 "그당 우한녹간 느낌"이라고 했다. 우한을 다녀올 전부 군산 대중목욕탕 등을 방공한 8번 확진자(62·한국인 여성)도 이날 양치 판정을 받고 먼원대생원을 나왔다.

정석무 허망우 기자
제재우 디한기자(서울대경의과학 석사)

12일 오전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음기 가전에 있는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한 아기가 한국에서 올해 기 마스크를 쓰고 잠 자들도 있다. 정부는 이날 전국 연 단수기로 총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대거발생, 서울 도봉장병원로 대거발생, 교민 가족과 이들의 접촉자로 구성 가족 가족 약이었다.

3차 전세기로 입국한 147명 중 5명이 의심 증상

중국 국적 가족 57명도 숫어와 이체 국방어학원서 2주간 격리

정부가 중국 우한에 보낸 3차 전세기로 12일 국내에 들어온 교민과 중국인 가족 147명중 5명이 발열 등 우한 코로나(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비행기 탑승 직전(1명이 증상)을 보였고 김포공항에서 실시한 검역에서 4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방송 의진 우한본 우증상자는 1명씩에서 다는 교민이나 가족들과 격리돼 살아도 입국했다. 정부는 이들을 감염 국민 중인이탈을으로 제외해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음증상자 중 열한 살, 15개월 자녀가 있는 2명의 아이 엄마는 자녀와 함께 국방부와의 등록으로 격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아이들은 아직 증상이 없지만 양가에 미칠 파로하는 경이 체질에 지 않아 함께 보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격정의 조치 하겠다"고 했다.

이날 3차 전세기로 국내에 들어온 교민과 가족은 총 147명이다. 교민 79명과 이들의 동국적 가족이 67명, 기타 외국적 가족 1명이다. 감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차이 교질 증상자 정불구대서 성수포에도 가급적 신소 근린을 해다 하로주고 싶다"고 "공 원해할 보 감지한 에에 주거하고 있다"고 했다. 김 반역장은 "확진자 중 고조호조기를 달기니 증환자 일 치료를 받도의 중환 편자는 없었다"고 했다. 시은수종을도 기자, 최형국 기자

WHO 공식 명칭은 '고비드-19'… 정부는 '코로나 19'로 부르기로

국제바이러스종는 '사스-CoV-2'

세계보건기구(WHO 가 12일 중국 우한에서 유행하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식 명칭을 '코비드-19(COVID-19)'로 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CO' rona Vi' rus 'D isease)의 앞글자를 딴 것. 발표 연구인 101차년을 맞아는 의미를 넣었다.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는 이날 이 바이러스 이름을 'SARS-CoV-2'라고 정했다. 사스(급 성호흡기 증후군 SARS)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의 동생뻘이라는 뜻이다. 우 바이러스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Co-V의 일종이다.

2012년 처음 발견된 2015년 국내에서 크유행적 적습을 보이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비코스)과 달리 일본 발원지? 포함해 없지 않다. WHO가 20.3년 감염병 이름에 사람의 위치 명칭, 개우이나 집단을 지조하는 뜻처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부호 지표, 계획 등에 대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많도를 해려는 것이다.

정부는 WHO가 등가 국 3개명을 발표로 '코비드 19' 라고 구도기로 했다. 중간합 노권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WHO가 당분을이어 대응 고비드-19이 간 편이기 때문에 정부 사분에서 만든 표현을 널도로 정했다"고 말했.

남시로 기자

중앙일보

2020년 02월 14일 금요일 018면 종합

출입국사실증명·지방세납세증명 …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발급

전자증명서 대상 13종으로 늘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이 눈어난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이 조르 당정부에 업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발했지만 14일부터는 발급대상이 13종으로 밀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사용 대상 증명서를 확대하는 고 13일 보했다. 스 이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경제증명서 ▶출업국사실증명 ▶국적취득증명서(혈통·귀화용)▶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사격확인서 ▶납세사실증명 ▶납세세목별세액증명 ▶인측불계정동등 조르 ▶사동차등록원부(말소등(초보) ▶운전경력증명서 ▶여장업종증명 등이다.

행정부는 "목히 주민격작보원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은행 대출 등에 쓰이는 격작보원자격득실 확인서가 포함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경부 24앱을 먼저 내려받아야 한다. 앱을 설치한 후 전사문서 사업을 본저하고, 공 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정하면 된다. 이하는 증명서 발급을 신 청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받을 수 있다.

이렇기 받은 전자증명서는 개인끼리 주고받아니, 공공기관이 서출할 수도 있다. 전자 생적증명서를 내려받아 복 하신청이나 공업내 경력 확인에 쓸 수 있고, 예외출장 증명에 전사 출입국사실증명을 낼 수 있다.

행정부는 연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0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자경 행정안전부 장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사증명서를 집 한으로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업에 힘쓸도록 더욱 늘어겠다"고 말했.

심경에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0년 02월 17일 월요일 A01면 종합

'공포의 日크루즈' 내 한국인 국내 이송 추진

정부, 코로나 추가 대책 발표

"탑승자 14명 중 귀국 희망자 이송할 것"

원인불명 폐렴 입원 환자엔 코로나 검사

中 유학생 입국 어려울 땐 원격수업 활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을 추진한다. 폰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방문 사실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바이 중대본부장 주재의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9일 이전이라도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한국인 승객 중 귀국 의사를 밝힌 경우 모두 국내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크루즈에는 한국인 3명(승무원 2명·승객 1명)이 타고 있다. 승객 1명 중 한국에 주소를 둔 내국인은 1명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첫 번 정도면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 보다 정확한 의사 확인하기 위해 기속 여러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크루즈 탑승객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진행,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일본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역학에서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거나 특별검역조치를 실시할 수 있지만 정부는 상황을 다지거부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추가 방역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29번째 환자(82세 남성)가 해외여행력이나 확진자와의 접촉 없이 감염된 점을 감안, 원인 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일 중수본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중증호흡기감시체계(SARI)와 지정특급 감염 감시체계에 신종 코로나 검사를 추가해 지역사회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에선 입국이 예상되는 중국 유학생과 관련, 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체학습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입국 후 등교 중지 기간(14일)에는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취학사람증명서로 바꾸어 기존에는 사용하고 있던 유학기간 연장만 받아 8만개를 비롯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 검사의 방법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거나 수익 감소이 중업종인 사업상에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부 보상하기로 했다. 세종=변태섭 기자·송목진 기자

매일경제

2020년 02월 17일 월요일 A01면 종합

정부, 중국인 유학생에 휴학 권고

교육부 "입국했다면 자체격리"

29번째 확진자 감염경로 불분명

폐렴환자 대상 코로나 조사

정부가 한국 입국이 어려운 일부 중국 유학생에게 휴학을 권고한다.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은 기숙사나 원룸 등 공간에서 자체 격리하야 하며 등교 중지 기간에 대학 내 식당,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 유학생 중 입국 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2020년 1학기 휴학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6면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이 2주간의 등교 중지 기간에 기숙시이 입소한 경우에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유 부총리는 "14일 등교 중지 기간에는 기숙사 혹은 자신의 거처에서 주로 머물러야 하고 학교,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하지 않도록 학생 카드 사용 제한 조치 등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해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총 1만 9742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중국 국적이 1만9022명이다.

한편 코로나19의 29번째 확진환자가 16일 발생했다. 이 환자는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자도 아니어서 감염원이 불분명한 상태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인 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승선한 한국인 가운데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슬기·신혜림 기자

한국경제

2020년 02월 18일 화요일 A2면 사회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 … "다문화 사회 진입"

〈작년말 기준〉

2018년보다 6.6% 증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문제인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0만 명에 육박했다.

◆올해 다문화 사회 진입

1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했다. 통상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한다. 외국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436명으로 비중(43.6%)이 가장 컸다. 이어 베트남 22만4033명(8.9%), 태국 20만9498명(8.3%), 미국 15만5682명(6.2%), 일본 8만6004명(3.4%)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몽골 출신이 늘어났다.

전체 인구의 4.9% 차지
중국인 비중 44%로 최대
베트남·태국·미국인 뒤이어
취업 독적 20~30대 많아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에
불법체류자도 40만명 육박

서아 윤신이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유형 중에선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숫자가 매우 많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 결과 지난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만7261명이었다. 단순기능직이 51.8%, 전문인력은 8.3%였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6만8025명을 기록했다. 이 중 82.8%가 여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7131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연령대로 따지면 30~39세(35.9%)와 20대(35.2%)가 전체 체류 외국인의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증가 흐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젊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국내 외국인은 2007년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새 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소 중소기업 업기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다이 들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구한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 '농공 스지' 디스브 사건과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 내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며 "외로에 대한 공감은 부족한 상황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 전년 대비 10% ↑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8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다. 문제인 정부 들어 불법체류자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다 숙인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3만 5000여 명이 추가했다. 박근혜 정부 때 불법체류자가 25만 명 늘어 나는 데 그치고, 이명박 정부 때 불법체류자가 9만 명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것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불법체류자를 대거 끌러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체류자 상당수는 단기간 머무를 목적이 입국한 뒤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그대로 눌러앉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016년 13만여 명이었지 작년에 29만여 명으로 3년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

이인혁 기자 lopend@hankyung.com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0년 02월 18일 화요일 A13면 사회

무비자 입국 중단 13일 만에 제주~중국 하늘길 끊겼다

지난 15일 中관광객 19명 입국
홍콩 노선도 조만간 중단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중단된 지 13일 만에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끊겼다. 제주~중국 간 직항 항공기 노선이 전면 중단된 것은 제주 기점 중국 노선이 개설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운항는 전날 오후 1시50분 제주에서 출발한 상하이행 중국 동방항공 MU5003편을 끝으로, 17일부터 제주~중국 간 직항 항공편 18개 노선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일 자정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 정지한 이후 중국인 탑승객이 급감해지, 제주~중국 지점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줄줄이 운항 불중단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665명으로 1일 평균 100명이 조금 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283명(1일 평균 2,637명)에 비교해 95.3%나 감소한 것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인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매일 2,000~4,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지만, 지난달 말부터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1,573명까지 감소했고, 지난 1일에는 870명에 그치면서 1,000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 4일부터 무사증 입국이 일시 중단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은 100명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15일에는 고작 19명만 제주를 찾았다.

제주 기점 해외 직항 항공노선은 중국 18개 노선, 일본 대만 각각 2개 노선, 홍콩·말레이시아·마카오 각각 1개 노선 등 모두 25개 노선이다. 이 중 중국 노선은 전면 중단됐고, 홍콩 노선도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운항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사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상황도 쉽게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중국 간 직항 항공기 운항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김영희 기자

한국경제

2020년 02월 19일 수요일 A05면 종합

의협 "지역사회 방역 실패…中 전역 입국 제한해야"

민관협의체 즉각 구성해
중소병원 목소리 반영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홍문종 기자 mrsan@hankyung.com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관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에서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중국 전역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홍지 등 남의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만으로는 늘어난 검사 대응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국면에서 최전선의 틀 사회(초·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민관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의협 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1차 감염관리지침이는 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있으면 1주 의료기관에서 다른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돼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현장의 현실을 잘 모르고 대응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1차적인 방역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예방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철저 못 넘 지나친 대응이었다고 반성도 지금 너무 쉽게 낙관하거나 방심했다가 나중에 많은 지미 수습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이 중국에서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표했지만 보건당국은 섣불리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에서 하루 4000명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이 중 1500명은 우리 국민"이라며 "입국 제한 조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yeo@hankyung.com

국민일보
2020년 02월 20일 목요일 026면 오피니언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정책 재설계해야

여의도포럼

박영범
한성대 교수
경제학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동포 많이 고용하는 현장에서 인력 확보 어려워져

급속한 고령화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 더 심화될 것

비전문취업, 동포취업으로 나눠 관리하는 시스템 바꿔야

세계보건기구(WHO)가 'COVID-19', 정부가 '코로나19'로 명명한 우한 발 폐렴의 경제적 여파는 무선적으로 식당, 오프라인 매장, 관광산업의 매출 감소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말 법무부 등록 체류 외국인은 128만8000명인데,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사증 소지자는 각각 27만7000명, 23만6000명이었다. 이 중 40% 정도가 주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하는 중국동포이다.

직장 이동이 자유로운 방문취업자로 들어오는 중국동포들은 취업을 위해 2박3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의 간접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 내 취업교육을 중단했다. 2006년부터 시작한 교육이 중단된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동포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건설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설 연휴 중 중국을 다녀온 이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고 조회도 중단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 동포인력으로 일부 대체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올해 신설한 5개월 체류 가능 E-8 계절근로자 제도도 착초부터 위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 통보만 하고 실제 운영 여부는 사태 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농촌에서 일손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3월 전에 정부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들을 볼 볼보느라 고생이 많으시다. 감염 위험 때문에 넓은 유아원이 임시휴업을 한데다가 중국동포 가사도우미들을 엄마들은 기피하나 한국인 도우미를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국동포를 많이 쓰고 있는 건설현장,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식당 등에서는 인력의 확보이 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중국동포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5년 기한의 H-2 입국사증을 받은 동포 외국인력은 사전에 국내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없이 입국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비자를 다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동포 외국인을 제외한 베트남 등 16개국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E-9 고용허가제 입국사증은 3년 기한이다. E-9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이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고 입국하기 전에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E-9 비전문취업사는 서비스업종에 취업할 수 없고 입국 이후 사업장 변경은 제한적인 사유로 최대 세 번까지 가능하다.

인권단체, 외국인노동자 단체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노예계약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동포와 같은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도입되는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해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동포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9 비전문취업자는 현재 상설, 특별 사례도를 통해 최장 10년 가까이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비전문취업 입국사증 소지자가 저숙련 근로자인지 의문이다. 수년간 체류하면서 일을 한 근로자와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비전문취업자에게는 호봉제도,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전문취업, 동포취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의 변화 하루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모집단계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모집업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E-9 고용허가제와 영우 고용주가 원하는 근로자를 선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외국 인력의 국가 수를 16개국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따뜻한 나라의 근로자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종종 국내 고용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용주들도 불만이어서 갈등이 일어난다. 3개월 기한의 단기취업(C-4) 비자를 활용하는 농촌계절근로자 제도는 짜깁기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인구, 고용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외국인력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07 주요 언론보도

東亞日報

2020년 02월 21일 금요일 A03면 종합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

"지역전파" 정부, 경계서 격상 검토
질본 "봉쇄→피해최소화 전략 선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매우 강화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사회 전파는 위기경보 최고 수준(4단계)인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인정했다.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8단계인 '경계' 단계에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또 모든 부처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군 시설 휴가 금지, 휴교, 행사 기능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건 2009년 11월 신종플루 유행 당시가 유일하다. 당시 전국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대거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군 장병 휴가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 역시 방역대책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감염원 차단을 최우선 전략으로 취했다. 이른바 '봉쇄 전략'이다. 하지만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지면서 보건당국은 중증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방침이다.

송혜미 tam@donga.com · 강등음 기자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대응 (자료: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상황	주요 대응
관심	해외에서 발생·유입	▪ 중앙과 지역에 방역대책반 운영
주의	국내 유입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24시간 감염병 유행 감시 ▪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상 준비 가능
경계 (현 단계)	제한적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전국에서 방역요원 24시간 활동 ▪ 국가 비축물자 수급체계 강화
심각 (검토)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가능 ▪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

경향신문
2020년 02월 22일 토요일
008면 종합

가정폭력·성폭력 전과자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규칙 개정
벌금형 이상 집행 뒤 10년 제한

베트남 부인 폭행 영상 공개 후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후속 조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21일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증 발급 기준 강화 등을 담았다.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외국인 초청 자체를 제한받는다.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이 금지된다. 제한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10년이다.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시점에서 5년간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다.

법무부는 부부 사이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닌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과자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부간 단순한 충돌로 발생한 폭력 전과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사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법령 개정안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제도 변경을 알지 못한 채 국제결혼을 준비한 사람들을 고려해 법령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성이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부인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전과자에겐 결혼사증 발급 제한을 이미 내규 지침으로 시행 중"이라며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해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장치를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일보

2020년 02월 24일 월요일 A06면 종합

정부, 이스라엘에 유감 밝혔지만… 한국인 입·출국 제한 막을 방법 없다

美, 한국 여행 주의 단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 금지' 혹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23일 국가위기관리본부 회의 결과에 '심각'으로 올린 만큼, 대응할 명분이 더욱 확보했다. 외교부는 국내 확산 정서가 높아지기 전부터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23일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이스라엘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스라엘은 대한항공 KE36편으로 도착한 성남 소재 웹젠 임직원 등 한국인 130명을 일방적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입국금지 및 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국가 현황

입국금지 국가

아스타나, 테헤란, 키레네시, 시므아, 시므아(구국명), 요르단

자가격리 및 입국절차 강화 국가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브라질,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23일 현재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브레멘, 키레바시, 시므아, 요르단 등 6개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 한국 경유 입국자 격리 조치 등을 시행 중인 나라는 영국, 브루나이, 브라질, 오만 등 8개국이다. 한국 출입국 제한은 없으므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이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를 1단계(사전 주의)에서 2단계(강화된 주의)로 격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조치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한국의 상황을 종합하게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일부 지역(대구·경북)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입·출국 조치를 외교적으로 하지 위한 시점의 현실적 방안은 없다. 국내 격리 규모가 중국에 이어 2위로 치솟은 상황에서 "한국인을 막지 말라"고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가 한국인 입국 금지, 여행 경보 격상 등 조치를 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할 순 없다"며 "국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잘 관리해 선제를 잃는 지 면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朝鮮日報

2020년 02월 24일 월요일 A16면 국제

이란 사망 8명, 이탈리아선 132명 확진… 코로나 글로벌 확산

이란 주변국, 국경폐쇄·여행금지
이탈리아, 이틀새 감염자 8배로

이탈리아와 이란에서도 하루 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크게 늘었다.

이탈리아에선 23일(현지 시각) 기준으로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1일까지만 해도 감염자가 18명에 불과했는데 이틀 사이에 8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이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 우한 코로나 감염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다.

총 900여 명의 격진자가 나온 북부 롬바르디아주(州)에 거주하는 38세 남성이 전염원으로 지목됐는데, 중국 여행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상황한 감염 경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200여 명의 격진자가 나온 베네토주의 두카 자이아 주지사는 "의심 브로커와 접촉이 있어 없었음에도 양성 판정이 나온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뤼 허가 없이는 위험 지역 출입이 제한되며 해당 지역의 학교와 직장들도 폐쇄된다"고 발표했다. 롬바르디아주 내 10개 마을은 불필요한 활동을 제한하는 정부 지시를 받고 시설상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북부 최대 도시인 밀라노는 학교와 문을 모두 닫았고, 가톨릭 축제로 성 일리진 베네치아 카니발은 일정을 이틀 앞당겨 종료했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던 이란은 23일 사망자가 총 8명으로 늘었고, 확진자 수도 43명이 됐다. 우한 코로나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 지난 19일 첫 사망자가 나왔고 당시 집계에 '데이터스의 죄원'으로 여겨지는 이란 북동부 도시 콤과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14개 지역의 학교 등이 폐쇄됐다고 알자지라 등이 전했다. 이란 보건 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첫 사망자가 중국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란의 현자 수가 급격히 늘자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라크는 20일 이란인의 국경 출입을 금지했고, 쿠웨이트 항공사는 20일부터 모든 이란행 항공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의 이란 여행을 금지했다고 요일 발표했다.

이순항 기자

22일(현지 시각)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이날 보건부는 23일 현재 이란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총 43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외국인이서 가장 많은 사례가 수다.

한겨레

2020년 02월 25일 화요일 009면 종합

전국 교정시설·소년원 접견 잠정 제한

법무부, 코로나19 '심각' 단계 대응
외국인 체류기간 4월말까지 연장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법무부가 24일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자 접견과 소년원의 면회 등을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약 13만6천명에 대한 국내 체류도 일괄 연장해 민원인 이동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처다.

이날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이날부터 잠정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했는데, 정부의 대응 단계가 격상되며 전국으로 이 조처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하되, 유관기관에 변호인·공무상 접견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부터 소년원의 면회도 전면 중지된다.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면회는 모두 화상으로 대체된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 13만6천명의 체류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비전문·선원취업 체류 자격 외국인은 이 조처에서 제외된다. 박춘용 기자 junchyong@hani.co.kr

朝鮮日報

2020년 02월 26일 수요일 A 01면 종합

中, 한국인 입국 통제… 美는 한국 여행경보 최고등급 격상

(3단계·중국과 동급)

프랑스도 한국여행 자제 권고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 확진
국내 확진자 1000명 육박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4일(현지 시각)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경고)로 격상했다.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의미의 3단계 여행 경보를 미국이 발령한 나라는 중국을 빼면 한국이 처음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현상시 주준인 1단계였던 한국 여행 경보 수준을 한 단계 높은 2단계로 격상했다. 일본 외무성도 25일 대구·경북 청도군에 대해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 50분 웨이하이 다수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한 저주왕공(7C8501편) 탑승객 전원을 근처 호텔에 격리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에서 도착한 항공편 승객 전원을 강제 격리한 것은 처음이다. 라오닝성 선양시와 지린성 연지시도 한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승객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호텔이나 시택으로 이동시켜 14일간 격리시켰다. 산둥성 칭다오시 역시 해외 입국자 전원을 격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내 확진자는 하루 새 144명 늘어 977명이 됐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부산 온천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데 이어 서울 명성교회에서도 부목사 등 2명의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명성교회 등에 따르면, 해당 부목사는 지난 14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15~21일 사이 모두 8차례 명성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중국인 밀집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금천구에서 첫 확신자(7세 중국인 여성)가 나왔다. 이날 서울지는 11명으로 늘어나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시행될 이정이년 5급 공무원 공채, 외교부 포모자 신발 1차 시험을 연기했다.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성석우 기자 기사 A2·4·5·6·12·16·18·B1면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0년 02월 27일 목요일 A03면 정치

'감염병 유행지역 입국금지' 장관 권한으로

국회, 코로나 3법 의결

검역법 제정후 63년만에 재정비
금지범위 환자→지역단위 확대
격리거부땐 의신자 처벌도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열차 체제했던 국회가 본회의 개의하고 다시 정상화된 26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출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출입자들의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재현에 대응해 긴급방역으로만 시행할 수 있었던 감염병 유행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중앙정부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26일 여야 합의에 따른 '코로나 3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954년 제정된 후 63년 만에 검역법이 재정비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해 법무부 장관이 수락하면 중국 지역 입국금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 3법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을 체계화하고 검역에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국금지 기준 단위를 환자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 법체계에서는 지역 단위 입국금지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명령권을 사용해 실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진 및 의심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개개인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우려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 또는 입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까지가 대상이다. 이들이 현행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개별 입국금지 대상 외국인 범위도 감염병 접촉자와 감염병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까지로 확대했다.

함께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처분 조치 규정의 실제 이력보강 등 체계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및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1번 확진자의 경우와 같이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감염병 폭산 예방을 위한 조치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세 차례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한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늘시에 취약계층이 대한 마스크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정학기자·bros@sedaily.com

코로나3법 핵심 내용

- 검역법 개정안
  - 장관 지휘에서 감염병 의심자 격리·입국금지 지역 지정 가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 감염병 의심자 법조 거부시 처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 새로운 보호기준 감시 체계 도입

東亞日報

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A12면 사회

신천지 "中서 88명 입국… 49명 수도권 체류"

6만명 교육생 명단도 추가제출
정부, 사실관계-동선파악에 집중
경기도, 신도들 訪中이력 요청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신천지예수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신도가 지난해 12월 이후 88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신도들의 중국 체류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27일 "중국 지역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성도는 88명"이라며 "이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 방문한 적이 없고, 49명은 현재 서울 경기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활동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뒤 '중국에서 온 신도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러한 해명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 본부로부터 신천지 교육생 60만5000여 명의 명단을 추가 입수했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25, 26일 중대본에 국내 신도 21만2000여 명과 해외 신도 3만3000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교육생을 합치면 신천지 신도 수는 모두 31만여 명이다.

경기도는 같은 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도내 신천지 신도의 중국 방문 이력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신천지의 중국 출입국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25일 경기도는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도내 신도 3만3562명과 18일 총회본부에서 예배를 한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떠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지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요청을 하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도 근거에 따라 출입국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본부부소' 윤재덕 소장은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천지가 중국 우한의 신도 357명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출입국 과학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천지 지도부의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행적 파악

한국경제

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A29면 사회

"한국이 더 위험" 중국인 입국자 '뚝'

하루 1만명 대에서 1천명 대로
한 달새 10분의 1로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국인의 하루 평균 한국 입국자 수가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인 1000명대로 감소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하루 1만2000~2만 명 가량의 중국인이 입국했지만, 최근 '한국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국자가 급감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의 일별 입국자 수는 지난 26일 1404명으로 지난달 26일(1만2685명)의 1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달 초 9000명대였던 일별 중국인 입국자는 8일 3973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25일에는 1000명대(1824명)로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언론을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이 보도되면서 한국 입국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인 유학생도 입국을 철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838명으로 당일 입국할 예정이라고 대학에 신고했던 1309명보다 471명 적었다.

한대규 기자 nowcruise@hankyung.com

07 주요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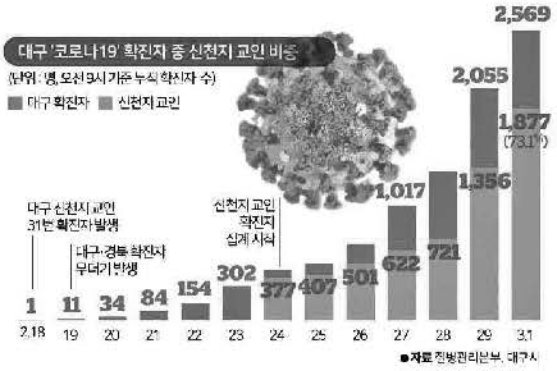
03

한국일보

2020년 03월 02일 월요일 A05면 종합

신천지 교인들 '바이러스 창궐' 1월에 우한 방문

법무부 출입국 기록서 확인
신천지측 "입국 없다" 주장과 배치
작년 7월 이후 우한서 42명 입국



신천지예수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신천지 신도가 바이러스 발생 근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 지역에 다녀온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우한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1월에 다녀온 사례도 드러나,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신천지 신도 24만4,743명에 대한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결과, 해외 신도 1명과 국내 신도 41명 등 42명이 우한에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파악한 바로는 3만3,281명의 신천지 해외 신도 가운데 30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우한에서 입국한 경우다. 21만1,462명으로 파악되는 국내 신도 가운데는 3,572명이 중국에서 입국했으며, 이 중 41명이 우한에서 들어온 경우다.

하지만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 입국자 현황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러스 전파 경로와 관련해 전적 관심을 12월 이후 입국자 현황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해 법무부는 "역학적 유의미성을 구분하기 어려워 월별 통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신천지 신도의 1번 우한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를 통해 신천지 신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가운데, 일부가 1번 중 중국 우한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해 조금 더 면밀히 조사를 해 이를 통해서 현재 발이고 있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된 경로 등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도 구체적인 월별 통계 및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발표는 기존의 신천지 측 주장과 상반된다. 앞서 신천지 측은 우한 지역에도 신도 357명이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2010년부터 우한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고, 2018년 신천지 우한교회 재적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다.

신천지 측은 "중국 정부에 따라 2018년 6월 18일부로 모든 예배당을 폐쇄해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며 "1월 23일부로 우한이 봉쇄조치 돼 우한 지역 교인들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문화일보

2020년 09월 02일 월요일 23면 종합

"지방정부 조치"라더니… 中정부 차원서 '한국인 격리' 지시

명륜 선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망으로 통나무처럼 서 있는 서기 시설의 모습이 보인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수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성용 기자

국가이민관리국 "항 고위험국 강화된 검사·격리력리" 발령
국무원 지속 제존중서 촉도
"발열검사 2회·여행력 조사"

베이징=김동호 특파원

중국 정부가 한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에 대한 검사와 격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이민관리국은 1일 "해외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국민에 대한 검사와 격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 전 48시간 이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외에 입국 후 2회 이상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14일간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입국 전 14일 이내 방문한 국가 또는 지역을 여권에 기재해야 한다.

국가이민관리국은 "일부 해외 도착자는 입국 후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국내 감염 확산 위험을 증가시켰다"며 "입국 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는 국내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후 한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만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입국자 수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약 8만 명으로 지난 1월 중국 방문 사상자 수의 약 1%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일부 해외 도착자는 입국 후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국내 감염 확산 위험을 증가시켰다"며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는 국내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후 한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만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입국자 수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약 8만 명으로 지난 1월 중국 방문 사상자 수의 약 1%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일부 해외 도착자는 입국 후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국내 감염 확산 위험을 증가시켰다"며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는 국내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후 한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만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입국자 수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약 8만 명으로 지난 1월 중국 방문 사상자 수의 약 1%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일부 해외 도착자는 입국 후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국내 감염 확산 위험을 증가시켰다"며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는 국내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후 한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만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입국자 수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약 8만 명으로 지난 1월 중국 방문 사상자 수의 약 1%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07 주요 언론보도

東亞日報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A01면 종합

법무부, 자가격리 1만4500명 출국금지

하루 확진 851명 최대… 5000명 돌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3일 5000명을 넘었다.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후 43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환자는 5186명이다. 하루 동안 851명이 늘었다. 가장 많았던 지난달 29일 813명보다 더 많았다. 1일 586명, 2일 599명 등 나흘 주춤하던 증가세가 다시 올라갔다.

대부분의 환자는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지역 신규 환자의 60% 이상은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이거나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신천지 교인 4527명 중 2792명이 양성이었다. 확진율은 62%다. 대구(경북 포함)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의 유증상자 교인은 4066명. 절반가량 검사한 결과 확진율은 1.7%였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단위: 명

확진자	의심환자
5186	12만1039

사망	회복	검사 중	검사 음성
31	34	3만5555	8만5484

3일 오후 10시 질병관리본부 발표 기준.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 등 1만4500명을 출국금지했다. 법무부 측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가 결정되면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와 접촉한 시점으로부터 14일 동안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등 과거 전염병 발생 때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출국금지된 1만45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접촉자는 올 1월 20일부터 누적된 수치다. 전주영 aimghe@donga.com·김정훈 기자

세계일보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012면 사회

자가격리자에 등기 배달 비대면 전환

법무부, 집배원 감염 우려 방지
수취함에 넣고 문자메시지 통보

김청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집배원들이 관련 등기 우편을 전달하다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들을 출국금지하고 해당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왔다. 약 8100명이 이 통지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등기 우편을 직접 전달하는 탓에 자가격리자와 접촉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전국우정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이날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배송 담당 집배원이 수취인의 자가격리 여부 등 관련 정보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배노조는 집배원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고객과 접촉하는 직업적 특성상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확산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기 우편 대신 준등기 우편으로 출국금지 통보 방식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준등기 우편은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고 배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 사자격리자와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 출국금지 사실 등지를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배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A29면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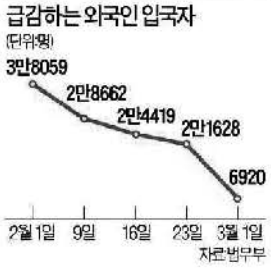
코로나 공포에 … 외국인 입국자 80% '뚝'

〈한 달 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한 달 만에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입국을 꺼리거나 자국민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등 세계에서 '코리아 포비아(한국 공포증)'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6920명으로 한 달 전(2월 1일·3만8059명)의 1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주일 전(2월 23일·2만1628명)에 비하면 32% 수준이다.

올초만 해도 하루 1만 명을 넘어섰던 중국인 입국자가 2일 300명대로 떨어지는 등 중국인의 한국 발길이 끊긴 것이 감소세를 이끌었다.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은 대다수가 유학생이거나 사업 목적의 장기 체류자일 뿐 평소 중국인 입국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우려했으나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서자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1일 6920명 찾아
중국인은 500명대로 급감
대부분 장기 체류자만 입국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방문을 자제하는 정황이 강해지고 있다. 1일 국내에 입국한 대만인은 42명으로 지난달 1일(5652명)과 비교할 때 99% 이상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일본(7194명→1631명)과 미국(1967명→1022명) 홍콩(1974명→928명) 베트남(2317명→312명) 태국(1967명→229명) 말레이시아(709명→91명)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평소 한국을 많이 찾는 상위 10개국의 하루 평균 국내 입국자 수는 최근 한 달 사이 최소 50%에서 최대 99% 감소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어난 최근 10여일 사이 외국인 입국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외국인 입국자는 2만 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4일 1만7318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7일(8909명) 1만 명 밑으로 줄었다.

연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신문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010면 사회

3일 오전 제주시 영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 주는 등 자진 출국을 유도한 데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관광객 급감으로 일자리가 없어지자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귀국하고 있다. 제주존재뉴스

법보다 무서운 코로나… 짐 싸는 中 불법체류자들

중국인 200여명 '脫제주' 러시

"일감도 끊기고 코로나19도 불안해 자진 귀국합니다."

3일 오전 제주시 영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은 자진 출국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온 200여명의 중국인 등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꾹꾹 숨어 있던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출국하겠다며 대기 나타난 것이다.

● "재입국 기회 준다기에 신청했다"

제주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1년째 불법체류 중이라는 중국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누 달째 막노동 일거리가 전혀 없어 더 머물 이유가 없다"며 "자진 출국자는 재입국 기회도 준다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오기로 하고 귀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 손님식당에서 일했다는 중국인 B씨도 "손님이 없어 식당을 그만뒀는데 벌이도 없이 계속 있으면 하루 숙박비와 밥값이 수만원이나 든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데다 당장 생활은 일거리가 생길 것 같지도 않아 자진 귀국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의 자진 출국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24~25일에만 하루 평균 74명꼴로 자진 출국 신청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해 겨울 하루 평균 신청자 27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230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 신고를 했고 54명이 출국했다. 176명은 대기 중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 지역은 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으로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불린다. 지난해 제주에 여행 목적의 30일 체류허가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무려 1만 3000여명에 이른다.

● "중국행 항공기 운항 재개에 신청 몰린 듯"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 불법체류자는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고 제주에서 출국해야 하는데 마침 중단됐던 제주발 중국행 항공기가 운항을 재개한 직후에 신청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던 중국 춘추항공은 자진 출국 신청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제주~상하이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육지에서 김염폐 우 확진환자가 3명에 불과할 만큼 비교적 코로나19 안전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여 경영난에 몰린 대형 관광식당에나 숙박업소 등에서 일자리를 잃은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wang@seoul.co.kr

朝鮮日報

2020년 03월 05일 목요일
A32면 오피니언

방역 정보 사각지대 이주민 챙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252만명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각종 관련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39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는 사정이 더 나쁘다. 우리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없다. 휴대전화를 통해 발송되는 긴급 상황 문자 메시지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주민이 많다. 이번 기회에 각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언어권별로 긴급 상황은 전달하는 공식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

한국경제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A29면 사회

코로나 공포에 … 외국인 입국자 80% '뚝'

(한 날 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한 달 새에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입국을 꺼리거나 자국민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등 세계에서 '코리아 패싱(한국 공부중)'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6920명으로 한 달 전(2월 1일·3만8069명)의 1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주일 전(2월 23일·2만1628명)에 비해선 32% 수준이다.

올초만 해도 하루 1만 명을 넘어섰던 중국인 입국자가 2일 500명대로 떨어지는 등 중국인의 한국 발걸음이 끊기 듯이 감소세를 이끌었다.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은 대다수가 유학생이거나 사업 목적의 장기 체류자일 뿐 평소 중국인 입국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인의 입국을 우선했으나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서자 오히려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1일 6920명 찾아
중국인은 500명대로 급감
대부분 장기 체류자만 입국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방문을 자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1일 국내에 입국한 내국인은 42만으로 지난달 1일(56만2천명)과 비교할 때 99% 이상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일본(71%명→163명)과 미국(196명→1022명) 호주(1946명→288명) 베트남(2317명→512명) 태국(1967명→229명) 말레이시아(2064명→91명)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평소 한국을 많이 찾는 상위 10개국의 하루 평균 국내 입국자 수는 최근 한 달 사이 최소 50%에서 최대 99% 감소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어난 최근 10여일 사이 외국인 입국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외국인 입국자는 2만 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4일 1만7318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7일(8809명) 1만 명 밑으로 줄었다.

한다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07
주요 언론보도

한겨레

2020년 03월 05일 목요일 012면 경향

코로나 여파 외국인 노동자 '기근' '농사는 누가 짓나' 속 터지는 농심

국외 계절노동자들 입국 포기·연기
일하던 이들까지 불안 호소 출국
농번기 앞두고 일손 구하기 버거워
재배지 줄이고 품종 전환 고육책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서 땅 6만6천㎡에 고추·천궁 등을 재배하는 김도년(54)씨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다음달 파종에 앞서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일손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 땐 국외 노동자를 데려와 일을 시켰는데 코로나19 이후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나마 일하던 이들마저 떠나는 실정"이라고 푸념했다. 게다가 다음달 16일 입국해 영양군 농가에서 일하기로 한 베트남 계절노동자 80명도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을 포기했다. 김씨는 "이대로면 일손 멀 가는 품종으로 전환하거나, 재배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국내 노동자를 구하면 되지 않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국인은 인건비는 올찌 치고 농촌에선 아예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 동강면에서 벼농 99만㎡를 경작하는 죽암농장은 오는 16일 필리핀에서 노동자 5명을 고용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노동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 농장 유아무개씨는 "못자리 설치 등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데 걱정이다. 대체인력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 양구 해안면에서 1만1570㎡에 과수를 기르는 변재모(54)씨도 "농촌이 고령화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국외 노동자의 손을 빌렸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충남 당진시 순성면 들녘에서 당진시 4-에이치(H) 연합회 회원이 트랙터를 이용해 토양개량제를 뿌리고 있다. 당진시 제공

국외로 빠져나가는 노동자도 늘고 있다. 전남 고흥지역 오이·토마토 농가, 미역·김 사업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31명은 4일 한꺼번에 출국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농어촌 일손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외 계절노동자들이 입국을 포기하거나 시기를 늦추기 때문이다. 계절노동자는 3개월 단기 취업비자(C-4)로 국내에 들어와 농어촌 등에서 일한다. 임금이 국내 노동자의 절반 정도인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주준히 입국하는 이들로 안정적으로 일손을 구할 수 있어 농가 등에서 크게 반겨왔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체류 시한을 5개월로 늘린 계절노동비자(F-8)도 도입하기도 했다.

201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 9698명이 국내 농어촌에서 일했고, 올해는 48곳의 지역에서 4797명이 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을 주저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달 말 입국 예정 노동자 119명 가운데 필리핀, 베트남 국적의 12명이 4월 이후로 입국을 미뤘다. 충북도는 중국 지린시에서 오기로 한 계절노동자 201명을 캄보디아 노동자로 변경했지만 입국이 불투명하다. 이에 경북 영양군은 기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에게 체류 자격 의 활동 자격을 허가해 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축산 농가들도 비상이 걸렸다.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23개국 7823명의 국외 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했다. 대한한돈협회 홍성지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대기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안관욱 박수혁 송인걸 기자 sting@hani.co.kr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경제

2020년 03월 06일 금요일 A28면 사회

韓 떠난 불법체류자 1주일 새 5배 증가

코로나 확산·일자리 감소에 지난달 24일~1일 5306명 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최근 한 주 동안 한국을 떠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평소 대비 다섯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 동안 자진출국 신고를 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5306명이었다. 지난달 둘째 주(10~16일)에 1031명이 자진출국 신고를 했고, 셋째 주(17~23일)에 1117명이 한국을 떠난 것과 비교할 때 최근 들어 4~5배 급증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진 데다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신체해 불법체류 외국인 일자리가 줄어든 것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출국하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위변조 이권 행사자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기존처럼 관서를 방문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인혁 기자 :wopecole@hankyung.com

매일경제

2020년 03월 06일 금요일 A29면 사회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고

앞으로는 불법체류자들이 온라인으로도 자진출국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5일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 등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는 출국 3~15일 전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인적사항을 비롯해 출국예정일·출국공항·출국편명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에는 사전 신고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출국 1시간 전까지 방문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 △신원 불일치 △형사처벌 △체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23일까지 자진출국 신고자는 평균 1332명 (일주일 기준) 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자진출국 신고자가 5306명(2월 24일~3월 1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일주일 전에는 1117명이 자진출국을 신고했지만 대구·경북 등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성승윤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朝鮮日報

2020년 03월 07일 토요일 A01면 종합

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 입국 차단

정부, 日의 입국제한에 맞대응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

외교부는 6일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 대상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맞서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무효화하는 등 입국을 크게 제한하는 상응 조치를 발표했다. 전 세계 102개 국가·지역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맞대응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불투명하고 소극적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査證·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을 9일부터 정지하고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하루 만에 동일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신규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건강 확인 절차가 발급 과정에 포함된다. 사실상 일본인에 대한 전면 입국 거부에 가까운 조치로, 후베이성(湖北省)으로 국한된 중국발 여행객 입국 금지 조치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절차로, '자가 진단 앱'을 통해 체류 기간 내내 증상을 추적하는 것이다.

김진명 기자

코로나 기사 A2·3·4·5·6·12·14·15면

중앙일보

2020년 03월 10일 화요일 01면 종합

코로나에 하늘길 끊겨 '베트남 일손 못온다' 농촌 초비상

"심each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못 한다네요. 이제 부족한 일손은 어디서 구하죠…" 경북 영양군에서 5만 6000㎡ 규모로 고추·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정도영(53)씨는 지난 3일 여자친구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6명을 신청한 정씨에 따르면 영주개발(주)은 4월 초 베트남에서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5개월가 일하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베트남 항공사에서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면서 계절근로자들이 올 수 없게 됐다.

정씨는 "싼 인건비에 최소 20명이 필요한데 이들이 없으면 농사 규모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며 "본업체 규모에 따라 농가에 배정되는 상황이라 일부 농가는 농사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곳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일로 올해부터 농사 규모는 물론 인건비는 늘어날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 예약이 전무해 텅 빈 베트남 하노이 구시가지 풍경. 태평양 해협의 무역항로가 마비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정부 "전염병 통제되면 재개할 것"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를 받은 여러 지역에서 농가가 코로나19 확산이 따른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편이 끊기면서 적격한을 몇개 됐다. 안동과 베트남을 오가는 부든 버는선 직항 노선은 2일부터 중지됐다. 업무 구역은 노선 중단 결정이 알려진 5일 이전부터 마쳤다. 베트남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베공 전염병이 더 잘 통제될 때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는 이달 중 입국예정이던 베트남 10여명의 계절근로자 90명의 입국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해 계절근로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통해 계절근로자 모집을 추진해 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차질
일하던 불법체류자까지 돌아가
오이·사과 등 농가 인력난 심각
일부는 농사 규모 절반으로 줄여
"장기화 땐 농산물 값 급등할 수도"

국에 머물렀다. 5~6명을 신청한 영주지역 농가들은 급하게 내국인 구하기에 나섰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난 4월 베트남 하이phong성이 계절근로자를 올 언제 다시 보낼 수 있는지 논의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베트남에서 54명, 중국에서 20명을 받기로 했던 영주지역 농가도 비상이다. 베트남은 인건비가 싸기 고 중국 역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입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관계자는 "다음 달 5일 베트남·필리핀·라오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90명이 입국하기로 했으나 계획은 잠정 연기됐다.

남동권 제천시 농업정책팀 담당은 "베트남 근로자 입국 중단으로 산벚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를 미루고 대체 근로자를 찾고 있다"며 "이미 정부가 일손 수급 일정을 맞춰놓은 오이·사과·대추 등 5개 농가가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필리핀·중국서 2910명, 한국 온 계절근로자 83% 차지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497명이다. 이 중 83%인 2910명이 베트남(1535명), 필리핀(1142명), 중국(233명)에서 왔다.

올해는 법무부가 지난달 6일 고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구성된 제도로 내외심사협의회를 열고 4분기 지자체에 476명을 배정했다.

전국 지자단체별로는 경북 영주군이 6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영양군이 402명, 강원 홍천군 400명, 인제군 385명, 충청권 226명, 충북 괴산군이 226명으로 두 번째 이었다. 코로나19 이후기준 경북 지역은 8개 시·군에 783명이 배정됐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배정이 베트남과 필리핀 정부가 지역별의 다국·경북 지역 배분을 근거하면서 경북지역 농가의 타격은 더 크다. 경북 상주시에 있는 A영농법인은 3월 중순 필리핀 세부주 로트스마시에서 6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5개월가 일하기로 했으나 이번 발표 금지 조치로 입국은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인 못 오자 캄보디아에 도움 요청

A영농법인 관계자는 "일손을 구하기 위해 국민 절구까지 낸 실정인데 아쉬운 인원을 도무 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필리핀 로트스시에 계절근로자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대구·경북지역 공문은 금지 한 상황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 입국 제한국에서 세부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일부 농가는 다른 나라에서 인력을 구하는 차한제도 생겨나고 있다. 중국인 계절근로자 300여 명이 입국을 추진한 충북 괴산군은 급하게 캄보디아 근로자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이 비싼 수수료를 내야 중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어 수요 조사를 다시 하는 상황이다.

고시근 관계자는 "캄보디아 측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여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입장이 바뀌면 언제 수급이 제대로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농가에 일일이 전화해서 캄보디아 근로자를 배정할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서한·허동권 기자
park.jhho@joongang.co.kr

朝鮮日報

2020년 03월 11일 수요일
A06면 정치

입국제한 첫날, 5명씩 오간 韓日

靑 "일본이 입국제한 일방적 발표" 사전에 통보했다는 日주장 반박

법무부는 한·일 양국 간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9일 일본에서 출국해 한국에 입국한 일본인은 5명, 한국에서 출국해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도 5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일 양국을 오가는 입국자가 확 줄어든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9일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 5명은 기업 투자, 기업 전문 인력 취업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정기 체류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또 9일 한국 비자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일본인 4명이 대해선 현지에서 돌승을 막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우리 국민은 총 464명이다.

한편 한·일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의 사전 통보 여부를 두고도 충돌했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은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우리 방침과 조치 내용은 한국 측에 외교 루트로 사전 통보를 하는 한편 발표 후에도 정중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윤세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일본은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한국경제

2020/03/11 수요일
A29면 사회

韓·日 입국제한 조치 첫날 인천공항 이용객 사상 최저

개항 후 첫 2만명 밑돌아

한국과 일본이 상대 국가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1만971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이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처음이다.

인천공항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하던 2003년 5월 20일 이용객 2만6773명을 기록한 것이 역대 최저치였다. 공항업계 관계자는 "하루 1만 명대 수송 실적은 고속철도(KTX) 기차역이나 고속터미널보다 적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운행한 항공 편수는 총 286편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이상 줄었다. 인천공항 이용객도 지난 1월 평균 20여만 명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여객 수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일본 항오 방문이 대폭 축소되거나 시실상 중단되면서 타격이 크다.

인천=김주완 기자 jetking@hankyung.com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0년 03월 12일 목요일 004면 종합

불법체류 외국인들 '방역 사각' 적발 우려에 의료기관 방문 꺼려 집단거주 많아… 감염 새변수 우려

이종민 기자 jmlee@segye.com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불법체류자 1만2091명이 자진 출국했고 1019명이 강제 퇴거됐다. 이는 1월 기준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 39만5402명 가운데 3.3%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수의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남아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불법체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거나 방역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어 등 문제로 인해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검사받으러 갔다가 당국에 적발돼 추방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경우에 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등 방역·보건 관련 정보에 취약했다.

법무부는 최근 보건소 등을 방문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검사를 기피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심증상이 있어도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거나 자신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신고접수대에 길게 줄을 서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자진출국을 신고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비용에 대한 걱정도 의료기관의 접근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의심사례가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폐렴 등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런데도 불법체류자에게 이런 사실이 전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자들의 주거·노동환경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 주로 공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거나 농촌에서는 컨테이너 등에서 지내는 방식은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키운다.

전남·목포 영암외국인근로자센터의 정봉신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 안내 공지를 띄우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의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또 다른 감염 확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지만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은 사실상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하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약국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사실상 접근 기회 자체가 차단된 상태"라며 "작업장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공급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일보

2020년 03월 13일 금요일 A13면 사회

김포공항 국제선 이착륙 '0'

입국 제한국 늘어 운항 중단
2003년 국제선 시작 후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2일 김포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 이착륙이 멈췄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다.

1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국제선 여객기는 단 한 편도 없다. 입국 제한국이 이날로 123곳까지 늘면서 국적 노선의 운항이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제선 여객기 '0'(이착륙) 넘춘 것은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되며 김포공항이 국제선 운항을 시작한 200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 전 하루 평균 계편 이뤄지던 김포공항 국제선은 이날 들어 하루 1편으로 감소했다. 노선별로 중국 톈진(천진)과 중국남방항공의 중국 상하이(홍차오)를 오가는 중국남방항공의 대이 운행 등 2개만 운영 중이다. 주 6회 운항하던 중국동방항공과 주 2회 운항하던 중국남방항공이 이날 모두 쉬는 바람에 국제선 여객기 0편, 이용객 0명을 기록하게 됐다. 중국 항공사들은 앞으로 운항 편수를 더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포공항 국제선의 '0' 기록 행렬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공항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제선에 입점한 롯데면세점도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롯데면세점이 매출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1980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 전 하루 1억원에 달했던 면세점 매출은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혜노 기자

중앙일보

2020년 03월 14일 토요일
011년 종합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4)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 과정과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었던 만큼,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곧바로 유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朝鮮日報

2020년 03월 14일 토요일 A16면 국제

자국민 출국·외국인 입국 동시에 막는 나라도 속출

체코·쿠웨이트 등 전면 시행
인도, 내달 15일까지 입국 금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제한적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넘어 외국인 입국과 자국민 출국을 아예 불허하는 나라도 생기고 있다. 사실상의 국가 봉쇄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확진자가 16명 나온 동유럽 국가 슬로바키아는 13일(현지 시각)부터 외국인 입국과 자국민 출국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바키아 국제공항 세 곳은 물류 항공편을 제외하고 전부 폐쇄했다. 94명이 감염된 체코도 16일 자정부터 영주권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 체류인들이 자국 영토를 떠나는 것도 금지했다.

쿠웨이트도 13일 사정부터 모든 국제 공항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다. 외국인 입국, 자국민 출국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세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열살바도르는 지난 11일부터 30일 동안 외국인 입국과 자국민 출국을 막고 있다.

인구 13억5000만명인 인도는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외교관과 UN 등 국제기구, 의료진 등만 예외로 한다.

인도의 우한 코로나 확진자는 73명이다. 부실한 방역 체계를 염려한 정부가 미리 봉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정부가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봉쇄 조치를 내린 국가들은 대체로 확진자 수가 적고, 의료 시설이나 방역 체계가 부실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로뉴스는 "이미 바이러스가 퍼진 상태라면 방역과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수경 기자

東亞日報

2020년 03월 16일 월요일 A05면 종합

제주공항 국제선 51년만에 전면 중단

28일까지 5개국 26개 노선 멈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정기편 운항이 51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15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14, 15일 일본과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5개 국가를 오가던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의 정기편 운항이 중단됐다. 공사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국제선 정기편의 운항 계획은 없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라면 이달 말까지 제주에 뜨고 내리는 국제선 정기편은 없다"며 "29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운항 계획이 새로 확정되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 현 상황에서 국제선 정기편의 운항 재개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13일에도 제주국제공항에선 정기편이 없었으나 지진 출국을 신청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춘추항공이 제주와 상하이를 오가는 부정기편을 운항했다. 14, 15일엔 이마저도 없었다. 주말 제주공항에선 국제선 비행기가 한 대도 뜨거나 내리지 않은 셈이다. 춘추항공 부정기편도 28일까지 이어질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변경돼 16일과 18일 각각 1편씩만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공항에서는 5개국 26개 노선에 주당 390편의 항공기가 운항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홍콩 중국 대만 등 중화권 노선과 태국 노선 등이 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9일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제주와 일본을 잇는 3개 직항 노선이 차례로 멈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3일부터 한국인과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14일 오전 8시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3시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D7501편이 취소됐다.

제주국제공항은 1968년 처음 국제공항으로 인증을 받은 뒤 이듬해 일본 오사카 직항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을 운영해 왔다. 15일 국제선 발권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대부분 철수했다. 제주=임세영 기자 jy798@donga.com

서울신문

2020년 03월 17일 화요일 005면 종합

정부, 특별입국절차 대상 유럽 전역으로 확대

유럽 36개국 여행경보 2단계로 격상
중대본 "美·동남아 등 추가 적용 검토"

정부가 16일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 서유럽과 중유럽 지역 36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도 2단계로 격상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럽발 내외국인의 입국 검역과 국민의 유럽행 자제 조치를 동시에 강화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0시부터 기존 유럽 6개국을 출발하는 항공노선(두바이, 모스크바 경유 포함)에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모든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와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란 등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왔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일대일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체 입국자 1만 1200명 중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사람은 3170명으로 약 30%를 차지한다. 검역 결과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환자가 지난 13일 1명, 14일 3명 발생했다. 이날 0시 기준 유럽발 특별입국자 1391명 중에서도 검역 결과 76명(한국인 71명)이 발열 등 증상을 보여 검체를 채취하고 진단검사를 했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유럽연합(EU) 회원국 또는 유럽 국가 간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셍겐협약 가입국에 속하는 31개국과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영국 등 국민 다수가 여행하는 5개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기존에 2단계가 발령됐던 지역은 현행 유지됐다.

아울러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동남아를 비롯해 세계 모든 국가로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차적으로 미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징 기자 hjlee@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07 주요 언론보도

국민일보

2020년 03월 19일 목요일 002면 종합

주한 美대사관,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 중단

90일 내 여행 목적 방문은 가능
업무 재개 시점은 확정 안 해

주한 미국대사관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여행경보 2~4단계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토록 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관광·상용 목적의 미국 입국자에게 최대 90일간 체류를 허용하는 전자여행허가제(EST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2~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며 "19일을 기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번 조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재개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정규 일정은 모두 취소된다"면서도 "이미 지불한 비자신청 수수료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국가에서 지불일 기준 1년 이내에 비자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 여행경보 2단계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무부는 대구·경북 지역은 4단계, 나머지 한국 전역은 3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2단계인 일본에도 유사한 조치가 적용됐다. 다만 주일 미국대사관은 한국과 달리 외교관 및 공무 비자와 이민 비자 업무는 중단하지 않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서울경제

2020년 03월 20일 금요일
A27면 사회

외국인 자가격리 불응 땐
정부 "비자·체류허가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일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한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 수준까지로 판단되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東亞日報

2020년 03월 24일 화요일 A35면 오피니언

입국제한 대신 입국자 전수검사… 재정·의료 과부하 경계해야

유럽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첫날인 그제 유럽에서 인천공항으로 1442명이 입국해 152명(10.5%)의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추려졌다. 발열 기침 등을 보인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자는 경증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함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의 고삐를 죈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최근에는 미국 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신규 확진자 중 미국이 유럽을 넘어서는 상황이라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는 빨리 시작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하루 3000명 안팎으로 유럽의 2, 3배에 달한다. 막대한 행정 의료 재정이 소요되는 작업이어서 우리 방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크다.

진단검사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유입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사업이나 공부, 학업 등 불가피한 이동은 가능하게 하되 불필요한 이동을 삼갈 수 있도록 출입국 과정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 중국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26일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자비를 들여 2주간 지정 장소에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근 한 달째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견뎌내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이라는 1차적인 불씨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 같은 노력은 보상받기 어렵다. 하루 수천 명의 입국자에 대해 무제한 무료 진단검사와 무상 치료를 우리 재정과 의료 역량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받쳐 줄 수 있는지, 더 근본적으로는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정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朝鮮日報

2020년 03월 24일 화요일 A31면 오피니언

코로나 재유입 비상, 대만·싱가포르는 '공항 환승'까지 금지

코로나 확진자가 23일 현재 전 세계 193국에서 33만명을 넘고 사망자는 1만5000명 가까이로 늘었다. 20억 인구가 사는 파키스탄·인도 등 남아시아에서도 수천명 확진자가 나왔다. 대참사 우려까지 나온다. 백신·치료제도 언제 나올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자 차단으로 방역에 successful한 대만·싱가포르는 최근 유럽발 감염원 재유입 위험에 직면해 다시 초강력 조치를 꺼내들었다. 대만은 지난 19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에 이어 오늘부터 공항 환승까지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오늘부터 단기 방문객의 입국·경유도 전면 금지시켰다.

정부는 중국발 감염원을 초기에 차단하지 않은 것을 '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 와 유럽을 막으면 중국은 왜 안 막았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유럽발 입국도 막지 않고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

현재 매일 2000~3000명 외국인이 입국하고 있다. 지금은 유럽발 입국자만 공항 신난 검사를 하지만 앞으로 미국발 입국자도 포함될 수 있다. 진단 검사비, 자가 격리 2주간 생활비, 양성 판정자 치료비 등은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시설도 점점 더 부족해질 것이다. 정작 내국인은 걸려도 코로나 검사도 받지 못한다. 공항 검역에 인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방역 현장에서 달인 상태에 있는 의료진 지원, 고쳐가 급선무다. 이 와중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휘청 명령을 어긴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중국 감염원 차단이라는 방역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날 28일 "중국을 입국 금지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중국에 문을 열어놓은 지난 두 달간 세계 176국이 한국인 입국을 막았다. 중국조차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는 지경이다. 어처구니 유럽 내 부분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우리도 한시적으로 유럽발 입국을 막을 필요가 있다.

07 주요 언론보도

경향신문

2020년 03월 26일 목요일 A14면 사회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 차질 빚어 농번기 앞둔 농촌, 일손 부족 '비상'

코로나19 여파로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인력 송출 꺼려
지자체들, 내국인 일신창구 개설·농기계 임대료 인하도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곳곳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대다수 동남아 국가에서 인력 송출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남 한 지자체 농민은 고령화와 이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자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적극 유치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집중 투입해왔다. 경북, 충북, 경북, 전북, 전남 등 전국 10개 시·군의 46개 시·군은 올해 4302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4532명을 배정받았다. 강원, 충청, 인천, 제주, 부산 등 강원도 10개 시·군의 경우 217명을 배정받았다. 이는 올해 전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노동자 4532명의 47.9%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는 30일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던 필리핀인 75명의 입국이 취소됐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노동자 유입이 지연되는 등 외국인 계절노동자 유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의 한 양파농가 관계자는 "3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한국사회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필리핀이 국외 이탈을 대기 때문에 현지 출국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각 지자체들은 농촌 인력 노심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2일부터 인력지원상황실을 개설하고, 유관기관·농촌 읍·면·기업체 등과 협력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 3000여명을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도도 마루 인력 유입이 여의치 않자 5개 노인은퇴농촌으로 현재로는 한농어민 수급체계인 '제주수확단'을 구성해 4~6월 마늘 수확 작업과 9~11월 감귤 수확 작업을 돕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3월부터 11월까지 농업 분야 내국인 일손 지원센터에 이상~65세 이하 주민 실업자 가운데 건강해 보이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 따라서 지역 농민들에게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건의해줄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 때문에 농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손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모두들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홍림·박주희·이은기자
cnhr@kyunghyang.com

2020년도 전국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노동자 신청 및 배정 현황

지자체	신청 인원	배정 인원	지자체	신청 인원	배정 인원
강원	2307	2175	제주	83	80
충북	1344	1004	충남	81	70
경북	775	765	경기	22	22
전북	255	255	대구	20	20
전남	204	121	세종	13	13
			합계	4902	4532

자료: 법무부

서울신문

2020년 03월 27일 금요일 006면 유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이탈 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살인 등 강력범죄 시 발동 '보드게로' 적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도 의무화
丁총리 "위치정보 활용 무단 이탈 관리"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입국 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면 내국인은 즉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킨다.

또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시 발동하는 코드제로(코드0)를 적용해 경찰을 긴급 출동시키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도 빈지 못하게 된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를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무증상 사람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 조치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되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원칙 시행지침(지자체에도 자가격리자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이탈 여부를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발열 등 의심증상을 진단하고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5일 오후 기준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60.9%이며, 지난 14~24일 자가격리앱으로 직접 무단이탈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곤충 보건소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기, 가족·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기, 수건·식기류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현행 방역당국은 유행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신규 감염원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나온 뒤 근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선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sark@seoul.co.kr

朝鮮日報

2020년 03월 27일 금요일 A14면 사회

"의료진 지쳐…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막아주세요"

감염학회 이사장, 페북에 글
"외국인까지 치료할 여력 없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26일 정부와 방역 당국에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의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이) 일부러 치료받으러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기도"라고 전했다.

백 이사장은 또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을 다 막았다"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입국) 금지"라고 썼다. 이날 현재 전 세계 170여국이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및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 입국 금지를 내렸을뿐 이후 다른 지역과 나라에는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달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입국 금지 방침을 내자 후베이성뿐 아니라 다른 중국 지역으로까지 입국 금지를 확대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는 대정부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백 이사장은 '외국인이 입원해 간호사들 동역기 요구해 동역기 샀다' '홍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연결되면 외국인을 막아달라. 이제 지친다'는 일선 의사들의 별도 페이스북으로 전했다.

배준용 기자

東亞日報

2020년 03월 30일 월요일 A14면 사회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영국인 강제추방 검토

마스크 안쓴채 스크린골프장 방문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스크린골프 등 외부 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전날 30대 남성인 영국인 A 씨의 동선이 공개된 직후 수원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 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법무부는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1등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14일 태국을 방문했던 때부터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2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는 공항에서 리무진버스를 타고 경기 용인으로 온 뒤 버스를 타고 수원시 영통구로 이동했다.

A 씨는 23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자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했다. 그는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24일 오전 9시 40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했다. A 씨는 스크린 골프장 방문 약 3시간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으로 옮겼다. A 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수원과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04

매일경제 2020년 04월 02일 목요일 A33면 오피니언

독자의견

마스크 보급 대책서 소외된 이주노동자

손용식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여럿고 더럽고 위험한 직업, 소위 3D 업종에 기꺼이 손사하는 이들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내국인이 구할 수 없거나 외면해 버리는 때문에 한국은 이들의 노동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아는 꽁도 함께를 맞을 수 있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의 노동을 통해 받아들인 지 10여 년이 된 지금 다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에서 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주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서로 흩어져 뿔뿔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바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어 버렸다.

그 배경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적·인종에 따라 차별 없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3월 19일 발표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발병과 확산으로 야기된 마스크 부족에 대한 정부의 '마스크 수급 및 배분 대책'에서 외국인서 온 유학생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민 등 200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들이 배제됐다. 그동안 쉽게 보았던 착취 노동사실을 찾아볼 수 없어 보인다.

이제껏 보듯나19가 아니다 우리 곁을 사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진 것이냐며. 게다가 대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이나 소외는 시급이 없이도 기대하지 않는다.

한국경제 2020년 04월 04일 토요일 A02면 속보

코로나에 계절성 근로자 입국 막혀…농번기 농가 일손 못 찾아 '발동동'

"외국인 노동자 일당 13만원 미리 줘도 못 구해요"

(4면 8단계)

올에 더 심해진 일손 부족

"일당 13만원은 준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다."

충남 천안 미나리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데 대해 한 농민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농협 딸기연구소 내부를 수리하고 있다. 고양=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농번기 인력 수요 평소의 10배

양파·과·건자 등 생산 수확

1~2일만 늦어도 상품성 떨어져

지자체 "내국인 근로자 찾아라"

구직자 모집해 농가와 연결 나서

농번기에 접어든 농촌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농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는 2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천 명 줄었다. 이 중 3천 명 이상은 지난 2월 중순 이후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수요가 평소의 10배 이상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지난 2월 말 지자체와 협의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가 구직자를 모집하면 농협이 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캄보디아 등 막힌 계절성 근로자

특히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경남 밀양시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딸기 수확 철을 맞아 하루 평균 3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실제 투입된 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밀양시 관계자는 "딸기 수확 철에 일손이 부족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 피해가 커진다"며 "캄보디아 등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일대 농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지역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천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캄보디아 국적이다. 이 지역 농가 관계자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대부분 3년 이상 한국에서 일한 숙련 인력"이라며 "이들이 입국하지 못하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인 구직자 모집해 연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경남 밀양시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딸기 수확 철을 맞아 하루 평균 3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실제 투입된 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밀양시 관계자는 "딸기 수확 철에 일손이 부족하면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 피해가 커진다"며 "캄보디아 등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일대 농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지역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천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캄보디아 국적이다. 이 지역 농가 관계자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대부분 3년 이상 한국에서 일한 숙련 인력"이라며 "이들이 입국하지 못하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성 근로자

농사철만 되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는 제도.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아 정해진 업종 구분 없이 한 번 입국하면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현재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성 근로자 수

(단위: 명)

지난 1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절성 근로자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안에 캄보디아 등 3개 국가를 추가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베트남 등 3개 국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계절성 근로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4797명에서 내년 말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경제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A33면 피플

"IPC가 최선…직원 조언 믿었죠"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

"효과·효율 다 잡았다" 해외도 호평
입국자 자가격리 등 2차 대비 주력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을 출입국 대책이라는 직원들의 조언을 믿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는 곧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직원들과 두 달 째 주말을 반납해서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다. IPC를 통한 사전입국제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챙겼다는 해외 평가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말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국경 전면 차단 대신 다른 확산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의료적 타격이 없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할 출입국 대책이 필요했다. 반년 국내 여론은 중국 등에 대한 국경 완전 봉쇄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차 본부장은 국경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정부 시침에 맞추려면 'IPC가 효과적'이라는 직원 보고를 믿고 그대로 실행했다.

차 본부장은 "1월 말부터 2월 초 중수본에서 각 부처 장관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제 규범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상 전면 입국금지는 밀입국 때문에 자칫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수본은 전면 입국 금지보다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했던 중국 후베이성을 우한시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대해서만 입국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찾다가 IPC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실행에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국 후베이성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승객들에 대한 탑승이 전면 제한됐다. 이후에는 승객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입국하려는 코로나 19 의심자 등 1만5,000명을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었다. 차 본부장은 IPC를 통한 1차 방어선에 이어 입국자 자가격리 체제 강화 등 2차 대비책에도 주력할 생각이다. /과천=송구민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책본부장이 지난 2일 서울경제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이호재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2년 04월 07일 ㅇ요일 A33면 1단

범죄자 막는 '탑승자 사전확인' 활용…코로나 1차 저지선 구축

법무행정 현장을 가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탑승수속 단계서 목적여부 판단
국경목적 없이 출입국 거부
승선정보시스템 등에서 자료 확보
한도인 10만 5,000여명 사전차단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서울신문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009면 종합

대만인 첫 강제추방

격리시설 거부… 외국인 11명 돌려보내

한국에 입국했다가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추방됐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무부는 격리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관광 목적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가 다음날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혀 되소 조치됐다. 격리시설 입소 비용은 2주 기준으로 140만원 안팎이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으로, 이들은 모두 입국이 거부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외국인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009면 종합

중국인 출입국 0명

법무부 일일통계… 1992년 수교 후 처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 여파로 지난 4일 중국인 출입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6일 법무부의 '중국 출발·도착 내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승무원 포함)은 각각 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중국인 입국 추이를 보면 지난달 29일 464명을 기록한 뒤 이튿날인 30일 50명으로 급감했다가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했다. 같은 기간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도 지난달 29일 141명에서 시작해 약간의 변화를 보이다가 지난 4일 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기 전인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은 하루 평균 1만 5000명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도 일평균 약 1만 8000명에 달했다. 불과 석 달 만에 하루 평균 중국인 출입국자 수가 3만 3000명에서 '제로'가 된 것이다.

김한주 기자 dream@seoul.co.kr

07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0년 04월 08일 수요일 A12면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검역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文 "인천공항 방역능력 자부심"

검역현장 방문해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천국제공항 검역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해외발(發)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의 '최전선'인 이곳에서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검역 및 방역 시스템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경을 적절 봉쇄하지 않고 방역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해외 유입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역 관계자들에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 요인 비중이 늘고 있다.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철저한 방역과 차단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항에서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여러분의 노력과 철저한 자가격리 과정을 통해 2·3차 감염을 차단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진정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법무부·소방당국·군·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외부 감염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성과를 인급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가진단 앱과 '워크스루(보행 선별 진료소)' 등 혁신적 방법을 도입해 세계적 모범 사례로 떠오른 점을 칭찬했다. 특히 "워크스루는 늘어나는 대도심 환자로부터 안전성이 강하며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 방문 일정을 사전에 취재진에 알리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세계일보

2020년 04월 09일 목요일 006면 종합

해외발 감염 차단… 상호주의로 맞대응

한국인 입국금지국 비자면제 중단

총 148개국 입국제한 조치 불구
'확진 폭증' 美·'발원지' 中 빠져
감염원 차단 역부족 지적도 나와
외국인 강제 부담 경감 목적도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정부가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키로 한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입국 금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여러 국가들이 한국 등 몇 개국을 특정해 입국 금지하거나, 모든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통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방성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면적 입국 제한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며 개방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국경 차단을 최소화한 '코리안 모델' 대응 원칙과 나소 결이 나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조치 대상국을 이미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나라로 제한했고, 이들 국가에게 취하는 조치도 전년 입국 금지가 아니라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개방성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우한발(發) 외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7일 신규 입국자 5073명 중 한국인은 3811명(75%)으로 한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런에도 지금까지와 달리 외국인에 입국 제한을 강화한 것은 시설 격리 등을 강제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대다수가 국내 기수지가 없어 시설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거부한 대만 출신 여성이 강제 추방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기준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총 148개국이다. 다만 현재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은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날 입국한 외국인 1262명 중 미국인은 206명, 영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유럽 국가 출신은 57명이었다. 중국인도 190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인을 입국 금지한 국가 중 가장 인적교류가 많은 일본과는 이미 상호간 무사증입국을 중단한 상태다.

고위당국자는 "법무부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소란산 시한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은 마련해 반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앞당겨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외국 정부의 일방식인 통보로 우리 국민이 불편을 입었던 전례를 감안해서다.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0년 04월 09일 목요일 006면 종합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 설명 지자체 공무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시민이 입국 심사장에서 받은 모바일 유학생 전용 입국수속 시트에서 한글로 쓰여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기자 사진=해당부처 제공

서울신문

2020년 04월 10일 금요일 009면 종합

中 포함한 외국인 단기비자 입국 못한다

13일부터 효력 정지… 장기비자는 제외

법무부 "입국자 중 단기체류 목적 30%"

한국인 막은 국가 무비자 입국도 중단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억제하고자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도 잠정 중단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입국 제한 조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에 대해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 적용 국가가 아니어서 입국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모든 외국인의 기존 단기비자 효력도 정지되면서 중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이 강화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 검역만 강화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이 한국인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지 2주가량 지났고, 중국에서 이미 확진한 자 증가세가 꺾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최다이자 한국 입국자도 많은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은 비자면제협정·무비자입국 적용 국가인데,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자면제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기비자 효력 중단 조치와도 상관없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외국인 입국자 중 단기체류목적 입국자가 30% 정도"라며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외국인 입국자 1530명 중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는 289명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5일 이전 발급된 단기 체류 복적 단수·복수비자는 효력이 정지되나, 단기취업 비자와 취업·투자 등 장기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151개국 중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정부가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 90개국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 비자 심사도 강화한다.

박기석 기자 kis1@seoul.co.kr

내일신문 2020년 04월 10일 금요일
021면 기획

단기사증 효력 '잠정정지'

코로나19 역유입 방지
13일 0시부터 시행

모든 단기사증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사증 심사도 강화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정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148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와 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만일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열 김상범 기자 sonan@naeil.com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2020년 04월 13일 월요일 S03면 기획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 … "올해 다문화 사회 진입"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이유와 이에 따른 긍정·부정적인 측면을 토론해보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한국 내 외국인 비율이 5%이 육박하면서 한국이 지금껏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석인 상부 등이 감증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0만 명에 육박했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했다. 등록 학제에서는 이 수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외국인 증가세로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미국(13만3650)이 기장 많다. 이 가운데 70만 1098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었다. 이어 베트남 22만4538명(8.9%), 태국 20만 9069명(8.3%), 미국 15만6826명(6.2%), 일본 8만6406명(3.4%)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의 중앙아시아 출신이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유형 중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질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만726명이었다. 단순기능 인력이 91.8%, 전문인력은 8.2%였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6만 6025명을 기록했다. 이 중 82.6%가 여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43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연령으로 따지면 30대(66만5515명)와 20대(65만753명)이 전체 체류 외국인의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증가 흐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최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와으로 기대된다.

이인혁전국경제부기자
lwaocpl@hankyung.com

한국일보

2020년 04월 14일 화요일 A12면 사회

인천공항 이용객 개항이래 최저 한국인도 국은 지는 90가국에대한 사증(비자)면제및 무사증 입국 제한 첫날인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한산하다. 이날 하루 이용객 수는 4만4명으로 개항 2001년 개항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공항 측은 당초 입국 예정 마상 3,000~7,000명일 정우 업무 상업시설은 체크할수록을 폐쇄하는 등 정해진상 운영(부분 셧다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종도=연합뉴스

東亞日報

2020년 04월 20일 월요일 A12면 사회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한 외국인 8명 추방"

어제까지 해외유입 확진자 998명
유럽 439명, 미주 431명… 中은 16명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기 시작한 1일 이후 모두 8명의 외국인이 자가 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됐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과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말레이시아 국적 유학생 1명이 자가 격리 조치를 어겨 17일 추방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유학생 4명은 출국 항공편이 끊기거나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귀국 항공편이 생기는 대로 즉시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앞서 14일에는 자가 격리 지역인 서울을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 격리 기간에 전남 여수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조업을 나간 베트남 국적의 선원 1명이 추방 조치됐다.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의무적 자가 격리가 시행된 1일 이후 18일까지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해 국내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 단계에서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29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만661명 중 해외 입국자는 998명(9.4%)이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의 약 87%는 유럽과 미주 지역에 몰려 있었다. 이 중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발 입국자가 4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미주 지역이 431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입국자 중 확진자는 16명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는 한 명도 없었다.

배석준 eulius@dorga.com·이소정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겨레

2020년 04월 21일 화요일 012면 사회

'난민면접 조작' 피해자 수천명 재심 기회 얻었다

법무부, 허위 조서 작성 인정하고
해당 면접 탈락자 재신청 받아
외국인 등록증 즉시 발급 배려도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들의 면접조서 조작으로 부당하게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수천명의 난민신청자에게 재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난민 면접에 신속심사 절차가 도입된 2015년 이후 3년 동안 벌어진 '면접조서 조작 사건'의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것이다.

20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2015년 9월4일부터 2018년 7월1일 사이에 아랍어로 면접을 보고 탈락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난민신사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일선 출입국 사무소는 법무부로부터 이런 방침을 전달받고 지난 2월3일부터 탈락자들의 재신청을 받고 있다.

재신청 대상자는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아랍어가 모국어인 이집트 난민신청자만 2천명이 넘고 이들의 난민 인정률이 0.75%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집트 쪽 재신청 대상자만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모로코, 리비아, 수단 등에서 온 난민까지 포함하면 재신청 대상자는 2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조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실은 2018년 7월 난민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난민인권단체가 조사한 19건의 피해사례를 보면,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면접조서에 "일을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문장이 똑같이 적혀 있었다. 정치적·종교적 탄압을 피해 망명했다는 이들의 면접조서에 '돈을 벌러 왔다는 거짓 답변을 적어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2018년 9월 탈락한 신청사례 중 55건만 직권취소한 뒤 재면접을 실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55건을 선정한 기준이 모호한데다 추가 피해가 잇따라 확인되자 난민인권단체들은 지난해 6월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 뒤 법무부는 면접조서를 조작한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면접조서 조작으로 탈락한 난민신청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곧바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외국인등록증 없이 불법으로 일하다 단속에 걸린 기록도 모두 지워주기로 했다.

유엔난민기구 쪽은 법무부의 조치와 관련해 〈한겨레〉에 "부당한 난민심사 및 한국의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제공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세호 기자 ph@hani.co.kr

한국경제

2020년 04월 21일 화요일 A08면 종합

국경이 폐쇄된다…"해외여행 더는 당연한 일 아닐 수도"

거꾸로 가는 세계화

너도나도 타국 유입환자 차단
유럽 경계 허문 셍겐조약 위협
"관광·항공산업 궤멸적 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 정부는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자국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90개국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두 달 전만 해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가 국가 간 연결 개념을 바꾸고 있다. 수전 엑켈 뉴욕대 기자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코로나19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절대 있는 것 같던 세계시민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명을 다했다"며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그런 세계시민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나아가선 세계가 코로나19로 역공을 맞게 된 것이다.

유럽 국가 간 경계를 허문 셍겐 조약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세계화가 멈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셍겐 조약 가입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해 총 26개국인데, 대다수가 국경을 닫았다. 스페인과 프랑스를 국경을 넘나드는 관광을 중단했고 독일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오스트리아·스위스·북셍부르크·네덜란드 등 5개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다.

셍겐 조약은 1985년 5개국과 체결 등 5개국이 룩셈부르크 남부의 셍겐에서 맺은 조약이다. 국가 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후 1995년 셍겐 조약이 발효된 뒤 관광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관광객은 1995년 5억3000만 명에서 지난해 14억6000만 명으로 급증했다. 관광산업 규모는 1995년 4970억달러에서 2018년 1조4620억달러로 세 배가량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닫히면서 이 같은 성장세는 올해 큰 폭으로 꺾일 전망이다.

대표적 관광국가인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올해 제한적 수준의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탈리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1%로 발표한 것이도 이런 이유가 반영됐다.

관광이 사라지는 것은 해외여행의 대표 주자인 항공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항공사들은 수년째 여행산업을 분류한 결과 여행객의 58%가 비행기를 통해 국경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시리엄에 따르면 코로나19이후 세계적으로 1만 5500여 개의 민간 항공기가 운항을 중단하고 지상에 대기 중이다. 전체 민간 항공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에서도 국제선 승객의 90% 이상이 사라졌다. 3월 마지막주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다.

은행 중단의 여파는 항공기 제조사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A320 생산 담당 월 60대에서 40대로 줄였다. 보잉은 737맥스의 생산을 5월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뒤 여행을 비롯한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곧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기업인들에 한해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원활한 편이 아니다.

강현우 기자 gaeshian@hankyung.com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경향신문

인권위 "난민신청 아동, 공항에 장기체류 않도록 개선해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 법무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에 장기간 머무는 아동 난민신청자들의 처우 보장을 위해 난민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의견 표명을 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난민인정 심사가 불허되며 10세 미만 자녀 4명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0개월간 체류했던 왕골라 국적 주앤도 은주키(48) 가족의 진정 조사에서 나왔다.

가족은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박해'를 들어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가족은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앙골라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했다. 불회부 결정이란 난민인정심사 대상자에 올릴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불회부 결정으로 송환대기실과 분류된 이들은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출국해야 했지만, 아들이 백혈병 치료 수술을 받게 되면서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출국이 유예됐다. 제도상 송환대기실에는 소송 중이라도 입국할 수 없어 공항 터미널 또는 출국대기실에 있어야 했다.

가족은 이후 10개월가량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휴송 편의시설 지역에서 제공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지난해 7월에는 공항 터미널에서의 생활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법무부에 인도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인권위에 한국정부가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진정서를 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진정과 관련, 인권위에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거부사유가 없고 입국허가 요건이 갖춰져야 하나, 진정인들은 입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고, 추가 입국허가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입국허가 조치 등의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중 지난해 9월서울고등법원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해 이들가족의 입국이 허가됐다. 이들이 진정 외의 의사를 밝혀 인권위는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송환의 우선된 난민신청 아동의 입국을 길도하지 않은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21일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 아동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서 규정한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조치는 최우선적으로 아동에게 가장 이로운 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신청 아동에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2020년 04월 22일 수요일 014면 사회

경향신문

인권위 "난민신청 아동, 공항에 장기체류 않도록 개선해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 법무부에 의견 표명

07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0년 04월 22일 수요일 A26면 사회

'227만 외국인' 지자체 재난지원금 중구난방

경기도, 이주민단체 차별 반발에
결혼이민·영주권자 11만명 포함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대상
부산시 15개 구·군별 제각각
"이주노동자도 지원하나" 이견도

국내에 주주하는 227만여 명 외국인에게서나지원금을지급할지를두고지방자치단체마다 논란이 제세지고 있다. 외국인 차별 논란은 물론 형평 지자체들의 지급 범위와 기준도 서로 갈라이어 행정 일관성과 신뢰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 중 경기도가 종전 입장을 바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국내 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민단체가 인권에 관한 문제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여성가족부까지 나서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는 대국민과 안정성, 한국 국적 추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지원정부의다문화가족지원책 무기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지방선거 유권자로,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가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도는 경기도민으로 한정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 10만 8000여 명에게도

東亞日報

2020년 04월 25일 토요일 A28면 투데이

'카자흐 의인' 알리 6개월 체류 연장

법무부 일단 임시비자 'G-1' 발급
의상자 지정땐 영주권 부여도 검토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했던 카자흐스탄 출신 욘다셰프 알리 압바르 씨(28·사진)에게 법무부가 한국에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발급했다.

압바르 씨는 2017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허용 체류 기간을 넘어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다음 달 1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24일

그에게 6개월짜리 치료용 임시 비자(G-1)를 발급했다. 법무부는 압바르 씨가 보건복지부에서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압바르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3층 원룸 건물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다. 그는 2층 원룸의 여성을 구하려다 목과 손, 귀 등에 2~3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07 주요 언론보도

05

한국일보

2020년 05월 02일 토요일 A02면 종합

국내 발생 확진자 1명 그쳤지만… 당국 "숨은 감염자 상당수 있을 것"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위해
정부, 불법체류 단속 일시 중단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키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

■ 일일(0시 기준, 사흘 전부터 누적 집계)

총 환자	전일대비
10,774명	+9
사망 250명 +2	완치 9,072명 +13
검사중 8,685명	+51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명 그쳤지만… 당국 "숨은 감염자 상당수 있을 것"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위해 정부, 불법체류 단속 일시 중단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키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 ■ 일일(0시 기준, 사흘 전부터 누적 집계) 총 환자 10,774명 +9 사망 250명 +2 완치 9,072명 +13 검사중 8,685명 +51

이재혁 기자

국민일보

2020년 05월 06일 수요일 015면 사회

무급휴직 강요에 반발하자 "비자 연장 안해준다" 협박

코로나에 더 서글픈 이주노동자들

체납지원금 대상서 대부분 제외
이동권 제한 등 인권침해 사례도
전문가 "우리 민낯 그대로 드러나"

김지혜 기자 amor@kmib.co.kr

경향신문

2020년 05월 07일 목요일 010면 사회

인권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강제퇴거 중단을"

국내 출생·고교까지 나와도
현행법상 강제퇴거 대상
법무부에 제도 마련 권고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무조건 강제퇴거할 것이 아니라 체류신청·심사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6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류자격을 신청하고 심사하는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상 가용절차를 활용해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하라"고 했다.

권고는 두 명의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각 17세, 18세)의 강제퇴거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나왔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지 못해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법무부의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부모와 함께 강제퇴거가 유예됐다. 고교를 졸업하면 다시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이들이 체류자격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제도는 없다.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대학 진학 등 사유의 '상시적 합법화 제도'(체류자격 부여)도 없다. 다만 법무부는 인권위에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국내 체류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무부는 가족관계 및 체류 실태, 국내 생활기반 유무, 국경 관리와 체류질서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해 체류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며 대한민국의 언어·풍습·문화·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우관계가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기반을 형성했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이 확실히 예견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특정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출국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정책 재량 영역에 속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판단은 공익적 측면과 헌법상 규정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권리,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사회적 기반, 가족결합권 등 개인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하고,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제도가 없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퇴거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07 주요 언론보도

중앙일보

2020년 05월 12일 화요일 이데일 종합

"신분 노출 우려해 검사 꺼려" 불법체류 39만명 방역 사각

정부 이번달 불법체류 단속 유예
중남서 2만명 추정, 검사 74건 뿐
"말 안통하고 동선 파악도 어려워"
지자체는 검사 확대·전담팀 운영

"신분이 들통날까 봐 검사를 안 하려는 것 같아요."

11일 중부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검사를 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 기간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한다고 외국인도움센터 등을 통해 전달했지만, 현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검사를 하면 최소한의 신원 사항을 위치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자진 출국한 신고자들이 안내문 서류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보건소를 찾지 않아서다.

이 지역 외국인노동자돕기센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코로나19 검사 독려 메시지를 보내고, 사업장을 찾아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박무부는 지난 4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임종빈부 기간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주가 외국인 불법체류 의심 정보가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신고한다고 한 경우 추후 단속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9만 2000명이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2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17.8%에 달하는 수치다.

중남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숨은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서울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11일 현재 검사를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74명에 불과하다. 중남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만6000분의 1에 불과한 0.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농번 남도 35명은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저변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들은 코로나 발병 사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약속도시 크게에서 동선 파악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5월 한달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검검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를 받을 경우 검계 출국 등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불법체류자가 검사에 응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원도는 시외권 도관합의체를 구성하고 있어가는 방역 등 각종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경두 본계자는 "현재 지역별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1차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단체까지 불법체류자를 검사한 실적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판매도 유인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나 이내원 등록 같은 경우는 숨어들어 옴성하는 것이 사장 분석이기 때문에 지역 내 유입 때부터 최대한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지난 8일 택스크로스TF를 구성했다. TF에는 부산에 있는 외국인 지원 시민단체 6곳이 참여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건덕터서", "아주민과함께" 등 6곳이 정부 지원은 외국인에게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청한 예정"이라며 "시 대신 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주는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주면 건강보험료나 보건의료기관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2018년 11월 기준 약 9000명으로 추산된다.

충북 음성외국인도움센터는 검사 안내문을 15개국 외국인 근로자 대표에게 보내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이종성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사무총장은 "불법체류자들은 강제 추방을 이유로 숨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불가피한 병원나 재난·질병에 노출됐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역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우·홍신·손성·대구·광주·부산=최종권 신진호·박진호·김명석·진형일·이준기 기자
chobo@joongang.co.kr

한국일보

2020년 05월 14일 목요일 A22면 사람들

"한국엔 처음이지? 이민자 멘토가 도와줄게"

법무부, 방송인 등 35명 위촉

이민자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 비결과 생활 경험을 자세히 알려 줄 '이민자 멘토단'이 새로 생겼다. 외국 출신 방송인 등 한국에 온 지 오래된 이민자들이 대거 참여해 본국에서 갓 넘어온 새 이민자들에게 한국 사회 곳곳을 심서히 안내해 주게 된다.

13일 법무부는 모범 이민자 35명을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선정하는 위촉식을 열었다.

이민자 멘토단에는 JTBC '비정상회담' 등에 출연한 방송인 샘 오취리(가나), 수산 사키야(네팔), 알리(파키스탄) 등 22개국 출신이 포함됐다.

멘토단은 새로 한국에 온 이민자들에게 멘토 교육을 통해 한국 사정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이밖에 하숙위원들을 선배로 출사녹기와의 사회망'과 등을 소개하는 특강에 나서고, 이민자들의 민식을 개선하는 홍보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우종식에 참석한 멘토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스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의 영문 표기에 '외계인'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ali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점 스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 등록사를 위한 체류 안내 책자가 없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건의했다.

최동순 기자

추미애(오쪽)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에서 벨기에 출신 방송인 존리인 퀸타르드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세계일보

2020년 05월 14일 목요일
026면 오피니언

세계타워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사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근접 접촉하는 유흥시설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시전이 적극 대처하지 못해 화를 키운 꼴이 됐다. 기동성 점도 제대로 갖추고 뜸 흘린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 안타깝다.

그런데 유흥시설만큼이나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초기 방역 모범국으로 분류된 싱가포르가 이주노동자들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진통을 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싱가포르는 확진자의 75% 정도가 이주노동자다. 단체 숙소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도 싱가포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불법 체류자에 의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 코로나19 감염보다 강제출국을 더 두려워한다. 지난 3월 강원도 양양에 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한 노동자는 발이 난 곳에 들어가 숨진 10여명을 대피시켰고 이 과정에서 목과 손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소방관이 출동하자 바로 귀국을 떠났다. 불법 체류자에서 화상치료자로 신분 노출로 인한 강제 출국을 피해야 하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파악 협의체 구성을

강제 출국 불이익에 노출 꺼려… 방역 사각 예방체계 시급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 38만여명이라고 한다.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밀집생활을 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코로나19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코로나19 증세가 생기더라도 보건소 등을 찾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본국에 두고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들에게 강제 출국보다 더 큰 불이익은 없다. 불법 체류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된다. 불법 체류자는 제조업이 밀집된 도시와 농어촌 등 전국에 산재해 자칫 방역의 손길이 세대 미치지 않는다면 싱가포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강화와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 걱정 없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발 그대로 파악 자체가 힘들다.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체류자를 하루빨리 찾아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방역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시가 있은 지 보름이 지나도 불법 체류자 파악은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체의 기초사실 등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을 정도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 시설에 정통한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단체, 종교단체, 통반장, 이장 등이 그나마 얻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흥주점 밀집지역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힘을 합쳐 일제조사를 한 뒤 파악한 정보를 방역당국과 공유해 예방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 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내국인 검진과 동시 추진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K방역이 불법 체류자 방역 소홀로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07 주요 언론보도

문화일보 2020년 05월 18일 월요일 001면 종합

'감염병 접촉자 出禁' 명문화 추진

이태원發 코로나 '2명' 추가

18일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 증가 폭이 줄기는 했지만 집단감염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접촉자,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국 금지 규정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 수는 전일 168명에서 이날 170명으로 늘었다. 인천에서는 앞서 신분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일으킨 인천 학원 강사와 동선이 겹친 택시 운전기사와 그 부인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은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하면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된 확진자는 학생 10명, 성인 7명 등 17명으로 늘어난다.

충북에서도 자가격리 해제 직후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지역사회 내 음식점, 커피숍 등을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대비 15명 늘어난 1만1065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 대상에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자규·최준영 기자

▶관련기사 9면

한국경제 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A33면 people

'60년 봉사' 영국인 사회복지가, 올해의 이민자 선정

〈대통령 표창〉

13주년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박인규 회장·화성복지센터도 표창

61년 전 부산항에 내린 뒤 가난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여성과 장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영국인 사회복지가 수산나 메리 영거 여사(83·사진)가 '올해의 이민자'대통령 표창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열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등 1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200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영거 여사는 1959년 23세에 영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외삼촌과 사촌오빠가 6·25전쟁에 참전해 한국에 관심이 있던 중 천주교 대구교구의 시무직 협조자인 옥실리스나로 입국했다. 그는 1960년 대구 요선여대 영어교수를 시작으로, 1962년 대구가톨릭이자 기술원(현 가톨릭푸름나)을 설립하고 대구·경북지역의 기초 장수님과 미혼모 지원에 나섰다. 1964년 영국의 지원을 받아 옥신 농장(무학농장)을 설립, 농민들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도 했다. 1967년 한국 생활을 기록한 《무궁화》라는 책을 미국에서 출간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현재 국내 영주자로, 2011년 명예 대구시민이 됐다. 대구 황금동 가톨릭푸름터에 기주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영거 여사는 영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그는 "양 수산나, 영어로 메리 영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한국에서 이런 상을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인규 사단법인 홍남다문화가정협회장은 대통령 표창(개인)의 영예를 안았다. 박회장은 중국인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꾸린 당시지이고 1급 중증 척수장애인이다. 그는 2011년부터 19년간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한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대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도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업무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단체)을 받았다.

문혜정 기자 sellermoon@hankyung.com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경제

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A10면 종합

"동남아 인재 유치할 파격 稅 혜택 필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고(高)학력 외국인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노동력을 흡수할 방안으로 이민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한국은 초고령화·초저출산 국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대로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면 '인구 절벽'에 대응하면서 미래 산업 전략을 짜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는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 시절부터 꾸준히 이민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은 이민을 지극히 보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저임금 불법체류자부터 떠올릴 정도로 외국인 인력 유입에 대한 부정적 이해도가 낮다. 민 위원장은 이런 분위기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만으로는 한국이 세계 산업지도를 주도적으로 그려나가기 어렵다"며 "새로운 고급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 별도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급 인력이 너도나도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도 1970~1980년대 기초과학 분야를 키울 때 아시아와 유럽 인력을 적극 유치했다"며 "이 인력들은 당시 부족했던 기초과학 연구 인력을 메꾸면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고학력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 위원장은 "수도권 기숙 환경이라는지 연구개발(R&D) 시설, 세금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다"며 "고급 인력을 끌어당길 매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외국인을 무조건 받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고급 인력을 유입해 산업 곳곳의 생태계 발전을 이끈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정지은/최다은 기자 jeong@hankyung.com

한국경제
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A10면 종합
"동남아 인재 유치할 파격 稅 혜택 필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A10면 종합

당장 '이민청' 신설하기 어렵다면…

"체류 외국인 빅데이터부터 관리해야"

"임금, 학력,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올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줄을 서세요."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이란 책자에 담긴 여덟 컷 만화의 일부다. 단기 추진 과제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수인재에겐 장기 체류, 가족 동반, 취업 허용 등의 혜택을 선별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언제 신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어느 곳에서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키'를 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할 중심 조직도 없다.

한국에선 이민 문제를 다루는 부처만 10개가 넘는다. 이민자 정착 지원은 행정안전부, 우수인력 유치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다. 고용허가제 및 취업 지원(고용노동부), 유학생·이민자 교육 지원(교육부), 다문화가족 지원(여성가족부) 등도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다. 이민정책을 내놔도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사진)은 "국내에선 2008년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민정책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3차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통합 관리를 책임지는 조직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여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신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10곳 넘는 외국인정책 담당 정부부처

외국인정책위원회 (간사: 법무부)	
이민자 정착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고용허가제 및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유학생, 이민자 교육 지원	교육부
우수인재 유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자와 2세의 복지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문화다양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범죄 등 국익 위해 방지	경찰청, 해양경찰청
재외동포 교류 지원	외교부

우수인재 비자 계획 내놨지만 담당 정부부처만 10개 넘어 언제, 어떻게 실행되는지 '깜깜'

"이민정보원이라도 먼저 구성해 체류 외국인 취업정보 축적을"

담장 이민청을 세우기 어렵다면 할 수 있는 조치이라도 우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 원장은 "이민정보원이라도 구성해 체류 외국인의 빅데이터를 쌓아 관리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적정 유입 규모를 추산하고 관련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서 중기 과제로 다룬 부분이기도 하다. 국적,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 임금 수준 등을 종합해 사회·경제 및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체류 외국인의 취업 정보는 우수 인력을 유치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외국인 전문인력 한 명을 유치하는 데 드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까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이들에 특정 산업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키우려 한다면 어느 국가의 어떤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도 가능하다.

속도가 더디더라도 결국 한국도 '이민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강 원장은 "이민 시대에 대비해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이민정책은 다른 곳에서 완제품을 사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한국 환경에 맞게, 한국이 원하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경향신문

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011면 사회

'유력 대선 후보' 풍자시위 이집트인 난민 인정

군부 쿠데타 주도한 현 대통령 조롱 "포주에 투표" 1인 시위
징역 5년 선고 받고 한국으로…난민 신청했지만 인정 못 받아
행정법원 "이집트로 돌아간 뒤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 삶이 더 짧아지도록 '포주에게 투표하세요 (Vote for Pimp)."

이집트 변호사 A씨는 2014년 5월 27일 이집트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소 앞에서 1인 시위 피켓을 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집트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30년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대통령이 몇 차례 바뀌었지만, 다시 軍출신 인사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엘시시 대통령 집권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A씨 시위는 엘시시를 풍자·조롱하는 퍼포먼스였다.

A씨는 언론·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생명·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미국에 다른 지역으로 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귀국했다. A씨는 경찰에 욕설과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사 A씨가 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이집트 법원의 판결문, A씨가 구금돼 있는 모습을 찍은 영상 페이스북 사진, 언론 인터뷰 기사 등에 증거가 됐다. A씨 지송 조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나타난 이집트 상황은 암치했다. 이집트에선 정부 비판자·정치운동 시위자·기자·인권운동가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물고문 등 제3자 의문 심문으로 범죄자는 것으로 보고된다.

재판부는 박해 가능성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은 해외 나의 교정 단체 최소한 공무원 기초 사람"이라며 "국적국인 이집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기준 1심 법원에서 지든 난민 사건 243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5건뿐이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집트 법원의 판결문, A씨가 구금돼 있는 모습을 찍은 영상 페이스북 사진, 언론 인터뷰 기사 등에 증거가 됐다. A씨 지송 조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나타난 이집트 상황은 암치했다. 이집트에선 정부 비판자·정치운동 시위자·기자·인권운동가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물고문 등 제3자 의문 심문으로 범죄자는 것으로 보고된다.

재판부는 박해 가능성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은 해외 나의 교정 단체 최소한 공무원 기초 사람"이라며 "국적국인 이집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기준 1심 법원에서 지든 난민 사건 243건 중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5건뿐이다.

재판부는 "A씨가 엘시시 후보가 아닌 상대 후보측의 선거 부정 행위를 주장하고 실제 후보를 비판한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라고 한 데 "A씨가 징역 5년을 받게 된 점도 박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예리 기자 lr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012면 사회

서울시 인권위,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제' 문제 논의

임시회서 개선 가능성 검토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된 것을 두고 논의에 착수했다. 의국인도 대국민시 뚜렷이 재난 상황에 처했지만 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권리의 중대한 영연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외국인은 한국 국적자와의 혼인 여부에 따라 지원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차별적 내가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회의를 소집해 서울시로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외국인 지원에 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회의는 기존 20일 예정됐다.

재난긴급생활비 사업은 지난 4월 16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구성원 전체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시 인권위에서 외국인 배제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인권위원은 통화에서 "외국인도 임원히 서울시 구성원인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해외에서도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가 재난지원금 대책을 논의할 때 외국인 지원 문제는 줄곧 논란이 됐다. 긴급복지 지원법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했거나 이혼·사별한 뒤 그 가족을 돌보는 사람, 난민법상 난민 등으로 한정한다. 서울시 역시 이 기준을 따르면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주민 단체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원은 "서울시 정책 결정에 있어 외국인 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김기스는 "논란이 일자 영주권자 이전이라도 서울시를 사랑하고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이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예리 기자 lrm@kyunghyang.com

07 주요 언론보도

06

한국경제

2020/06/02 화요일
A23면 사회

대검 "출국금지 조치 최소화"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제3자의 시각으로 출국금지의 적정성 등을 '이중검증'해 과잉 출국금지 조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국금지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수사 검사가 대상자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장검사 또는 차장검사 등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곧바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권감독관의 결재를 받아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도피 차단, 형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기주·이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감독관의 검증을 통해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lwpeople@hankyung.com

세계일보

2020년 06월 03일 화요일 011면 사회

"출국금지 대상, 수사 피의자로 한정해야"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1년 이상 땐 심의위 열어 심사"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출국금지 대상을 '범죄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출국금지 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지도를 도입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현행 출국금지제도는 헌법이 부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출국금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그런데도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고 그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동지가 유에디이부인의 출국금지는 물론 해외 사실주지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의신청 기간도 시나치게 짧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우선 출국금지 대상을 '범죄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해'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출국금지 기간 장기화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기구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신중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도 법무의 해제 통지를 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금지기간 만료 시 반드시 해제통지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출국금지 실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권고안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일보

2020년 08월 11일 목요일 A08면 기획

이주 여성들 이혼 느는데… 일자리 못 구한 채 '가난의 굴레'

글 최재영 선임기자 사진 박해윤 인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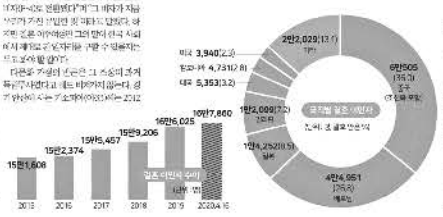
<4> 한국, 막막한 다문화 가정

경기 부천시 춘의동의 한 다가구주택. 필리핀에서 결혼 이주해온 레아(39)씨는 6.6㎡ 남짓한 원룸에 혼자 살고 있다. 옷 수납 공간이 부족했던지, 여고생 손님의 방문에도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한국에 지난 2008년 발을 디딘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다. 필리핀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한국으로 결혼이민 온 직후에는 행복했다. 장원영만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레아씨는 "처음 한 달 정도는 남편이 잘 해줘 정말 행복했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치를 못 먹는다고 말하고, 한국말을 못한다고 또 말했다"고 날벼락. 교육의 가속이 보고 살이 통화를 할 땐 주먹이 날아오기도 했다. 이혼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혼 1년 만이었다.

폭력 남편과 이혼한 필리핀 여성
신장병 앓서 빈수입 세번 투석 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생활고 극심

8년간 악착인 신분 고려인 여성
의협 주손 한건체 거부 국적 취득
남편은 치계 이니라는 이유로 제외
"동포비자만이라도 주길…" 간절

2008년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이 10만 명이 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서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글 싣는 순서
<1>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2> 일본 "내 일하는 것인들
<3> 가족 기업도 생활도
<4> 한국, 막막한 다문화 가정
<5> 한국 정착한 북한 난민

07 주요 언론보도

내일신문

2020년 06월 17일 수요일 020면 기획

공항난민들이 만난 한국의 민낯

정식 난민심사도 받지 못한 채 강제송환

난민신청 188명 중 13명만 정식심사 받아
세계 난민의 날 앞두고 인권침해 사례 공개

난민신청을 했지만 정식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기간 동안 인천공항에 갇혀 지내야 했던 르렌도 가족.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르렌도 가족처럼 공항이라는 경계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공항난민'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가 16일 공개한 '2019년 한국의 공항, 경계에 갇힌 난민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188명 중 정식으로 난민심사를 받은 사람은 13명뿐이었다. 나머지 175명은 정식으로 심사를 받을 기회도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2013년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가 도입되면서 공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이들은 곧바로 난민인정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부터 판단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심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적 보장이 제도적으로 부재한 데다 외부의 조력으로부터 차단되 있고 심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다툴 수도 없다"며 "위법한 강제송환과 여권압수의 관행 등 인권침해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신청을 해서 정식심사에 회부될 기회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나마 조건부 입국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에 명시돼 있지만 정식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을 때가 문제다. 신청자들은 이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걸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는 입법 공백으로 남아 있다.

공항 송환대기실이나 환승구역에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다는 게 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경제적 형편상 송환대기실에 머무를 경우 사실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고 좁은 공간에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수용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면 르렌도 가족처럼 공항 출국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야하는 상황이 되곤 한다.

변호사 접견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직전에 강제송환시켜 접견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 당일 강제송환될 수 있다는 난민신청자의 연락을 받고 접견을 신청했지만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 변호사는 "법률이 공항난민의 변호인 접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행정당국이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정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agle@naeil.com

내일신문 2020년 06월 17일 수요일
021년 기획

"인력파견업체 통한 불법체류자 고용 무죄"

대법 "직접 고용관계 보기 어렵고 불법체류인지 몰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고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기는 했지만 이들과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외국인을 소개해 준 업체가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라는 점, 이 파견업체가 A씨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준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외국인들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서 고의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봤다.

해당 인력파견업체는 A씨가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확인을 요구하자 마치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꾸며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경향신문

2020년 06월 19일 금요일 021면 사람

"난민이라고 말하면 범죄자처럼 바라봅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수라펠 '세계 난민의날' 기자회견

세계 난민의날을 맞아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에서 열린 난민인권을 위한 난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수라펠이 한국에서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보국선 PD로 군사정권에 대항…한국 생활 10년 봄구 '이방인'

난민법엔 동등한 대우 보장돼 있지만 '재난지원금'도 못 받아

한국 생활 10년째인 수라펠(35)은 아직도 사신을 '이방인'이라고 느낀다. 에티오피아 출신의 그는 2011년 한국에 들어왔다. 에티오피아에서 방송국 PD로 일하며 정권의 부정부패 사건에 계기가 됐다. 방송을 직접 부적하고 카메라 대단했던 당시 정부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그 사건 이후 고국에서 살기가 두려워졌어요. 아프리카에서는 권력층으로 의견을 표명하면 나도 모르게 살해당하기도 해요."

수라펠은 입국 2년 뒤인 2013년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한국생활은 쉽지 않았다. 한국에 들어온 직후부터 2015년까지는 서울, 경기 안산·포천시 등을 돌아다니며 라디어이터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다. 난민 지위를 획득한 뒤엔 전우공장, 철물공장, 합판공장 등을 오갔다. 열심히 일해도 결제는 늘 밀렸다. 6개월, 1년씩 밀려 회사에서 해고됐다. 월급을 못 준다며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 그 동당국이 난민에게 보내주는 문자들 보고 일자리를 구하러 가서 '외국인은 싫다'는 말을 듣고 돌아서곤 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수라펠은 많은 노력을 했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수강해 최고 수준인 5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인들의 난민에 대한 오해·편견식은 그에게 상처가 됐다.

"지금 공항이 열리고 난 때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니' '체류자격이 뭐니'고 물어봐요. 그때 '난민'이라고 답하면 저 내적 시선이 들어옵니다. 마치 내가 범죄자, 교주을 피린 사건인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 3월엔 세로은 어려움이 닥쳤다. 일하던 공장이 코로나19 때문에 일거리을 줄 수 없다며 한국인 직원만 남기고 외국인은 모두 내보냈다. 실업급여나 재난지원금 등은 받지 못했다. 한 달 내내 수입 없이 지내야 했다. 난민법에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나와 있지만 사회보장금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에게만 한해 지원됐다.

"부끄럽지만, 한국은 종이에 쓰여진 대로 난민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난민에 계적용된다는 법의 사회적 보호도 지켜지지 않아요." 수라펠은 '세계 난민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바늘구멍을 통과해 한국에 들어온 극소수 난민들은 언어 및 문화의 차이, 정부의 무정책, 난민에 대한 대중의 낮은 이해 등으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을 받는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난민을 우리 이웃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고 정부는 우리에게 보호 요청을 한 난민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이라고 했다.

수라펠은 기자회견에서 "난민과 이주민은 한국인과 분리돼 살아가지 않는다. 친구로, 고용주로, 공동체로 더 시대관계를 맺는다"며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재난이듯 우리의 고통도 한국 사회가 겪는 고통의 일부으로 대해달라"고 말했다. 조문희·조해질 기자 moony@kyunghyang.com

중앙일보

2020년 06월 19일 금요일 01면 종합

"공장 일하는 난민도 한국 미래 일부"

'세계 난민의 날' 맞는 제주 예멘인들
난민 신청 550명 중 4명만 인정
대부분 국내 조선소·양식장 근무
콩고 난민은 "한국 벗어나면 죽음뿐"

2018년 5월,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이스마일(32)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아시아 항공편을 타고 제주도에 왔다. 그 무렵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500명이 넘었다. 이들은 입국신고서의 입국 목적 칸 '관광'에 체크했지만, 사실은 내전을 피해 한국을 두 번째 고향으로 선택한 이들이었다.

갑작스러운 이방인들의 입국에 한국 국민은 적잖게 당황했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이들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어봤다.

18일 서울 이태원 이주민가정지원센터에서 만난 이스마일씨는 "처음 우리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난 2년간 한국에서 살며 한국인들과 제대로 대화했을 때는 오해 없이 친절하고 좋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친구 대부분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다.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예멘인 550명 중 난민 인정자는 4명에 불과하다. 이스마일씨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많다"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 미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미래도 한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5월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모함마드 알마마리씨. 본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식당에서 웃고 있다. [사진 모함마드 알마마리]

모함마드 알마마리(37)씨도 2018년 5월 제주도에 왔다. 지난해 한국인 하민경씨와 결혼해 할랄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내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적 박해 등의 인정 사유를 직접 소명하지 못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알마마리씨는 역시 "한국에서 아내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인종차별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안내서 등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알마마리씨는 "함께 온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나 지원 봉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는 상황"이라며 "불행히도 정부의 도움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대부분인 490명은 알마마리씨처럼 인도적 체류자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에서 조선소(119명), 제조업체(155명), 양식장(10명) 등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

예멘 난민 이외에 다른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도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인정 신청자 중 심사를 완료한 2만9463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2명(3.6%)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8%)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17년째 난민 불인정자로 살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나디아(가명·42)씨는 "아이들은 한국말밖에 못 한다"며 "이 땅을 벗어나면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라고 호소했다.

나디아씨는 남편이 반정부 세력으로 몰리면서 한국행을 택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디아씨는 "한국은 이미 내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평범한 한국인으로 정상적으로 사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난민 신청이 1만5000건을 넘겼는데, 현재 난민 심사 인력은 국내에 93명뿐"이라며 "난민을 효율적으로 걸러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광우·박사라·편광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07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0년 06월 23일 화요일 A03면 종합

"편법 관광비자 안막고 취업 입국은 막나"

동남아인력 관광비자로 입국
일손부족 농어촌서 편법근로
외국인 취업비자는 발급안해

22일 외국인들이 서울 영천구에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올 들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E9비자)는 2003명에 불과하다. 〈이승훈 기자〉

관광비자(B2)를 이용한 외국인 노동자 편법 입국은 막지 못하면서 3~4년 동안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E9 비자로 입국해야 한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막고 있는 정부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고득영 해외입국관리반장은 "최근 B2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 관광 목적은 아니고 국내 산업 수요에 의한 분들 같다"며 "급여기가 끝나면서 선원 수요가 생겼고 농번기를 맞아 계절노동자분들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기가 끝난 어촌이나 농번기에 돌입하는 농촌에서는 당장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주 격리기간 동안 인건비를 주더라도 외국인 인력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들어오는 인력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 실제 경남 통영·미산·거제·사천 지역 기선권현망 멸치업계는 3개월간 금어기를 끝내고 7월 1일부터 멸치잡이를 시작한다. 멸치잡이 선원 40여 명 중 절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입국 확진자 중 필리핀인과 인도네시아인 확진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관광비자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입국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취업비자를 통해 들어와야 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통해 4월 13일 이후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했고, 그간 외국인에게 발급됐던 단기체류용 비자 효력을 모두 중지시켰다.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는 진단키트 등 방역·검사 관련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개개인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엔 현실적 이견에 제약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외국 현지에서 출국조차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들어와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그 지역에서 감염돼 입국하면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많은 상황"이라며 "인력난과 국외 입국 차단을 이중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처럼 14일 격리 등 중간 검역 과정을 강화해 관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좀 더 안전하게 해당 국가 근로자들을 확보하는 방법과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과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대책만 내놨다.

정슬기·안정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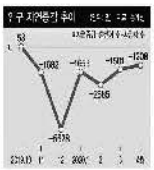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겨레

2020년 08월 28일 금요일 20면 사회

저출생 속도, 올해 더 빨라졌다

출생아 수 감소율 역대 최대
2015년 12월 이후 계속 줄어들어
사망↑ 출생↓ 6개월째 이어져 '최장'
코로나로 미룬 혼인 사상 최저



문화일보

2020년 08월 28일 금요일 3면

54만명 이주민 자녀 등 취학절차 간소화

외국 국적 청소년 중도입학
시·군 교육장이 입결 배정

'외국인 불법고용' 시몬스 사장 유죄

가사도우미 채용해 회사돈으로 급여 지급 … 검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 정식 재판 회부

내일신문

2020년 08월 29일 토요일 C20년 기획

'외국인 불법고용' 시몬스 사장 유죄

가사도우미 채용해 회사돈으로 급여 지급 … 검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 정식 재판 회부

유명 가구업체인 '시몬스' 기프티 지니트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필리핀 국적 여성을 고용하면서 비자 연장 법을 위반하고 급여까지 회사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 관련 법 위반 혐의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부는 이기용 전 시몬스 대표 A씨(5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생활교사 및 가사도우미 역할을 떨어 알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약식 기소를 했고,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의 구형했다.

시몬스코리아 변호인에도 김씨의 소극적 기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판사는 "범죄가 낮다고 보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선고했다. 법원의 권한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약식기 대표이사 겸임 시몬스는 2010년 필리핀 국적 여성 L씨를 고용했다. 시몬스 본사 및 시몬 연관성에 근무하며 필리핀 현지 시장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문직 E-2' 비자를 받은 것이다. 체류자격에서 화장품업도 이뤄졌다.

시몬스는 L씨 채용을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한 뒤 올림국·외국인청에 E-2 시증발급신청서 제출했다.

E-2은 전문인력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기에 용이한 비자다. 3년 단위로 체류할 수 있어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 인력들이 선호하는 비자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허위로 만들어진 신청서였다. 실제 L씨는 시몬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L씨는 시몬스가 아닌 시몬스 대표인 A씨의 자택에서 일했다. L씨 본부는 필리핀 현지 시장 마케팅이 아닌 A씨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였다. A씨가 L씨 급여를 회사돈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배임 내지 횡령의 가능성이 높다.

◆수사 시작되자 비용 회사 반환 = 하지만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문제가 된 비용을 회사에 모두 반환했다.

검찰에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A씨가 회사돈을 유용한 것과 관련한 미해결책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의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교사 및 가사도우미 역할을 떨어 알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약식 기소를 했고,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의 구형했다.

시몬스코리아 변호인에도 김씨의 소극적 기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판사는 "범죄가 낮다고 보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선고했다. 법원의 권한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약식기 대표이사 겸임 시몬스는 2010년 필리핀 국적 여성 L씨를 고용했다. 시몬스 본사 및 시몬 연관성에 근무하며 필리핀 현지 시장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문직 E-2' 비자를 받은 것이다. 체류자격에서 화장품업도 이뤄졌다.

시몬스는 L씨 채용을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한 뒤 올림국·외국인청에 E-2 시증발급신청서 제출했다.

E-2은 전문인력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기에 용이한 비자다. 3년 단위로 체류할 수 있어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 인력들이 선호하는 비자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허위로 만들어진 신청서였다. 실제 L씨는 시몬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L씨는 시몬스가 아닌 시몬스 대표인 A씨의 자택에서 일했다. L씨 본부는 필리핀 현지 시장 마케팅이 아닌 A씨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였다. A씨가 L씨 급여를 회사돈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배임 내지 횡령의 가능성이 높다.

◆수사 시작되자 비용 회사 반환 = 하지만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문제가 된 비용을 회사에 모두 반환했다.

검찰에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A씨가 회사돈을 유용한 것과 관련한 미해결책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의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07 주요 언론보도

07

한국일보

2020 · 07월 01일 수요일 A01면 2단

제주살이 3년차… 예멘인, 평범한 이웃으로 녹아들다

예멘인 602명, 무비자 입국 2년

네 식구 보금자리 꾸려 오하메드 감귤 포장 일하며 "한국 문화 만끽"

한국인 아내와 식당 운영하는 이민 "개중 강요? 배우자의 천주교 존중"

난민 신청자 중 2명만 '난민' 인정 대부분 '인도적 체류 허가' 신분 불안 부담해고·차별·금융소에 고통받기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예멘 출신 오하메드 씨 가족이 자신들이 난민 인정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부부는 한국인 아내와 예멘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서귀포=홍인기 기자

"저는 제주도 주민으로 살고 있어요"

지난달 29일 제주시 하귀1동 자동차 정비업체 밀집 지역. 이곳 한 식당에서 만난 오하메드(32)씨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2018년 이곳으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500여 명 중 한 명이다. 2018년 6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한 일부 예멘인들의 집단 가짜 난민 신청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바로 그 예멘인이다. 오씨는 "한국 문화를 만끽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오씨 가족은 부인 김은희(32)씨와 두 자녀, 그리고 오씨 형제 등 모두 6명이다. 오씨 부부는 2015년 결혼했다. 오씨는 "아내가 먼저 한국에 와 있었는데 예멘 내전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 말 터키에서 재회했다"고 말했다. 부부는 2018년 제주에 정착했다. 오씨는 "아내가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 제주를 택했다"고 했다. 부부는 현재 하귀1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오씨는 "아내가 천주교 신자라 주일에는 식당 문을 닫고 교회에 간다"며 "개중 강요?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오씨 부부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오씨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 한국어를 더 잘한다"며 "아이들 덕분에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오씨 가족은 제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오씨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다"며 "제주는 공기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아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오씨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종교의 자유"라며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종교의 자유"라며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씨 가족은 제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오씨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다"며 "제주는 공기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아 아이들을 키우기에 좋은 것 같다"고 했다. 오씨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종교의 자유"라며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홍인기 기자 ▸8면에 계속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일보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A06면 종합

'평화의 섬' 정착했지만… "전쟁 피해 왔는데 왜 난민인정 안되나"

"한국에 온 건… 한국에 놀아야 해서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아 온 교육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 보고서들이 속속 나왔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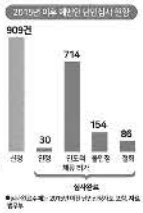
대한 예도 지역의 대표 예술단체로 도두동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하여 제주도민과 함께 하고 있다. 제주에 주민자치센터나 공연예술 단체가 있는 곳은 제주도에서도 이곳이 유일하다.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중에서도 이곳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예술단'이다. 예술단원들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공연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인들, 조기 저주부의 해결해줘"
때부분 공정·동정 등 적정 나가
유는날면 한국어 문화 배워

교육사회보장·구직 등 해택
난민 인정 안되면 그림의 떡
"최소한 모욕해야이나는…"

업부 직장신 배타·폭행 여전
인터넷서 노골적 언어폭력도
"본국으로 돌아가라" 반면 빈이찬까
중동지역 심서 변화에 촉각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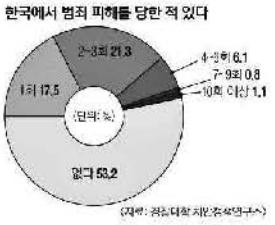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신문

2020년 07월 02일 목요일 009면 | 사회

이주여성 10명 중 5명 "범죄 피해 당해"

사기 등 재산범죄 30%로 가장 많아
한국말 서툴러 피해 신고 못해 40%



(자료: 경희대학 치안정책연구소)

#1. 필리핀 국적의 글로리아 디아즈(29·여·가명)씨는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했다. 'K뷰티'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서 행사를 찾기 보고 일자리도 구해 보고 싶어서다. 그러나 지난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모든 행사가 중단됐고 항공편마저 모두 결항돼 한국에 머물러야 했다. 문제는 생활비였다. 급히 아르바이트를 찾던 그는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 통장은 범죄에 쓰이는 줄이 불법인지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돈도 받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몰려 수사를 받아야 했다.

#2. 10년 전 한국에 정착한 응우옌티빈(35·여·가명)씨는 3개월에 한 번씩 베트남에 돈을 보내고 있다. 조금이나마 친정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송금 수수료 없이 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광고를 선전했고, 수수료를 아껴 보려는 욕심에 방법대로 한화 200만원을 보냈다. 돈을 받은 이는 며칠 뒤 빈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증명서도 사진으로 보내왔지만 얼마 후 사기임을 깨닫았다.

국내 체류 중인 이주여성 10명 중 3명은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재산을 노린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취약한 것으로만 여겨 왔지만, 한실에선 금전을 노린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한국 사정에 어둡고 한국어에 익숙치 못한 이주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결혼이주여성과 여성 이주노동자 26개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를 분석한 내용을 담은 '국내 체류 이주여성의 범죄피해 분석'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응답자 중 기혼이 168명(63.9%)이었고, 미혼 34명(12.9%), 이혼 29명(11.0%), 사별 10명(3.8%)이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 51명(19.4%), 중국 48명(18.3%) 순이었다.

한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3명(46.8%)이었다. 특히 물적 피해(재산범죄)를 입었다고 답한 이들은 81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54명(20.5%), 성범죄 29명(11.0%), 기타 14명(5.3%), 마약범죄 6명(2.3%) 순이었다. 가장 흔한 재산범죄를 사세히 보면 사기가 16.4%로 가장 많았고, 월급 갈취 9.1%, 절도 6.1%, 취업알선 브로커 갈취 4.9% 순이었다.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 본 일을 모두 신고했다고 답한 이들은 26명(21.7%), 대부분 신고했다는 이들은 14명(11.7%)에 그쳤다. 대부분 신고를 안 했다가 36명(30.0%),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도 31명(25.8%)에 이르렀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가 35명(40.2%)으로 가장 높았다.

이채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은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재산범죄에 취약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금희(당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안양관악성폭력상담소 생활안전과장은 "이주여성의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범죄예방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swl48@seoul.co.kr

서울경제

2020년 07월 07일 화요일 A01면 종합

'영주권 자판기' 된 투자이민제

투자외인, 영주권 취득후 먹튀
외자 유치 효과 없어 유명무실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관련 영주권자는 지난해 1,500명을 넘겼지만 정작 투자금은 빠져나가 투자 효과는 퇴색되고 문턱이 낮은 영주권만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먹튀'는 기본이고 외국인의 국외도피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관련기사 27면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1,560명(올해 4월 기준)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투자이민 1,489명, 공익사업 투자이민 71명 등이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특정지역(제주·인천·강원)의 부동산 또는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F-2)를 내주고 5년이 지나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투자이민제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는 중국계 자본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이 본격화한 2013년 이후 '5년 기한'를 채운 2018년과 일치한다. 제주도에는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가 2013년과 2014년 각각 667건(4,532억원), 508건(3,473억원) 이뤄졌다. 5년여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누적으로 각각 545명, 1,434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이민 금액은 2015년 1,014억원, 2016년 1,493억원, 2017년 926억원, 2018년 620억원, 2019년 309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부동산보다 투자금 회수가 쉬운 공익사업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건수는 지난해 120건(600억원)으로 2017년(39건·190억원), 2018년(91건·445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혁준·이희조기자
awlkwon@sedaily.com

07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0년 07월 17일 금요일 A30면 사회

국내 난민·인도적 체류자 처음으로 3000명 넘었다

작년 난민 신청, 러시아인 최다 실제 난민인정은 미얀마가 1위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강제추방되면 생명·신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일시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이다. 16일 법무부가 발간한 '2019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1022명)와 인도적 체류자(2217명)를 합쳐 3239명이 국내 체류 자격을 얻었다.

1994년 난민 통계를 집계한 이후 난민·인도적 체류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5년간 난민 신청도 급증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난민 신청자가 5069명뿐이었지만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며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중에서는 러시아인이 2829명(18.3%)으로 가장 많았다. 카자흐스탄인 2236명(14.9%), 중국인 2003명(12.9%), 말레이시아인 1438명(9.3%)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출신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미얀마인이 34명(43%)이며 에티오피아인·방글라데시인이 각각 6명(7.5%)으로 뒤를 이었다. 성승훈 기자

세계일보

2020년 07월 22일 수요일 011면 사회

외국 출생 미성년자 국적 선택기회 넓힌다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추가 골자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앞으로는 해외 출생자라도 자기 뜻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살면서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미성년자도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적보유신고란 결혼이나 입양 등으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얻게 됐을 때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국적은 상실된다. 국적보유신고는 1998년 도입됐지만 신고자는 1020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기존 국적보유신고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의 심사는 치밀해진다. 법무부는 퇴직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면접관이 귀화 면접 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한국일보

2020년 07월 23일 목요일 Y16면 지방

외국인 근로자 입국 무산 경북농촌 발칵

영양, 베트남 근로자 380명 계획,
법무부 "계약 종료 즉시 출국"
현지정부 보증서 요구로 무산내

영주시 계획 계절근로자 94명도
보증서 발급 시실상 불기능
고추 사과 등 수확 차질 불가피

수확철을 앞둔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손 공급이 끊겼다. 고추와 사과 재배농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증단 등 여파로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경북 영양군 농기면에서 고추 3.5ha를 재배하는 이모(65) 씨는 고추 수확을 20여일 앞둔 22일 "외국인 근로자 수급 중단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 같은 "다음 달 중순부터 500여곳 중만 내일 10명 인팎의일손이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에도 일손이 부족해 수수로 끝이 아무 과나를을 거우 구했는데 정작 수확기에 일손이 모자라게 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난해에는 영양군이 운영하는 인력센터에서 베트남과 캄국 근로자를 구해 고추를 수확한 이씨는 "고추 수확시기 만이르드 공동근로시업을 중단해서 농가로 일손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농촌일손 해소 부족을 위해 2017년부터 베트남 다낭시와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맺고 6차례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르나19)으로 다낭시로부터 사업중단을 통보받았다. 이에따라 고은 베트남 다이쿰우연성기 협으를 거쳐 계절 근로자 380명을 데려올 계획이었다.

영양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데려오지 못한게 된 것은 최근 외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유입' 급증하자 법무부가 대응 지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부 출국보증서를 추가 제출토록 요구했고, 베이트우연성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보증을 발시 못해 내달 사업이 최종 중단됐다.

영양군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 120여 농가에 배정해 그추와 삼추 수박 수확에 투입할 방침이었다. 영양군은 고추 주산지로 재배면적이 1,324ha에 이른다. 입국 후 금한대에서 시동 또도나 검역 과정을 거쳐 지역 지연학양협에서 2주간 격리한 뒤 이상이 없으면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무산으로 9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는 사과 등 재배농가도 발을 구르고 있다.

소700ha 년적으 과수원이 있는 영주시도 지난해 베트남 하이빈등과 계절 근로자 도입 왕해각서(MOU)를 체결해 3개월간 베트남 근로자 74명이 사과를 수확했다. 올해는 5세원자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94명을 데려올 계획이었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따라 영주시는 인력지원 센터를 최대한 가동해 실직자, 휴폐업 삼인 등으로 농촌일손을 구할 방침이다.

김영동 경주시 일삼특작과장은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9농가에 205명을 구해 농가에 배정했 나, 하반기에는 250명여 농촌 근로자를 구해야 하는데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권정식이묘호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한겨레

나는 지금 '모르는 나라'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상을 더 얻는 다나 한국 든이와 끊선 살아온 대목국 몽스터스장님 출입국·외국인청에 지 진출국 신고 한국서 살니년 쓴 그 부 제일구분

코로 증명책 등서에 민속 다살

"강제퇴거 중인, 처음 말인 마운"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법무부는

"출국해야 재입국 허서" 방침 고수

8 구국과 존산다 문 U 지원는데 출입 힘 좋은 작법은 단속의 공포 못서니다 않기 억해 꼭수적 주이크 분이인 긴다며 "삶는 사업소 선 살아"

시간동안 집 세무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직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국적자는 내가 생활하던 곳에서 2년 10개월 넘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다른 외국인들은 여권을 제출하고 출국 절차를 밟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 여권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조선족 동포로 살았습니다.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 한족과 같은 한자를 쓰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지만 엄연히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여권의 유효기간은 2015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31일,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4년 이상 체류하면 재입국 금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중국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나는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겨레

2020년 07월 25일 토요일 00판 인쇄

경찰관이 '아랍에밀 시민들로 스페셜 등에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건물을 촬영하고 있다.

"3층은 업소 사무 공간으로 산업안전 공간이었다. 노동해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가리켜서부터 확정했다. 다른 산업의 업체도 마찬가지로 마련을 못 했다는 사실은 없는 이상. 언어구조가 '외국 다른 분야 유지보수 부분을 가진 산업안전 '일이 확인 하기 어려워서 업무에서도 부분 산업안전 업체들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법'이 부분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법'이 부분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법'이 부분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신문

2020년 07월 29일 수요일 010면 종합

외국 노동자·봉사활동 끊겨 '일손 가뭄'에 속타는 농촌

수확철 농가 '인력 비상'

상반기 계절근로자 4797명 입국 못해

일당 2만원씩 올라… 공무원까지 지원

"지난 3월 고향에 잠시 갔다 오겠다며 나간 40대 베트남인 부부는 소식이 없습니다."

경남 사천시 지역 노마농 시설재배 농가인 문은 28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농촌에서 외국인 일손은 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올해 코로나19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가고 일손 돕기 봉사 활동마저 위축돼 양파, 마늘 등 주요작물 수확철인 지난 5~6월 농가마다 일손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법무부는 상반기 48개 기초지자체에 479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지만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5개월간 일한 뒤 돌아간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배정된 992명도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 일손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대학생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도 끊겼다. 경남도와 농협경남본부는 상반기 농사철 일손 부족을 행정·공공기관과 농협 등의 봉사활동과 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한 인력 알선 등으로 겨우 넘겼다. 하반기 수확철에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4~7월 모두 116차례 도 공무원 2318명이 고령·여성 농가 등 취약농가 위주로 일손돕기 지원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인원이 2배 많다. 농협경남지역본부도 상반기에 봉사활동을 예년보다 2배 늘렸다. 경남농협 농촌인력담당 김영창 차장은 "지난 4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8차례 매회 30여명이 일손돕기를 했다"고 말했다. 도와 농협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합천·창녕군 농촌 지역은 가까운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에서 일손돕기 지원을 많이 했지만 올해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런 활동이 중단됐다.

농번기 일손 부족은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져 농가에 부담된다. 함안·창녕·합천군 농가 등에 따르면 양파, 마늘 수확철인 지난 5~6월 하루 삯이 1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2만원 올랐다. 창녕에서 마늘농사를 하는 70대 농민은 "인건비가 올라도 수확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다 농협에서 일손을 도와준 덕분에 수확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인력중개센터와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가 도시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50~60대를 알선해 지역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줬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08

세계일보

2020년 08월 13일 목요일 025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 것"

광복절 맞아 국적증서 수여식
빅찬익 열사 후손 등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국적 획득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12일 경기 정두리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귀화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하얼(哈爾)독립운동 시사 후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교업무를 맡았던 빅찬익 선생의 증손녀 등 2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12일 수여식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21명은 모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이들은 중국(14명), 키르기스스탄(4명), 러시아(2명), 루마니(1명) 등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의 시세존·비속은 브별귀화 요건에 해당하 후손임이 확인되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06년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 365명이 특별귀화를 통해 새롭게 국적을 얻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 차장 등을 지낸 박찬익 선생의 증손녀 윤비람씨는 이날 "할아버지를 생전 만난 적은 없지만, 중국에서 살 때도 할아버지의 나라 사랑 나눔과 희생정신은 잊은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열 자랑스럽게 여기며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교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또 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국적을 부여받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2020년 08월 14일 금요일 018면 경제

녹색금융가·난민전문 통역인… 미래 新직업 50개 키운다

정부 "일자리·新산업 지원" 적극 육성
직업훈련 교육·공인자격 제도 등 마련
도시분석가 등 국제 유망 직종도 발굴

'녹색금융 전문가, 육아전문 관리사, 난민 전문 통역인, 커머스 크리에이터, 오디오북 내레이터….'

정부가 미래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지원을 위해 14개의 신직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나아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킨트를 러 등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37개 이상의 유망 잠재 직업을 국내에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미래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하고,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 수요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교육을 강화하고 법개정 등을 통해 공인자격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스마트건설 전문가는 기존 건설 기술뿐 아니라 드론 측량, 3D프린팅 활용 건설자재 생산 등의 기술까지 갖추어 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녹색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전문가도 특성화 대학원 지정·운영을 통해 육성한다.

수요가 있으나 제도적 상지가 부족했던 신직업에 대해선 공인자격증제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 관리사, 기부자를 발굴해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에게 재원 지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향상 인력난에 허덕이는 난민 전문 통역인에 대해서도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양성기관도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37개 이상의 잠재 신직업 발굴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킨트를러는 자율주행차와 드론의 공간 관리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프로그래밍하고, 사이버 도시분석가는 도시의 안전, 보안, 기능성 보장을 위해 도시 데이터를 관리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글로벌 유망 직업의 도입 필요성과 시장 수요 규모 등을 연구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lee@seoul.co.kr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0년 08월 24일 월요일 010면 사회

귀국길 막힌 외국 노동자, 농어촌 취업 허용

생계부담 덜고 인력난 해소 효과

이동수 기자 ds@segye.com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귀국길이 막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농어촌에서 일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중단·감축되면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어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

계절근로 신청 대상자는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올해 4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다. 법무부로부터 지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합법지위 체류자가 해당한다.

농어촌 인력 수요 조사 결과 농업분야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09명이, 어업분야는 4개 지자체에서 265명의 일손이 필요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 허용 분야는 고추·수박 등 시설원예·특작, 배·사과, 인삼, 곡물, 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 등이다. 어업분야 계절근로자는 김 건조, 다시마·미역 톳 염식,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에 선정되면 시·군농협 각 지자체에서 3개월 이내 농어기로 허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기타(G-1)비자로 변경해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 22만원은 전액 면제된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고, 재입국시 특별한국시험에 응시할 경우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E-9 자격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전환할 때 1~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세계일보

2020년 08월 27일 목요일 010면 사회

귀국길 막혀… 불법체류 40만명 '사상 최대'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꼴 지난해 동기대비 10% 늘어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지난 5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명이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고치다.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 불법체류자는 모두 39만6654명이었으며, 이는 지난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할 외국인이 국내에 발이 묶이면서 빚어진 사태로 분석된다.

불법체류자 중 75%인 29만6000명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해 90일 미만만 머무는 '단기체류 외국인'이었으며, 대개 귀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사례로 파악됐다. 단기 불법체류자는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 나머지 10만여명은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등록증을 받고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같은 기간 7.4% 늘어났다. 장기 불법체류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것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초 처음이다.

또 5월 총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도 1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라는 의미다.

09

朝鮮日報

"나도 어엿한 이주민 선배… 우리가 나서 후배들 자립 도와야죠"

우리사회 튀주민

소모뚜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

"한국 생활 25년, 이주민 위해 유통 알선 이주노동자 복지관 건립 발판해고 센터 세워 스스로 목소 지조 시스템 구축 고국 미얀마 민주화 운동도 지속 이어가"

07
주요 언론보도

한국경제

2020년 05월 05일 오요일 A 9면 사회

불법체류자 40만명 … 코로나로 '역대 최다'

"한국은 방역 안전국" 인식
임금 수준도 높아 눌러앉아
각국 검역 강화로 귀국길 막혀
자진 출국 신고 1만명 발 묶여

이해성기자 hscale@hankyung.com

한경레

2020년 09월 22일 화요일 00면 사회

출신국에서만 비자 재발급해주는 규정 탓에…
'코로나 생이별' 고려인 가족 발동동

출국한 동포들 몇달째 못 돌아와
이산가족 되고 자녀 학교 못 다녀
미등록 체류상태로 바뀌어 불안도
지원센터 "법 바꿔 국내서도 재발급을"

전광준 기자 kjh@hani.co.kr

한국경제

2020년 09월 24일 목요일 A29면 사회

출입국 발 묶인 외국 기업인 서울시 "2주 격리 풀어달라"

기업들 투자유치 끊겨 '비명'
법무부·방역당국에 완화 요청

국내 지사에 근무하는 유럽 제조업체 직원인 외국인 A씨는 올 들어 아직까지 한 번도 본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출입국 절차가 강화돼 2박3일 일정으로 나녀오려면 양국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데 한 달여가 걸리기 때문이다. A씨는 "대규모 투자 전에는 실사 등 대면 소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본사에서 한국으로 건너오지도 못해 사실상 투자가 끊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외국 기업인의 고충을 수용해 법무부와 방역당국에 외국 기업인에 대한 2주 자가격리 규정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국 전 검사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 또 검사를 받아 두 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 출장이 어려워 본사와 자회사 간 비대면 면담만 하다 보니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외국계 기업의 민원이 많다"며 "자가격리 규정이 완화되면 더욱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도 코로나19 상기화로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자 출입국 절차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 중국, 일본 등과의 여객기 운항 재개를 허가했는데, 이날 전 비행기 탑승 사흘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14일 이내 단기 출장을 오는 외국 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방침을 밝혔다. 대만은 지난 6월부터 국가별로 위험 수준을 판단해 기업인과 유학생 등의 자가격리 기간을 2주에서 5~7일로 줄여주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인에게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출장을 다녀오려면 해외 기업 초청장 수령부터 비자 발급, 양국에서의 자가격리 기간까지 너허 '배보다 배꼽이 너 큰' 상황이라 사실상 출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내 기업인과 외국 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조치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준 완화는 중대본 등 방역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이인혁 기자 pjk@hankyung.com

07 주요 언론보도

서울경제

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A31면 피플

소외된 이웃 위해 54년 외길 '파란 눈 신부' 한국 국민 됐다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R.존
탄광촌·철거민 등 권익 앞장
법무부서 한국 국적증서 수여

54년간 한국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온 뉴질랜드 신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났다.

뉴질랜드 국적의 브레너 로버트 존(78·사진) 신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로부터 한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존 신부의 한글 이름은 안광흔(光薰)이다.

안 신부는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20대 청년으로 한국에서 광혼의 이름을 받았고 54년이 흘러 80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며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 그 자체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안 신부는 지난 1966년 원주교구 주임 신부로 부임해 1969~1979년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썼다. 1978년 정선신용협동조합을 조직해 탄광촌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고 1981년에는 천주교서울교구로 자리를 옮겨 목동성당 주임신부로 재직하며 당시 올림픽 준비로 지역에서 쫓겨난 주민들을 위해 철거반대운동에 참여했다.

1999년에는 주민자치의 협동공동체 마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올리협동조합'을 설립해 저소득 주민들 삶의 질 개선에 노력했다. 외환위기 때는 '서울북부실업자 사업단장복지부' 대표로 활동하며 실업자기 된 이들과 함께했고 2016년에 산양주민연대를 만들어 소외된 이웃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에는 인권 및 봉사 분야의 '아산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odaily.com

東亞日報

2020년 09월 29일 화요일 A12면 사회

법원 "법무부 난민신청 사유 제대로 조사안해"

종교박해 피해 한국 온 난민자
체류자격 변경불허에 무효 판결

법무부가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의 사유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중동 국가에서 온 난민 신청자 A 씨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안 판사는 "A 씨의 난민 신청서만 살펴봐도 박해 경험 등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법무부는)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1993년 처음 한국에 온 A 씨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본국으로 돌아간 A 씨는 개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A 씨는 가까스로 다시 한국으로 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배교자로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난민 신청을 했다.

A 씨는 난민 심사 동안 한국에 머물기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 씨가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또 난민 신청을 했다"며 기초 조사도 하지 않고 신청 당일 불허 처분을 내렸다.

A 씨를 대리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법원이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이에 무효로 판단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10

東亞日報

2020년 10월 08일 목요일
A14면 사회

대법원 승소 후에도 입국 거부 유승준, 다시 소송 제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올해 7월 한국 정부로부터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유 씨는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때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유 씨는 2015년 한국 법원에 지외 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올해 7월 2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세계일보

2020년 10월 09일 금요일 009면 사회

한인 2세 취업제한 해소… 병역기피 악용 '구멍'

'국적법' 헌법 불합치 의미·전망

"만 18세 이후 국적 이탈 제한 예외 인정 안해 위헌성" 판단
해외 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 공직 진출·군복무 제한 논란
'예외 허용' 후속법 개정 과제

이노형 기자 scope@segye.com

헌법재판소가 해외 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기본권 침해에 주목해 국적법 내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의무' 조항에 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의 변경에 따라 국적 포기 기회를 놓쳤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또 이들의 이중국적에 제한을 느는 해외 자리에의 진출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복수국적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세밀한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헌재는 현 국적법 조항이 복수국적자의 국시이탈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 중에서는) 외국에서만 주로 체류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별다른 접촉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해당 국적법 조항은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만 기계적인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시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률적인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 내 국적이탈 제한 조항이 생겨난 이후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한국 국적법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국적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권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의 한이 3·4세가 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만 18세 이후에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의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군 복무 제한 등 병역 선택이 제한이 생기는 문제가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 3만분기를 받는 연방공무원직 채용 시에도 시원소와를 거쳐야 한다. 현재이 위헌심판을 제기한 청구인 A씨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별 국적법 '국적선택' 조항 위헌 판단

심판대상 조항(국적법 12조 2항)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법무부 장관(병무청)부터 37세 미만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재판관별 의견

유남석(소장),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 헌법불합치
이선애, 이미선 — 합헌

재판관 7:2로 헌법불합치 결정, 2022년 9월30일까지 국적법 해당 조항 개정

한국에서 그를 대리한 전하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대한민국 병역자원이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장하게 됐지만, 자칫 병역회피자들마저도 국적이탈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를 어떻게 막느냐가 이후 법 개정의 쟁점이다.

헌재는 결정서지 설명에서 "해당 국적법 조항의 입법목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적이탈을 이유시으로 허가할 수 있는 시점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완전한 소항 폐지보다는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음을 증명하는 등 확실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만 국적이탈 기회를 주는 예외조항을 두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등 이 사안에 적극 관심을 가져온 김종순 변호사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17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 해소와 무관하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07 주요 언론보도

한겨레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009면 사회

"베트남인 잘못해도 변명만·캄보디아인은 돌변하는 습성"

차별·편견 부추기는 법무부

정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재
중국·몽골 등 국가 부정적 편견 다수
"배우자 존중 아닌 갈등 조장 우려"

'캄보디아인은 돌변하는 습성이 있어서 봉사에는 조용히고 난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외지인이 현지인을 비하하거나 구박하는 행동을 하면 폭행이나 흉격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태국인들은 깊은 사고를 하거나 참조직 고통을 기피하고 무슨 일이든 일찍 끝내기를 바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주민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를 위해 펴낸 '생활 풍속과 사회문화 이해' 교재의 일부다. 국제결혼한 부부의 상호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20~30년 만든 교재인데 곳곳에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부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재에서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타이),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7개 국적자와 출가입체를 통해 국제결혼한 한국인에게 사회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교재는 이때 사용된다.

결혼 풍속과 문화를 국가별로 펴낸 이 교재에는 정부가 파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편견과 혐오가 뒤섞인 표현들이 넘쳐났다. '필리핀' 편에는 "자존심이 강한 필리핀인들을 무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폭력이 돌출하기도 한다. 사업 기회 협약과 약속 등을 기입 내에 지키 거나 정면하듯를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국' 편에선 "중국인은 중화사상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문화가 유일한 것으로 여기기에 주위의 민족을 오랑키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고, '베트남' 편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은 체면을 유지하려는 습성과 자신들이 멈에를 즘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깊로한 일에도 끝까지 버경과 이유를 대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수를 했을 때 사과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적었다.

센분가 놀은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교육자료로 인해 상호 이해가 아닌 갈등과 폭력이 조장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는 "법무부 교육자료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은 나라를 권장하여 협소하게 바라보고 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자료를 통해) 즈길된 편견으로 배우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제도 취지와 달리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이 조장될 수 있는 부정적 내용이 여과 없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선인지 ·문화 분야 간수를 늘아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향구 기자 jg@hani.co.kr

한겨레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027면 오피니언

'외국인 편견' 가득 찬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책자

법무부가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위해 제작한 안내 책자에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3일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국민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교재 '결혼 풍속과 사회문화 이해'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재에서 사뭇 과한 편견을 주입하려는 혼도에기 쪽이 없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보면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일에도 끝까지 변명을 대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캄보디아인은 돌변하는 습성이 있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필리핀인은 약속을 기일 내에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태국인들은 깊은 사고를 하거나 창조적 고통을 기피하고 무슨 일이든 일찍 끝내기를 바란다' 등 비합리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인이 중개업체를 통해 주로 국제결혼을 하는 7개국의 국적자와 결혼하려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늘어나면 조장기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 등을 막고자 도입한 교육인데도, 배우자를 존중 아닌 갈등 조장 우려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중앙일보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Y20면 종합

과메기 철 맞은 포항, 비자 연장해 외국인 일손 잡는다

코로나로 해외 근로자 입국 못해
법무부 체류 연장 한시적 허용

과메기 철(11월~이듬해 3월)을 앞두고 경북 포항 일대가 분주하다. 과메기 가공을 위한 '일손'이 그만큼 많아지는 시기여서다.

과메기는 꽁치를 짚으로 엮은 뒤 바닷가 덕장에 매달아 찬바람에 일렀다 녹이기를 반복해 쫀득쫀득하게 말린 것이다.

그동안 포항의 부족한 과메기 일손은 다른 농·어촌처럼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을 통해 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맡았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자가격리 및 항공편 문제 등으로 해외 입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에 포항시는 고심 끝에 과메기 작업에 투입할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예년처럼 외국에서 근로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근로자 가운데 비자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을 빌리는 방식이다.

정종용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법무부를 통해 과메기 업체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비자 연장, 취업 허용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농림부에서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를 일부 손질해 농·어촌에서 한시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포항이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를 통해 과메기 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에서 5개월 한시적 국내 체류 연장과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다. 단, 비자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국내 방문 동거(F-1) 비자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만 대상이다.

포항시는 20일 기준 베트남·태국 등 9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모집한 상태다. 전국 지자체와 결혼이주여성, 고용노동부 등에 도움을 받아 근로자를 구했다. 이들은 이달 말부터 과메기 건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07 주요 언론보도

내일신문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020면 기획

인터뷰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외국인과 상생 분위기 만들어가야"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올해 8월말 현재 168만명에 이르고, 단기 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211만명에 달한다. 이들을 책임지는 정부부처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차규근(사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본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외국인과 상생·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일신문이 추진하고 있는 외투나눔사업(어서와, 거울은 처음이지?)에 지금 동참한 계기도 여기에 있다.

차 본부장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따로 있는게 아닌 한 몸 상생하고 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투나눔사업은 그런 면에서 새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동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해 겨울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찍부터 장·차관님께 보고하고 흔쾌히 사인 final을 받았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본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외국인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무원이다 보니, 행사 취지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며 "모든 게 낯선 외국인에게 우리의 정과 나눔 문화를 알게 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적극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은 본인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옷장 속 외투 10벌을 기부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위에 공존하는 삶을 불편해 하거나 경계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줄이는데도 외투나눔사업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외투나눔 사업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다가가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 국민과 외국인 상호간의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는 자율외투 나눔행사와 함께 수도권 중·고등학생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흑역을 치르는 정부부처 중 하나다. 초기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막지 않고 잘 대응하고 있는 편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성공한 수 있었던 대응방안에 대해 차 본부장은 초기 중국 입국제한 조치(2월 4일)와 활동범위 제한 명령제도(4월 1일), 비자면제 일정 및 무사증잠정 정지(4월 13일), 재입국허가제 부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3월 1일) 등 다양한 선제적인 조치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특히 지난 6월 1일 재입국허가제 부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법무부가 제안해 시행한 것이 보람이었다"며 "법무부는 욕설을 날지 않고, 불필요한 출국은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내일신문

2020년 11월 22일 목요일 (20면 기획)

[창간특집] 나눔으로 차별에 맞서는 사람들 ① 이민 국경안전 시킴이, 법무부

"외국인 안전, 우리 사회안전과 뗄 수 없다"

"어서와, 겨울은 처음이지?" 제3회 외투나눔 대축제

코로나19 대응 위해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24시간 활동
외국인 외투나눔사업에 1200벌 기부…방역시각지대 해소

내일신문은 2018년부터 매년 12월 창간 기념사업으로 '어서와, 겨울은 처음이지? 외국은 이웃과 함께 하는 외투나눔 대축제'를 주최해왔습니다. 시민들이 기부한 겨울옷두를 따뜻한 느리 혼신 역국인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심보와 보수를 넘어 나 옷을 하며 내옷을 지향한다'는 창간정신은 이제 '함께 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반대, 다문화, 공존은 우국인 거주자 200만명 시대, 금로벌 대한민국의 꼭 필요한 키워드입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준 주역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이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조끼를 들고 '외투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우리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올해 8월말 현재 231만명(장기 체류 외국인의 이력)에서 이들의 인권과 우리 사회안전을 다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없는 시대가 왔다. 북에 기술이 없는 중국(동포),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온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80%를 넘게 차지하면서 사회보장 안전이 든세서 커고 한다.

물가 올라 코로나19 대유행이 으제 되면 추우데 부여력이 약한 외국인들의 방역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 외국인 브호 등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의 최대 관심사이일 수밖에 없다.

◆오투 나눔사업 적극 참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내일신문과 2018년부터 매년 12월 진행하는 외국인 겨울 외투 나눔행사(어서와, 겨울은 처음이지?)에 적극 참여하게 된 계기도 외국인들의 겨울철 안전을 고려해서다. 본부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본부 및 22개 소속기관 등에 총 1200벌이 넘는 외투를 수거해 기부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남녀노소 누구, 중동, 아프리카 등 따뜻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의 추움을 실감할 수이 없고 특히이 노출되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놓여있다"며 "외국인의 안전이 우리사회 안전과 뗄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겨울 외투 나눔사업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부는 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부터 체류하고, 출국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 위해 외국인의 입국 차단, 합법한 외국인의 체류 지원,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또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국적 등 매우 다양하다.

◆특별입국절차 진행 = 국적 코로나19 확산유입 방지를 위한 출입국심사와 공무원들의 출입국 심사 절차가 사정거본서 정상 출입국심사관 등의 인구서 괄늘어났다. 당초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 시 본인정보의 여권 소지, 탁국인의 유효한 사증 등 입국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1명당 입국심사 기준 1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소지 증보제공, 앱 설치 여부 확인, 감염병 관련 증리대상자 확인, 자가격리·시설격리 구분, 역학조사 분내용 숭지, 지역 연락 능의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24시간 긴급상황 대응 = 출국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민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업무도 추가됐다. 긴급대응단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해외유입을 차단, 선제적 출국 등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2일 편제적(87명)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긴급대응단은 총 15명으로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핸드폰대수 예약을 수행하고 있다. 국의 전나성확 대응책 소속 3팀 이상은 24시간 긴급상황에 대비 중이다.

지난 10월 5일 구내 인고자가 신체 없이 국내 누속성확자 복점성확, 그런 등을 없고 있는 외국인 A(20·남)씨를 지노해 출국시킨 것을 무도 7 급대응단이 처리했다.

긴급대응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있기전이 질병관리청 결병관리형 승격도 하나의 센터로 매리 준비해서 온 대시할 수 있었다"며 "24시간 체국 공항의 무나너관리그 브호외국인을 파악해 조치하는 등 국심적대응해드를 확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일 기자 sikim@seoil.com

07
주요 언론보도

東亞日報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A16면 사회

국내 외국인 222만명… 충남인구보다 많아

1년새 16만명 증가… 총인구의 4.3%
OECD 다문화국가 기준에 근접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22만 명을 넘어섰다. 1년 만에 16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수가 4.3%에 이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류하는 '다문화·다인종 국가' 분류 기준(5%)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행정안전부가 살펴본 지난해 11월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18년보다 약 16만 명이 증가해 222만66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인구(5177만9203명)의 4.3%를 차지한다.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8번째 인구가 많은 충남(218만8649명)과 대구(242만9940명) 사이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등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 177만89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외국인 주민 자녀 중 한국 출생자가 25만1966명으로 11.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72만90명(32.5%) △서울 46만5885명(21.0%) △경남 13만4675명(6.1%) 순이다. 전체 외국인의 59.4%가 수도권에 사는 셈이다.

시군구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공단 밀집 지역인 △경기 안산시(9만2787명) △수원시(6만7073명) △화성시(6만5040명) △시흥시(5만9634명) 등에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11

‘外’ 몸값 급등·‘韓’ 실업급여 요청하며 퇴사… “코로나, 나빠요”

무종합인력 갈어진 시점

불해 외국인노동자 5590명
국내 5년째 넘어 원…
출입국 규제 영향도
지난 대비 63% 감소
임금은 3년 넘게 증가

자가격리 비용 日10만엔
조선족동포 무급에도
구직 활동은 활발 인데
계절 근로자 입국 무소도

“한국 사람은 안 와요”
신업을 지탱하다…“인건
3D 업종 취업보다
신업군에 선택…

외국인 노동시장 유형 변화

07
주요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0년 11월 09일 월요일 A01면 종합

외국인 노동자 유입 3분의1로 뚝

비자 갱신 안돼 인력수급 비상

코로나19사태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 외국인노동자의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귀국한 뒤 비자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데 이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수단이 사라져 새로운 노동자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관련기사 A31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취업 가능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3~10월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외국인은 4만65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3313명과 비교하면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80만명가량을 유지해왔는데 12.5%의 노동자가 줄어든 셈이다.

특별한 기술을 갖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발급받는 비자 중 대표적인 것은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다. 3년 동안 일한 후 한 차례 비자 연장을 해 1년10개월간 추가로 일할 수 있다. 4년10개월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방식이다. 조성호·박윤예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일보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A27면 오피니언

아침을 열며

중년 아저씨 유승준은 한국에 올 수 없는가

이철우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신분 경이 밝혀졌다. 병역기피자로 처벌 받은 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을 제한 금지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경화 장관은 사증(비자)을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경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30년 동안 아주 이 본래의 자기가 부승준의를 해칠 위한 이었어 입국을 금지하느냐고 항의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한 것은 2002년의 일이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그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했다. 그 후 그는 18년이 넘도록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그는 2015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부터 사증 발급을 거부당한 후 행정 소송을 제기 했다. 작년 7월 대법원은 총영사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그에 따른 환송심 판결이 지난 3월에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사증 발급을 또 거부했고, 유승준은 제2차 소송라운드에 돌입한 상태이다.

재외동포법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지만 4년(유승준 사증발급 거부 당시는 3년)이 경과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영사는 입국 금지가 미래의 원칙에 입각하는지, 사증 발급 거부로써 실현하려는 공익이 무엇인 대상자가 없는 불이익보다 큰지를 판단하지 말고 13년 7개월 전의 일곱 금지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판결의 논조는 유승준에 우호적이지만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해 입국 금지의 비례성을 결여하고 사증 발급 거부 이유를 객관적 사실으로 뒷받침하는 경우에도 사법부가 자기의 판단으로써 행정청의 판단을 갈음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증 발급 거부는 연도 밖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행정처분이다.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처분은 법원에서 다투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에서는 일부러라는 사실을 맞이하는 내부의 주권 제한을 다투는 소송 전략을 택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내부 이권 당국이 나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아니스트 마셜의 사람을 자부하자 그런 조점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개인 참해를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민정책에 전권(全權, plenary power)을 가지는 입장에서 행정부에 우월했고 법무부장관이 신의로 성실하게 그 판단을 했다면 이상 법원은 그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승준의 사례는 단지 그들은 순수한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 국적법의 근본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유승준이 그들을 가지 않은 것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법제 때문이다. 외국에 귀화해도 우리 국적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많은 재미동포가 그동안 해주기를 바라지만 국민청서가 이를 어렵기 한다. 2005년 법무부는 국적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러 유형의 복수국적(중국제) 허용안을 검토했는데, 외국에 귀화한 사람이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부가 있다고 조사되어 그것은 국적법 개정 구상에서 제외했다. 한번 한인이면 영원한 한인이라는 생각으로 재외동포법을 제정한 본국별 코리안을 만들어 내는 중국인이지만 미국에 귀화한 한인이든 한민국 국적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같은 이중적해석이라고 금지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국민의 의무를 면탈하고 국가의 안전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함께 용인하게 되는 것이라니다.

한국경제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A13면 경제

전경련 "택배업에 외국인 고용 허용해야"

물류시설 확충·요금 현실화 제시

택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 물류센터 신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택배업 발전을 위한 현안 및 과제' 보고서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개 서비스업종에서 제외돼 있다. 그렇다 보니 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기존 근로자들은 강도높은 노동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경련은 또 택배 분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건축법 등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물류 집하장)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요금 현실화도 전경련이 꼽은 주요 정책 과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택배 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정도씩 증가했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택스당 4732원에서 2018년 2229원으로 떨어졌다.

황정수 기자 hs@hankyung.com

07 주요 언론보도

東亞日報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A14면 사회

버림 받은 '그림자 아이들'… 품어주는 시설 없었다

복지 사각지대 놓인 불법체류 아동
장애아 기숙이… 성추행 피해 유정이
기초수급자도 건보혜택도 못받아
'보호종료' 규정 있지만 강제성 없어
퇴지시설측 "치료비 등 감당 안돼"
전문가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1월 21일 인천시 한 고등학교에서 1주년 기념 세미나로 손을 맞는 기숙이(가운데) 등 필리핀 사회복지사의 일손 아동들이 노수을 도운 뒤, 사단이 11월 이들에 돌아와 1주년을 맞은 '그림자 아동' 기숙이는 특수 사회 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었다. 천선 기자 ray@donga.com

사진에서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들은 모두 '그림자 아동'이다. 부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아이 역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림자 아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병원에 가기도 어렵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의 강제 출국 과정에서 혼자 남겨져 길거리를 전전하다 인권 침해에 노출되기 쉽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열린 '그림자 아동' 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아동들은 필리핀 사회복지사의 일손을 돕고 있다. 사단이 11월 이들에 돌아와 1주년을 맞은 '그림자 아동' 기숙이는 특수 사회 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었다. 천선 기자 ray@donga.com

동진 그림자 아이였다. 중국인 아빠와 베트남 출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유정이는 생후 3개월 때 부모가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됐다. 당시 유정이는 기저귀를 떼지 못한 상태였다. 유정이는 한국에 남겨졌고 결국 고아원에 맡겨졌다. 유정이는 그곳에서 장애아 판정을 받았다. 유정이는 "고아원 선생님들이 때리고 밥을 주지 않아 굶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정이는 지난해 입양됐다. 현재 유정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가정에서 살고 있다. 유정이는 "한국에 와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기숙이와 유정이 같이 불법체류 아동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지원이 없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아동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숙이와 유정이는 오랜 수술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한국일보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A22면 사회

'제안정책명장' 5명 선정… 금상엔 김택균 법무부 주무관

국민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실제 정책에 적용한 '제안정책명장' 공무원 5명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로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5명(금상1·은상1·동상3)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표창인 금상은 법무부 소속 김택균(사진)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그는 최대 5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한 장기체류 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은상(국무총리 표창)은 국토교통부 소속 김부병 사무관이 수상했다. 동상(행안부 장관 표창)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순천 주무관, 행안부 이재훈 사무관, 병무청 신영희 주무관이 받았다. 변태섭 기자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12

세계일보

2020년 12월 20일 목요일 026면 오피니언

한국에 살며

코로나 상황 속 외국인노동자 체류연장 방안 마련을

며칠 전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서울 서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이주여성노동자가 출입국 관리업무에 문의해 임시보호하고 있다고 해서다. 우리 부부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주노동자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출입국관리소를 찾은 것이다. 우리나라 출입자 관리는 엄격하게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비판여시도 외국인보호소급 찾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호기심은 있고 낯선 곳이었다. 시민은 제시된에 서명 번호로 보이수고 성명을 하라고 했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터치스크린에 입력 출입자 명단을 하고 있었다. 남편이 휴대폰으로 전달된 신분 승인을 대리주는 듯이한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안내에 따른 영국인 노동 일시수용소인 5층에 도착했다.

카운터를 찾아 방문 목적을 설명한 뒤 접수에 따라 서 있는 의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앉아 기다렸다. 직원은 우리가 준 물품에 소지품을 받았고 우리는 면허가 가능한 간단한 질문 번호를 배정받았다. 점시 후 우리는 여성이주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투명한 유리창 안에 있었다. 위하여서 보았듯이 구멍이 나 있어 내부 저 너머에 갇혀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녀 대화를 시도했으나 잘 들리지 않아서 곧 전화기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송수신기부 다음을 이어갔다. 상담사 직원은 이주노동자 권리 구제에서 경험한 우리를 살펴보고 있었다. 10분 후 면

허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려 면허를 마치게 되었다. 우리는 시로 대화에 많은 질문을 남겨두고 작별해야 했다. 우리는 민원 접수처에 내걸린 항공권을 구입한 수 있는 사실이 연락처를 이주노동자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로 입국한 여성은 미사가 만료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었다. 코로나 대문에 네팔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팔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코로나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이 대팔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로 비자에 문제 없이 입국하였으나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시도도 실패했다. 하는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일을 했으나 고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돈도 더 벌어졌다. 그러던 중 수원에 있는 쉼터에 잠시 머문다가 서울 대림동에 직업소개소로 왕래 일자리를 알아보고 나오던 중 길거리에서 붙잡힌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가 될 사례는 늘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코로나로 인해 15개국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중단되면서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연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일정 기간만이라도 체류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한 고용주에게도 좋은 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운 날씨에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따뜻한 한국을 느낄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면주구릉
네팔 한국문화센터 대표

경향신문

2020년 12월 31일 금요일 010면 사회

"난민법 개정하라" 에디오피아 출신의 한 난민신청자 기간을 연기 조부고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난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권우주 기자 kjuju@kyunghyang.com

07
주요 언론보도

한겨레

2020년 12월 07일 월요일 004면 종합

국민의힘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사찰"
법무부 "수사위해 적법한 출입국 조회"

국민의힘이 6일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기록 등을 100차례 넘게 무단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조항을 근거로 대며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 조회가 수사를 위한 적법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일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신분이던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서류 일체를 대검찰청에 넘겨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했다고 공무원 세명이 실형을 살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019년 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내 통령이 좌표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사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법무부 직원 여러 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2019년 3월23일)가 있기 사나흘 전인 3월19~20일에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및 출국금지 요청 정보를 177회 조회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불출석을 계기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수차례에 걸쳐 보도됐다"며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 조회가 수사를 위한 적법 절차였다고 밝혔다.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조처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장나래 기자 goloke@hani.co.kr

내일신문

2020년 12월 07일 월요일 021면 기획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정보' 적법하게 열람했다"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들며 반박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계기로 언론에서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며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김 전 차관의 해외 혐의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어 "출입국 내역 조회에 엄정이 필요하다는 법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차관에 임명됐으나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금품과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6일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2013년, 2015년 두 차례의 검찰에서 두형의 처분을 받았으나, 문제인 정부 집권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년 3월 15일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은 일주일 뒤인 2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저지된 바 있다.

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한국경제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A31면 사회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제한 석달에서 한달로 단축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간 근무할 수 있고, 허용기간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다시 4년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다만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한국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야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4년10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던 재입국 특례 요건도 완화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07 주요 언론보도

세계일보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011면 사회

다른 국적포기자와 입국금지 차별? 대체로 사실 아님

FACT IN 뉴스

유승준 논란 재점화 살펴보니

박수윤 기자 psy@segye.com

병역기피 목적 국적 포기 후 2002년 이후 한국 방문을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사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7일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국내 입국을 막는 패키지 감면(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19일 "난 사기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를 막으려고 나라법 석이냐"고 서울에 반납했다. 일부 언론들도 유씨에 대한 냄비근성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병역은 악속이 아니다→ 사실 아님

유씨는 "절도이든 강간이든 지 못한 것뿐"이라며 "군대 가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약속 못 지킨 게 죄라는 논리는 평생 약속을 못 지키고 사는 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하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져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통해 군복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3조 1항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른 국적포기자와 차별한다→ 대체로 사실 아님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1만3000여명. 유씨와는 달리 입국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유씨 사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병역면제 사례가 아닌, 병역 의무를 피하고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9월 유씨가 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뒤 미국인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 여행 허가서와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입국금지시키면 과한 처벌? → 대체로 사실 아님

유씨는 지난 3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A총영사관은 2015년 5월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외교부 훈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질자지위원이 일부 있으므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LA총영사관이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의 법무부 입국금지 요청 사유를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이 비자 발급 판결을 내리는 것과 비자 발급 거부의 법무부 입국금지 요청 사유가 다른 점에 기반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입국금지가 당장 철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세부터는 범무부 관단 하에 입국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입국금지도 가능하다.

스티브 유 병역 및 입국금지 논란

병역은 팬들과의 약속이다?
- 팩트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 근거 헌법 제39조, 병역법 제3조 등
- 대체로 사실 아님

다른 국적 포기자와 차별한다?
- 팩트 병역기피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
- 근거 법원 판례 등
- 대체로 사실 아님

입국금지는 사법부 관할 무해?
- 팩트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 발급하루 재판단하라는 취지
- 근거 법원 판례
- 대체로 사실 아님

경향신문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030면 사회

부적격 받은 뒤 재신청 사실상 불가… 더 높아진 '난민 인정' 벽

법무부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 신설' 난민법 입법예고

朝鮮日報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A12면 사회

코로나 생이별 국제 커플들 "특별비자 달라"

하늘길 막히자 외교부·靑에 호소
獨 등 일부 EU국, 연인 입증땐
非유럽 출신에 입국 허용해줘

"결혼한 사람만 사랑입니까?"

이달 초 외교부 홈페이지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국제 커플을 제발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일본인 여자 친구를 9개월째 보지 못하는 A씨 사연이었다. 그는 "매일 밤 울며 이메일 전화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다"며 "군대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코로나로 대부분 국가가 외국인 입국 제한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1년 가까이 생이별을 주는 이른바 '국제 커플'들의 호소가 외교부에 밀려들고 있다.

영사·재외국민 담당 부서에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남친(남자 친구)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는 애절한 사연이 한 달에 수십 건씩 쏟아진다고 한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연인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비자를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결혼하지 않은 미혼 커플은 출입국에 제약이 많다. '관광 비자' 같은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대부분 국가가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 그나마 예적으로 부부라면 인도적 이유 등을 들어 비자를 내주기도 하지만 연인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자 국제 커플들이 자신들을 위한 '특별 비자'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프랑스 남자 친구와 3년째 원거리 연애 중인 B씨는 "코로나가 겨울에는 사그라들겠지 하다 벌써 9개월째 발만 구르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에 왔다 갔다 하려면 사가 격리 기간만 각국에서 2주씩 총 한 달이나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를 허락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프랑스 남자친구가 위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오려 했지만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연인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별 비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거리 연애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국제 청원 사이트도 등장했다. 성화에 못 이겨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자국 거주자와 장거리 연인임을 '입증'하면 비(非)EU 출신 연인들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계좌나 공동임대차계약서, 사진과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등을 심사해 비자를 내준다.

김은중 기자

07
주요 언론보도

東亞日報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A02면 종합

'백신 여권' 있어야 해외 가는 시대 오나

美-유럽, 접종 확인용 '디지털 여권' 개발… 백신 못 맞으면 여행 제한될 수도

"코로나 면역력 증명해야 입국 허가"
'격리 대신 백신 여권' 논의 가열
WEF-IBM 등 자체 앱 개발 추진
국가간 '백신 디바이드' 우려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조금이라도 먼저, 더 많이 구매하려는 국가 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른바 '백신 여권'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백신 여권은 접종 사실 증명으로 입국제한이나 격리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접종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족쇄로 작용하는 일명 '백신 디바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백신 여권이 개발돼 전 세계에 보급된다면 한국을 포함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나라의 국민들만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27일(현지 시각) CNN은 여러 기술업체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앱에 등록한 뒤 이를 해외 입국할 때나 콘서트, 스포츠 경기, 국제회의장 입장 시 제시해 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영리단체 '코먼스 프로젝트'는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일종의 백신 여권인 '커먼패스' 앱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앱 사용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업데이트하면 각국 정부의 보건당국이나 항공사가 인정하는 증명서, 통행증 등을 QR코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이들은 캐세이퍼시픽,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스위스항공 등의 항공사와 미국 내 수백 곳의 의료법인과 협업해 앱을 개발 중이다.

세계 항공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는 3개 항공 공동체 스카이팀·스타얼라이언스·원월드는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입국자 격리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엔 무딘 방식이다. 백신 여권 도입만이 대안"이라고 했다.

코먼스 프로젝트 관계자는 개발 중인 앱을 '디지털 옐로 카드(Digital Yellow Card)'라고 불렀는데 이는 황열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인 '옐로 피버 카드(Yellow Fever Card)'에 빗댄 것이다. 옐로 피버 카드는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에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접종 증명서다.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가나, 카메룬, 우간다 등 17개 나라가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황열은 아프리카 서남부와 남미에서 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어서 이 지역으로 갈 때만 필요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번져 있어 종이 증명서보다는 '디지털 자갑'인 백신 여권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IBM도 백신 여권 개발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백신 여권이 백신 접종자들에겐 자유 여행을 보장하는 '프리 패스'가 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에겐 '이동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제 활동 등에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도 지난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승객만 국제선 탑승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알렉산드라 펜턴 조지타운대 메디컬센터 교수는 "면역 여권은 어떤 국가의 어떤 시민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여권을 이동권 제한 조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면역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여권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여운 yeah@donga.com·김소민 기자

내일신문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021면 기획

체류연장 목적 난민 재신청 제한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 신설'
난민신청 때부터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브로커 처벌은 강화
난민 보호 인권단체들 "더 신속히 추방하려는 법안" 비판

법무부가 체류연장 목적으로 남용되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난민 인정 턱이 더욱 높아졌다. 중대한 사정 변경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할 경우 심사 부적격 결정을 내리는 등 각종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난민법상 위장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불인정하는 등 인정 사유도 엄격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난민 관련 인권단체들은 인권 차원에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난민의 권리를 명확히 침해한다며 난민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난민 인정 건수 줄이는 법 개정안 = 법무부는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등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체류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선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규정해 불인정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큰 틀에서 난민 심사·인정 건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중대한 사정 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이 제한된다. 지금은 불인정 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어도 난민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난민 자신청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남용되기도 한다는 비판을 낳아왔다.

법이 개정되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다시 할 경우 14일 내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을 내려 난민 신청자의 지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제한된다.

또 난민 신청 사유가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명시해 불인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체류연장 목적에나 경제적 이유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 등이 이기에 포함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도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결정한다.

난민 신청자가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면 난민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권유하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절차적 권리 일부 보장 = 다만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는 일부 보장하기로 했다.

난민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지정 거점기관에서 난민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 단계부터 전담 공무원이 배당하고 통·번역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면접 과정에서 만들어진 녹음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난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방식도 전원회의에서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개편한다.

위원을 대폭 늘리면 지역·종교·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위원을 확충할 수 있어 복잡·다양해진 이의신청 사례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또 분과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개편하면 심의 횟수를 늘릴 수 있어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난민 인정자나 인도적체류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상담과 취업 지원 등은 제공하고 인도적인 사유 등 특별히 필요성이 인정되면 난민 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취업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법절차 즉시 중단하라" = 하지만 난민 관련 인권단체는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난민의 권리를 명확히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협약에 개반한 반인권적 탑안"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의 경우 "재신청한 난민들은 서류만만 심사해 원칙적으로 기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 명시에 대해선 "법무부가 임의 해석한 기준에 따라 거부해왔던 다수들의 난민 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라고 낙인찍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을 구별하기 위해선 '박해 위험'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와 상관없는 체류연장 목적, 경제적 이유 등을 근거로 난민 여부를 심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1~9월 난민 신청자 수는 8888명이지만 인정자 수는 42명에 그쳤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난민을 내부하고 추방하기에는 너무 빠른 법무부의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그나마 존재하던 난민인정심사 제도 자체를 파기하는 것과 다를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유엔난민기구, 전문가단체 등과 협의해 새로운 법률안과 정책을 입안하라"고 요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PHOTO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 2020.1.21.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 방문 | 화성, 2020.1.22.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추미애 법무부장관 방문 | 인천공항, 2020.1.22.

인천공항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 2020.2.19.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헌혈버스 방문 | 부산, 2020.2.19.

TJB이슈앤피플 촬영 | 대전, 2020.1.2.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 2020.2.28.

주한태국대사 법무부 방문 | 2020.3.6.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1345콜센터 정책현장 방문 | 2020.3.10.

추미애 법무부장관 1345콜센터 방문 | 서울, 2020.3.12.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인천공항 정책현장 방문 | 인천공항, 2020.3.19.

서울경제 '법무행정 현장을 가다' 인터뷰 | 2020.4.2.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방문 | 제주, 2020.4.3.

YTN 인터뷰 | 2020.4.6.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의정관 브리핑 | 2020.4.9.

UNHCR 한국대표 화상인터뷰 | 2020.4.20.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국적심의위원회 위촉식 | 2020.4.24.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 | 2020.5.6.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제1기 이민자멘토단 위촉식 | 2020.5.13.

덕분에 챌린지 | 인천공항, 2020.5.27.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서울남부사무소 개청식 | 서울남부, 2020.6.2.

K-방역 웹세미나 | 2020.6.3.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주한유럽연합대사 접견 | 2020.6.11.

감염병 예방 홍보 | 부산, 2020.6.18.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코리아타임스 인터뷰 | 2020.6.29.

외국인밀집시설 방역 합동점검 | 2020.7.3.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인공지능 실증랩 개소식 | 2020.7.24.

이민자네트워크 뮤지컬콘서트 | 서울, 2020.8.10.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독립유공자 국적증서수여식 | 2020.8.12.

모범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수여식 | 전주, 2020.8.12.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결혼이민자 항균비누만들기 | 여수, 2020.8.13.

고기영 법무부차관 방문 | 인천공항, 2020.8.14.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이민국경안전 긴급대응단 현판식 | 2020.9.4.

제6기 재정착난민 퇴소식 | 지원센터, 2020.9.9.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보호외국인 자체 코로나 PCR검사 실시 | 청주(보호소), 2020.9.1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 청주(보호소), 2020.9.17.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 2020.9.24.

갑질근절 직원간담회 | 인천, 2020.10.20.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서정대 한국문화 영상 글짓기대회 | 양주, 2020.10.26.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간담회 | 광주, 2020.10.28.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고기영 법무부차관 방문 | 화성, 2020.10.30.

주한프랑스대사 접견 | 2020.11.3.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 광주, 2020.11.4.

겨울외투 나눔행사 | 2020.11.6.

사진으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Together Again 사진공모전 | 대구, 2020.11.19.

이웃사랑 희망의 집고치기 행사 | 서울, 2020.12.1.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 | 인천, 2020.12.18.